



2022. 8.

국회에산정책처 | 대한민국 경제

2022 대한민국 경제

Economic Overview of the Republic of Korea 2022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2 대한민국 경제

Economic Overview of
the Republic of Korea 2022

2022 대한민국 경제

총괄 | 진익 경제분석국장

기획·조정 | 이동훈 경제분석총괄과장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
허가형 인구전략분석과장
이규민 경제분석총괄과 경제분석관

작성 | 이규민 경제분석총괄과 경제분석관 권일 산업자원분석과 경제분석관
김경수 경제분석총괄과 경제분석관 조은영 산업자원분석과 경제분석관
박승호 경제분석총괄과 경제분석관 최세중 산업자원분석과 경제분석관
황종률 거시경제분석과 경제분석관 김용균 산업자원분석과 경제분석관
오현희 거시경제분석과 경제분석관 유근식 인구전략분석과 경제분석관
박선우 거시경제분석과 경제분석관 김상미 인구전략분석과 경제분석관
이진희 거시경제분석과 경제분석관

지원 | 이주호 인구전략분석과 경제분석관
강혜원 경제분석총괄과 행정실무원
조예은 산업자원분석과 자료분석지원요원
채소예 인구전략분석과 자료분석지원요원

「2022 대한민국 경제」는 각종 국내외 경제지표의 정리·분석 정보를 적시성 있게 제공함으로써, 국회의 예산 및 법안 심사와 의제 설정 과정에서 대외경제 현황 파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문의: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 02)6788-3780 | eacd@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담당 분석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 대한민국 경제

Economic Overview of
the Republic of Korea 2022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회위원회의 심의(2022. 6. 30.)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간사

대한민국 경제는 규모면에서는 세계 10위이며 1인당 소득으로는 OECD 중 18위인 고소득국가입니다. 2021년 무역액은 최초로 1조 2천억달러를 기록하여 세계무역 순위로 8위로 상승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금융위기 이후 성장률이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최근 전염병의 대유행, 국가간 분쟁, 신냉전 국제질서 등 대외적 요인에 따라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상황에 직면했으며 인구고령화와 총인구 감소, 가계부채 증가, 설비투자 부진 등 대내 요인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대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회예산정책처는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경제성장을 위해 검토해야 할 주요 경제 현안을 지표로 제시하는 「2022 대한민국 경제」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2022 대한민국 경제」는 총 2부 11장으로 구성됩니다. 제I부에서는 국민경제의 구조와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경제의 순환과 성장을 생산·분배·지출 측면 GDP로 조망 하였습니다. 제II부에서는 개별 정책분야의 대표 지표를 통해 경제성장의 관계를 추적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분야별 주요 정책으로는 생산분야에서는 신산업 정책, 소득·분배분야에서는 고용 정책, 지출분야에서는 가계의 소비활성화 정책을 사례로 검토하였습니다. 성장분야에서는 저탄소경제 정책을, 금융·통화분야에서는 통화와 금융건전성 정책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글상자를 통하여 가계부채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환율변동 등 현 시점에서 주요 경제지표를 통해 확인되는 경제 현안을 최신 통계를 이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와 경제정책 현안을 파악하고 경제 법과 제도를 수립하는데 「2022 대한민국 경제」가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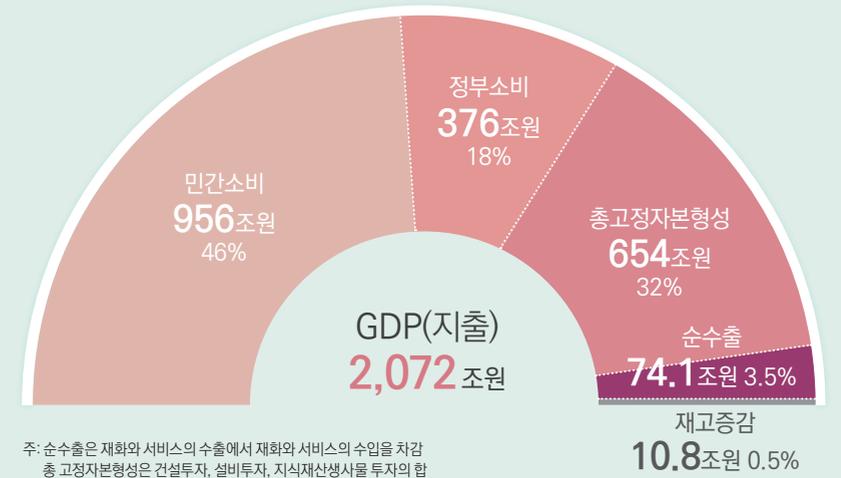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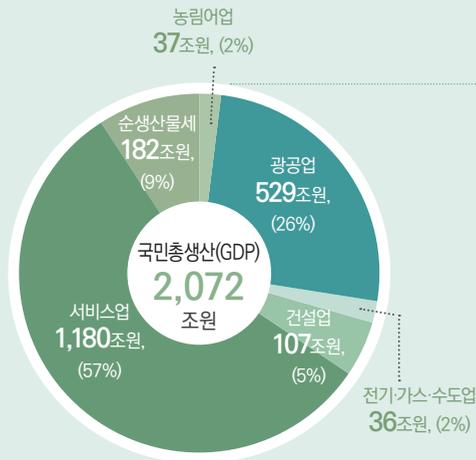
2022년 8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임 익 상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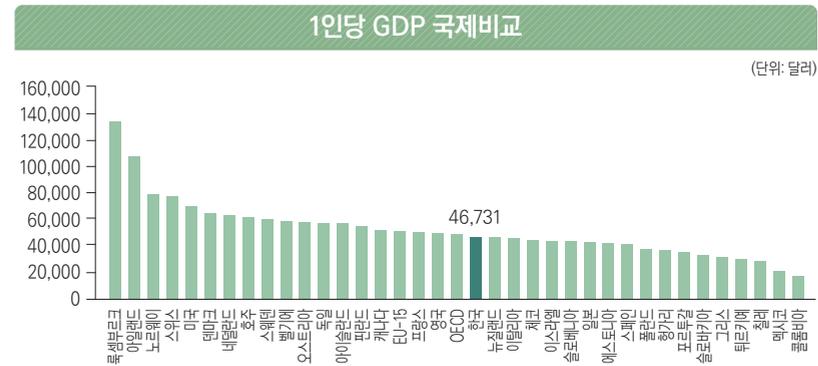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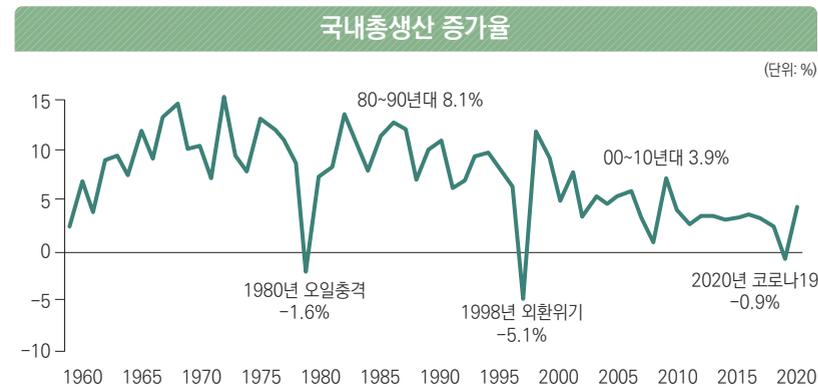
주요 경제지표

2021 주요 경제지표



주: 순수출은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수입을 차감
총 고정자본형성은 건설투자, 설비투자, 지식재산생산물 투자의 합

주: 명목 기준, GDP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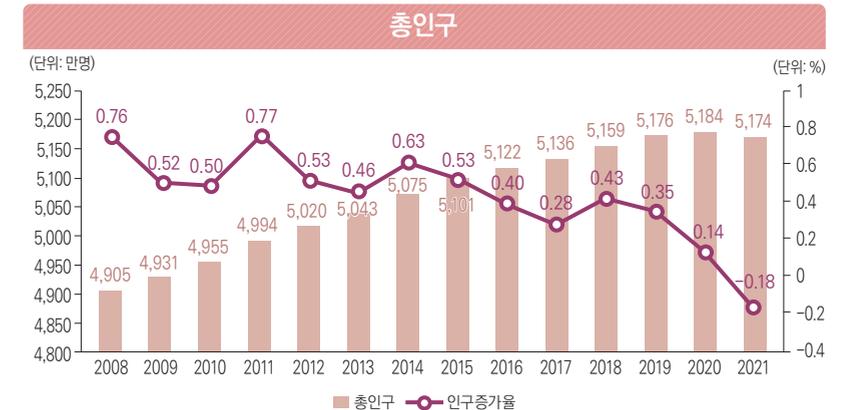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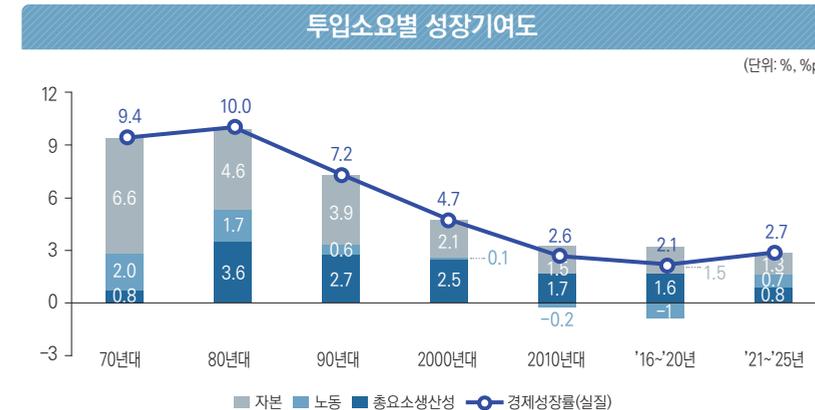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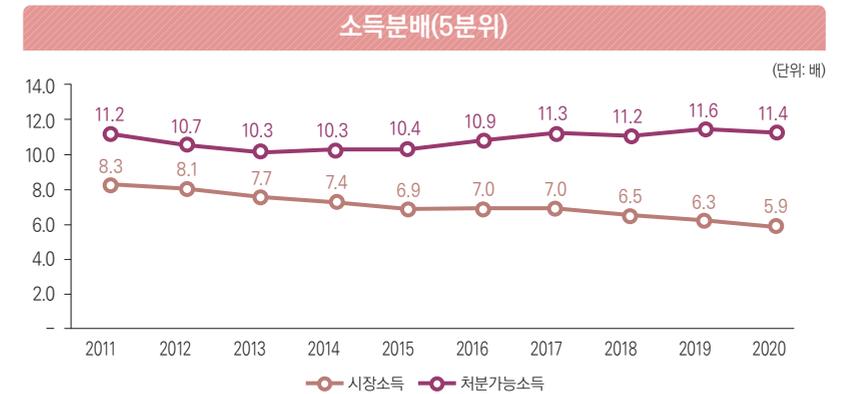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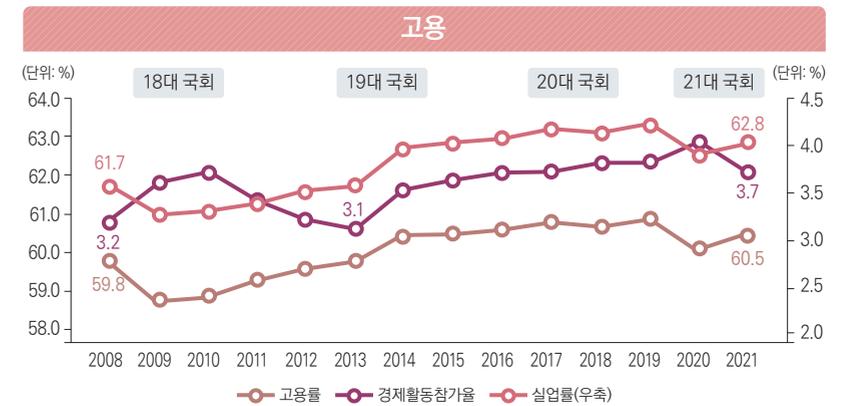


주: 명목, PPP, GDP
자료: OECD database



산업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가율
농림어업	31.4 -5.6	32.1 2.3	32.1 0.2	33.4 3.9	31.4 -5.8	32.6 3.8	0.8
광업	2.3 7.0	2.2 -4.0	2.0 -7.4	1.9 -6.2	1.9 -3.3	1.9 1.4	-3.9
제조업	451.3 2.3	468.1 3.7	483.5 3.3	488.9 1.1	483.7 -1.1	517.0 6.9	2.8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112.3 10.3	117.7 4.8	131.1 11.4	139.4 6.4	146.7 5.2	165.6 12.9	8.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71.3 0.5	73.7 3.4	75.6 2.5	74.9 -0.9	74.7 -0.3	78.9 5.7	2.0
기계 및 장비	35.4 -4.4	43.4 22.5	43.7 0.7	43.3 -0.9	43.7 1.0	48.6 11.2	3.3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41.3 -1.2	43.8 6.2	43.1 -1.7	44.9 4.3	46.8 4.1	48.6 4.0	3.3
건설업	89.1 9.8	94.4 5.9	91.7 -2.8	89.4 -2.6	88.2 -1.3	85.9 -2.6	-0.7
서비스업	948.4 2.9	973.1 2.6	1,010.4 3.8	1,036.2 3.4	1,036.2 -0.8	1,075.4 3.8	2.5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164.7 2.7	167.7 1.8	172.5 2.9	178.6 3.5	168.7 -5.6	174.3 3.4	1.1
사업서비스업	145.1 2.2	147.9 2.0	153.6 3.8	157.6 2.6	157.7 0.1	162.1 2.8	2.2
부동산업	126.5 3.5	129.3 2.3	133.4 3.2	135.3 1.4	138.4 2.3	139.5 0.8	2.0

주: 실질 GDP 기준, 회색 수치는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I

경제의 이해

제1장 국민경제	2
제1절 경제의 구성	2
제2절 경제원칙	5
제3절 경제질서	7
제4절 국민경제통계와 국민계정	9
1. 국민경제통계	9
2. 국민계정	10
제2장 국민경제의 순환과 성장	14
제1절 국민경제의 순환	14
1. 상품의 순환	14
2. 소득의 순환	15
3. 자본의 순환	16
4. 국민경제의 순환과 부의 축적	17
제2절 경제성장	18
1. 국내총생산	18
2. 국민소득	21
3. 경제성장	24
4. 경기순환	32
제3절 금융·통화	36
1. 국민경제와 금융·통화	36
2. 자금순환표를 통한 국민경제 분석	37
3. 자금순환표와 다른 경제통계와의 관계	38
제3장 경제구조	46
제1절 개요	46
제2절 생산측면 경제구조	50
제3절 분배측면 경제구조	57
제4절 지출측면 경제구조	61

II

경제 정책

제1장 경제정책	70
제1절 시장경제와 경제정책	70
제2절 경제정책의 목표 및 수단	76
1. 경제정책 목표	76
2. 경제정책 수단	80
3. 경제정책의 주체	82
제2장 생산 관련 주요 정책	86
제1절 제조업: 신산업 정책	88
1. 국민계정 상 제조업	88
2. 제조업 관련 주요 지표	89
3. 대한민국 신산업 정책	95
4. 신산업 정책과 재정	99
제2절 서비스업: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103
1. 국민계정 상 서비스업	103
2.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주요 지표	104
3. 대한민국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107
4.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과 재정	110
제3절 전기·가스업: 에너지·자원 정책	113
1. 국민계정 상 전기·가스업	113
2. 전기·가스업 관련 주요 지표	114
3. 대한민국 에너지·자원 정책	121
4. 에너지·자원 정책과 재정	123
제3장 분배 관련 주요 정책	126
제1절 가계-기업-정부간 분배: 소득 정책	129
1. 국민계정 상 가계-기업-정부간 분배	129
2. 소득 분배 관련 주요 지표	131
3. 대한민국 경제와 소득보장 정책	137
4. 소득보장정책과 재정	141
제2절 노동-자본간 분배: 고용 정책	143
1. 국민계정 상 노동-자본간 분배	143
2. 노동 분배 관련 주요 지표	145
3. 대한민국 고용 정책	152
4. 고용 정책과 재정	155
제3절 소비-저축간 배분: 주택 정책	158
1. 국민계정 상 소비-저축간 배분	158
2. 주택 관련 주요 지표	160
3. 대한민국 주택 정책	166
4. 주택 정책과 재정	170

C O N T E N T S

제4장 지출 관련 주요 정책 174

제1절 가계부문: 소비 활성화 정책	177
1. 국민계정 상 가계부문	177
2. 소비활성화 정책의 주요 지표	178
3. 소비활성화 정책	184
제2절 기업부문: 투자 유인 정책	192
1. 국민계정 상 기업부문	192
2. 투자 관련 주요 지표	194
3. 대한민국 투자 정책	200
제3절 대외부문: 무역 정책	205
1. 국민계정 상 대외부문	205
2. 대외부문의 주요 지표	206
3. 대한민국 경제와 무역정책	218

제5장 성장 관련 주요 정책 224

제1절 노동: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226
1. 국민계정 상 노동과 저출산·고령사회	226
2. 성장과 노동 관련 주요 지표	228
3. 대한민국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234
제2절 자본: 저탄소경제	239
1. 국민계정 상 자본과 저탄소경제	239
2. 저탄소경제 관련 주요 지표	241
3. 대한민국 저탄소경제 정책	245
4. 저탄소경제 정책과 재정	247
제3절 총요소생산성: 과학기술 정책	248
1. 국민계정 상 총요소생산성과 과학기술	248
2. 과학기술 관련 주요 지표	249
3. 대한민국 과학기술 정책	255
4. 과학기술 정책의 주요 내용	256



제6장 금융·통화 관련 주요 정책	260
제1절 금융인프라: 통화	263
1. 국민계정 상 통화	263
2. 통화정책의 주요 지표	264
3. 대한민국 통화정책	270
제2절 금융시장: 금융건전성	279
1. 국민계정과 금융건전성	279
2. 금융건전성 정책의 주요 지표	280
3. 대한민국 금융건전성 정책	287
제3절 정책금융	303
1. 국민계정 상 정책금융	303
2. 정책금융 주요 지표	304
3. 주요 정책금융	308

제7장 경제정책	312
-----------------------	------------

부록

부록: 주요지표 국제비교	318
1. 경제 일반	318
2. 산업	325
3. 금융	327
4. 대외경제	330
5. 재정	333

참고문헌	334
-------------------	------------

찾아보기	336
-------------------	------------

BOX 차례

[BOX 1] GDP 통계의 한계와 대안적 후생지표	31
[BOX 2] 한국경제의 지나온 길	39
[BOX 3] 명목가격과 실질가격	48
[BOX 4] 국가재정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66
[BOX 5] 정책수단으로서 공공재정의 목표와 기능	75
[BOX 6] 정책목표의 최적 선택	79
[BOX 7] 경제정책 입법과정	85
[BOX 8]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제조업 성장기여도	101
[BOX 9] 중소기업 대출 현황	111
[BOX 10] 최근 에너지 및 자원 가격 상승 동향	124
[BOX 11] 노인빈곤 국제 비교	142
[BOX 12] 청년실업	156
[BOX 13]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171
[BOX 14] 소비심리와 소비간 상관관계 분석	183
[BOX 15] 경기순환과 민간소비	189
[BOX 16] 재정지출	190
[BOX 17] 최근 국내 투자 부진	203
[BOX 18] 글로벌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210
[BOX 19] 우리나라 주요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 분석	215
[BOX 20]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한국경제	275
[BOX 21] 2022년 한국경제와 금융시장	292
[BOX 22] 환율과 한국경제	296
[BOX 23] 가상자산과 한국경제	300

표 차례

[표 I -1] 국민계정 연혁	12
[표 I -2] 생산·분배·지출측면 국내총생산(2021년, 명목)	20
[표 I -3] 국민소득지표 비교(2021년, 명목)	22
[표 I -4] 총노동투입 추이	27
[표 I -5] 자본투입 추이	28
[표 I -6] 국회예산정책처의 잠재성장률 및 요인별 성장기여도 추정치	30
[표 I -7] 종합지수별 구성지표	33
[표 I -8] 우리나라의 기준순환일과 국면 지속기간	34
[표 I -9] 국내총생산	47
[표 I -10] 생산GDP의 구성	50
[표 I -11] 산업별 비중 추이	52
[표 I -12] 분배GDP의 구성	57
[표 I -13] 지출GDP의 구성	61
[표 II -1] 경제정책의 헌법적 근거	77
[표 II -2] 2022년 한국판 뉴딜 재정투자 및 제도개선 계획	98
[표 II -3] 디지털 뉴딜 관련 주요 사업 예산 현황	99
[표 II -4] 미래산업 전략R&D 투자 및 혁신형 인재양성 예산안 현황	100
[표 II -5] 중소·벤처기업 지원 관련 사업 분야별 예산 추이	110
[표 II -6]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총지출 추이	110
[표 II -7] 2021년 에너지밸런스 플로우	116
[표 II -8]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영 규모	123
[표 II -9] 소득보장 관련 예산 규모	141
[표 II -10]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규모	155
[표 II -11]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법정계획	167
[표 II -12] 서민 주거안정 지원 관련 사업 주요 예산 현황	170
[표 II -13]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추이	186
[표 II -14] 소비활성화 관련 관계부처 회의	188
[표 II -15] 정부의 주요 투자 활성화 대책	201
[표 II -16] 2022년 기관별 수출금융 공급 계획	222
[표 II -17]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재정소요액 현황	237
[표 II -18] 2021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예산(지방비 포함)	238
[표 II -19] 주요국의 연도별 온실가스배출량과 연평균 감축률	242
[표 II -20]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법정계획	245
[표 II -21] 저탄소경제 분야 예산 및 예산안	247
[표 II -22] 2022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일반 예산 현황	258
[표 II -23] 2021년 금융거래표(잠정치)	263
[표 II -24] 2017~2021년간 공개시장운영 수단별 실적	273
[표 II -25]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 현황	274
[표 II -26] 2021년 금융자산부채잔액표(잠정치)	279
[표 II -27] 미시적·거시적 건전성 확보를 위한 주요 정책	289
[표 II -28] 2021년 금융자산부채잔액표 정부용자(잠정치)	303
[표 II -29] 정책금융 역할에 따른 지원분야	308

그림 차례

[그림 I -1] 경제활동	2
[그림 I -2] 경제주체	3
[그림 I -3] 국민경제의 과제	4
[그림 I -4] 국민경제 순환모형	6
[그림 I -5] 국민계정과 5대 국민경제통계의 관계	10
[그림 I -6] 상품의 순환	14
[그림 I -7] 소득의 순환	15
[그림 I -8] 자본의 순환	16
[그림 I -9] 국민경제 순환도	17
[그림 I -10] 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	19
[그림 I -11] 경제성장	24
[그림 I -12] 실질GDP 성장률	25
[그림 I -13] 투입요소별 실질GDP성장률 기여도 추이	26
[그림 I -14] 총요소생산성 추이	28
[그림 I -15] 국회예산정책처의 잠재성장률 전망	30
[그림 I -16] 경기순환도	32
[그림 I -17]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34
[그림 I -18] 경기수축기 GDP성장률과 지출부문별 증가율 추이	35
[그림 I -19] 2021년 중 경제부문간 자금운용 및 조달(잠정치)	37
[그림 I -20] 생산구조·분배구조·지출구조	46
[그림 I -21]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	47
[그림 I -22] 산업별 실질부가가치 추이	52
[그림 I -23] 산업별 실질부가가치 연평균 증가율 추이	53
[그림 I -24] 제조업 실질부가가치 비중 추이	54
[그림 I -25] 서비스업 실질부가가치 비중 추이	54
[그림 I -26] 산업별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지수 추이	55
[그림 I -27] 서비스업 업종별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지수 증가율 비교	56
[그림 I -28] 분배GDP의 요소별 분배 추이	58
[그림 I -29] 피용자보수비율 추이	59
[그림 I -30] 임금 및 사회보장이전의 국제비교	59
[그림 I -31] 경제주체별 영업잉여(기업 및 재산소득) 추이	60
[그림 I -32] 최종수요별 지출 추이	62
[그림 I -33] 일반정부 기능별 지출 추이	63
[그림 I -34] 유형별 최종고정자본형성 추이	64
[그림 I -35] 재화 및 서비스의 수출입 추이	65
[그림 II -1] 시장실패	71
[그림 II -2] 정부실패	74
[그림 II -3] 경제정책 체계	78
[그림 II -4] 경제정책의 수단	81

[그림 II -5] 경제정책의 주체	82
[그림 II -6] 생산 관련 주요 현안과 경제지표	86
[그림 II -7] 제조업 생산 추이.....	88
[그림 II -8] 제조업 고기술사업군 설비투자 규모	89
[그림 II -9] 산업별 설비투자 규모.....	90
[그림 II -10] 설비능력 확충 중 신제품생산	90
[그림 II -11] 설비능력 확충 중	90
[그림 II -12] 미래유망신기술 R&D 투자 비중	91
[그림 II -13] 미래유망신기술 분야별 R&D 지출 추이	92
[그림 II -14] 주요 신산업별 2020년 세계시장점유율 비교	93
[그림 II -15] 주요 신산업별 최고 기술보유국 대비 기술격차(2020년)	94
[그림 II -16] GDP 대비 서비스업 비중 추이	103
[그림 II -17] 산업별 매출액 비중 추이.....	104
[그림 II -18] 산업별 종사자 수 비중 추이	104
[그림 II -19] 서비스업 중 소상공인의 비중 추이(종사자 수, 매출액)	105
[그림 II -20] 서비스업 중 중소기업의 비중 추이(종사자 수, 매출액)	105
[그림 II -21] 기업규모별 서비스업 생산지수 추이	106
[그림 II -22] GDP 대비 전기·가스업 비중	114
[그림 II -23] 1차에너지 공급 추이(에너지원별).....	115
[그림 II -24] 최종에너지 소비 추이(부문별)	116
[그림 II -25] 주요국가 1인당 에너지소비량 순위(2018년 기준)	117
[그림 II -26] 에너지 수입 의존도 및 총수입 대비 에너지 수입 비중 추이	118
[그림 II -27] 에너지 원단위 추이	119
[그림 II -28] OECD 국가 1인당 에너지소비량(2019년 기준).....	120
[그림 II -29] 분배 관련 주요 현안과 경제지표	126
[그림 II -30]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국제비교	130
[그림 II -31]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131
[그림 II -32] 소득분배 지표	132
[그림 II -33] 상대적 빈곤율	134
[그림 II -34] 연령대별 빈곤율(2019년)	135
[그림 II -35] 빈곤갭	136
[그림 II -36] OECD 국가 전체인구의 상대적 빈곤율 변화(2013~2019년)	136
[그림 II -37] 피용자보수 및 피용자보수비율 추이	143
[그림 II -38] 피용자보수비율 및 혼합소득비율 추이	144
[그림 II -39] 취업자 수 및 GDP성장률	145
[그림 II -40] 주요 고용지표 변화	146
[그림 II -41] 노동시간 변화	147
[그림 II -42] 단시간 근로자 수 및 비중	148
[그림 II -43] 시간당 노동생산성지수	148
[그림 II -44] OECD국가 연평균 노동시간	149
[그림 II -45] OECD국가 시간당 노동생산성	149
[그림 II -46] 월평균 임금 수준 및 상승률	150

C O N T E N T S

[그림 II-47] 고용형태별·종사자규모별 상대임금(시간당 임금 기준)	151
[그림 II-48] 총저축액과 총저축률	158
[그림 II-49]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자산 및 비금융자산 금액 및 비중 ..	159
[그림 II-50] 국내 및 가계의 주택자산 비중	160
[그림 II-51] 주택매매 수급 지수	161
[그림 II-52] 주택보급률 추이	162
[그림 II-53] 지역별 新주택보급률(2020년)	162
[그림 II-54] 자가보유율	163
[그림 II-55]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163
[그림 II-56] 경제성장률과 실질 주택가격 상승률	164
[그림 II-57] 주요국의 주택가격상승률과 공공임대주택 비중	165
[그림 II-58] 지출 관련 주요 현안과 경제지표	174
[그림 II-59] GDP대비 민간소비 비중 추이	177
[그림 II-60] GDP성장률과 민간소비 증가율 추이.....	178
[그림 II-61] OECD 국가별 GDP대비 민간소비 비중	179
[그림 II-62] 평균소비성향 추이	180
[그림 II-63] 소득5분위별 평균소비성향	181
[그림 II-64] 가구주 연령별 평균소비성향	181
[그림 II-65]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182
[그림 II-66] 소비증가를 통한 경제 선순환 형성	185
[그림 II-67] 투자 비중	194
[그림 II-68] 투자 증가율	195
[그림 II-69] 경제주체별 투자	195
[그림 II-70] 주요국의 GDP대비 투자 비중	196
[그림 II-71] 부문별 투자	197
[그림 II-72] 경제의 저축-투자 갭	198
[그림 II-73] 경제 주체별 저축-투자 갭	199
[그림 II-74] SOC 예산	202
[그림 II-75] 수출입 추이	206
[그림 II-76] 실질GDP 성장률과 수출증가율	207
[그림 II-77] OECD국가 수출/실질GDP 비중(2020년 기준)	208
[그림 II-78] 가공단계별 수출 및 수입	209
[그림 II-79] 주요 교역 상대국으로의 수출 추이	213
[그림 II-80] 세계 수출시장 1위 품목 수(2020년 기준)	214
[그림 II-81] 성장 관련 주요 현안과 경제지표	224
[그림 II-82] 생산연령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227
[그림 II-83] 연도별 총인구 및 인구증가율	228
[그림 II-84] 연도별 인구동태 현황	229
[그림 II-85] 연도별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	230
[그림 II-86] OECD 회원국 합계출산율(2020년) 및 첫째아 출산연령(2019년)	231
[그림 II-87] 연도별 고령총인구 비중과 생산연령인구 비중	232
[그림 II-88] 성별 기대수명 추이	233

[그림 II -89] GDP 대비 생산자본소득	239
[그림 II -90] 온실가스배출량과 GDP 성장률	241
[그림 II -91] OECD국가의 온실가스배출량과 GDP 변화	242
[그림 II -92] 탄소집약도	243
[그림 II -93] 1차 에너지 중 재생에너지 비중	244
[그림 II -94]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244
[그림 II -95] 총요소생산성과 경제성장	248
[그림 II -96] 실질 GDP증가률과 연구개발비	249
[그림 II -97] 국가별 연구개발비와 1인당 연구개발비 비중	250
[그림 II -98] 우리나라 연구원 수 추이	251
[그림 II -99] 국가별 연구원 수	252
[그림 II -100] 과학기술 논문 수	253
[그림 II -101] 특허 수	253
[그림 II -102] 국가별 과학기술논문 발표 수(2020)	254
[그림 II -103] 국가별 삼국특허 수(2019)	254
[그림 II -104] 금융·통화 관련 주요 현안과 경제지표	260
[그림 II -105] 통화량 증가율(M1, M2)	264
[그림 II -106] 본원통화 증가율	265
[그림 II -107] 금융기관 유동성	265
[그림 II -108] 통화승수	266
[그림 II -109] 통화유통속도	266
[그림 II -110] 한국은행 기준금리	267
[그림 II -111] 소비자물가상승률	268
[그림 II -112] 근원물가지수상승률	269
[그림 II -113] 민간신용	280
[그림 II -114] 가계신용	281
[그림 II -115] 기업부채	282
[그림 II -116] 외환보유액 및 단기외채비율	283
[그림 II -117] 원달러환율	284
[그림 II -118] KOSPI 및 KOSDAQ 지수	285
[그림 II -119] 국고채금리(3년물·10년물)	286
[그림 II -120] 명목 GDP와 정책금융 공급 잔액	304
[그림 II -121] 중소기업 및 주택금융 공급 잔액	305
[그림 II -122] 기업대출 및 가계금리	305
[그림 II -123] 우리나라 실물·금융 발전 경로와 정책금융 규모	306
[그림 II -124] 국가별 실물·금융 발전 경로	307
[그림 II -125] 경제성장과 경제구조 변화	312
[그림 II -126] 경제정책·정책수단·정책목표 구조도	313
[그림 II -127] 생산·분배·지출 GDP와 경제정책	314

Economic Overview of the Republic of Korea 2022



I

경제의 이해

제1장 국민경제

제2장 국민경제의 순환과 성장

제3장 경제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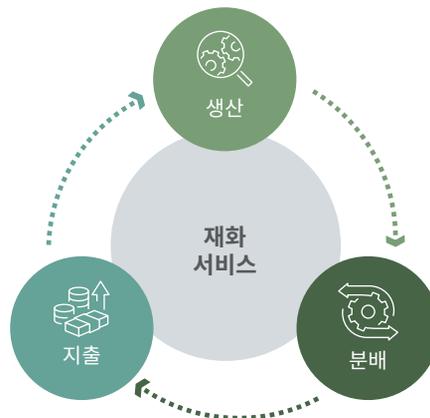
제1절 경제의 구성¹⁾

- 국민경제(national economy)는 한 나라의 경제를 의미
 - 국민경제는 한 나라의 경제 안에서 일어나는 생산, 분배, 지출을 다룸
 - 세 경제주체와 세 주요 시장, 세 주요 과제로 나타낼 수 있음

■ 국민경제는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생산, 분배, 지출을 의미

- 경제활동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활동을 의미
- 국민경제는 경제주체가 재화 생산 및 서비스 제공 등 생산활동을 하고, 이의 대가로 받은 소득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해 지출하는 과정을 통해 순환
 - 상품(commodities)은 사람들이 소비하기를 원해서 시장에서 사고파는 모든 것을 의미하며, 눈에 보이는 상품인 재화(goods)와 보이지 않는 상품인 서비스(services)로 구분

[그림 I-1] 경제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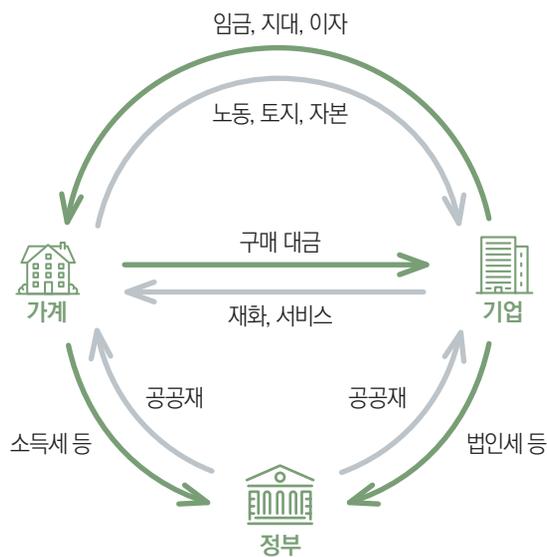
1) 이준구·이창용, 「경제학원론」 제5판, 2015의 '국민경제의 기본 골격'에서 인용

- **경제주체**는 상품을 생산하고, 교환하며, 소비하는 경제활동을 행하는 주체를 의미하며, 가계, 기업, 정부로 구성

■ 국민경제의 세 경제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

- 국민경제의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로 나누고, 각 분야의 경제활동으로 국민경제가 작동
- 가계는 상품을 소비하는 주체이며,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을 기업에 공급함으로써 상품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소득을 얻고,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며 공공재와 이전소득을 받음
- 기업은 상품을 생산하는 주체로 국민경제에서 무엇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를 결정하며 가계로부터 상품 생산에 필요한 생산요소를 구입
- 정부는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여 재정사업을 수행하며, 국방이나 치안같은 전형적인 공공재뿐 아니라 교육, 복지, 환경보호, 사회간접자본 등 여러 분야에서 재정지출을 통해 자원을 재분배하는 역할을 수행

[그림 I-2] 경제주체



■ 국민경제의 세 시장은 상품시장, 노동시장, 자본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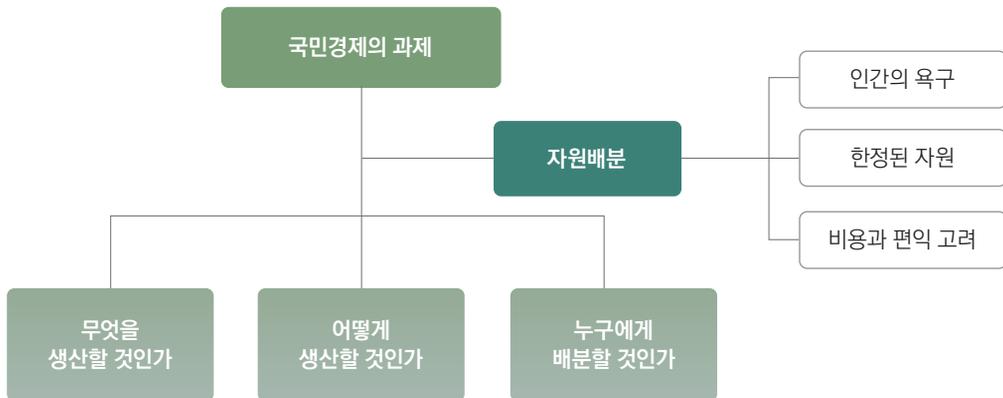
- **시장(market)**은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사람들의 모임
 - 현실에 존재하는 시장은 크게 상품이 거래되는 상품시장과 생산요소가 거래되는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으로 구성

- **국민경제의 과제**는 주어진 자원으로 무엇을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생산하며, 생산된 상품을 누구에게 배분할 것이냐의 문제
 - 시장은 경제적·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한정된 자원을 배분

■ 국민경제의 과제는 자원배분과 분배의 문제를 의미

- 첫 번째 과제는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로 한정된 자원으로 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얼마나 생산할 것인지를 선택
 - 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야 만족감이 커질 것인가는 국민경제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
- 두 번째 과제는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 것인가’로 노동, 자본, 기술 등의 생산요소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어떤 생산요소를 더 투입할 것인가를 선택
 - 생산요소 자원을 보다 적절한 생산방식으로 활용한 국민경제는 그렇지 못한 국민경제에 비해 풍요로운 소비가 가능
- 세 번째 과제는 ‘생산한 상품을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가’로, 사람들의 다양한 선호를 고려하여 배분(allocation)하는 것을 의미
 - 상품의 배분에는 시장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이 각각 필요
 - 자원배분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은 효율성이나, 국민경제는 공정성(equity)에 기초한 분배(distribution) 문제도 다루어야함

[그림 I-3] 국민경제의 과제



제2절 경제원칙²

- **경제원칙**은 경제주체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기본 원리로 경제가 움직이는 기본 원칙을 의미
 - 경제원칙은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정책의 기초가 될 수 있음

■ 경제활동은 선택의 문제이며, 모든 선택에는 필연적으로 대가가 따름

-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반드시 다른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하므로, 선택은 기회비용을 수반
 - 기회비용은 선택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대안 중 가장 큰 가치를 갖는 대안의 가치를 의미

■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시장에서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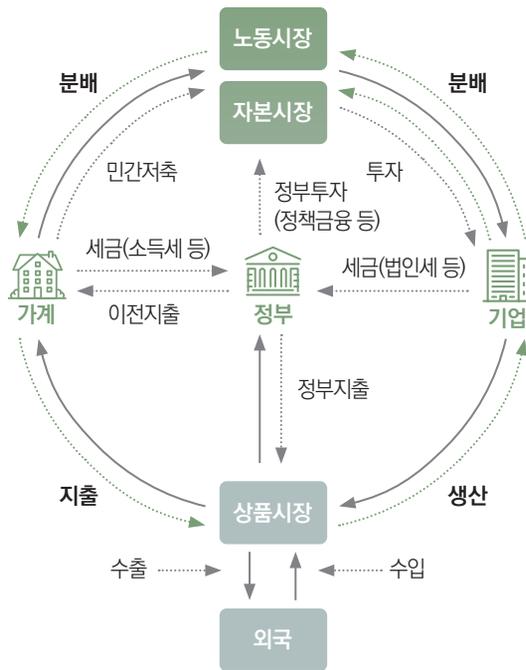
- 시장경제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작동되며,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각 재화의 생산량과 판매가격을 결정
 - 경쟁시장 하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균형가격이 결정되고, 이 때 거래량을 균형거래량이라고 함
-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고려하지 않고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은 경제의 균형을 이탈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비효율성을 야기함

■ 경제활동의 상호의존성으로 인해 한 시장의 변화는 연쇄적 변화를 야기

- 모든 시장(자본, 노동, 상품시장)은 상호 연계되어 있으므로, 한 시장의 변화는 다른 시장에 연쇄적으로 변화를 야기
 - 요소시장(노동, 자본)에서 요소가격(임금, 이자율)의 변화는 소득을 변화시키며, 소득 변화는 재화시장(상품)에서 소비자(가계)의 수요를 변화시키고, 소비자 수요의 변동으로 다시 요소가격과 수량이 연쇄적으로 변화
- 따라서 경제정책은 여러 시장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하여 경제주체의 균형과 시장의 균형을 반영한 일반균형 분석이 필요

2) 이준구·이창용, 「경제학원론」, 제5판의 '경제학적 사고의 기초'에서 인용

[그림 I-4] 국민경제 순환모형



■ 시장은 효율적이지만 완벽하지 않으므로 시장 실패가 존재

- 시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최선의 수단이지만,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는 경우 공공재 부족과 독과점 현상 등 시장 실패가 발생
- 효율성(efficiency)은 제한된 희소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것이며, 형평성(equity)은 경제 발전의 혜택이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분배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시장에서 두 가지 목표는 동시에 충족하기 어려움

■ 정부는 유용한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음

- 정부가 적절한 방식으로 개입한다면 정부개입으로 국민의 경제적 복지가 향상될 수 있으나, 적절한 방식의 정부개입이 어려움
- 경제학적 접근법은 정부가 좀 더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을 찾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제3절 경제질서

- **경제체제(economic system)**는 생산, 분배, 지출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 지향적인 시스템으로서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 등이 있음
- **경제질서(economic order)**는 경제주체들의 경제행위를 조율하기 위한 제반 규칙들의 총체
-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시장경제를 기본 경제질서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가 균형성장과 공평한 소득분배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음을 규정
 -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국가가 확고히 해야 함을 규정
 -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는 자유시장경제를 기본 경제질서로 규정하고 균형성장, 공평한 소득분배 등을 위해 국가가 경제를 규제·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

■ 경제체제는 생산, 분배, 지출과정의 경제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 지향적 시스템

- 경제문제를 시장경제에 의해서 해결하려는 시장경제체제와 계획으로 해결하려는 계획경제체제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시장경제체제라고 할 수 있음

■ 경제질서는 경제주체들의 경제행위 조율을 위한 제반 규칙들의 총체³

- 대한민국의 경제체제는 시장경제체제이며, 이러한 체제하에서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제행위를 조율하기 위한 제반 법, 제도, 규칙을 경제질서라고 함

■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기본 질서체계로 규정

-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의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규정

■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시장경제를 기본 경제질서로 규정

- 헌법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로 규정
- 대한민국 헌법은 기본권으로서의 자유권이 시장경제에 적용되어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 경제질서로 천명

3) 경제체제, 경제질서에 대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의는 없음. 본 보고서의 경제체제와 경제질서에 대한 정의는 “배진영 (2007), 경제질서, 경제체제, 경제제도, 경제헌법의 개념적 비교, 「제도와 경제」 제1권 제1호”를 참조하였음.

■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음을 규정

-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로 규정
- 대한민국 헌법은 불균형 성장, 불공평한 소득분배, 독과점 등에 있어서는 국가가 직접적인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음을 명시
 - 국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일부 시장원칙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
 -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기본적 경제질서인 자유시장경제(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수정이라고 볼 수 있어서 수정 자본주의 혹은 혼합 자본주의라고도 불림

제4절 국민경제통계와 국민계정

1. 국민경제통계

- 국민경제통계는 국민경제를 대상으로 경제 활동을 나타내는 통계
 - 5대 국민경제통계는 국민소득통계,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국민대차대조표를 의미

■ 국민경제통계는 국민경제를 대상으로 경제적 흐름과 자산 변동을 기록

- 국민소득통계는 경제주체들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결과로 창출된 국민소득이 어떻게 분배되고 처분되는지를 나타내는 통계
 - 국민경제의 손익계산서에 해당
- 산업연관표는 특정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어떤 상품을 얼마나 쓰는지의 투입구조와 특정 상품이 어떤 부문에 중간수요 또는 최종수요의 형태로 팔렸는지의 배분구조를 보여주는 통계
 - 국민경제의 제조원가명세서에 해당
- 자금순환표는 생산·지출 등의 실물활동 및 금융활동과의 관계와 금융활동 간의 관계를 정리
 - 국민경제의 현금흐름표에 해당
- 국제수지표는 국가와 국가 간에 발생한 실물과 자금의 흐름을 기록
 - 국민경제의 외화수지계산서에 해당
- 국민대차대조표는 국민경제의 자산과 부채를 대조하는 표로 유형의 실물자산과 무형의 비금융자산, 대내외 금융자산 및 부채를 기록
 - 국부(national wealth)의 변동을 파악할 수 있는 국민경제의 대차대조표에 해당하며 소득창출 과정을 기록한 유량(flow)계정과 자산의 축적상태를 기록한 저장(stock)계정을 일관성 있게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
 - 경제주체별 자산 및 부채를 기초대차대조표, 증감표, 기말대차대조표 등 3개의 표로 나누어 기록

2. 국민계정

- 국민계정(National Account)은 국민경제 활동을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작성되는 국가차원의 재무제표로 5대 국민경제통계로 구성
-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는 국민소득통계를 중심으로 5대 국민경제통계를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에 따라 연결한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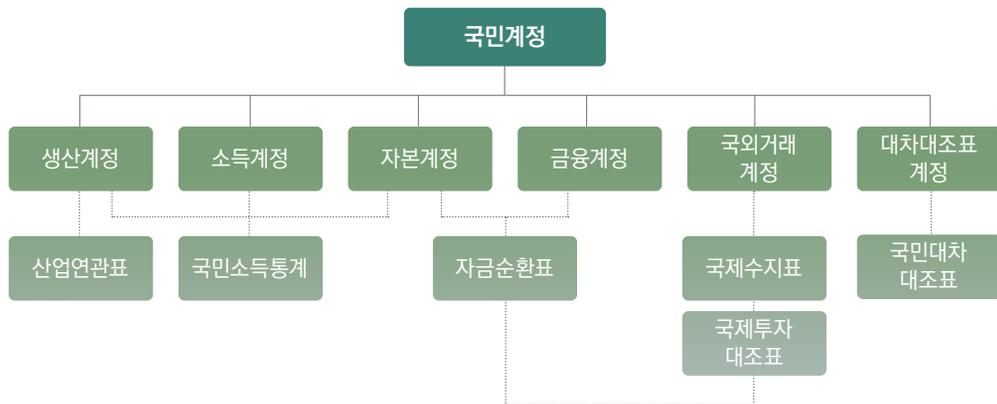
■ 국민계정은 기업 재무제표와 같이 국민경제 활동과 자산을 기록

- 한 나라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을 포괄하여 정합적이고 통합적 관점에서 설명하기 위한 통계표로 구성
- 생산활동을 보여주는 생산계정, 소득의 분배와 사용에 대한 소득계정, 자산의 취득과 처분을 기록한 자본계정 및 금융계정, 경제전체의 자산과 부채를 보여주는 대차대조표와 국외거래계정으로 구성
 - 경제활동을 거래형태별 및 거래에 참가하는 경제주체별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록

■ 국민계정체계는 국민경제통계를 경제분석에 적합하도록 체계화

- 우리나라는 2014년에 국민대차대조표를 신규편제함으로써 SNA 이행 최상위 단계(6단계)인 완전한 국민계정체계를 구현
 - 기업의 재무제표가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현금흐름표, 재무상태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국민계정은 국민경제의 재무제표에 해당

[그림 I-5] 국민계정과 5대 국민경제통계의 관계



자료: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020

■ 국민계정체계는 국민경제 내 모든 경제주체와 주요시장의 흐름을 포함

- 국민계정체계의 5대 국민경제통계를 이용하여 국민경제의 세 경제주체와 세 주요 시장, 세 주요 과제를 수치로 파악할 수 있음
- 국민경제 내 생산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생산되고,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이 경제주체에게 분배되고 지출되는 과정과 자산을 취득하여 축적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 국민계정체계는 경제주체를 제도단위와 제도부문으로 분류

- 국민계정은 부가가치를 생산·분배·지출하고 잉여 부가가치를 축적하여 운영하는 주체를 구분하여 통계로 제시하며, 이를 위한 경제주체를 제도단위와 제도부문으로 분류
- 제도단위(institutional units)는 자산 소유, 부채 부담, 경제활동에 종사 또는 거래를 할 수 있는 경제적 실체(economic entity)를 의미
 - 가계, 법인기업, 비영리단체 또는 정부로 국민경제의 주체와 동일
- 제도부문(institution sectors)은 기능, 행위 및 목적에 따라 5개의 거주자 부문과 1개의 국외부문으로 분류
 - 비금융법인기업(non-financial corporations): 재화 및 비금융서비스의 시장생산에 종사하는 제도단위로 구성
 - 금융법인기업(financial corporations): 금융중개 또는 보조적 금융활동에 종사하는 제도단위들을 의미
 -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 개별 또는 집합 소비를 위한 비시장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득 및 부를 재분배하는 제도부문
 - 가계(household): 1인 또는 다수의 개인, 가계가 소유한 비법인기업. 가계는 노동의 공급, 재화와 서비스의 최종소비를 담당하며, 기업으로서의 가계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NPISHs: non-profit institutions serving households): 가계를 위한 비시장서비스의 생산에 종사하는데 그 주요 재원을 가계의 자발적 기여금에 의해 조달
 - 국외부문(the rest of the world):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를 기록한 부문으로, 거주자는 한 나라의 경제적 영역에서 일정기간(1년 이상) 경제활동에 종사한 경제주체이며, 비거주자는 다른 경제영역의 거주자를 의미

■ 국민계정체계는 3가지 측면에서 국민경제 분석의 틀로 유용

- 국민계정은 국민소득통계를 중심으로 매년 국민경제의 규모와 국민소득,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생산요소 및 경제주체에 대한 통계를 제공
 - 국민계정의 핵심지표는 국민소득통계에서 제공하는 국내총생산(GDP)으로 국민경제의 성장과 구조변화를 포괄적으로 제시
 - 국민계정은 기초통계를 단계적으로 개발한 통계이므로 성장을 구성하는 요소를 포괄하며 이를 수치화하고 있음
- 국민계정은 공신력 있는 통계로 자료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높으며 국제기준을 적용하여 국가간 비교가 용이
 - 국민계정은 UN 공식통계로 공통의 기준으로 국제비교가 가능
 - 국민계정은 1953년에 처음 발표된 이래 지속적인 방법론 개선을 통해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가능하며 세부 계정처리가 안정적
 - 안정적인 장기 시계열 통계를 제공함에 따라 다양한 분석에 활용 가능
- 경제성장과 경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정책의 주요 대상을 포괄하는 통계
 - 국민소득통계는 국민경제 총액뿐 아니라 국민경제 순환구조의 유기적 관계를 포함하므로 성장과 순환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정책의 필요성과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음

[표 I-1] 국민계정 연혁

개편회차	공표연도	대상기간	비고
1차	1963년	1953년~1963년	1953 SNA에 의거
5차	1987년	1970년~1985년	1968 SNA 이행
6차	1989년	1970년~1987년	국민소득통계와 산업연관표 연결
8차	1999년	1970년~1997년	1993 SNA 부분 이행
9차	2004년	1970년~2002년	1993 SNA 이행 완료
11차	2014년	1953년~2013년	2008 SNA, 국민대차대조표 작성
12차	2019년	1953년~2018년	분배 국민소득 및 정부계정 강화

자료: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020

Economic Overview of the Republic of Korea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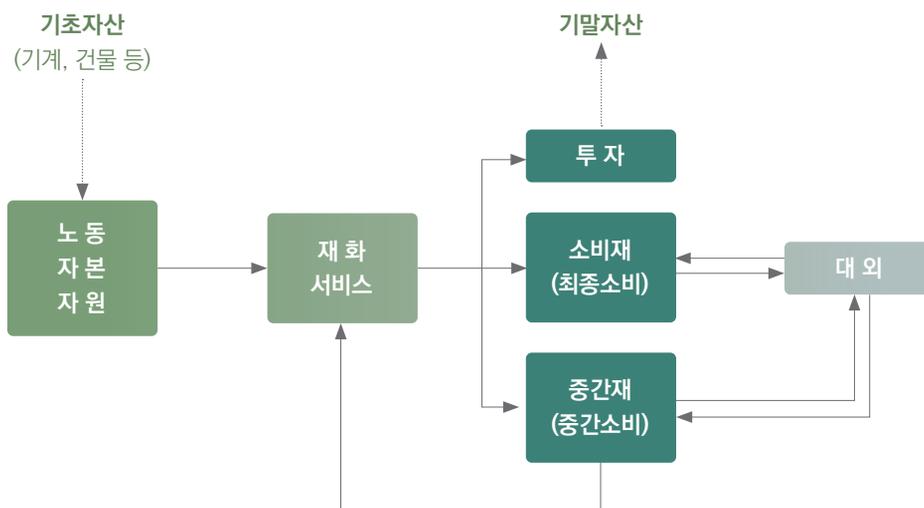
제1절 국민경제의 순환

1. 상품의 순환

■ 상품의 순환은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되고 소비되는 것을 의미

- 생산자는 기계와 건물 같은 기초자산에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여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 생산된 상품은 중간재로 다시 생산에 투입되거나, 최종재로 소비됨
 - 상품은 재화와 서비스를 의미
- 기간내 소비되지 않고 남은 중간재와 재고자산 및 자본재는 생산자의 자산에 추가되어 다음 생산에 이용되거나 판매됨

[그림 I-6] 상품의 순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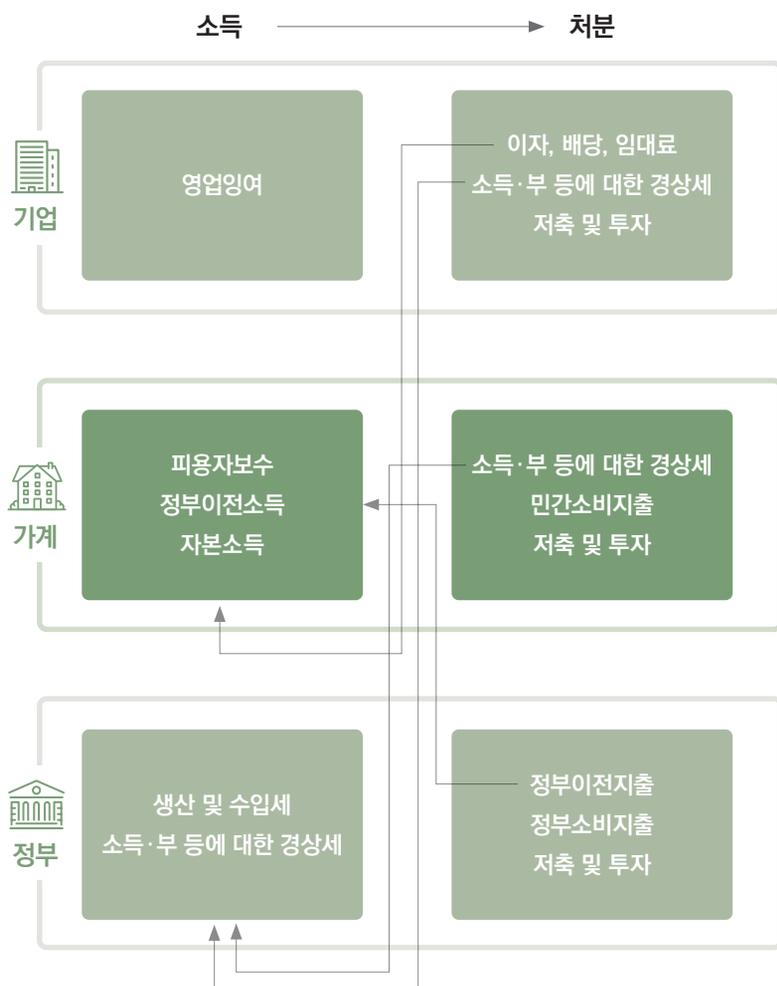


2. 소득의 순환

■ 생산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은 경제주체에게 분배된 후 순환됨

- 생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생산요소를 제공한 경제주체에게 분배되며 이를 본원소득이라고 함
 - 기업은 영업잉여를 가지며, 가계는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피용자보수를, 자본을 제공한 대가로 이자와 배당금을, 정부는 기업과 가계의 생산 및 수입활동에 대한 세금을 받음
- 각 경제주체는 분배된 소득에서 정부에 세금을 내고 남은 처분가능소득을 이용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는 소비지출로 쓰거나 저축으로 자산을 축적

[그림 I-7] 소득의 순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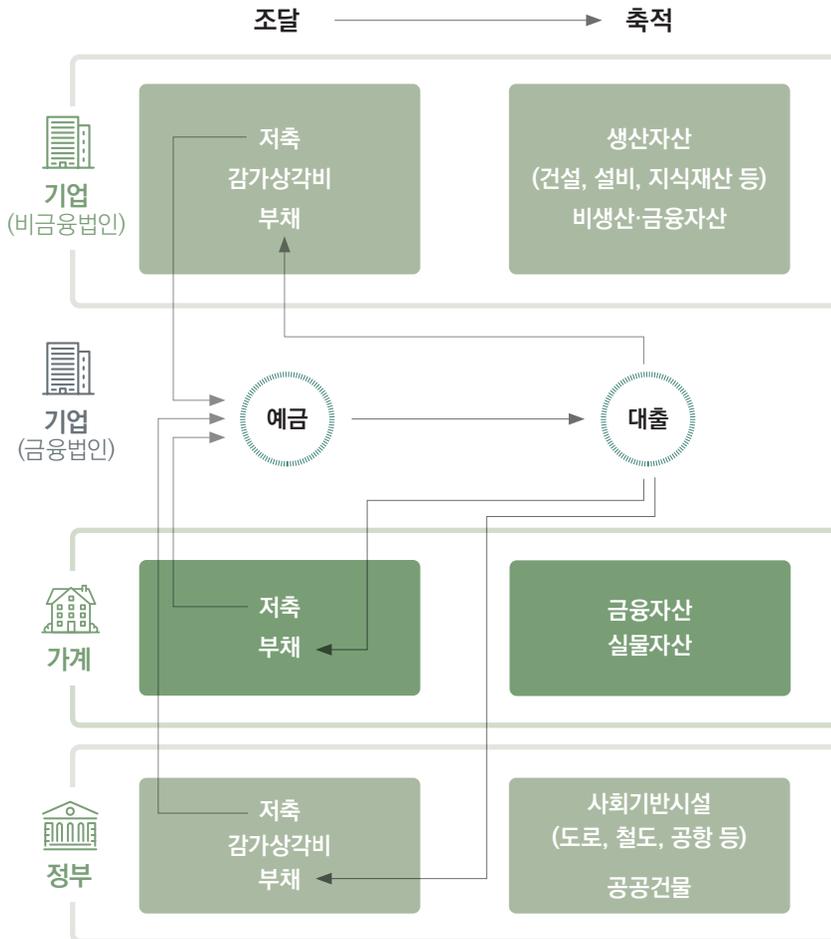


3. 자본의 순환

■ 경제주체들의 잉여 자본은 실물자산에 투자되거나 금융자산으로 축적

- 기업은 사내유보한 저축과 금융부채를 통해 기계를 구입하거나 토지매입, 건축 및 구축물을 건설함
- 정부는 청사의 신축이나 도로, 항만 등의 건설을 통하여 자본을 축적하는데, 정부 자체 자금으로 충당하고 모자라는 자금은 국공채 발행과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조절
- 가계는 당기에 소비지출로 처분하지 않고 남은 소득을 저축으로 금융기관예금이나 주식, 채권과 같은 금융자산 형태로 운용하며, 가계의 금융자산은 기업이나 정부에 공급되어 투자재원으로 활용됨

[그림 I-8] 자본의 순환



4. 국민경제의 순환과 부의 축적

■ 국민계정은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분배·소비·투자·축적되는 과정을 기록

- 국민경제는 경제주체가 생산한 각종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고 지출하는 과정에서 소득이 분배되고 생산자본 및 잉여자본이 축적되어 국가의 자산을 형성
- 국민순자산은 순금융자산(자산-부채)과 비금융자산(재고, 구축물, 기계, 토지 및 건물 등)으로 구성되며, 2021년말 대한민국의 국민순자산은 1경 9,809조원
 - 2021년 국민순자산은 2020년말 국민순자산에 2021년의 금융자산순증(252조원)과 비금융자산순증(1,778조원)으로 구분되며, 비금융자산순증은 고정자본형성(655조원)과 고정자본소모(-432조원), 재고증감, 비거래순자산증감으로 구성

[그림 1-9] 국민경제 순환도

(단위: 조원)



제2절 경제성장

1. 국내총생산

○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은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새롭게 생산된 생산물의 부가가치를 의미

■ 국내총생산(GDP)은 국민경제의 규모와 구조, 경제성장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

- 국내총생산(GDP)은 한 나라 안에서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 기간동안 생산활동에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를 제공하여 새롭게 창출한 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
 - GDP는 국민계정체계에 따라 국민소득통계로 한국은행에 의해 작성되며 분기, 연간으로 공표됨
- '한 나라 안에서'란 지리적 영역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주된 경제이익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결정됨
- '새롭게 생산'이란 GDP가 그 해 또는 그 분기에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부가가치로 측정됨을 나타냄⁴
- '생산물'이란 휴대폰, 반도체와 같이 물질적 형태가 있는 상품과 금융, 의료, 교육, 관광 등 형태가 없는 서비스를 모두 포함

■ 국내총생산은 5개 국민경제통계 중 국민소득통계에 반영

- 국민소득통계(national income statistics)는 나라 경제의 생산·분배·지출 측면을 일관성 있게 반영하여 국민경제의 모습을 포괄적으로 제공
- 국내총생산을 대표지표로 국민총소득, 가계저축 등 한 나라의 경제적 성과와 경제활동 상황, 경제구조의 변화, 국민의 생활수준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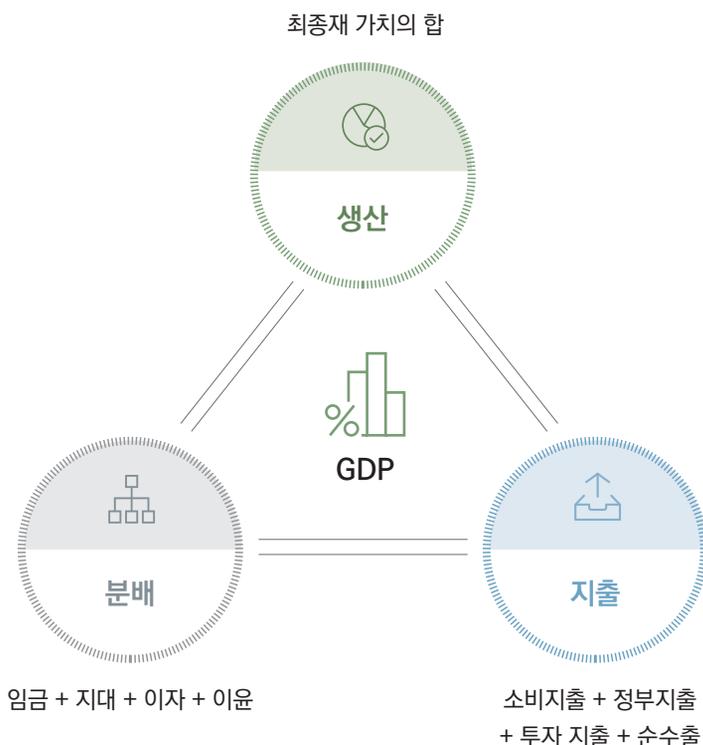
4) 과거에 생산된 것의 거래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예를 들어 사람들이 사고파는 중고차의 금액은 GDP에 반영되지 않음.

- 국민소득 3면 등가는 국내총생산(GDP)을 생산, 분배, 지출의 세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으며 각 측면에서 측정된 값이 동일함을 의미

■ 국민소득통계는 ‘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에 따라 세 측면에서 접근

- 경제주체에 의해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되고 구입되며 분배되며 순환하기 때문에 생산·분배·지출 측면에서 측정된 부가가치는 동일하므로 국내총생산(GDP)도 동일
 - 생산GDP는 각 경제부문에 의해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총부가가치
 - 분배GDP는 생산활동에 사용된 생산요소에 지불하는 대가의 총합
 - 지출GDP는 경제주체들이 구입하여 사용한 생산물의 총가치
- 국가경제의 생산물이 모두 구입되어 사용되므로 생산GDP와 지출GDP의 크기는 동일
- 생산요소의 비용이 생산물의 총가치로 충당되므로 분배GDP와 생산GDP는 동일

[그림 I-10] 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



○ 국내총생산 추계는 생산·분배·지출 측면의 부가가치 추계를 의미

■ 국내총생산 추계는 생산접근법, 지출접근법, 소득접근법을 이용⁵⁾

- 생산접근법(net output approach)은 산업별 또는 재화별 국내총생산물의 가치에서 중간 투입액을 공제하여 국내산출물의 순가치(GVA: gross value added)에 순생산물세를 더하여 산출
 - 생산측면 국내총생산 = 총부가가치+순생산물세
- 지출접근법은 수요접근법(demand approach)과 공급접근법(supply approach)가 있으며 최종수요자의 지출을 추계하거나 최종생산물에 대한 지출을 추계하는 방법을 이용
 - 최종수요의 주체인 가계, 정부, 기업, 대외부문의 최종소비지출로 구성
- 소득접근법은 부가가치가 귀속되는 각 생산요소별로 산출하여 부가가치액을 소득의 발생 측면에서 측정
 - 생산요소의 제공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인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생산 및 수입세로 구성

[표 I-2] 생산·분배·지출측면 국내총생산(2021년, 명목)

(단위: 조원)

생산측면		분배측면		지출측면	
총부가가치	1,890	피용자보수	993	민간최종소비지출	956
농림어업	37	영업잉여	435	정부최종소비지출	376
광업	2	고정자본소모	432	총고정자본형성	654
제조업	527	생산 및 수입세	227	재고증감	11
전기·가스·수도사업	36	(-) 보조금	16	수출	871
건설업	107		-	(-) 수입	797
서비스업	1,180		-	통계상불일치	1
순생산물세	182		-		-
국내총생산	2,072		2,072		2,072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통계

5) 생산·분배·지출 측면의 GDP는 제3장 경제 구조에서 보다 상세히 기술

2. 국민소득

- **국민소득**은 한 나라의 국민이 국내외 생산활동에 참가하거나 생산에 필요한 자산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
 - 소득의 범위에 따라 국민총소득, 국민순소득, 국민소득, 국민처분가능소득, 가계처분가능소득 등으로 구분됨
-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은 국민소득통계 내에서 국내총생산과 함께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지표로 한 나라의 국민이 일정기간 동안 벌어들인 임금, 이자, 배당 등의 소득을 모두 합한 값
 - 국민총소득은 국내총생산에서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더하여 구함
 - $GNI(명목) = GDP(명목) + \text{국외순수취요소소득}$

■ 국민소득은 국민의 생활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

- 국민총소득(GNI)은 우리나라 국민을 기준으로 소득을 측정하며 국가 간 국민소득 비교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됨
 - 국민총소득 = 국내총생산 + 국외순수취요소소득
 -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뺀 금액
- 국민순소득(NNI: Net National Income)은 국민총소득(GNI)에서 감가상각을 제외한 값으로 본원소득으로도 불림
 - 국민순소득 = 국민총소득 - 고정자본소모
 - 단, 국민순소득은 국외순수취소득(피용자보수, 기업 및 재산소득)을 각각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에 포함
- 국민소득(NI: National Income)은 한 나라의 거주자들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정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합친 값으로 요소비용 국민소득으로도 불림
 - 국민소득 = 피용자보수 + 영업잉여 = 국민순소득 - 순생산 및 수입세
- 국민처분가능소득(NDI: National Disposable Income)은 나라 경제 전체가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으로 국민순소득(본원소득)에 국외순수취경상이전을 추가
 - 국민처분가능소득 = 국민순소득(NNI) + 국외순수취경상이전
 - 국외순수취경상이전은 생산활동과 관계없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소득에서 무상원조 등 외국에 지급한 소득을 뺀 금액
 - 다만, 생활수준은 전체 국민소득의 크기보다는 1인당 명목 국민소득과 밀접

-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 Gross National Disposable Income)은 국민처분가능소득에 고정자본소모를 더한 금액
 -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 = 국민처분가능소득 + 고정자본소모

[표 I-3] 국민소득지표 비교(2021년, 명목)

(단위: 조원)

구분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순생산 및 수입세	고정자본 소모	국외순수취 요소소득	국외순수취 경상이전
국내총생산(GDP)	2,072					
	993	435	211	432		
국민총소득(GNI)	2,095					
	993	435	211	432	23	
국민순소득(NNI)	1,662					
	992	459	211			
국민소득(NI)	1,451					
	992	459				
국민처분가능소득(NDI)	1,658					
	992	459	211		-	-4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	2,091					
	992	459	211	432	-	-4

주: 국민순소득, 국민소득, 국민처분가능소득,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각각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에 포함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통계

- 소비율은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 중 최종소비의 비중
- 저축률은 국민총처분가능소득 중 소비되지 않은 부분
- 고정투자율은 국민총처분가능소득에 대한 총고정자본형성의 비율

■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을 이용하여 소비, 저축, 투자 관련 지표를 산출

- 소비율은 국민의 소비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국민총처분가능소득 중 최종소비 목적으로 처분된 재화와 서비스의 비율을 의미
 - 소비율(%) = 최종소비지출 /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 × 100
 - 평균소비성향은 소비율을 백분비가 아닌 계수로 표시한 것
- 저축률은 소득 중 소비로 처분되지 않은 부분
 - 저축률(%) = 100 - 소비율
- 국내총투자율은 국민총처분가능소득에 대한 총자본형성의 비율을 의미
 - 국내총투자율(%) = 총자본형성 /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 × 100
 - 총자본형성 = 총고정자본형성 + 재고증감 및 귀중품 순취득(재고투자)
- 고정투자율은 생산능력을 변동시키는 요인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총소득의 규모와 그 증가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
 - 고정투자율(%) = 총고정자본형성 /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 × 100

- 1인당 국민총소득은 국민의 생활수준을 파악하는데 용이하며 국민총소득(GNI)을 연앙인구로 나누어 산출
 - 연앙인구는 해당연도 7월 1일의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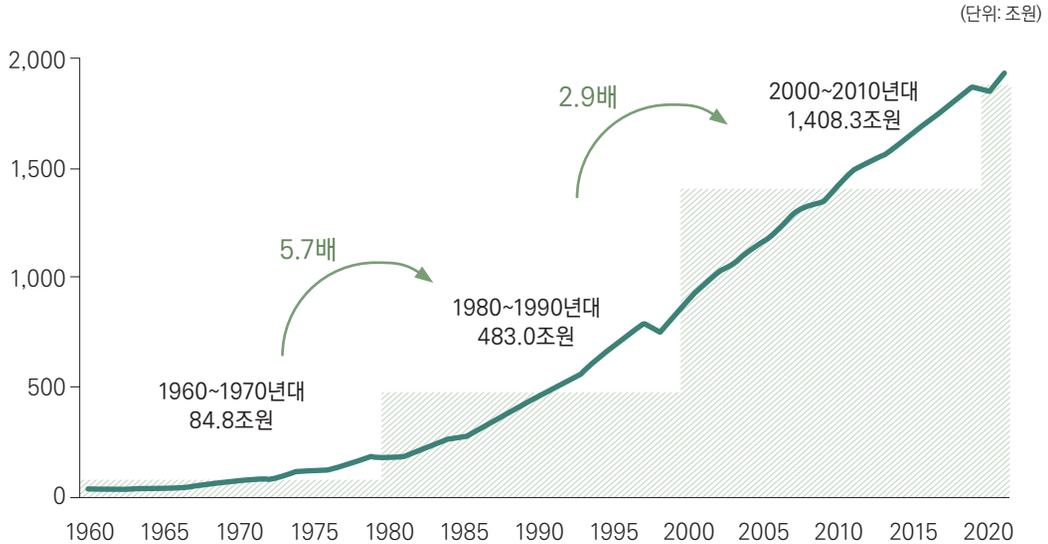
■ 한국의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2021년 4,048만원

- 미 달러화 기준 명목 국민총소득은 35,373달러이며, 구매력평가(PPP)환율을 적용하면 47,490달러임
 - 국가별 비교를 위해서는 국가 간 다른 물가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구매력평가(PPP) 환율 기준을 적용
 - PPP환율 기준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2018년에 일본을 추월

3. 경제성장

○ 경제성장은 장기에 걸쳐 한 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나 국민소득(GNI)이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현상

[그림 I-11] 경제성장



자료: 한국은행

■ 한국은 1960년 이후 경제규모가 60배 이상 확대되는 고속 성장을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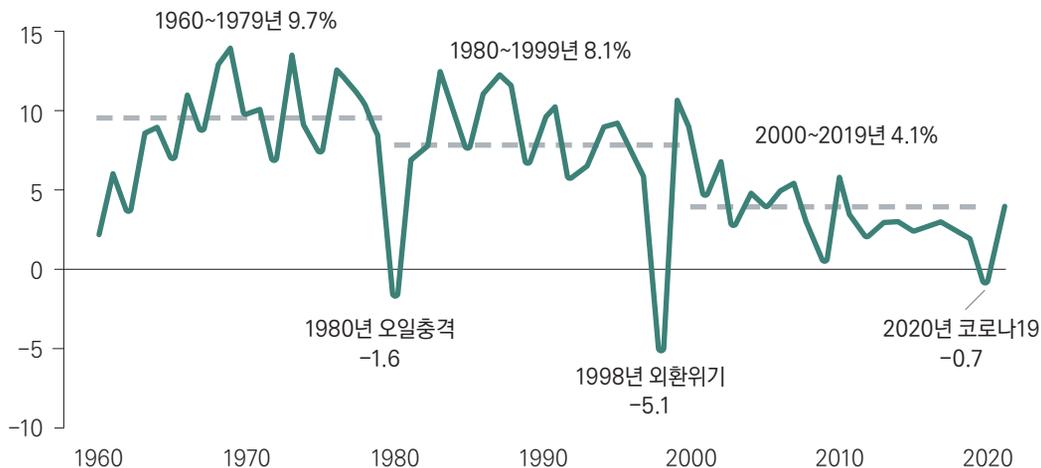
- 2021년 한국의 실질GDP는 1,916조원으로 1960년(29조원)대비 65.7배 규모로 성장
 - 1960년 한국의 명목GDP는 39.6억달러 규모로 콜롬비아(40.3억달러), 칠레(41.1억달러), 나이지리아(42.0억달러)보다 작았으나 2021년기준 한국의 명목GDP는 세계 10위권(IMF 기준)으로 확대됨⁶⁾

6) 2020년 통계에 따르면, IMF, 세계은행, UN 모두에서 한국의 명목GDP가 세계 10위로 집계됨

○ 경제성장률은 경제규모의 성장 속도를 의미

[그림 I-12] 실질GDP 성장률

(단위: %)



자료: 한국은행 ECOS

■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00년대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

- 한국의 1960년~1970년대 평균 성장률은 9.7%에 달하였으나 2000년~2010년대 평균 성장률은 4.1%로 낮아짐
 - 다만, 성장률의 하락은 선진경제로 진입하며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경제발전 과정
- 1인당 실질국민총소득은 1960년 133만원에서 2000년 1,972만원으로 연평균 7.2%⁷⁾ 증가했으나, 2000년 이후 2021년까지의 증가율은 3.0%로 낮아짐
 - 국민총소득 대비 수출액은 2010년 최대를 기록한 이후 최근 다소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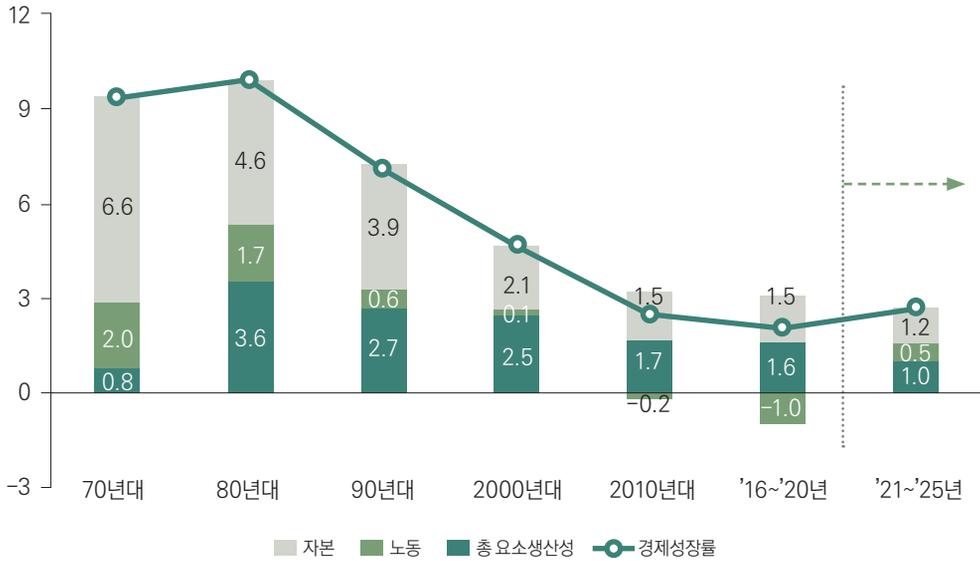
7) 1961년부터 2000년까지의 연간 증가율의 평균

○ **성장기여도**는 투입요소인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이 성장에 기여한 비중

- 생산함수접근법을 적용하여 투입요소의 기여도를 분해한 값으로 각 투입요소 기여도의 합이 국내총생산의 증가율
- 투입요소는 자본, 노동, 총요소생산성으로 구분

[그림 I-13] 투입요소별 실질GDP성장률 기여도 추이

(단위: %, %p)



자료: 한국은행 ECOS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자체 계산

■ **실질GDP성장률을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로 분해**

- 생산함수접근법을 적용하여 성장요인을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등의 투입요소로 분해
- 지난 1998년 외환위기를 전후로 노동과 자본의 양적 투입을 동반한 고도성장의 시대가 사실상 끝난 것으로 추정
-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노동인구의 급격한 고령화로 노동의 기여도는 하락한 가운데 기업투자가 위축되고 총요소생산성이 저하되면서 성장률 하락이 가속화
- 2016~2020년의 실질GDP성장률은 2.1%였으며, 자본과 총요소생산성은 각각 1.5%p와 1.6%p의 성장률을 담당한 반면, 노동의 기여도는 1.0%p 감소

■ 최근 5년(2016~2020년) 기간 중 총노동투입은 연평균 1.6% 감소

- 최근 5년(2016~2020년) 기간 중 총노동투입⁸⁾은 15세 이상 인구증가세 둔화, 주당근로시간 감소, 실업률 상승 등에 기인하여 연평균 1.6% 감소

[표 I-4] 총노동투입 추이

(단위: 연평균 %)

기간	총노동투입 증가율	결정요인 추이				
		생산인구	취업자수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주당근로시간
2001~2005	0.5	1.0	1.5	61.9	3.7	-1.0
2006~2010	-0.2	1.4	1.0	61.6	3.4	-1.3
2011~2015	1.1	1.2	1.7	62.0	3.4	-0.6
2016~2020	-1.6	0.7	0.6	63.0	3.8	-2.2

주: 1) 해당 기간별 평균치

2) 주당근로시간은 전체 취업자 기준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자체 추정

■ 최근 5년(2016~2020년) 기간 중 생산자본스톡은 연평균 3.7% 증가

- 생산자본스톡⁹⁾은 2000년대 초반(2001~2005년 중) 연평균 5.7% 증가하였으나, 금융 위기 이후(2011~2015년 중)에는 장기간의 투자 부진으로 3.6%로 둔화되었고 최근 5년(2016~2020년 중)간 연평균 3.7%로 소폭 상승
- 최근 5년(2016~2020년) 기간 중 총고정자본투자는 연평균 2.9% 증가하여 지난 2011~2015년 기간 2.5%에 비해 연평균 0.4%p 확대
 - 이는 주로 2016년 중 건설투자가 건설경기 회복으로 10.0% 증가하고, 2017년에는 설비투자가 반도체 경기호황에 힘입어 16.5% 증가한 데 기인

8) 총노동투입시간 = 취업자수 × 주당근로시간 × (365/7)이고, 취업자수 = 생산가능인구 × 경제활동참가율 × (1-실업률)로 계산

9) 생산자본스톡은 총고정자본투자(설비투자+건설투자+지식재산생산물투자)와 기존 생산자본스톡의 감가상각률에 의해 결정($K_t = I_t + \delta_t K_{t-1}$)

[표 I-5] 자본투입 추이

(단위: 연평균, %)

기간	생산자본소득	자본재 형태별			
		총고정 자본투자	설비투자	건설투자	지식재산 생산물투자
2001~2005	5.7	3.8	1.6	4.6	7.6
2006~2010	4.6	2.9	6.8	-0.1	6.2
2011~2015	3.6	2.5	2.6	1.7	4.8
2016~2020	3.7	2.9	3.4	2.1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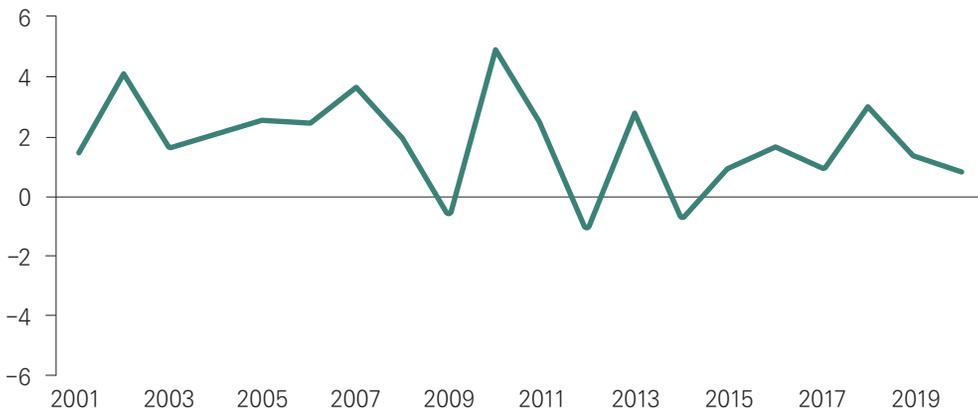
주: 해당 기간별 평균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 최근 5년(2016~2020년)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은 연평균 1.6% 증가

-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은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
 - 생산함수에 자본과 노동 등의 투입요소가 생산에 미친 영향을 반영 후 남은 부분으로, 노동과 자본에 체화된 생산성 및 기술 발전이라는 개념과는 다르게 해석해야 함
- 최근 5년(2016~2020년)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은 연평균 1.6% 증가해 지난 2011~2015년 기간 1.0%에 비해 연평균 0.6%p 상승

[그림 I-14] 총요소생산성 추이

(단위: 전년 대비,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자체 계산

- **잠재성장률**은 한 경제의 주어진 기술여건과 생산요소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활용하여 달성할 수 있는 산출물 수준의 증가율을 의미
 - 경제 전체에 인플레이션 유발 등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sustainable) 생산 수준
- **GDP갭**은 실질GDP와 잠재GDP 간의 차이로 경기변동의 폭과 수요측 인플레이션 압력을 평가하는 기준

■ 잠재 총생산량은 한 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산출량

- 최근에는 경기안정화 측면에서 생산요소시장이 균형을 유지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유발하지 않는 생산수준으로 정의¹⁰
 - 과거에는 한 경제가 이용 가능한 생산요소로 달성할 수 있는 최대생산수준, 또는 완전고용 생산수준(Okun, 1962)로 정의됨

■ 잠재GDP는 경기안정화정책, 성장잠재력, 재정정책기조의 평가 기준을 제공

- 단기적인 경기변동의 측면에서 GDP갭은 경기변동 폭과 수요측 인플레이션 압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경기 안정화 정책의 준거를 제공
 - GDP갭은 실제GDP와 잠재GDP 간의 차이로 계산되며, GDP갭이 양(+)이면 노동 및 자본이 정상수준 이상으로 이용되어 생산요소가격 및 일반 물가수준에 상승압력으로 작용
 - 단기에는 가격변수가 충분히 신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총수요가 증가할 경우 생산이 먼저 증가하게 되고 잠재수준 혹은 균형수준과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고 봄
-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잠재GDP는 성장잠재력을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 있으며, 향후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향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실질GDP를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 등의 투입요소별로 분해하여 각 요소별 잠재성장기여도 추이를 분석하여 성장잠재력 정책을 설정

10)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유발하지 않는 생산수준(Non-Accelerating Inflation Rate of Output, NAIRO), 혹은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에서는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지 않는 실업률(Non-Accelerating Inflation Rate of Unemployment, NAIRU) 등의 개념이 널리 사용되고 있음

○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경기중립적인 재정수지(구조적 재정수지)를 추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중기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평가하는 데 활용

- 구조적 재정수지는 잠재GDP 수준에 부합하는 재정수지로서 정부지출이나 세제 관련 개혁이 중기적으로 지속가능한지 여부나 중기재정운용의 목표 달성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이용
- 재정수지가 흑자이거나 적자일 경우, 일시적인 경기불황이나 호황의 영향인지, 아니면 잠재GDP 증감의 영향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재정수지 = 구조적 재정수지(잠재GDP수준에 상응하는 재정수지)
 + 경기변동 재정수지(GDP갭이나 재량정책의 함수)

[그림 I-15] 국회예산정책처의 잠재성장률 전망



주: 실질성장률과 잠재성장률 간 차이는 GDP갭률이라고 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 및 중기 경제전망」, 2021

[표 I-6] 국회예산정책처의 잠재성장률 및 요인별 성장기여도 추정치

(단위: %, %p)

기간	실질GDP 성장률	잠재실질GDP 성장률	투입요소별 잠재성장 기여도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
2001~2005	5.0	5.1	0.3	2.3	2.8
2006~2010	4.3	4.3	0.2	1.9	2.4
2011~2015	3.1	3.1	0.2	1.4	1.5
2016~2020	2.1	2.6	-0.1	1.5	1.2
2021~2025	2.8	2.3	0.1	1.3	0.9

주: 1) 해당 기간별 평균치
 2) 2020년까지는 실적치, 이후는 전망에 기초한 추정치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1년 및 중기 경제전망」, 2020

BOX 1 GDP 통계의 한계와 대안적 후생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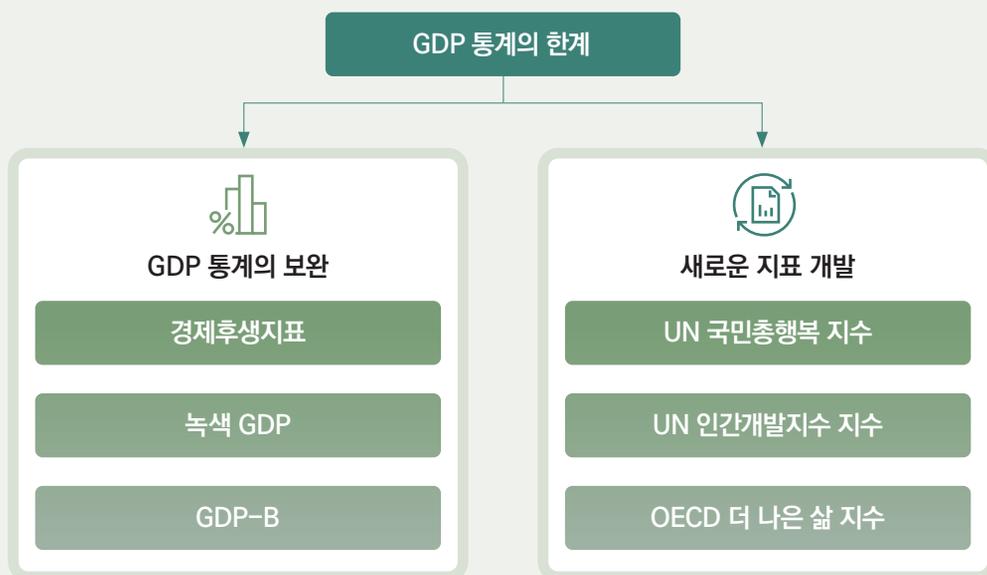
■ GDP는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국민후생 측정의 한계를 지님

- 행복이나 삶의 질과 같은 사회의 질적 측면을 반영하는데 한계를 지니며, GDP가 사회의 진보나 후생의 적절한 척도가 아닐 수 있음
- GDP는 긍정적인 생산활동과 부정적 생산활동을 구분하지 않음
 - 예를들어 환경오염과 코로나19는 국민의 삶의 질을 현저히 낮추었지만 환경오염을 정화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이나 코로나19의 방역 비용은 GDP를 높이는 요인으로 계상됨
-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은 재화 및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음
 - 이웃과의 중고거래나 나눔, 가사노동이나 봉사 등은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지만 GDP로 집계되지 않음

■ 삶의 질을 반영할 수 있는 대안적 지표가 개발되고 있음

- 경제성장의 궁극적인 목표가 삶의 질(후생)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환경오염, 불평등, 기후변화 등 사회·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가 개발되고 있음
- GDP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방향은 기존 GDP 통계를 보완하는 방향과, GDP 통계와 독립적인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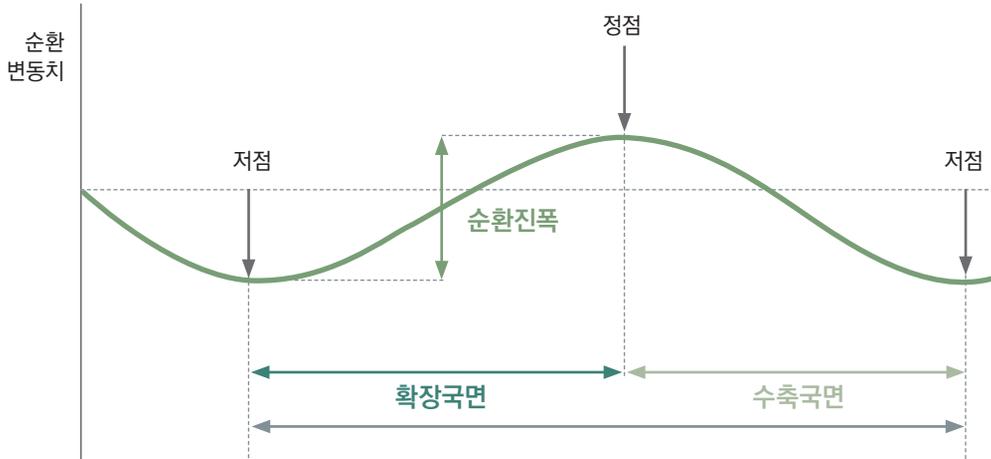
[GDP 통계의 한계]



4. 경기순환

- **경기순환**은 경제활동이 장기추세를 중심으로 등락하며 성장하는 현상
 - 확장과 수축의 경기국면에서 저점에서 다음 저점까지, 또는 정점에서 다음 정점까지의 기간을 순환주기라고 하며 통계청에서 사후적으로 발표

[그림 I-16] 경기순환도



자료: 통계청

■ 경기순환은 경제활동이 장기추세를 중심으로 등락하며 성장하는 현상

- 경기순환의 국면은 확장국면과 수축국면으로 구분하며, 확장국면은 경기저점에서 정점까지 경제활동이 활발한 시기를, 수축국면은 경기정점에서 저점까지 경제활동이 위축된 시기를 의미
 - 일반적으로 경제활동 성장률이 2분기 이상 추세성장률을 상회하면 확장국면, 하회하면 수축국면으로 판단
- 확장과 수축의 경기국면에서 저점에서 다음 저점까지, 또는 정점에서 다음 정점까지의 기간을 순환주기라고 함
- 우리나라의 기준순환일은 통계청에서 GDP, 광공업생산 등 개별지표와 경기지수의 움직임을 분석한 후 사후적으로 발표

- **경기종합지수**는 경기변동의 국면 및 전환점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 선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 후행종합지수로 구성

■ 경기종합지수는 경기대응성이 양호한 경제지표들을 가공·종합하여 작성

- (선행종합지수) 실제 경기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로 구성
-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에측에 이용
- (동행종합지수)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로 구성
- 현재의 경기국면과 전환점 판단에 이용하는 공식적인 지표
- 지표가 2분기 이상 상승하면 경기확장기, 하강하면 경기수축기로 간주
- 가장 높을 때와 낮을 때를 경기정점 또는 저점으로 판단
- (후행종합지수) 경기순환에 후행하여 변동하는 개별지표로 구성
- 현재 경기의 사후확인용에 이용
- 경기분석에는 비경기적 요인인 계절 및 불규칙 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치를 이용
- 계절요인은 1년 동안 계절에 따른 주기변동
- 불규칙요인은 천재지변, 파업 등에 따른 단기적·우발적 변동

[표 I-7] 종합지수별 구성지표

지수	지표
선행종합지수(7개)	재고순환지표, 경제심리지수, 기계류 내수출하지수(선박제외), 건설수주액, 수출입물가비율, 코스피, 장단기금리차
동행종합지수(7개)	광공업 생산지수, 서비스업 생산지수(도소매업 제외), 건설기성액, 소매판매액지수, 내수출하지수, 수입액, 비농림어업 취업자수
후행종합지수(5개)	생산자제품 재고지수, 소비자물가지수 변화율(서비스), 소비자재수입액, 취업자수, CP유통수익률

자료: 통계청

■ 현재는 제11순환기로 2017년 9월을 경기정점으로 잠정 추정

- 우리나라는 1970년 이후 공식적으로 10개의 기준순환일을 설정하고 있으며 평균 49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기준순환일 설정

[표 I-8] 우리나라의 기준순환일과 국면 지속기간

	기준순환일			지속기간(개월)		
	저점	정점	저점	확장기	수축기	순환기
제1순환기	1972.3	1974.2	1975.6	23	16	39
제2순환기	1975.6	1979.2	1980.9	44	19	63
제3순환기	1980.9	1984.2	1985.9	41	19	60
제4순환기	1985.9	1988.1	1989.7	28	18	46
제5순환기	1989.7	1992.1	1993.1	30	12	42
제6순환기	1993.1	1996.3	1998.8	38	29	67
제7순환기	1998.8	2000.8	2001.7	24	11	35
제8순환기	2001.7	2002.12	2005.4	17	28	45
제9순환기	2005.4	2008.1	2009.2	33	13	46
제10순환기	2009.2	2011.8	2013.3	30	19	49
제11순환기	2013.3	2017.9	—	54	—	—
평균	—	—	—	33	18	49

자료: 통계청

[그림 I-17]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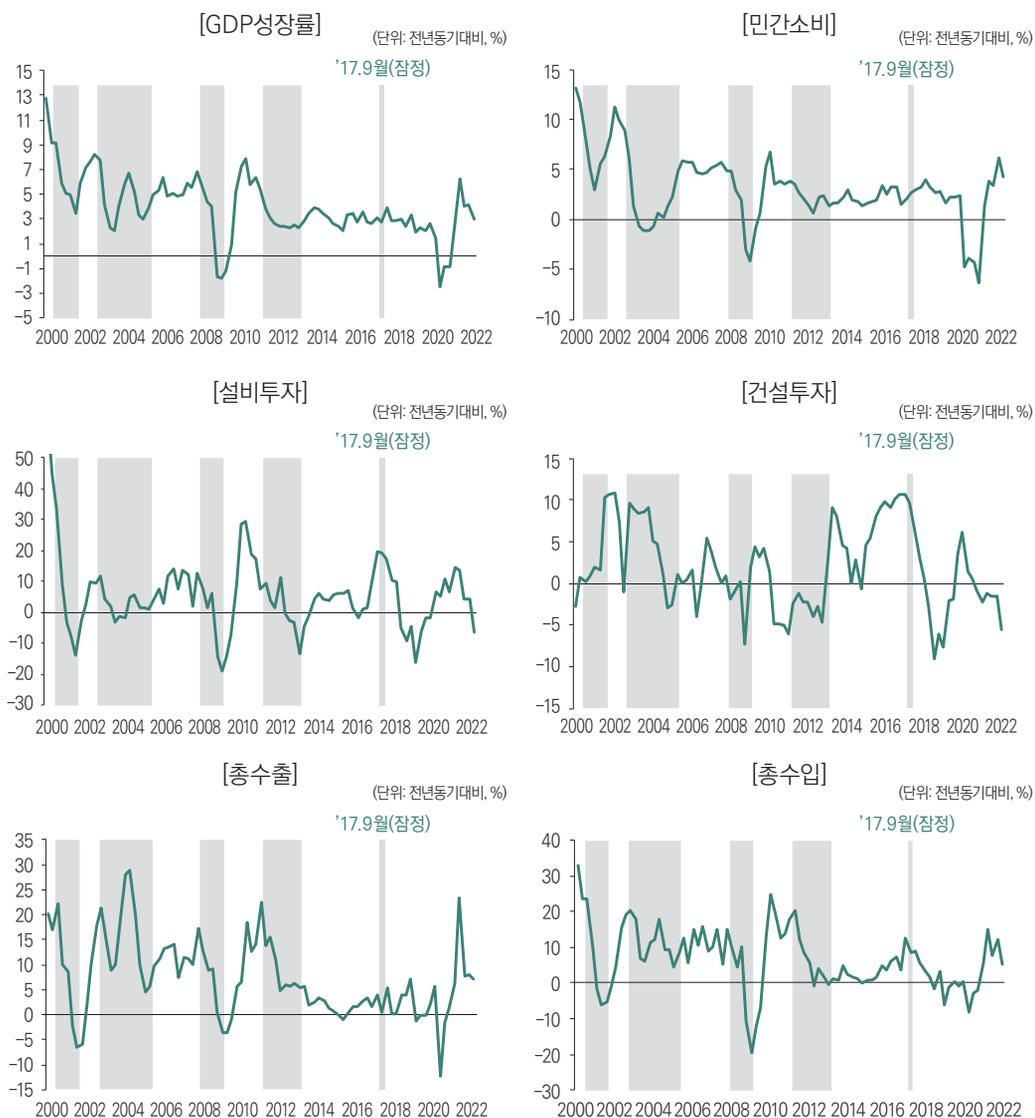


주: 음영부분은 경기수축기
자료: 통계청

■ 2000년대 이후 경제활동이 위축된 경기수축기는 총 4번

- 2000년 8월 시작된 경기수축기는 세계 IT경기 침체로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설비투자의 급격한 위축과 소비둔화 등에 기인
- 2002년 12월 시작된 수축기는 신용 및 투신사 유동성 위기 등으로 소비와 투자가 침체되면서 경제성장이 둔화되었으나, 해외경기는 확장세를 나타내며 수출입은 호조세를 보임
- 2008년 금융위기로 수출과 내수가 모두 급락하며 경기둔화
-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수출과 수입, 내수가 위축되며 경기수축

[그림 I-18] 경기수축기 GDP성장률과 지출부문별 증가율 추이



주: 음영부분은 경기수축기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제3절 금융·통화

1. 국민경제와 금융·통화

- 통화는 거래에서 지급수단 및 유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진 은행권과 정부 발행 지폐 및 주화
- 통화량은 한 나라의 경제에서 일정 시점에 유통되고 있는 통화의 존재량

■ 통화량은 국민경제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통화의 양

- 통화는 유통되고 있는 화폐를 의미
 - 통화는 은행권과 보조화폐로 이루어지는 현금통화(currency in circulation)와 당좌예금 및 요구불예금으로 구성되는 예금통화(demand deposits)를 포함
 - 총통화는 현금통화와 예금통화에 저축성 예금과 거주자 외화예금을 포함
- 통화량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며, 통화량이 부족하면 경제 활동이 위축될 우려

■ 국민경제의 자금인 통화는 실물경제활동과 금융거래를 통해 유통

- 통화는 재화와 서비스의 매매, 투자 등 실물경제활동과 예금, 주식매매 등 금융거래를 통해 유통
- 소비, 투자 감소 등으로 실물경제활동이 위축될 경우 소득과 저축 감소로 금융거래 역시 축소된다는 점에서 실물경제활동과 금융거래를 통한 통화 유통은 밀접한 관련성을 보유
- 따라서 통화의 흐름을 통해 국민경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실물경제활동과 금융거래를 연결하여 파악할 필요

2. 자금순환표를 통한 국민경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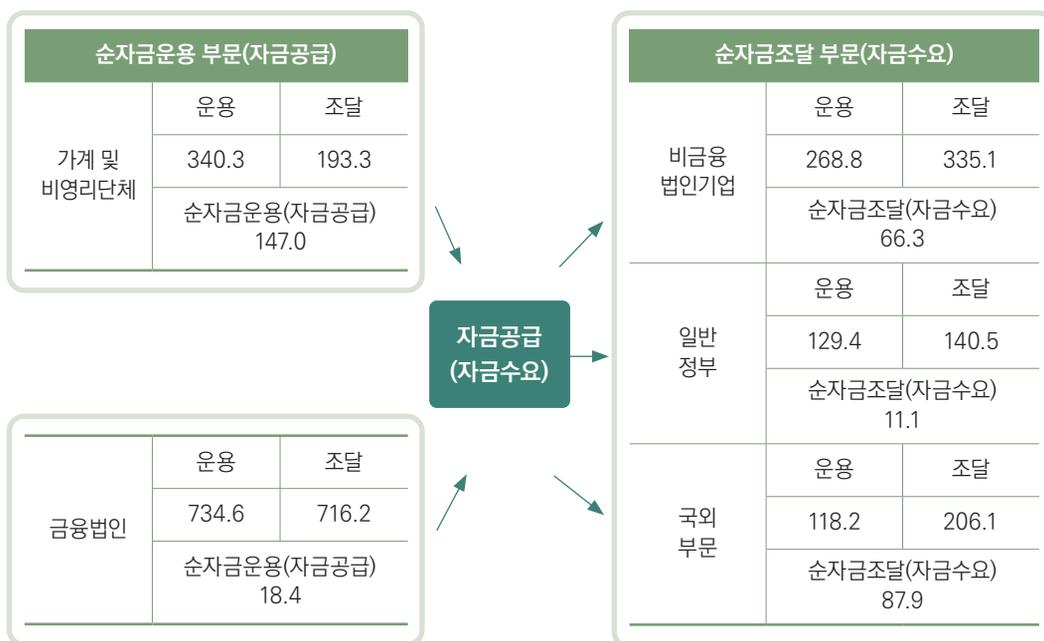
- **자금순환표**는 국민경제의 경제주체별 자금조달 및 운용상황, 금융자산 및 부채의 변동을 파악하여 경제주체들의 금융거래를 나타낸 표
 - 경제주체를 가계 및 비영리단체, 비금융법인기업, 일반정부, 국외, 금융법인으로 나뉘며 각 부문의 자금조달 및 운용내역을 기록

■ 자금순환표는 실물경제활동과 금융거래의 통화 흐름을 기록

- 자금순환표는 실물경제활동을 통한 자금의 잉여 및 부족,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의 조달·운용을 체계적으로 기록
 - 가계는 소득 중 일부를 소비하고 나머지를 저축하며, 기업은 금융부문을 통해 투자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자금순환표는 이러한 잉여·부족자금의 운용·조달을 표시

[그림 I-19] 2021년 중 경제부문간 자금운용 및 조달(잠정치)

(단위: 조원)



주: 순자금운용은 다른 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을, 순자금조달은 다른 부문으로부터 자금을 공급받는 자금수요로 봄
자료: 한국은행

- **운동(transaction: assets)**은 해당 금융자산을 취득 또는 처분한 금액으로 금융자산 순취득액에 해당
- **조달(transaction: liabilities)**은 운동에서 조달을 차감한 금액으로 금융부채 순조달액을 의미
- **차액**은 운동에서 조달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 경우 순운동, (-)인 경우 순조달을 의미

■ 자금순환표는 경제주체의 금융거래와 국민경제의 금융구조 분석에 기여

- 자금순환표를 통해 자금 잉여·부족 여부, 자금의 운동·조달 방식을 파악하여 국민경제의 금융구조 역시 파악 가능
- 자금순환표에 기재된 경제주체의 금융자산 형태별 거래를 살펴 경제주체의 금융거래 행태 분석 가능

3. 자금순환표와 다른 경제통계와의 관계

■ 국민계정체계의 자본계정과 금융계정이 자금순환표에 기재

- 국민경제 저축은 자본계정과, 저축과 투자의 차이에 따른 자금과부족은 금융계정과 연계되며, 자금순환표는 이때의 자본계정과 금융계정을 함께 기재

■ 국제수지는 자금순환표의 국외부문에 기록

- 국민경제의 대외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국제수지는 자금순환표의 국외부문을 통한 자금 운동·조달(원천) 란에 기록

BOX 2 한국경제의 지나온 길

■ 1960~2021년 기간 한국은 산업기반을 갖춘 경제대국으로 성장

- 한국 경제는 1960년대 이후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실질 GDP는 65.7배 증가
 - 또한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7%로 빠른 성장세를 시현
- 한국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근대화 및 경제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자원의 동원과 배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개발경제 시스템을 운용
- 1인당 국민총소득(실질)은 1960년 133만원에서 2021년 3,647만원으로 상승했으며¹¹⁾ 2021년 수출은 6,444억달러로 세계 10대 무역대국으로 발전
 -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 4.4%에서 2021년 27.9%로 상승

[한국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단위: 조원, %, 만원, %)

기간	국내총생산 형태별		1인당 국민총소득 (실질)	국민총소득 대비 수출액	GDP 중 제조업 비중
	실질	연평균성장률			
1960	29.1	5.4%	133	3.5	4.4
1970	72.1	9.6%	256	13.8	8.4
1980	174.9	9.4%	486	32.1	15.2
1990	454.1	10.0%	1,192	26.5	18.6
2000	903.6	7.2%	1,972	36.5	22.7
2010	1426.6	4.7%	2,808	51.6	27.8
2021	1915.8	2.7%	3,647	44.3	27.9

주: 1) GDP 디플레이터(2010=100) 적용

2) 성장률은 해당 년을 포함한 10년 단위 연평균 성장률로, 1960은 1953~1960, 1970은 1961~1970, 1980은 1971~1980, 1990은 1981~1990, 2000은 1991~2000, 2010은 2001~2010, 2021은 2011~2021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11) 1인당 GDP의 미국과의 상대비교시 미국의 5.3%에서 2017년 50%로 상승함. IMF 기준 1960년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158달러, 미국은 3,007달러였으며, 2017년에는 각각 29,743달러와 59,532달러

[한국경제의 경제성장률과 GDP]



자료: 한국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 1950년대 우리 경제는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시회간접자본을 확충

- 전후복구기로 사유재산제도를 포함한 시장경제의 기반을 도입하였으며, 외국원조에 의존하여 사회간접자본을 확충
- 사유재산제도를 확립하고 농지개혁, 경제부흥계획 등을 통해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여 자립경제 건설과 수입대체정책을 추진
- 높은 관세¹²와 복수 환율제도¹³, 외환시장 개입이 있었으며, 높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마이너스 실질 금리로 국내 자본 축적은 부진
- 1953~1960년 동안 GNP에서 원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8.2%였으며 총세입에서 대총자금¹⁴이 차지하는 비중은 38.4%¹⁵

12)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고관세를 적용, 총관세율은 1950년대 하반기 중 27.4~66.5%

13) 환율을 복수화하여 통화면과 무역면에서 또는 품목별, 환거래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환율을 달리하는 제도로 개발도상국에서 수입제한을 위해서 적용함

14) 대총자금은 미국의 대외원조 공여조건에 따라 피원조국 정부가 특별계정으로 적립해야했던 자금. 미국은 1948년 마셜플랜의 「경제협력법(Economic Cooperation Act)」이 규정하는 쌍무협정에 의거하여 피원조국에 적립된 대총자금 중 5%를 전략물자 구입 및 미국 정부 파견기관의 제 비용을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95%를 원조국인 미국 정부와 합의하에 피원조국의 경제재건에 사용하도록 함. 따라서 대총자금은 무상증여이지만 원조국의 동의 없이는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총자금 적립제도를 통하여 원조국은 피원조국의 경제 재건과정에 영향력을 행사

15) 1945~1960년 우리나라가 받은 총원조액은 29억달러이며 이중 미국원조가 80% 이상을 차지함

[원조자금 도입규모(1945~1960)]

(단위: %)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평균
원조/수입	58.3	73.9	69.3	76.1	86.6	84.9	73.1	71.4	74.2
원조/GNP	7.5	5.4	6.8	10.0	10.4	9.1	7.4	9.0	8.2
대총자금/총세입	11.9	29.9	46.5	-	52.9	51.5	41.6	34.6	38.4

자료: 김적교, 『한국의 경제발전』, 2012, p.15

■ 1960년대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정책으로 경제기반을 조성

- 수출에 우호적인 금융정책¹⁶과 고금리 정책¹⁷, 외환 배정, 조세유인 등을 통해 수출산업을 지원하였으며, 공공투자를 통해 기간산업을 건설하여 경제기반을 조성
 - 한일국교 정상화(1965년)¹⁸로 일본 상업차관 및 직접투자를 유치
- 노동집약적 공업화에 초점을 둔 정부주도형 개발을 시행하여 제조업 성장률이 17%로 높아짐

■ 1970년대 중화학공업 중심의 제조업에 기반해 경제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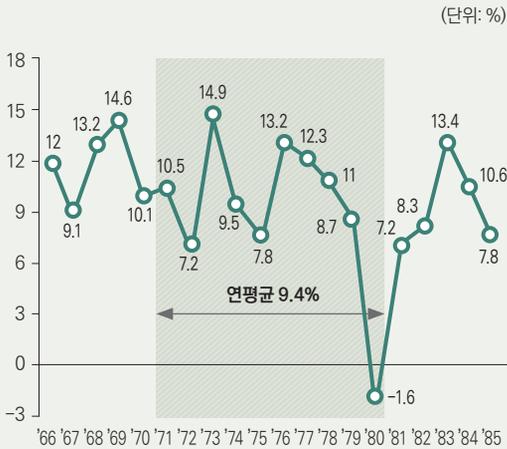
- 대외부문에서 자유화와 개방화, 금융부문에서는 정책금융의 강화 및 수출주도형 중화학공업화 정책을 정부가 주도
 - 중화학공업(전자, 기계, 철강, 조선, 석유화학, 비철금속 등)과 기간산업(철강, 비료, 정유, 전력, 통신, 수송 등)을 지원
- 중화학공업은 1971~79년 연평균 20% 성장하여 제조업 성장(18.2%)을 주도하였고 1980년 1인당 국민소득은 423만원으로 크게 증가
 - 장기 저리의 정책금융 지원, 외자 조달에 대한 정부 보증, 주요 산업에 대한 조세감면과 인력공급을 위한 교육기관 확대,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출연연구소를 설립

16) 1965년에 은행의 일반대출금리는 16%에서 26%로 인상했으나 수출금융금리는 8%에서 6% 까지 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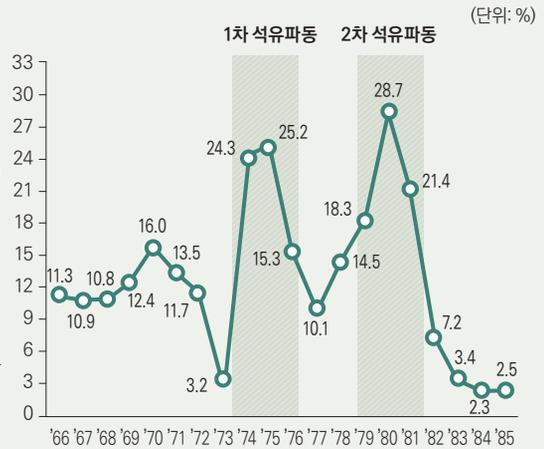
17) 금리현실화 조치(1965.9.30): 물가상승률보다 예금금리를 높이기 위해서 1965년에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30%로 인상함. 당시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실질금리로 인해 저축성예금이 획기적으로 증대. 1965년 말까지 3개월간 50%가 증가하였고, 1969년 말까지 매년 2배 증가. 그 결과 GDP 대비 저축성예금의 비율은 1964년 말 2%에서 1969년 말 21%로 상승

18)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를 통해 무상자금 3억달러, 유상자금 2억달러, 청구권자금 3억달러를 받음

[1970년대 경제성장률 추이]



[1차, 2차 석유파동 전후 물가 변화]



- 차관 중심의 외자도입정책으로¹⁹ 국내 기업의 육성과 성장을 촉진하여 자본축적에는 기여하였으나 기업의 부채비율이 급증하고 재무구조가 악화하는 부작용 발생
- 1차, 2차 석유파동으로 세계 경제뿐 아니라 국내경제에 충격
 - 석유파동 기간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물가불안 심화

■ 1980년대 금융·외환 등에서 자유화·개방화를 추진하며 시장기능이 개선

- 1980년대 금융(규제완화), 외환(환율 현실화), 무역(자유화), 산업정책(공업발전법 제정) 등에서 자유화 및 개방화를 추진하는 등 시장기능 활성화
- 1980년대는 정부주도에서 시장주도로 가는 과도기로 민간주도의 안정, 자율, 개방에 기초를 두고 시장기능을 제고하는 방향전환이 발생
 - 수입자유화와 금융규제의 완화 등 정부개입을 줄이고자 노력하였으며, 독과점은 규제하되 산업정책은 특정산업지원에서 기술, 인력, 입지 등 기능별 지원으로 전환
- 「제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82~1986)」이 실시되고 80년대 후반에는 3저(저금리, 저유가, 저달러)로 인한 경제호황

19) 외국인투자는 1980년대까지 GDP 대비 1%를 초과하지 못하지만, 차관은 1960년대 GDP대비 3.9%, 1970년대 5.5%로 증가했으며, 1980년대에도 2.1%에 달함(김적교, 2012, p.102)

[1980년대 경제성장을 추이]



[2차 석유파동 이후 물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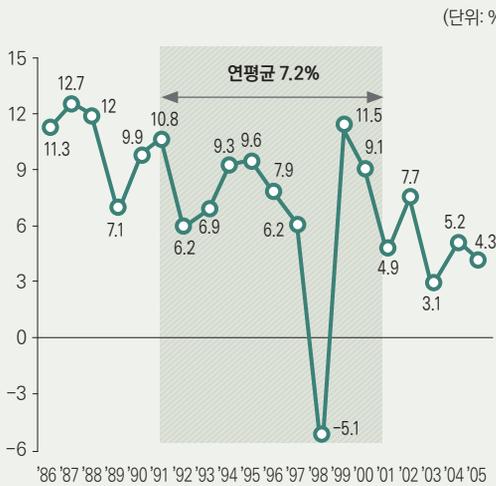
- 경제규모가 크고 복잡해짐에 따라 정부 보호와 지원만으로는 산업경쟁력을 향상하기 어려워졌으며, 주택, 보건, 의료 등 국민의 욕구증대를 고려할 필요성이 대두됨
 - 국민연금 및 최저임금제도 도입(1988), 의료보험의 전 국민 확대 실시(1989)
- 2차 석유파동의 영향으로 경성장률 둔화 및 물가불안이 나타났으나 이후 빠르게 안정화

■ 1990년대 한국경제는 규제 완화와 시장주도형 경제성장을 추진

- 1990년대에는 무역, 금융, 자본 시장에서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실시하고 시장주도형 경제성장을 추진
- 은행산업자유화를 추진하여 1980년대 후반부터 4단계에 걸쳐 금리자유화와 점진적인 자본거래 자유화를 추진
 - 1993년 금융실명제, 1995년 부동산 실명거래제도 시행
- 1997년 IMF 외환위기 발생
 - 유동성 리스크, 외환보유고 소진 등을 막기 위해 시장평균환율제도²⁰를 폐기하고 1997년 12월 자율변동환율제도 도입
 - 또한 외국인투자자들에 단계적으로 금융시장을 개방하여 1997년 12월 국내 상장채권 시장, 1998년 2월 기업어음, 상업어음 시장 개방

20) 시장평균환율제도는 환율이 시장에서 외환수급에 의해서 결정되게 하되, 일일 변동범위를 제한하는 방식

[1990년대 경제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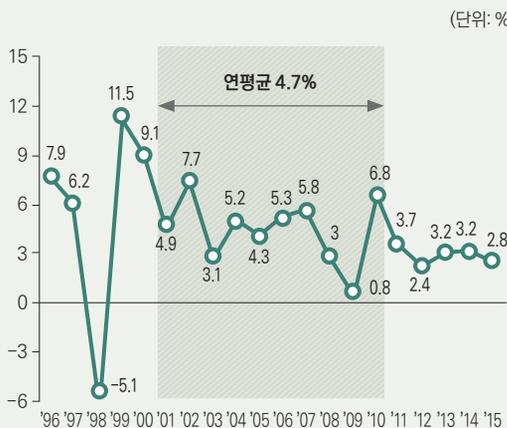
[IMF 기간 환율 및 외환보유고 추이]



■ 2000년대 우리경제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질적 성장을 추구

-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공공·기업·금융 부문 등의 구조개혁이 진행되며 경제시스템이 시장중심으로 선진화되고 재무안정성 개선
 - 대외개방을 추진하며 외국인직접투자, 자본시장, 외환거래 자유화 등이 진전되고 통화정책의 운용체계 물가중심으로 개편되고 금리기능 정상화
 - 대부분의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기업이 폐쇄 또는 인수합병 등으로 통폐 정리되었으며 공기업의 민영화 등이 추진
- 경제 구조개혁 등을 통해 추세적 성장 수준으로 빠르게 복귀
 - 2001~2010년 연평균 4.7%의 경제성장률을 나타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1~2007년 연평균 5.2%의 경제성장률을 나타냄
 - 소비자물가는 2001~2010년 중 연평균 3.2%를 나타냄
- 다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며 우리 경제에도 충격
 - 2008년, 2009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각각 3.0%, 0.8%로 하락하였으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설비투자 증가율도 동기간 -0.2%, -8.1% 기록
 - 2008년 1년간 코피스지수는 40.7% 하락

[2000년대 경제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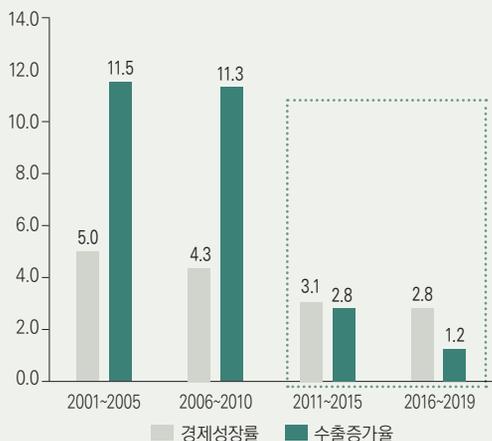
[2008년 금융위기시 환율·외환보유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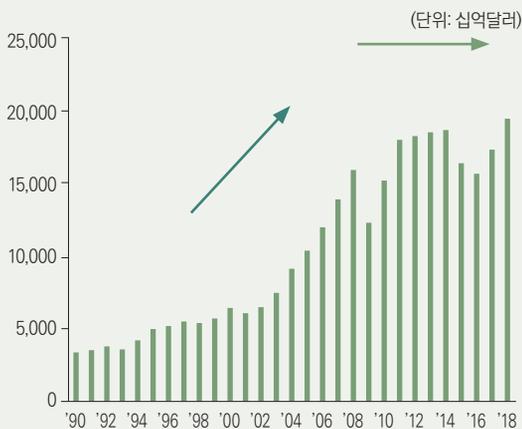
■ 2010년 이후 경제활력이 전반적으로 둔화

- 2010년대 경제성장률은 2000년대에 비해 비교적 큰 폭으로 둔화
 - 2001~2010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4.7%를 나타냈으나 2011~2020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6%로 하락
- 이는 우리경제가 높은 대외의존도를 지속하는 가운데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강화, 세계 경제 성장률 둔화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
 - 최근 석유화학 등 제조업 부문의 수출이 중국과의 경쟁으로 인해 다소 둔화되며 반도체, 전자 제품 중심의 수출 편중도 심화되는 상황
 - 또한 글로벌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구 저출산·고령화 가속화

[주요 경제지표_경제성장률, 수출증가율]



[세계 무역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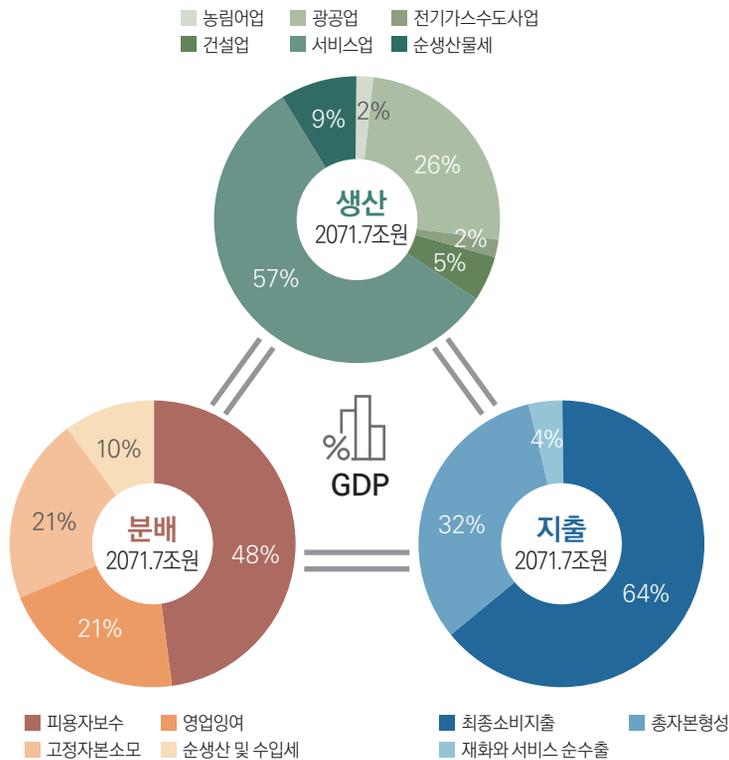


제1절 개요

■ 경제구조는 각 경제활동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 파악

- 국민소득 3면 등가 원칙에 따라 생산구조, 분배구조, 지출구조는 모두 동일한 총합을 가짐
- 생산구조는 각 경제활동부문이 만들어 낸 부가가치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며, 분배구조는 소득의 배분구조를 의미
- 지출구조는 소비, 투자, 수출입 등 지출측면의 구조를 의미

[그림 I-20] 생산구조·분배구조·지출구조



■ 2021년 국내총생산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크게 증가

- 2021년 명목GDP는 2,072조원이었으며 경제성장률은 기저효과로 인해 평년보다 높은 6.7%를 기록
 - 2020년 명목GDP는 전년대비 0.8% 증가한 1,941조원
 - 2022년 1/4분기 명목GDP는 전년동분기대비 5.4% 증가한 510조원
- 2021년 실질GDP는 1,916조원으로 전년대비 4.1% 증가
 - 2020년 실질GDP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0.7% 감소한 1,840조원
 - 2022년 1/4분기 실질GDP는 전년동분기대비 3.0% 증가한 467조원

[표 I-9] 국내총생산

(단위: 조원, %)

		2020	2021					2022. 1Q
				2021. 1Q	2021. 2Q	2021. 3Q	2021. 4Q	
명목	국내총생산	1,940.7	2,071.7	483.5	514.5	528.9	544.8	509.6
	성장률	0.8	6.7	5.1	8.1	6.6	7.2	5.4
실질	국내총생산	1,839.5	1,915.8	453.8	478.3	478.2	505.6	467.4
	성장률	-0.7	4.1	2.2	6.2	4.0	4.2	3.0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은 2021년 4,048만원으로 전년대비 7.2% 증가

-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정체된 것에 대한 기저효과로 2021년 1인당 국민총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

[그림 I-21]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



주: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 = 명목 국민총소득 ÷ 총인구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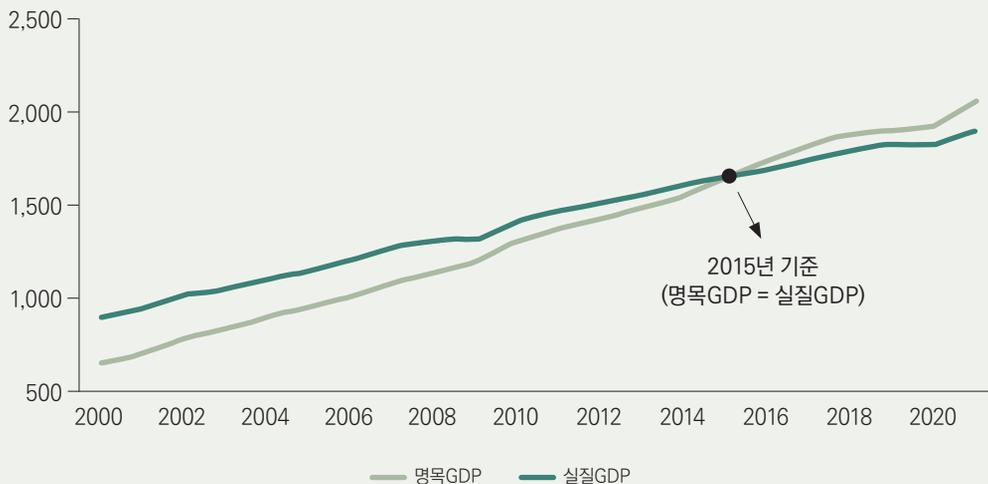
BOX 3 명목가격과 실질가격

■ 경제변수는 물가요인 고려에 따라 명목변수와 실질변수로 구분

- 명목가는 생산액을 당해연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것으로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가치를 의미
 - 명목GDP는 국민경제의 규모나 구조변동 등을 분석하는데 사용
- 실질가는 수량에 기준연도*의 시장가격을 곱하여 계산하므로 가격변동은 제거되고 수량 변동만 반영
 - 실질GDP는 경제성장 및 경기변동 등 실질적인 생산활동의 변화를 분석하는데 사용
 - ※ 기준연도는 명목금액과 실질금액이 같은 연도를 의미하며 현재 국민계정의 기준연도는 2015년을 적용
- 2021년 기준 명목GDP는 2,072조원, 실질GDP는 1,916조원을 기록
 - 기준년(2015년) 대비 물가수준이 상승²¹하였기 때문에 2015년 이후 명목GDP규모가 실질GDP 규모를 상회

[명목GDP와 실질GDP 비교 추이]

(단위: 조원)



자료: 한국은행 ECOS

21) GDP디플레이터: 2015년(100) → 2021년(108.1)

■ 물가요인을 고려하기 위해 GDP디플레이터를 사용

- GDP추계시에는 국민소득에 영향을 주는 모든 물가요인을 포괄하는 물가지수인 GDP 디플레이터 개념을 사용
 - GDP추계시 이용되는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수출입물가지수, 임금, 환율 등 각종 가격변수를 포함
- GDP디플레이터는 국민계정 추계결과 사후적으로 계산되는 물가지수로서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누어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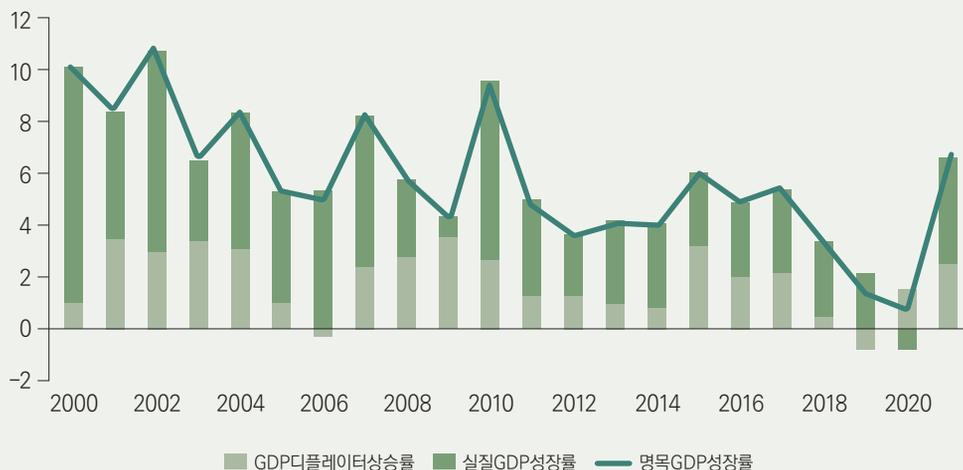
$$\text{GDP 디플레이터} = \frac{\text{명목 GDP}}{\text{실질 GDP}} \times 100$$

■ 명목GDP성장률은 GDP디플레이터상승률과 실질GDP성장률의 합

- 2021년 명목GDP성장률은 6.7%로 실질GDP성장률 4.1%와 GDP디플레이터 2.5%로 구성
 - 명목GDP성장률 = 실질GDP성장률 + GDP디플레이터상승률

[명목 및 실질GDP성장률과 GDP디플레이터상승률]

(단위: 전년대비, %)



자료: 한국은행 ECOS

제2절 생산측면 경제구조

○ **생산GDP** = 총부가가치 + 순생산물세(생산 및 수입세 - 생산물보조금)

■ 생산측면 경제구조는 각 경제활동이 만들어낸 부가가치의 비중을 의미

- 생산GDP는 총부가가치와 순생산물세의 합으로 구성
 - 총부가가치는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서비스업의 생산활동 부가가치를 의미
- 총부가가치(gross value added)는 생산활동에 의해 새로이 창출된 가치로 경제주체별 산출액의 합에서 중간소비(중간투입)를 차감하여 산출
 - 총부가가치는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생산 및 수입세와 보조금의 합과 동일

[표 I-10] 생산GDP의 구성

(단위: 조원)

	분류	포괄범위	2021년(명목)
총부가가치	농림어업	재배업, 축산업, 임업, 어업	37
	광업	석탄·원유·천연가스채굴업, 금속광업, 비금속광업	2
	제조업	음식료제품제조업, 섬유·가죽제품제조업, 목재·종이·인쇄·복제업, 코크스·석유정제품제조업, 화학물질·화학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컴퓨터·전자·광학기계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기계·장비제조업, 운송장비제조업, 기타제조업·산업용장비수리업	527
	전기·가스·수도업	전기업, 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36
	건설업	건물건설업, 토목건설업, 전문건설업	107
	서비스업	도소매·숙박음식업, 정보통신업, 사업서비스업, 문화·기타서비스업	1,180
순생산물세	생산 및 수입세	생산물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취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기타생산세: 재산세, 인지세, 종합부동산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182
	보조금	생산물보조금, 기타생산보조금	

주: *는 재원별로 생산물세, 기타생산세, 경상세를 나누어 배분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 순생산세(net taxes on production)는 생산 및 수입세(생산물세와 기타생산세)에서 생산물보조금을 제한 값
 - 생산물세는 생산자가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 판매 또는 수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음
 - 기타생산세는 생산에 이용된 토지, 건물 등 자산의 소유 또는 이용에 대한 세금으로 재산세, 인지세 등이 있음
 - 생산물보조금은 정부가 기업의 생산활동 수준이나 생산, 판매 또는 수입한 재화 및 서비스의 양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기업에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경상적 지급액

■ 2021년 명목GDP는 2,072조원이고 이 중 총부가가치는 1,890조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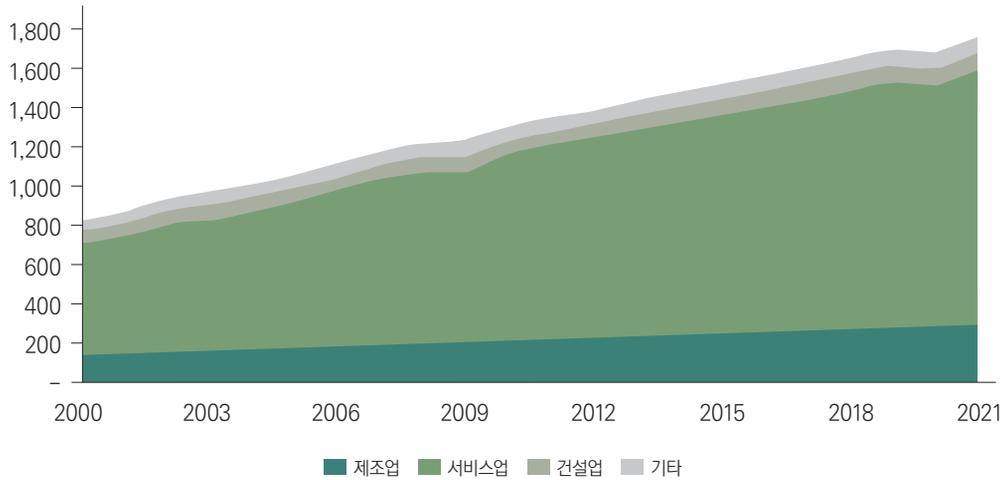
- 총부가가치 중 경제활동(산업)은 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농림어업, 광업 순으로 구성
 - 서비스업이 1,180조원(GDP 대비 57.0%)으로 가장 많고, 제조업 527조원(25.5%), 건설업 107조원(5.2%),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37조원(1.8%), 농림·어업 37조원(1.8%), 광업 2조원(0.1%)임

■ 2000년 이후 실질GDP는 고부가가치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성장

- 2021년 제조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517조원(실질GDP 대비 27.0%)으로 2000년 이후 연평균 4.4% 증가하여 실질GDP의 성장률 3.6%를 상회
 - 한국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들어 고부가가치의 제조업 비중이 증가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임
 - 반도체를 포함한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화학물질 및 제품, 운송장비, 기계장비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특정 산업의 집중도가 상승
 -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독일('20, 19.3%), 일본('20, 22.7%)에 비해 높은 수준

[그림 I-22] 산업별 실질부가가치 추이

(단위: 조원)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국민소득통계

- 서비스업은 2021년 기준 1,075.4조원(실질GDP 대비 56.1%)으로, 2000년 이후 연평균 3.8% 증가하여 실질GDP의 성장률을 상회
 - 고부가가치 산업인 금융 및 보험업, 사업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의료 및 보건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의 비중이 감소

[표 I-11] 산업별 비중 추이

(단위: 실질GDP 대비, %)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2000년 이후 증가율
제조업	3.7	5.9	11.7	16.8	19.8	24.3	26.7	26.6	4.4
서비스업	59.7	55.0	54.4	53.5	54.8	55.0	55.4	56.2	3.8
건설업	5.2	8.1	11.8	12.1	11.2	6.7	5.0	4.6	1.3
농림어업	30.7	25.4	13.8	7.8	4.0	2.5	2.0	1.7	0.9
전기·가스·수도사업	0.2	0.3	0.8	1.5	2.4	2.8	2.5	2.5	3.3
광업	3.1	4.8	3.3	1.7	0.6	0.3	0.1	0.1	-2.7

주: 1950년대는 1953년~1959년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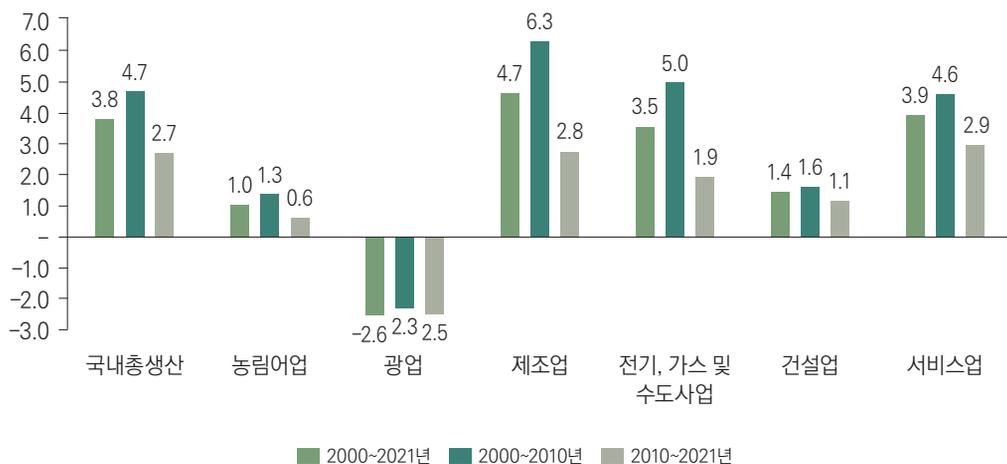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2010년 이후 제조업의 성장세는 유지되었으나 성장률은 크게 둔화

- 경제활동별 실질GDP는 제조업의 연평균 증가율이 2000~2010년 동안 6.3%였으나 2010~2021년 동안 2.8%로 3.5%p 하락
- 제조업이 그동안 자본축적과 양질의 노동투입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왔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내외 경제 불안정과 수익성 악화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된 데 기인

[그림 I-23] 산업별 실질부가가치 연평균 증가율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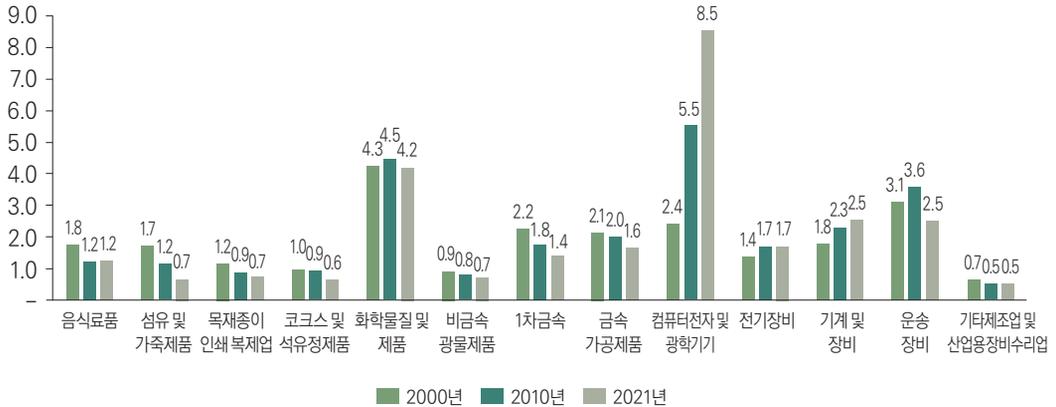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제조업의 경우 반도체를 포함한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의 비중이 크게 증가

-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화학물질 및 제품, 운송장비, 기계장비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특정 산업의 집중도가 상승
 - 특히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의 비중은 2021년 기준 실질GDP 대비 8.5%로, 2000년(2.4%)에 비해 6.1%p 증가
- 이에 반해, 기계 및 장비는 동기간 0.7%p 증가에 그쳤고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은 0.3%p, 운송장비 0.6%p, 금속가공제품 0.5%p 감소

[그림 I-24] 제조업 실질부가가치 비중 추이

(단위: 실질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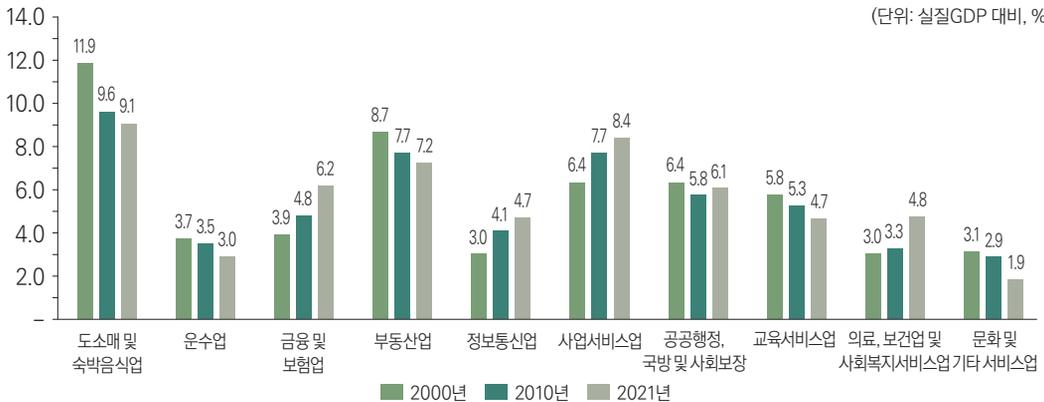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서비스업의 경우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비중이 증가

- 금융 및 보험업, 사업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의료·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
 - 금융 및 보험업의 비중이 2021년 실질GDP 대비 6.2%로, 2000년(3.9%)에 비해 2.3%p 증가하였고 사업서비스업은 2.1%p, 정보통신업과 의료·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도 각각 1.7%p 성장
-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등은 감소
 - 서비스업 중 비중이 가장 높은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2000년 실질GDP 대비 11.9%였으나 2021년 9.1%로 2.7%p 감소하였고 부동산업 1.4%p,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1.2%p, 교육서비스업도 1.1%p 감소

[그림 I-25] 서비스업 실질부가가치 비중 추이

(단위: 실질GDP 대비,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산업별 고용 추이를 살펴보면, 고용률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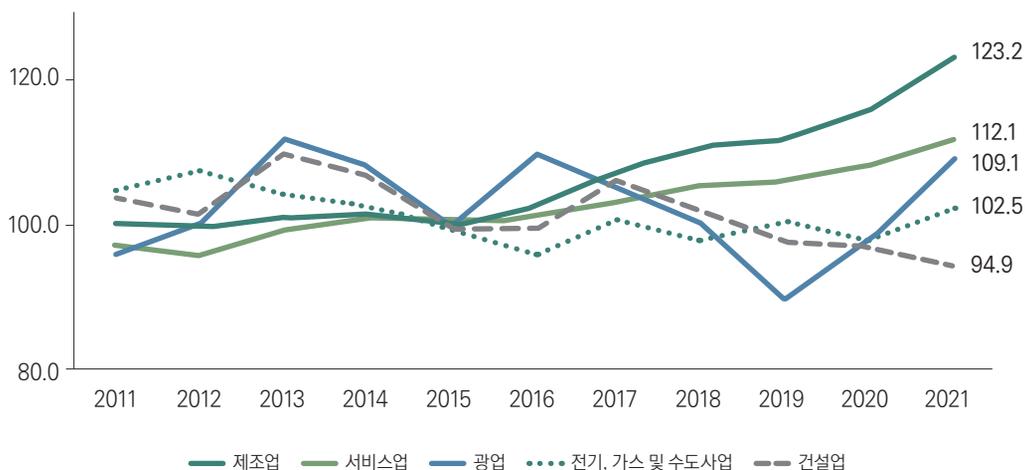
- 2021년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66.5%로 전년대비 0.6%p 상승
-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4.2%로 전년대비 2.0%p 상승
- 서비스업 종사자수는 2000년 950만명(전산업 종사자수 대비 69.8%)에서 2019년 1,685만명(74.2%)으로 연평균 3.1% 증가
- 제조업 종사자수는 2000년 333만명(24.5%)에서 2019년 412만명(18.1%)으로 연평균 1.1% 증가

■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종사자 수 증가로 저조

- 제조업의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지수²²는 2011년 100.5에서 2021년 123.2로 연평균 2.1%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 1.4% 증가

[그림 I-26] 산업별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지수 추이

(단위: 2015=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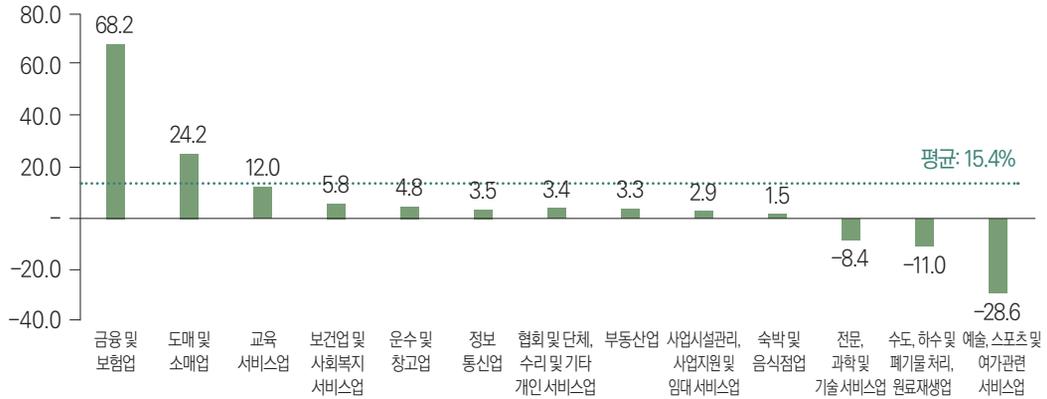
자료: 한국생산성본부

- 서비스업의 업종별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지수를 살펴보면,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하고 노동생산성이 정체되어 있고 업종 간 편차가 큼

22)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지수 = {산출량(불변 국내총생산(GDP))지수/노동투입량지수(근로자수×근로시간수)}×100

[그림 I-27] 서비스업 업종별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지수 증가율 비교

(단위: %)



주: 2011~2021년 노동생산성지수 연평균 증가율

자료: 한국생산성본부

- 이는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종사자수가 증가한 데 반해 서비스업의 R&D 투자 비중이 저조한 데 기인
 - 서비스업 R&D 투자 비중은 2015년 기준 8%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독일('15, 14%), 일본('18, 12%)을 하회할 뿐 아니라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이 한국과 비슷한 포르투갈(30%)과 비교해도 상당한 차이를 보임²³

23) 신동진·박승호·조은영,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대응전략 III: 지속성장을 위한 산업구조변화 대응전략」, 국회예산정책처, 2020, 23쪽.

제3절 분배측면 경제구조

○ 분배GDP = 피용자보수 + 영업잉여 + 고정자본소모 + 순생산 및 수입세

■ 분배측면 경제구조는 생산과정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분배를 제시

- 피용자보수(compensation of employees)는 생산과정에서 피고용자가 제공한 노동을 대가로 고용자로부터 지급받는 현금 또는 현물형태의 급여와 피고용자를 위한 사회보장기금, 연금 및 보험에 납부한 고용주 부담금
- 영업잉여(operating surplus)는 생산활동에 자본을 제공한 대가를 받는 이익으로 '기업 및 재산소득'으로도 불림
 - 이자, 임료, 기타 재산소득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
- 고정자본소모(consumption of fixed capital)는 고정자산이 생산에 사용되면서 물리적 감소 및 손실 등으로 감소된 가치의 화폐평가액
 - 국민계정의 고정자본소모는 경제적 의미의 자산가치 감소를 의미하며, 투자축진, 조세감면 등의 목적으로 기록하는 기업회계상의 감가상각(depreciation)과는 차이가 있음

[표 I-12] 분배GDP의 구성

(단위: 조원)

분배측면	구성	2021년(명목)
피용자보수	임금 및 급여, 현금 임금 및 급여, 현물 임금 및 급여	993
	고용주 부담 사회부담금, 실제 사회부담금, 의제 사회부담금	
영업잉여	법인, 생산과정에서 발생된 잉여	435
	가계가 소유한 비법인기업, 혼합소득	
고정자본소모	자산가치 감소분의 화폐평가액	432
순생산 및 수입세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판매 또는 사용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에서 보조금을 제외	211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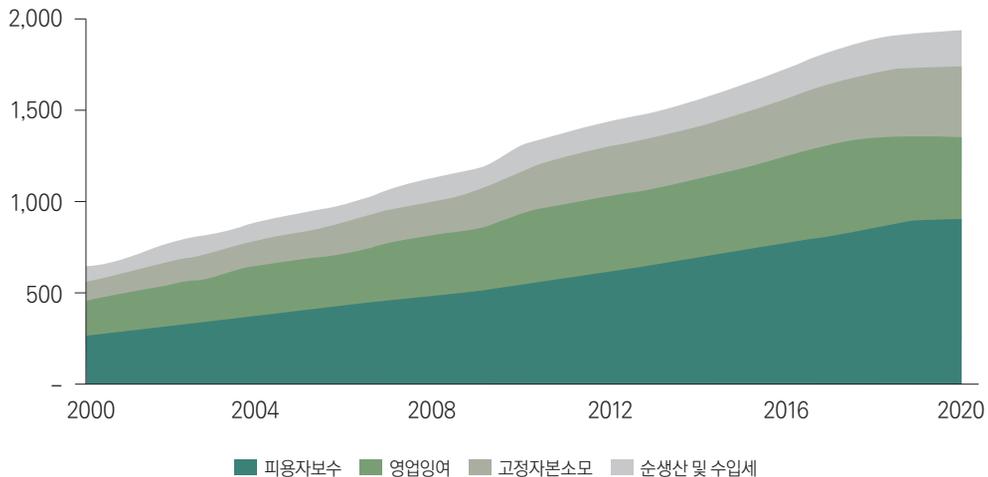
- 생산 및 수입세(taxes on production and imports)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판매 또는 사용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생산물세와 기타생산물세
 - 생산물세는 생산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배달, 판매, 이전 또는 기타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동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
 - 기타생산세는 생산에 사용된 토지, 건물, 기타 자산의 소유 또는 이용에 대한 조세와 고용된 노동력 또는 피용자보수에 대한 조세
 - 보조금(subsidies)은 정부가 정책목적으로 생산자의 생산비용 일부를 부담한 것으로 유가보조금과 같이 제품의 시장가격 인하나 산업진흥을 위한 지원금을 의미

■ 2021년 명목 분배GDP는 2,072조원이고 국민총소득은 2,095조원임

- 분배GDP는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순생산 및 수입세로 구성
 - 2021년 기준 피용자보수는 993조원(GDP 대비 47.9%)으로 가장 많고, 영업잉여 435조원(21.0%), 고정자본소모 432조원(20.9%), 순생산 및 수입세 211조원(10.2%)로 구성
- 국민총소득은 2,095조원으로 분배GDP에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더하여 구함
 -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23조원으로 국외순수취피용자보수(-0.8조원)와 국외순수취 기업 및 재산소득(23.8조원)의 합으로 구성

[그림 I-28] 분배GDP의 요소별 분배 추이

(단위: 조원)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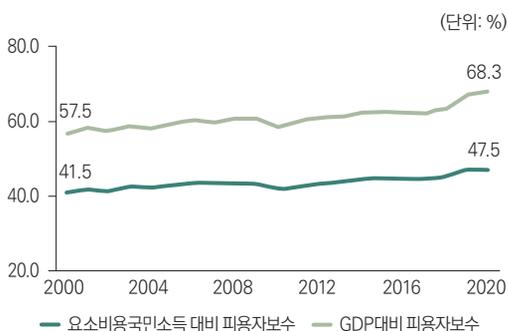
○ **피용자보수비율** = 피용자보수 / 요소비용국민소득

- 피용자보수비율은 자본소득과 비교해 피용자(임금근로자)의 소득분배 비중 변동을 살펴보는 데 유용한 지표

■ **피용자보수비율²⁴은 2010년 이후 증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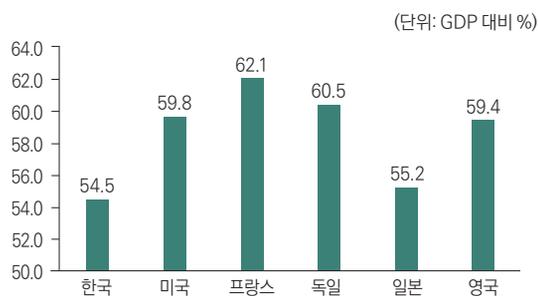
- 요소비용국민소득(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합) 대비 피용자보수로 산출되는 피용자보수비율은 2000년 57.5%에서 2010년 59.1%로 정체되어 있었으나 이후 증가하여 2020년 68.3%까지 10.9%p 증가
 - 피용자보수비율은 노동의 가격이 자본의 가격보다 높을수록, 산업이 노동집약적일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최근 피용자보수비율의 증가는 피용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 및 사회보장기금 확충²⁵에 기인
- 한국의 피용자보수비율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데 이는 영세 도소매업의 비중과 소득이 영업잉여로 잡히는 자영업의 비중²⁶이 높은데 기인

[그림 I-29] 피용자보수비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그림 I-30] 임금 및 사회보장이전의 국제비교



주: 1) 2004~2017년 평균
2) 임금 및 사회보장이전 포함
자료: UN, 통계청

24) 피용자보수비율은 분모로 사용되는 국민소득을 나타내는 변수에 따라, 자영업자의 소득을 피용자보수에 포함하느냐에 따라 상이. 본 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요소비용국민소득과 국민총생산(GDP)을 기준으로 분석. 참고로 한국은행 국민계정 상에서 자영업자의 소득은 영업잉여로 산정되고 있음. 자영업자의 소득 전체를 영업잉여로 볼 경우 전체 취업자에서 자영업자가 제외되면서 피용자보수분배율은 감소하게 됨. 따라서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피용자보수분배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아지는 경향

25) 피용자(임금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의 실제 사회부담금은 2000년 12.6조원에서 2021년 133.8조원으로 연평균 11.9% 증가하여 임금 및 급여의 연평균 증가율 6.2%를 상회

26)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2000년 27.8%에서 2020년 20.6%로 감소하였으나 2019년 기준 OECD 국가 중 6번째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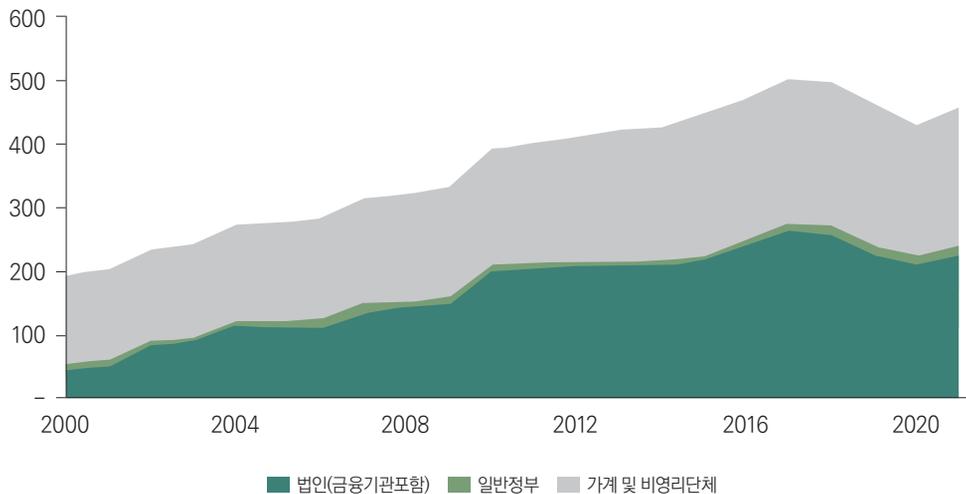
- 자영업자의 소득이 임금소득과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산출된 조정 피용자보수비율의 경우 한국이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감소세를 보임
- 이런 추세로 인해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의 비중이 2000년 67.2%에서 2020년 61.4%로 5.8%p 감소

■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영업잉여는 법인의 영업잉여에 비해 증가율이 낮음

- 피용자보수는 2021년 기준 992조원(GDP 대비 47.9%)으로, 2000년 이후 연평균 6.4% 증가
- 영업잉여는 2021년 기준 459조원(22.2%)으로, 2000년 이후 연평균 4.2% 증가
 - 법인이 받는 영업잉여는 226조원으로, 2000년 이후 연평균 8.0% 증가
-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받는 영업잉여는 221조원이며, 2000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이 2.1%로 GDP 증가율보다 낮음
-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영업잉여 중 혼합소득²⁷은 2010년 68조원에서 2019년 63조원으로 연평균 0.9% 감소

[그림 I-31] 경제주체별 영업잉여(기업 및 재산소득) 추이

(단위: 조원)



자료: 한국은행

27) 혼합소득 통계는 2015년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 이후 2010년부터 산출되고 있음

제4절 지출측면 경제구조

○ **지출GDP** = 최종소비지출+ 투자(총고정자본형성) + 순수출

■ 지출측면 경제구조는 소비주체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의미

- 민간최종소비지출은 가계의 최종소비지출과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최종소비지출의 합을 의미
- 정부최종소비지출은 생산자로서 일반정부가 생산한 산출물에서 상품과 비상품 판매수입을 차감하고 사회보장현물수혜를 더하여 구함
 - 정부소비는 사회전체에 대해 공공행정, 국방, 법률의 시행, 공중보건 등과 같은 집합서비스를 무상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행하는 지출과 의료·보건·교육 등과 같이 개별 가계에 무상 또는 낮은 가격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출을 의미
- 투자는 총고정자본형성으로 부르며 생산주체가 생산활동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유무형의 산출물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
- 순수출은 국내 거주자와 국외의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한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거래를 의미하며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함

[표 I-13] 지출GDP의 구성

부문		구성	2021년
최종소비	민간소비	가계소비: 국내소비, 거주자국외소비 (-)비거주자국내소비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소비	956
	정부소비	공공의 집합서비스(공공행정, 국방, 공중보건 등)와 개별서비스(의료, 교육 등)	376
총고정 자본형성	건설투자	건물건설, 토목건설	654
	설비투자	운송장비, 기계류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연구개발(R&D), 기타지식재산생산물	
재고증감 및 귀중품순취득		원재료 및 소모품, 재공품(work-in-process), 완성품, 재판매용재화, 귀중품순취득	11
순수출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재화수출, 서비스수출	871
	(공제)재화의 서비스의 수입	재화수입, 서비스수입	(-) 797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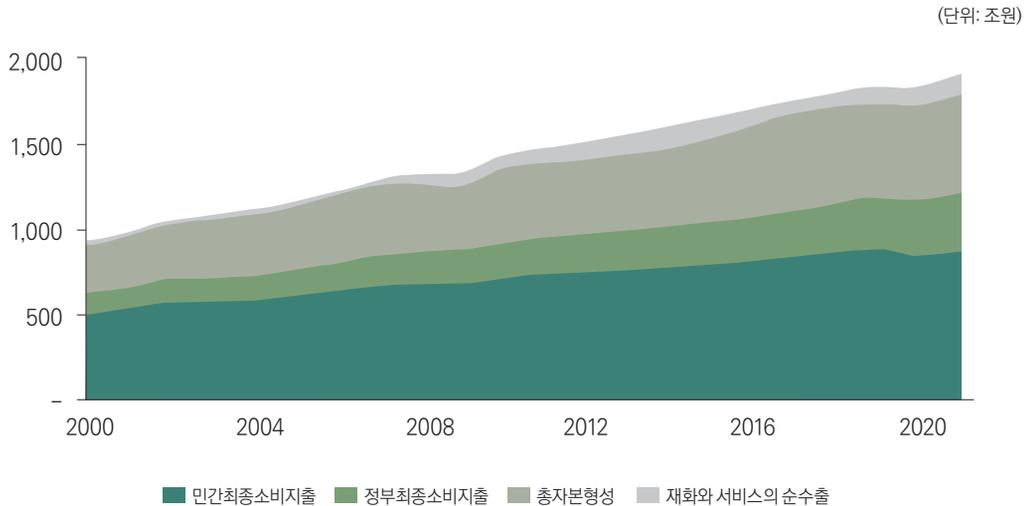
■ 지출GDP는 2021년 기준으로 2,072조원이며 소비, 투자, 순수출로 구성

- 경제주체별로 민간(가계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법인), 정부로 구분되며, 지출유형별로 최종소비지출, 총고정자본형성(건설투자·설비투자·지적재산생산물투자), 재고증감, 수출과 수입으로 구성
 - 이 중 최종소비지출이 1,332조원(GDP 대비 64.3%)으로 가장 높고 총고정자본형성이 654조원(29.9%), 재화 및 서비스의 수출이 871조원(42.0%), 재화 및 서비스의 수입이 797조원(38.5%)임
 - 총고정자본형성은 건축투자(13.8%), 설비투자(9.5%), 지식재산생산물투자(6.6%)로 구성
 - 최종소비지출에 있어서 민간과 정부의 비중은 각각 71.7%, 28.2%임

■ 2000년 이후 정부최종소비지출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상회

- 실질최종소비지출은 2000년 628조원에서 2021년 1,221조원으로 연평균 3.2% 증가하여 실질GDP의 연평균 증가율(3.6%)을 하회
- 민간최종소비지출은 2000년 512조원(실질GDP 대비 56.6%)에서 2021년 882조원(46.1%)으로 연평균 2.6% 증가에 그침
 - 이는 인구고령화, 가계부채비율과 전세가격의 상승 등으로 소비성향이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됨²⁸

[그림 I-32] 최종수요별 지출 추이



주: 실질GDP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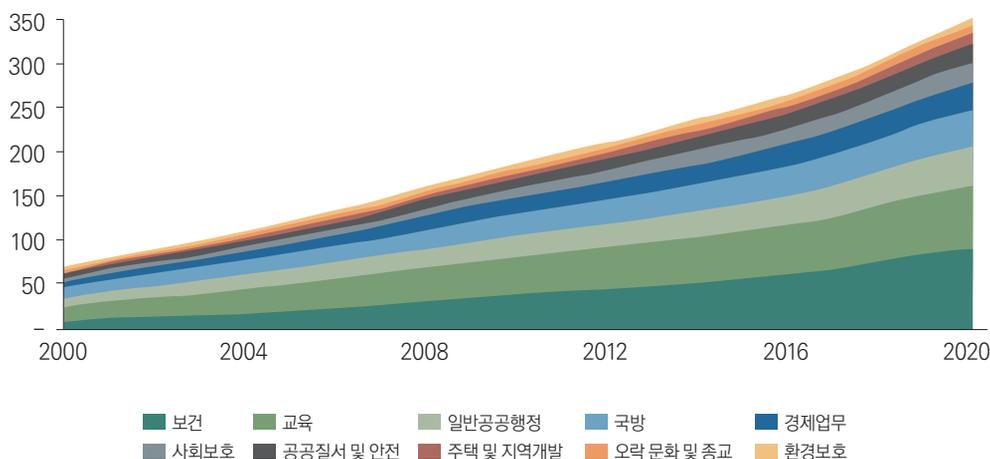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28) 김진웅·노영진, "최근 가계 소비침체의 현상 및 원인에 대한 연구," 「통계연구」 제22권 제3호, 2017, 41~67쪽.

- 정부최종소비지출(실질)은 복지지출의 확대 등으로 동기간 116조원(실질GDP 대비 12.8%)에서 338조원(17.6%)으로 연평균 5.2% 증가
 - 정부지출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보건(명목GDP 대비 26.3%), 교육(20.3%), 일반공공행정(12.7%), 국방(11.2%), 경제업무(8.9%), 사회보호(6.3%), 공공질서 및 안전(6.2%) 등으로 구성
 - 이중 보건(10.9%), 일반공공행정(8.5%), 경제업무(8.7%), 사회보호(9.1%), 주택 및 지역개발(9.9%), 오락 문화 및 종교(8.5%)의 증가율이 명목 정부최종소비지출 증가율(8.3%)을 상회

[그림 I-33] 일반정부 기능별 지출 추이

(단위: 조원)



주: 일반정부 기능별 지출은 명목GDP 기준으로 제공됨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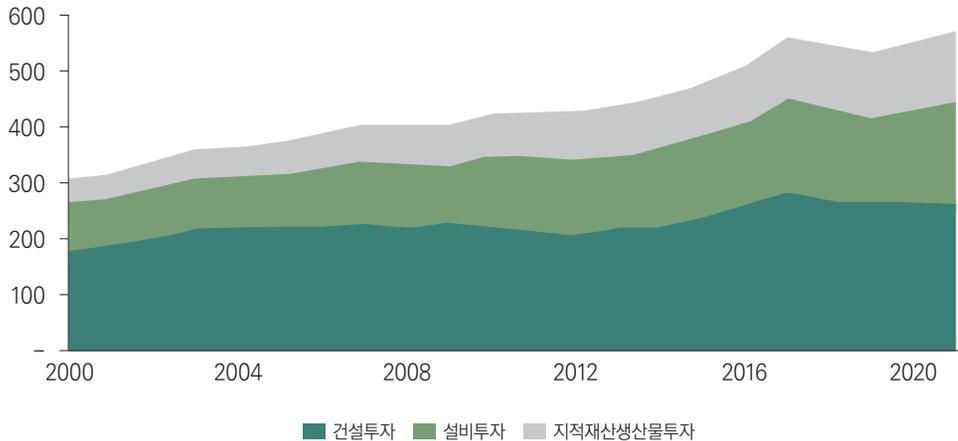
■ 총고정자본형성의 GDP 대비 비중이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감소세

- 총고정자본형성은 2000년 306조원에서 2021년 573조원으로 연평균 3.0% 증가하였으나 GDP 대비 비중은 동기간 33.9%에서 29.9%로 4.0%p 감소
- 건설투자는 2000년 179조원에서 2021년 265조원으로 연평균 3.0% 증가하였으나 GDP 대비 비중은 동기간 19.8%에서 13.8%로 6.0%p 감소
 - 2017년을 정점으로 SOC 예산 감축과 주택정책 강화 등으로 하락세
- 설비투자는 2000년 87조원에서 2021년 182조원으로 연평균 3.6% 증가하였으나 GDP 대비 비중은 동기간 9.6%에서 9.5%로 0.1%p 감소
 - 2017년에 설비투자가 크게 증가한 것은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제조업의 설비투자가 전년대비 18.2조원(20.8%) 증가한 데 기인

- 지적재산생산물투자는 신성장동력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되면서 2000년 40조원에서 2021년 127조원으로 연평균 5.6% 증가하였으며 GDP 대비 비중은 동기간 4.4%에서 6.6%로 2.2%p 증가

[그림 I-34] 유형별 최종고정자본형성 추이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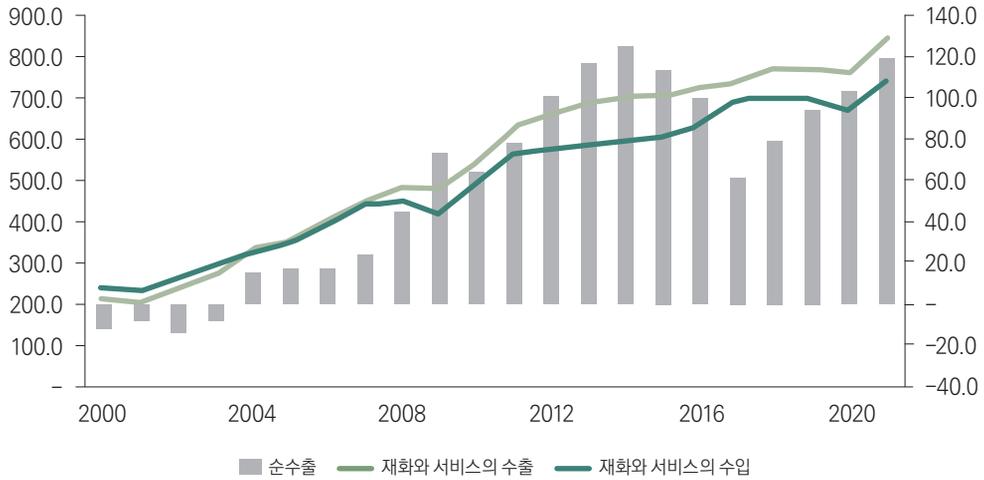
주: 실질GDP 기준
자료: 한국은행

■ 수출입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고 수출도 플러스로 전환

- 재화 및 서비스의 수출은 2000년 219조원(GDP 대비 24.2%)에서 2021년 849조원(44.3%)으로 연평균 6.7% 증가
- 재화 및 서비스의 수입은 2000년 232조원(GDP 대비 25.7%)에서 2021년 730조원(38.1%)으로 연평균 5.6% 증가
- 순수출은 2000년 -1.4조원(GDP 대비 -1.4%)에서 2014년 124.3조원까지 증가하였으나 유가 상승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로 2017년 61.7조원으로 감소
 - 이후 연평균 17.9% 증가하면서 2021년에 119.3조원에 이룸

[그림 I-35] 재화 및 서비스의 수출입 추이

(단위: 조원)



주: 실질GDP 기준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BOX 4 국가재정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정부지출은 지출GDP의 18.2%를 차지하며 경제정책의 주요 수단임

- 2021년 정부지출은 최종소비지출의 18.2%를 차지하므로 재정지출 확대는 경제성장 효과가 있음
- 최근 코로나19 등 예상하지 못한 충격으로 경기순환이 빠르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재정지출의 경기대응이 보다 적극적이어야한다는 주장과 함께 재정정책의 중요성과 성과가 강조되고 있음
 - 경제정책의 정책목표는 잠재성장률 제고와 경기대응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재정지출은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을 위한 잠재성장률 제고에 보다 가까운 것으로 알려짐

■ 재정 성과는 경제변수뿐 아니라 정치 및 예산제도의 영향력이 큼

- 임익상·하연섭(2016)은 예산과정에 있어서 제도요소와 예산투명성이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감소 등 재정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제도적 시각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¹
 - 대통령제 정치제도, 비례대표 및 혼합형 선거제도, Top-down 예산제도 등은 국가재정성과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반면, 이원집정부제 정치제도와 정당제도, 의회 예산수정권한 등은 국가재정성과 감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예산투명성의 제고를 위해 경제지표의 검증절차 강화 및 사전예산제도 도입 검토 등의 제도개선과 재정전문기관의 거시적·장기적 관점의 분석·연구기능 강화가 필요
- 백웅기(2014)는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장기재정전략을 수립하고 재정성과를 대통령에 대한 성과와 연계하도록 재정운용시스템을 바꿔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을 높여야한다고 주장²
 -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경기적 요인보다는 주로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므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기부양보다는 잠재성장률 제고에 재정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함

자료: 1) 임익상·하연섭, "국가재정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의원논총」 제11권 1호, 2016

2) 백웅기, "저성장·고령화 시대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정책과 제도의 개선방향," 「예산정책연구」 vol.3, no.1, 2014

Economic Overview of the Republic of Korea 2022



II

경제 정책

제1장 경제정책

제2장 생산 관련 주요 정책

제3장 분배 관련 주요 정책

제4장 지출 관련 주요 정책

제5장 성장 관련 주요 정책

제6장 금융·통화 관련 주요 정책

제7장 경제정책 종합

제1절 시장경제와 경제정책

- **시장경제(market economy)**는 경제주체들이 자기 책임하에 자유로운 영리활동으로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시장 중심의 경제체제
- **시장실패(market failure)**는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 상태를 의미
 - 개별시장에서 발생하는 미시적 시장실패와 경제전체에서 나타나는 거시적 시장실패가 있음

■ 시장경제는 가격기구를 통해 자원배분 등 경제문제를 해결

- 시장경제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생산요소 소득의 분배,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기본적인 경제문제를 시장기구를 통해서 해결
- 시장경제는 가격을 매개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도록 조정하기 때문에 가격이 곧 시장기구를 의미

■ 시장경제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시장실패가 존재

- (미시적 시장실패) 공공재, 불완전경쟁, 외부효과, 정보 비대칭성 등으로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¹⁾
 - 공공재는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소비하는 재화 및 서비스(국방, 치안 등)로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²⁾으로 인해 가격기구에만 맡길 경우 무임승차의 문제로 사회적 필요 수준보다 적게 생산될 수 있음
 - 불완전경쟁은 규모의 경제나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산업에서 독과점이 형성되는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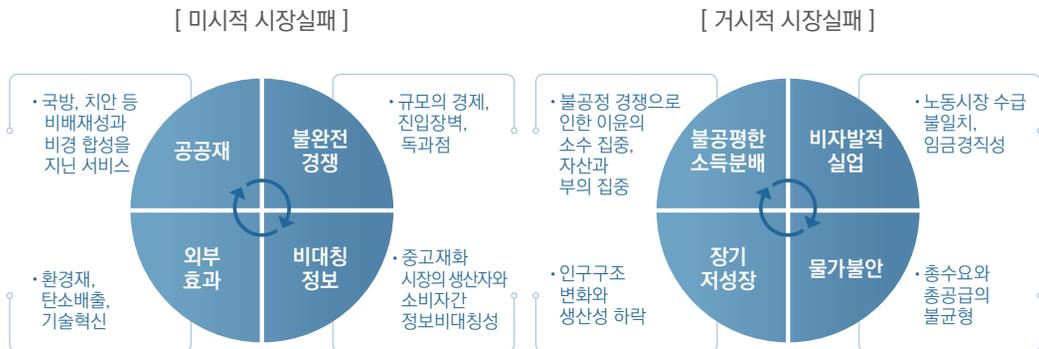
1) 임명현, 「대한민국 공공재정론」, 나눔, 2022

2) 공공재의 비경합성이란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해도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에 영향을 미치는 않는 성질을 의미하며, 비배제성이란 소비에 있어서 대가를 치르지 않더라도 소비하지 못하게 배제할 수 없는 성질을 의미함. 공공재의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공공재 공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임승차(free rider)의 문제가 발생함.

가격기구에만 맡길 경우 사회적 필요 수준보다 과소 생산되거나 소비자 편익 감소와 불공정경쟁이 발생할 수 있음

- 외부효과는 시장 내 경제활동이 시장 밖에 미치는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을 의미하며, 자신의 경제행위가 제3자에게 이득 혹은 손실을 초래해도 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필요 수준보다 과소 혹은 과다생산되는 경향이 있음
- 정보 비대칭성은 중고재화 시장처럼 시장참여자 간 정보격차로 시장형성이 어렵거나 형성되더라도 우수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음
- (거시적 시장실패) 개별 시장에서는 효율적이더라도 경제 전체적으로 소득, 부, 실업, 물가, 성장이 양극화되거나 불안정한 상태
 - 불공평한 소득분배와 부의 집중은 사회적 양극화 등의 문제를 발생
 - 노동시장의 수급불일치와 임금의 경직성으로 비자발적인 실업이 발생하고, 총수요와 총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 있음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생산성 하락은 잠재성장률을 지속적으로 하락시켜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음

[그림 II-1] 시장실패



자료: 임명현(2022)을 참조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경제정책(economic policy)**은 정부가 경제분야에 취하는 행위들을 가리키며, 특히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규제와 재정을 통해 경제부문에 개입하는 계획적인 행동방침을 의미하기도 함

■ 경제정책은 정부가 경제분야에 취하는 행위들을 의미

- 경제정책은 시장실패의 교정을 위한 정부의 계획적인 행동방침을 의미하기도 함³
 -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상존할 때,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기관 혹은 정부가 시장경제에 개입하여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것이 정당하게 됨
- 경제정책은 정부가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규제와 재정을 통해 경제부문에 개입하는 계획적인 행동방침이라고 할 수 있음
 - 정부개입은 법률 및 제도와 같은 강제 규범이 필요하며, 이러한 강제 규범은 민주적 정치 과정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경제정책은 정치적 행위로도 볼 수 있음
 - 국가기관은 민주적 정치과정을 통해 권한과 대표성을 위임받은 정부, 의회, 공공기관과 같은 기관을 의미

■ 경제정책 목표는 경제 전체를 효율적인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임

- 경제정책을 통한 시장실패의 교정은 정부 및 공공부문이 경제를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상태로 변화시키기 위해 규제와 재정 등 적절한 수단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경제정책의 목표는 경제전체를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이며, 그 수단은 규제와 재정이고, 주체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 있음
 -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목적인 바람직한 경제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과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이를 실행시키는 주체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

■ 경제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규제와 재정으로 시장에 개입

- 규제는 법과 제도를 통해 심판자로서 시장의 공정한 경쟁규칙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감시하는 방식
- 재정은 정부가 경제주체로서 시장에 직접 참여하거나,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
 - 공공재인 치안과 국방과 같은 서비스를 정부가 재정을 통해 제공

3) 김적교·김상호(2020), 「경제정책론」, 박영사

- 외부성이 존재하여 초기 기술개발이 어려운 분야에 대하여 정부가 재정을 통해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를 간접적으로 지원
- Musgrave(1959)는 시장실패와 관련하여 재정은 자원배분, 재분배, 경제의 안정적 성장이라는 3가지 기능을 갖는다고 설명^{4,5}
 - 자원배분(미시적 시장실패의 치유): 정부가 직접 자원을 배분하여 시장의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효율성을 증진
 - 재분배(사회통합): 정부가 재정을 통해 소득을 적정하게 재배분함으로써 분배의 불공정 개선을 추진
 - 경제의 안정적 성장(거시 재정정책): 물가불안과 고용 불안정성 및 장기 저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아동수당·기초연금 등의 재정사업을 추진

○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자원의 최적 배분 등 시장실패를 교정하지 못하거나 기존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를 의미

■ 정부개입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정부실패도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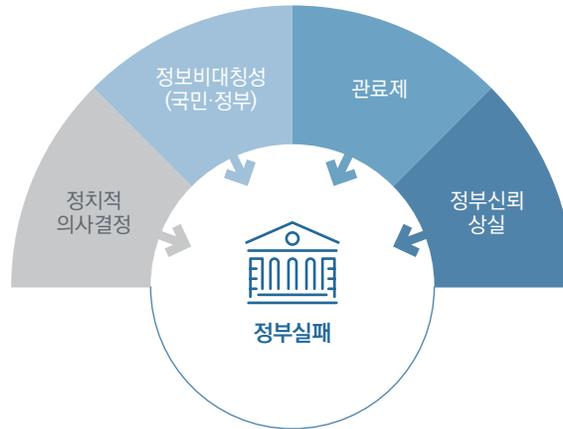
- 시장실패는 정부개입 정당성의 필요조건이지만 정부개입으로 오히려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이게 되고 분배의 불공정성이 더 악화될 수 있음
 - 시장실패가 모든 정부개입의 타당성까지 인정하는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음
- 시장 참여자들(가계, 기업, 정부) 간 정보 비대칭성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부개입(경제정책)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보장이 없음
 - 정부는 가계 및 기업과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시장에 개입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음
- 정부의 의사결정이 정치적으로 결정될 경우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나타날 수 있음
- 관료들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기보다는 개인의 이익에 충실할 경우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나타날 수 있음

4) 임명현, 「대한민국 공공재정론」, 나눔, 2022

5) Musgrave(1997)는 전통적인 3가지 기능 외에 재정의 새로운 기능으로 중앙정부 재정의 축소(downsizing)와 지방정부로의 권한이양(devolution), 세제개혁(tax reform), 재정균형(budget balance),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등을 제시하였음(서세욱(2021), 「농정과 재정」, 나눔 참조)

- 정부에 대한 신뢰성이 없을 경우 경제주체가 정부정책에 호응하지 않게 되며, 이에 따라 정부 정책은 성공하기 어려울 수 있음

[그림 II-2] 정부실패



자료: 김적교·김상호(2020)를 참조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BOX 5 정책수단으로서 공공재정의 목표와 기능

■ 재정의 3대 목표, 재정의 기능, 기능별 주요 내용(예)

- 재정은 첫째, 성장을 통한 부의 창출이라는 경제적 목표와 둘째, 재분배를 통한 사회통합 제고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표, 그리고 셋째,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함
 - 경제적 목표 달성을 위해 효율적 시장형성을 지원하고, 경제안정을 위한 경기조절과 지속 성장 기반을 구축
 -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해 취약계층 및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안정망을 제공, 경제적 약자의 자립지원, 공적연금을 포함한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제공
 - 공동체적 목표 달성을 위해 각종 위협으로부터 공동체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삶의 기반 구축, 지속가능 생태계 구축을 지원

[정책수단으로서 공공재정의 목표와 기능]

재정의 목표	재정의 기능	주요내용
경제적 목표 (성장을 통한 부의 창출)	효율적 시장형성 지원 (미시적 기능)	시장실패에 대응하여 시장효율성 제고, 기업경쟁력 강화, 경쟁과 혁신의 시장질서 확립 예) 조세감면, 보조금, 창업지원 등
	경제안정을 위한 경기조절 (거시·단기적 기능)	대내외 충격으로 인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시정 예) 총수요 확대, 고용안정, 물가안정(곡물·자원 비축, 유류세 인하)
	지속성장 기반 구축 (거시·장기적 기능)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인적·물적 자본 확충 및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 구축 예) SOC, R&D, 산업정책, 경제발전계획, 인구정책, 균형발전정책 등
사회적 목표 (재분배를 통한 사회통합 제고)	사회안전망 제공	근로능력·근로기회가 없는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 및 각종 위험에 처한 피해자 구호 예) 공공부조, 실업급여, 보험, 긴급구호
	경제적 자립지원 (생산적 복지)	경제적 약자에 대한 근로기회 부여 및 근로능력 제고에 대한 경제적 자립 지원 예) 일자리정책, 서민금융,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지원
	보편적 사회서비스 제공	공적연금(사회보험서비스), 교육·보건·보육 등 보편적 사회서비스(현물보조)
공동체적 목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 조성)	안전한 삶의 기반 구축	공동체 구성원을 각종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삶의 질 제고(공공복리 실현)의 토대 마련 예) 경찰·국방·재난안전 등 공공재 공급, 전기·가스·수도·교통·통신 등 준공공재 공급
	지속가능 생태계 구축	생태계 다양성과 공존을 위한 환경 보전 및 기후변화 등으로 파괴된 생태계 복원 예) 생물다양성, 동물복지, 생태계 복원 정책

자료: 임명현, 「대한민국 공공재정론」, 나눔, 2022, 72쪽

제2절 경제정책의 목표 및 수단⁶

○ **경제정책의 목표**는 정책을 통해 국가의 경제가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의미하며, 사회의 규범적 당위성이 반영

1. 경제정책 목표

■ 경제정책의 목표는 사회적 기본가치 달성을 통한 사회후생 극대화

- 사회가 달성하고자 하는 기본가치로 효율성, 공정성, 안전성, 지속가능성 등 사회후생(social welfare)을 들 수 있음⁷
- (효율성) 시장경제가 경쟁과 혁신이 작동할 수 있도록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 (공정성) 사회의 안정과 통합을 위해, 창출된 부를 사회적 합의에 따라 약자에게 재분배하여 사회통합을 제고
- (안전성) 공동체 구성원의 안정적 경제활동에 필요한 기본적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험 발생 시 건강과 소득을 보장
- (지속가능성) 기후변화와 인구구조변화 등에 대한 우려로,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가의 역할 강조

6) 경제정책의 목표 및 수단은 아래의 문헌들을 바탕으로 발췌 정리함.

1. 김호균, 「경제정책론」, 청록출판사, 2016
2. 김적교·김상호, 「경제정책론- 한국의 경제정책」, 박영사, 2020
3. 임명현, 「대한민국 공공재정론」, 나눔, 2022

7) 김적교·김상호(2020), 김호균(2016), 임명현(2022)에 제시된 목표를 재구성

■ 사회적 기본가치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구체적인 경제목표를 설정

-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권한 또는 의무와 현재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여 아래의 7가지 경제목표를 제시
 - 경제정책의 목표는 경제안정, 경제성장, 대외무역 육성, 적정 소득분배, 고용증진, 지속가능성장, 균형발전으로 설정
 - 경제정책은 헌법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119조, 제123조, 제125조, 제127조를 헌법적 근거로 함

[표 II-1] 경제정책의 헌법적 근거

경제목표	헌법적 근거
1. 경제안정	헌법 제119조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2. 경제성장	헌법 제119조 ② 헌법 제127조 ①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3. 대외무역 육성	헌법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4. 적정한 소득분배	헌법 제119조 ② 헌법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5. 고용 증진	헌법 제119조 ② 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간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6. 지속가능성장	헌법 제119조 ② 헌법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7. 균형발전	헌법 제119조 ② 헌법 제123조 ②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주: 경제목표의 헌법적 근거가 중복되는 제119조 ②의 경우, 조문을 최초 한번만 기재하였음.

8) 헌법 제35조는 환경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광의로 해석할 경우 지속가능성장의 근거로 볼 수 있음.

■ 경제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 부문별 경제정책이 설정

- 경제목표의 달성을 위해 생산, 분배, 지출, 성장, 금융·통화 부문으로 정책의 부문을 설정하고, 각 부문별 경제정책을 아래와 같이 제시

[그림 II-3] 경제정책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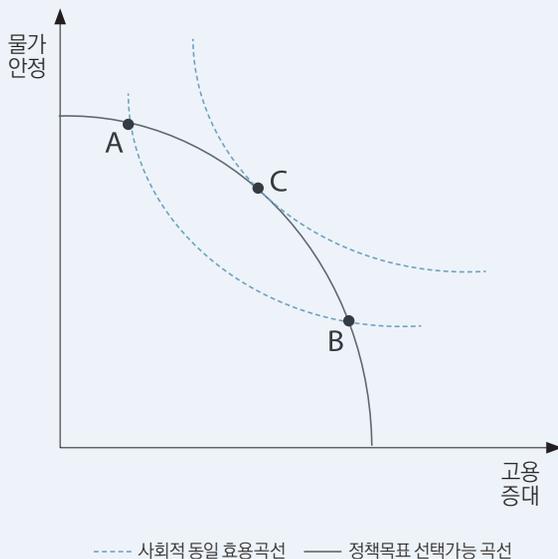


주: 경제정책 부문은 국민경제체계를 반영하여 생산, 분배, 지출을 설정하였고, 현실을 반영하여 성장과 금융·통화 부문을 추가하였음
 자료: 김호균(2016), 김적교·김상호(2020), 임명현(2022)을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경제정책은 목표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설정할 필요

- 경제정책은 일반적으로 다수의 목표를 추구하며, 목표 간 독립적, 보완적, 대립적 관계가 성립
 - 독립적 관계는 하나의 목표의 실현이 다른 목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의미
 - 보완적 관계는 하나의 목표 실현이 다른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경우를 의미
 - 대립적 관계는 한 목표의 실현을 위해 다른 목표를 희생하거나 포기해야 하는 경우를 의미
- 경제목표가 독립적 또는 보완적 관계인 경우 여러 정책목표를 동시 추구하는 것에 문제가 없으나, 대립적인 경우 최적선택이 필요([BOX 6] 참조)

BOX 6 정책목표의 최적 선택



■ 대립적인 정책목표의 최적선택은 정책목표 선택가능곡선과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사회적 동일효용곡선이 일치하는 점이 최적선택이 됨

- 예를 들어, 물가안정과 고용증대는 대립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의 목표를 중시할 경우, 다른 목표를 일부 포기해야 함
 - 고용증대를 위해선 경기가 활성화 되어야 하지만 지나친 경기 활성화는 물가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목표는 대립적
 - 따라서 정책목표 선택가능곡선은 원점에 대해 오목한 형태를 나타냄(검정색 실선)
- 반면, 물가안정과 고용증대는 모두 사회적 효용을 증가시킴
 - 따라서 동일한 수준의 사회적 효용을 가져오는 곡선은 원점에 대해 볼록한 형태를 나타냄(파란색 점선)
 - 사회적 동일 효용곡선은 원점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더 큰 효용을 지님
- 정책목표 선택가능곡선 위에 한 점을 선택할 경우,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회적 선호함수와 일치하는 점인 C를 선택하는 것이 최적선택이 됨
 - 만약 정책목표가 A점 또는 B점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정책적 목표를 조정하여 C점으로 이동하게 되면 사회적 효용을 증대시킬 수 있음

2. 경제정책 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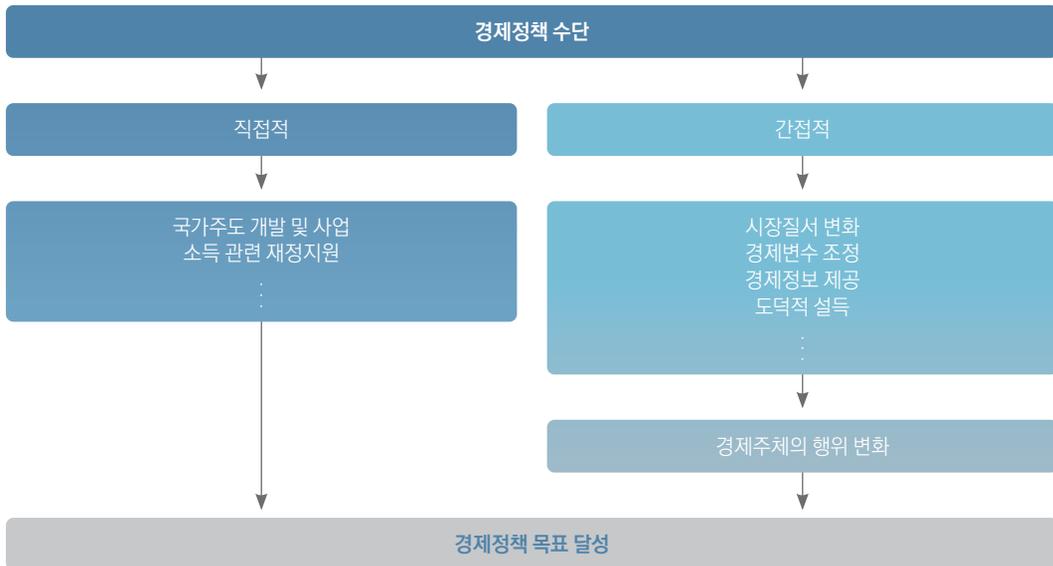
- **경제정책의 수단**은 경제정책 목표의 실현을 위해 국가가 선택하고 통제하는 경제적 또는 경제 관련 행위를 의미
 - 경제 관련 법·제도의 변경, 국가의 시장참여, 경제변수의 가격 및 물량 통제 등이 경제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

■ 경제정책의 수단은 「직접적」 성격과 「간접적」 성격을 지님⁹⁾

- 「직접적」 성격을 지닌 경제정책 수단은 경제정책 목표에 직접 영향을 미침
 - 국가 주도의 개발 및 사업, 소득 관련 재정지원(조세감면, 보조금 및 이전소득 지원) 등은 직접적 성격이 강한 수단
 - 예를 들면,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고용증진 목표로 재정지원이라는 수단을 활용한 것이며, 직접적 성격이 강함
- 「간접적」 성격의 경제정책 수단은 민간 경제주체의 행위에 영향을 미쳐 경제목표 달성에 기여
 - 경제정책 수단을 통해 경제정책의 목표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를 유도하거나 행위의 효율성을 제고
 - 시장질서(공정거래법 등) 변화, 경제변수(기준금리, 조세 및 금융지원 등) 조정, 정보 제공과 도덕적 설득 등은 간접적 성격이 강한 수단
 - 예를 들면, 최근 미 연방준비은행 및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경제안정을 목표로 수단인 기준금리를 활용한 것이며 간접적 성격을 지님

9) 모든 수단이 하나의 성격만을 지니게 되는 것은 아니며, 두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수단도 다수 존재

[그림 II-4] 경제정책의 수단



자료: 김호균(2016)의 그림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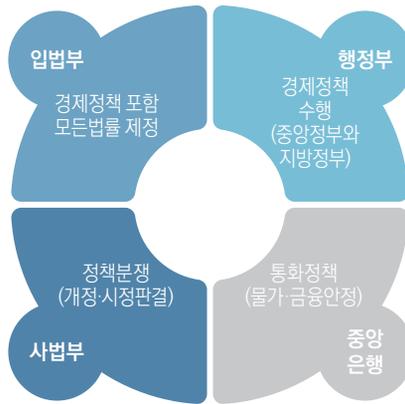
■ 합리적 경제정책 수단 투입을 위해 「목표정합성」과 「체제정합성」의 고려 필요

- 「목표정합성」은 어떤 정책수단을 채택할 때, 그 정책수단이 정책의 기본 목표에 부합해야 함을 의미
 - 경제정책은 일반적으로 복수의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택된 정책수단이 목표에 부합하는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함
- 「체제정합성」은 정책수단이 그 사회의 체제나 기본질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을 의미
 - 예컨대, 가격 및 임금통제와 같은 조치는 시장경제질서와 상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채택에 신중해야 함

3. 경제정책의 주체¹⁰

- **경제정책 주체**는 경제정책의 의사결정이나 집행을 담당하는 국가(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을 의미함
 - 경제정책의 주체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앙은행

[그림 II-5] 경제정책의 주체



■ 경제정책의 주체는 크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중앙은행으로 구분

- 경제정책은 시장실패를 교정하고자 하는 행위이므로 역량이 있고, 책임있게 수행할 주체가 분명해야 함
- 경제정책 분야가 다양하고 정책의 결정과 수행에 다양한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정책을 수행하는 주체도 다양함

■ 입법부는 경제정책 의사결정의 최고 권한인 법률 제·개정권을 가짐

- 국회에서 심의, 제정, 개정되는 법률은 개별 국회의원에 의해 제안되며, 행정부는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을 집행함¹¹

10) 2장 1절 경제정책의 의미는 아래의 문헌들을 바탕으로 발췌 정리함.

김적교·김상호, 「경제정책론- 한국의 경제정책」, 박영사, 2020

김호균, 「경제정책론」, 청록출판사, 2016

11) 국회가 제정한 법률일지라도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찬성으로 다시 의결할 경우에는 법률로서 확정(헌법 제53조 제4항)

- 정부가 직접 법안을 발의할 수도 있는데, 법률안의 심의·확정은 입법부의 고유 권한임 ([BOX 7] 경제정책 입법과정 참조)
- 입법부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확정함
 - 정부는 의회에서 정한 법률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의무가 있으며,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대로 집행할 의무가 발생
 - 법률(재정수반법)은 사업계획 수립 및 소요 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로서 작용하고, 예산(법)은 구체적으로 각 사업계획과 지출계획을 승인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직접적 근거로 작용

■ 행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뉘며 법률에 따라 경제정책을 결정·집행

- 중앙정부는 대규모 공급이 이뤄질 경우 생산 단가가 낮아지는 이점이 있거나, 거래비용을 절감하거나, 국방·외교와 같은 공공재 공급
 - 예를 들어 위성시스템을 이용한 일기예보나, 공공재나 공공서비스의 제공 등은 중앙정부를 통해 공급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지방정부는 지역 발전을 위한 개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며, 지방의 도로·주택·상하수도 건설 등의 공공재 공급과 지방행정 및 공공서비스를 제공
 - 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예산집행 및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 중복 및 비효과적인 집행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 발생 가능

■ 사법부는 경제정책 관련 분쟁 발생시 합법성과 합헌성에 관하여 판결을 함

- 경제주체의 행위나 행정 규정 또는 계약조항의 합법성을 판결하고, 이에 따라 입법부와 행정부에게 개정이나 시정을 명할 수 있음

■ 중앙은행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통화정책, 화폐 발행의 고유한 권한을 가짐

- 한국은행은 물가안정(한국은행법 제1조)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중립성과 자율성, 자주성을 보장(동법 제3조)하고 있음
 - 통화신용정책을 담당함으로써 통화가치 안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침범받지 않도록 독립성이 보장됨

■ 이외에도 간접적 영향주체로 협회 및 이익단체들과 경제관련 국제기구가 존재

- 국가기관과 같은 권력독점을 가지지는 않으나 경제정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으로 정당, 협회 등의 이익단체가 존재
 - 정당은 자신이 추구하는 이념과 목표에 관해 유권자의 선택을 받고, 집권을 통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주체임
 - 협회는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조달, 가공해서 전달함으로써 제3자를 설득하고, 회원수나 조직력 등의 동원능력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여론형성을 통해 경제정책에 영향을 미침
-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해 짐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등의 국제기구가 국제무역규범이나 경제정책에 대한 조건을 강제하는 등 국내외 경제정책에 영향 미침
 - 세계무역기구는 국제무역질서 형성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상품 및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적 재산권까지 관장하여 국가 간 무역규범을 다루는 국제기구임
 - 국제통화기금은 국제통화 금융질서를 관리하기 위해 창설되었으며, 회원국이 금융위기에 처했을 때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경제정책에 대한 조건을 강제함

BOX 7 경제정책 입법과정

■ 한국의 입법과정은 법률안 입안 및 제안, 심의, 이송 및 공포를 거침

- (법률안 입안 및 제안) 국회의원이거나 정부가 법률안을 입안하여 국회에 제안(제출)
 - 제안권자(제출권자)가 법률안을 입안하여 제도적인 입법과정을 공식적으로 개시하는 과정으로 '입법준비(입법수요의 파악 및 정책조사) → 법률안 기초 → 비용추계서 등 부속 서류 작성 → 국회 제안(제출)'을 거침
- (법률안 심의) 국회가 제출된 법률안을 여러 단계의 입법절차를 거쳐 심의 의결
 - 국회에 제안된 법률에 대해 심의하는 과정으로서 입법과정의 핵심적인 단계로 '본회의 보고 → 소관위원회 심사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의 단계를 거침
- (이송 및 공포)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대통령에 의하여 공포됨으로써 법률로서 확정
 -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정부에 이송, 대통령이 공포하는 입법과정의 완결단계로 '의안 정리 → 정부이송 → 국무회의 심의 → 공포'의 과정을 거침

[한국 입법과정의 단계적 구조]



자료: 임종훈·이정은, 「한국입법과정론」, 박영사, 2021

[그림 II-6] 생산 관련 주요 현안과 경제지표

구분	현안	경제지표
제조업: 신산업 정책	➤ (1) 신산업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고기술사업군 설비투자 규모 ◦ 신제품생산 관련 설비투자 규모
	➤ (2) 미래유망신기술 R&D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유망신기술 R&D 투자 비중 ◦ 미래유망신기술 분야별 R&D 지출
	➤ (3) 기술 경쟁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시장점유율 ◦ 최고 기술국 대비 기술격차
서비스업: 중소·벤처기업	➤ (1)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별 매출액·종사자수 비중 ◦ 서비스업 중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매출액·종사자수
	➤ (2) 생산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별 제조업 생산지수 ◦ 기업규모별 서비스업 생산지수
전기·가스업: 에너지	➤ (1) 에너지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에너지 공급
	➤ (2) 에너지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에너지 소비 ◦ 주요국 1인당에너지 소비량 순위
	➤ (3) 에너지 공급 안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수입의존도 ◦ 총수입 대비 에너지 수입 비중

○ 생산측면 GDP는 총부가가치와 순생산물세의 합으로 구성

- 국민계정의 국민소득통계와 산업연관표를 통해 생산활동별 부가가치를 파악할 수 있음
- 생산GDP는 경제주체별 산출액의 합에서 중간소비(투입)를 차감한 총부가가치와 기업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생산물보조금에서 상품에 대한 간접세를 차감한 순생산물세의 합으로 구성
- 총부가가치는 경제활동별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건설업, 농림어업, 광업과 전기가스 및 수도업으로 구분

[GDP 생산부문의 구성]

부문		구성	주요 정책
총부가가치	농림어업	재배업, 축산업, 임업, 어업	
	광공업	광업, 제조업	신산업 정책
	서비스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전기가스수도사업	전기업, 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재생업	에너지·자원 정책
	건설업	건물건설, 토목건설, 전문건설	
순생산물세		생산물세, 기타생산세, (-)보조금	

○ 생산부문이 당면한 현황은 다음과 같음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창의적인 인재 육성 등 혁신성장을 목표로 투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세계시장점유율, 신산업에 대한 기술력 등에서 구체적인 성과는 미흡
- 중소기업은 2019년을 기준으로 전체 기업의 99.9%, 종사자의 82.7%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체 매출액의 48.7%, 전체 수출액의 17.9%를 차지할 만큼 대기업과 격차를 보임
-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구조,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 및 석유 비중, 낮은 에너지소비 효율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대외 경제 및 에너지 국제 가격의 변화에 취약

제1절 제조업: 신산업 정책

1. 국민계정 상 제조업

■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국민계정 상 국민소득통계와 생산계정에서 확인

- 제조업은 물질이나 구성요소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 작용을 가함으로써 신제품으로 전환하는 산업활동을 일컫음
 - 제조업은 생산물의 중량에 따라 경공업과 중공업으로 구분¹²
- 신산업 정책은 제조업 중심의 미래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의미하며, 역대 정부에서 ‘미래성장동력’ 또는 ‘혁신성장’이라고 명명됨. 신산업 정책이 기존 주력산업 관련 기술의 고도화와 연관성이 강하고 신기술의 도입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생산 부문으로 분류

■ 국내총생산 대비 제조업 생산 비중은 2011년 이후 감소하였으나 최근 반등

- 제조업 생산은 2008년 실질 기준으로 344조원에서 2021년 517조원으로 50.1% 증가
- 국민총생산 대비 제조업 생산 비중은 2011년 27.2%에서 2020년 26.3%까지 하락세를 보였으나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제조업과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을 중심으로 2021년 27.0%로 상승

[그림 II-7] 제조업 생산 추이



자료: OECD, 한국은행

1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경공업(輕工業)) 참조. 경공업에는 식료품, 음료, 담배, 가죽·가방·신발, 섬유·가죽제품, 목재·종이·인쇄 및 복제업, 펄프·종이·종이제품, 고무·플라스틱, 가구, 기타제품이 포함. 중공업에는 코크스·연탄·석유정제, 화학물질·화학제품, 의약품·물질·의약품, 비금속 광물제품, 1차 금속,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전자부품 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전기장비, 자동차·트레일러 등이 해당

2. 제조업 관련 주요 지표

가. 주요 신산업 지표

- 제조업 고기술산업군 설비투자는 의약,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통신기기, 가전, 정밀기기, 전지, 항공, 자동차의 설비투자 규모를 의미

(1) 현황

[그림 II-8] 제조업 고기술산업군 설비투자 규모



자료: 한국산업은행 「설비계획투자조사」

■ 제조업 고기술산업의 설비투자는 2017년을 정점으로 감소하였으나 최근 반등

- 제조업 고기술산업군 설비투자는 2011년 37.8조원에서 2017년 64.8조원으로 증가
- 이후 2019년까지 54.4조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21년 69.5조원으로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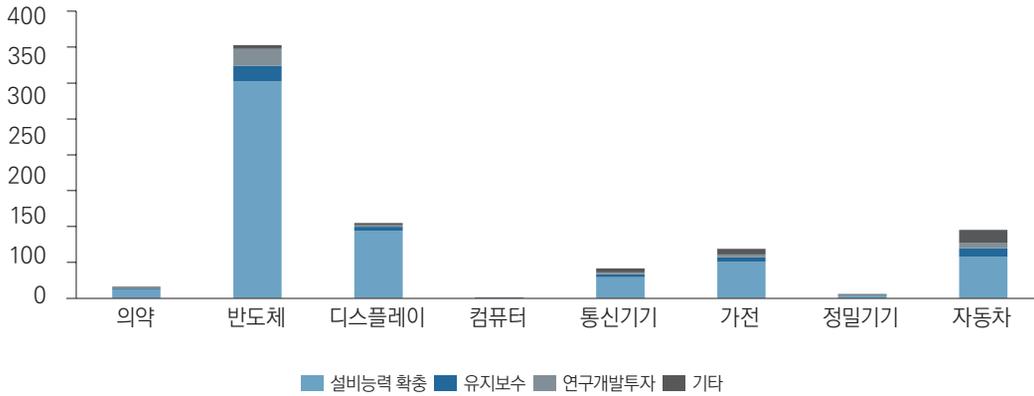
(2) 비교

■ 산업별 설비투자 규모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요 산업에 집중

- 산업별 설비투자 규모는 2010~2021년 동안 반도체가 353조원으로 가장 많고 디스플레이 (105조원), 자동차(95조원), 가전(69조원), 통신기기(41조원), 의약(16조원) 등의 순

[그림 II-9] 산업별 설비투자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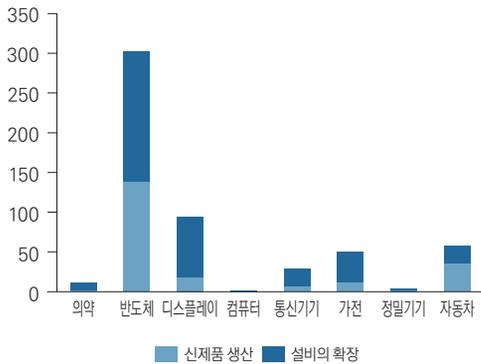
(단위: 조원)



주: 2010~2021년 누계
 자료: 한국산업은행, 「설비계획투자조사」

[그림 II-10] 설비능력 확충 중 신제품생산 관련 설비투자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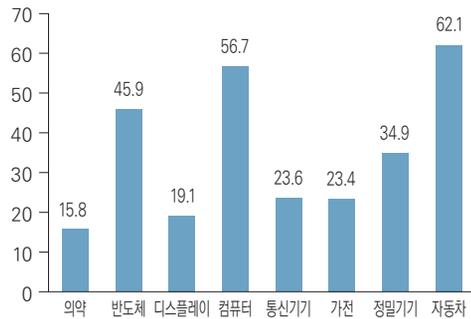
(단위: 조원)



주: 2010~2021년 누계
 자료: 한국산업은행, 「설비계획투자조사」

[그림 II-11] 설비능력 확충 중 신제품생산 관련 설비투자 비중

(단위: %)



주: 2010~2021년 누계
 자료: 한국산업은행, 「설비계획투자조사」

■ 고기술산업의 설비능력확충 중 신제품생산 관련 비중이 3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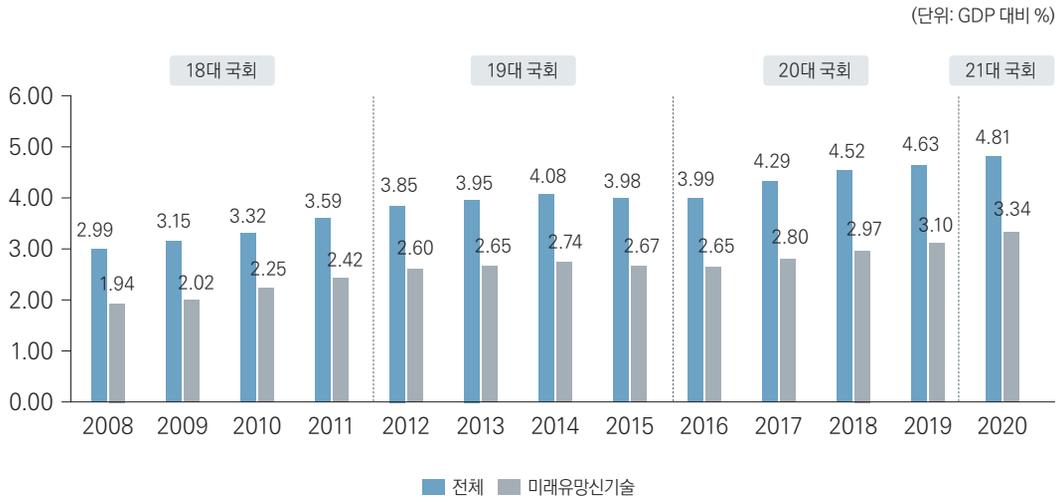
- 신제품생산을 위한 설비능력확충 규모는 2010~2021년 동안 반도체가 139조원(설비능력확충의 45.9%)으로 가장 높고 자동차 36조원(62.1%), 디스플레이 18조원(19.1%), 가전 12조원(23.4%) 등으로 나타남

나. 미래유망신기술 R&D 투자비중

○ 미래유망신기술 R&D 투자비중은 GDP 대비 정보, 생명공학, 나노, 우주항공, 환경, 문화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 비중을 의미

(1) 현황

[그림 II-12] 미래유망신기술 R&D 투자 비중



자료: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NTIS)

■ 우리나라의 미래유망신기술 R&D 투자비중은 증가세

- 미래유망신기술 R&D 투자비중은 2020년 기준 GDP 대비 3.34%로, 2008년 1.94%에서 1.4%p 증가
 - 총 R&D 투자 비중은 2020년 GDP 대비 4.81%

(2)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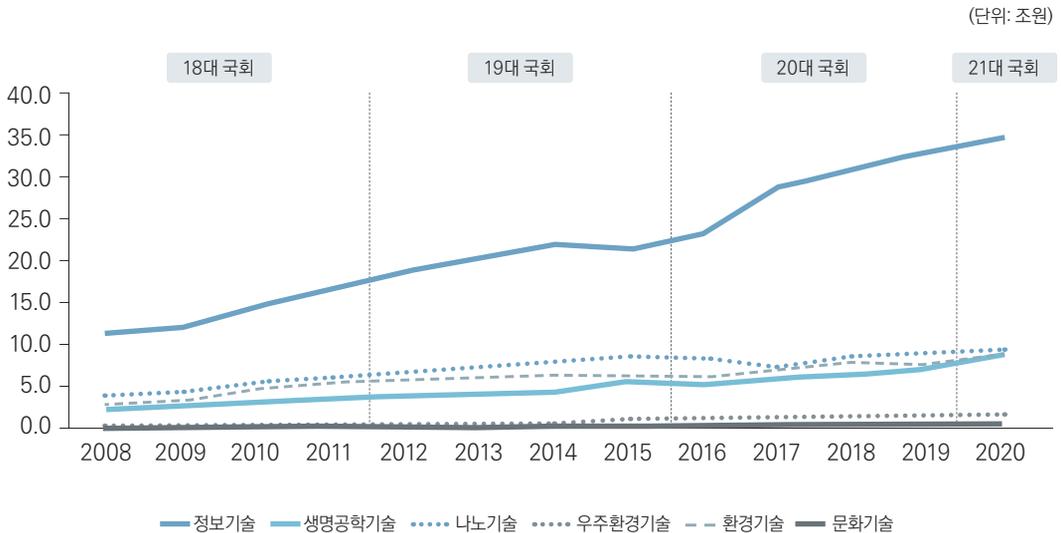
■ 미래유망신기술 R&D 지출 중 정보기술 분야의 비중과 증가율이 높음

- 미래유망신기술 중 정보기술 분야의 지출은 2020년에 34.8조원으로 2008년(11.7)에 비해 약 3배 증가
- 나노기술이 9.4조원, 생명공학기술이 8.9조원, 환경기술이 8.9조원, 우주항공 1.7조원, 문화기술이 0.8조원 수준

■ 한국의 고도기술에 대한 R&D 지출은 낮지 않지만 미국의 1/6 수준

- 우리나라의 고도기술에 대한 R&D 지출은 2019년 기준으로 331억달러로, 일본(337억달러)와 유사하고 독일(175억달러)에 비해 높은 편이나 미국(1,950억달러)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
 - 고도기술(R&D intensive industry)은 OECD의 정의로 제약산업, 컴퓨터·전자·광학 산업, 항공우주산업을 대상으로 함. 단, 중국의 경우 항공우주산업이 결측치인 관계로 제외됨

[그림 II-13] 미래유망신기술 분야별 R&D 지출 추이



자료: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NT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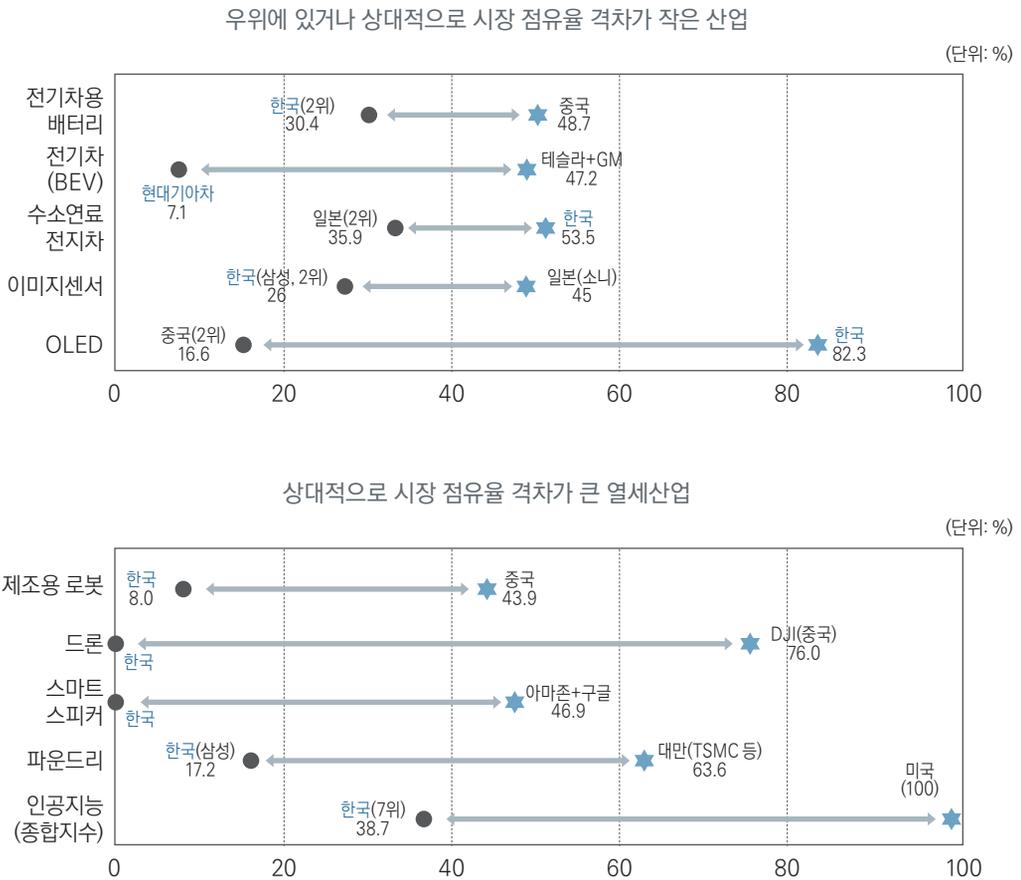
다. 세계시장점유율

○ **세계시장점유율**은 특정 업종의 제품이 세계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율로, 신산업의 세계시장점유율을 통해 신산업 정책의 성과를 추정해 볼 수 있음

(1) 현황

■ 세계시장점유율은 OLED와 수소연료전지차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

[그림 II-14] 주요 신산업별 2020년 세계시장점유율 비교



주: 1) 전기차는 판매량, 스마트스피커는 판매 대수, 인공지능은 AI종합지수, 기타 산업은 매출액 기준이며, 스마트스피커는 2021년 3분기, 제조로봇은 2020년 기준

2) ●는 한국(기업) 또는 2위국, ★는 세계 최고수준국(기업)을 의미

자료: 산업연구원, 「미래전략산업 브리프」, 2022. 4.

- OLED의 시장점유율은 2021년 매출액 기준으로 82.3%로, 17.7%를 차지하는 중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
- 수소연료전지차의 경우 선제적 투자로 시장점유율이 53.5%를 차지하고 있어, 2위인 일본 (35.9%)에 비해 높은 수준
- 전기차, 이미지 센서, 전기차용 배터리의 경우 1위인 테슬라·GM, 소니, 중국에 비해 각각 40.1%p, 17.0%p, 18.3%p의 격차를 보이고 있으나 다른 산업에 비해 경쟁력이 제고되고 있음
- 이에 반해, 파운드리¹³, 제조로봇, 드론, 스마트 스피커, AI 등은 기술력 열세 및 생산기반(기업 수, 스타트업 창업, 인프라 등) 취약으로 큰 격차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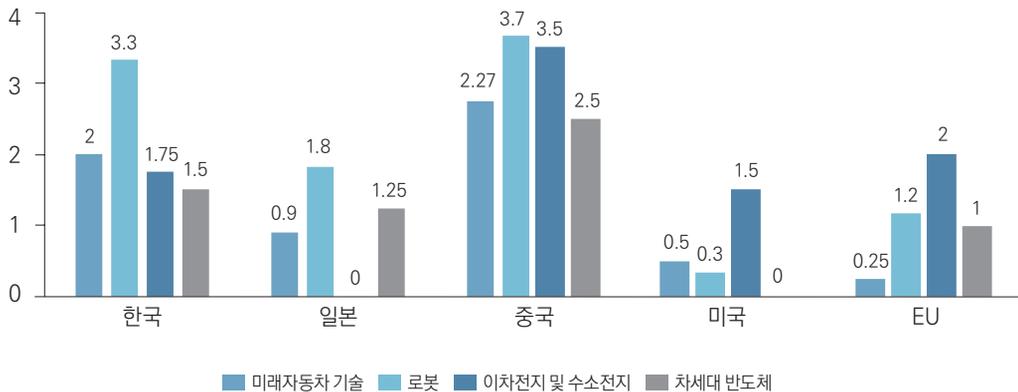
(2) 비교

■ 세계시장점유율에 영향을 미치는 신산업의 기술격차는 1.5~3.3년 정도

- 이차전지 및 수소전지의 경우, 최고 기술보유국과 1.75년 차이를 보임
 -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능력에서는 일본, 중국에 비해 우수하나 소재의 원산지 비중이 높고 전기차 시장점유력이 증가된 중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은 낮은 반면, 기초와 품질에서는 일본을 하회하는 수준

[그림 II-15] 주요 신산업별 최고 기술보유국 대비 기술격차(2020년)

(단위: 년)



주: 1) 미래자동차는 스마트 자동차 기술과 친환경 고효율 자동차 기술을, 로봇은 스마트 제조로봇, 재난구조 및 극한탐사로봇, 초정밀 의료용로봇을 포함
2) 평균 기술격차 연수를 단순평균한 값

자료: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NTIS)3, 대한민국 신산업 정책

13) 반도체산업에서 외부 업체가 설계한 반도체 제품을 위탁받아 생산·공급하는, 공장을 가진 전문 생산 업체를 의미

3. 대한민국 신산업 정책

가. 신산업 정책 개요 및 필요성

■ 신산업 정책은 경제 및 사회의 모습과 체질을 바꾸기 위한 경제정책

- 민간 주도의 기술·자본·인력 연결을 통해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유도
- 노동시장 개선, 규제 재설계, 사회적 자본확충 등 경제와 사회 전반의 제도개선도 병행

■ 대내외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에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필요

- 대내적으로 인구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창의적인 인재 부족, 특정 산업에 편중된 산업 구조, 규제개선 지연에 따른 미래먹거리 창출의 제한 등으로 우리 경제에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우려
- 대외적으로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패러다임의 대전환, 협업과 상호 네트워크를 통해 가치가 창출되는 '지식 경제'로의 이행을 목표로
 - 독일의 경우 'Industry 4.0'을 통해 효율적인 제조생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민관 합동 스마트공장 생태계 조성
 - 미국의 경우 대학의 인재들이 투자자-창업자 연결 프로그램 등을 통해 창업으로 유입되고 창업실패사례를 반면교사로 삼는 '실패 비즈니스'를 활성화
 - 중국의 경우 신산업에 대해 '先허용 後보완'의 규제적용 원칙을 채택

■ 해당 산업은 정부마다 산업의 발달정도, 시장성, 파급효과 등에 따라 조정됨

- 참여정부는 디지털 TV·방송 등을 중심으로 10대 분야를 선정
- 이명박 정부에서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의 3대 분야의 17개 신성장동력으로 확대
- 박근혜 정부 '미래성장동력'의 경우 19개 분야로 조정 및 확대
- 문재인 정부의 경우 혁신기반기술, 잠재시장규모, 연관산업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3+1 전략투자', '8대 선도사업', '3대 중점육성 산업', '13대 신산업동력'으로 수정하였으며 2020년 이후 '디지털 뉴딜 정책'으로 변경됨
 - 3+1 전략투자: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 수소경제
 - 8대 선도사업: 스마트공장·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에너지,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드론

- 3대 중점육성 산업: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형자동차
- 13대 혁신성장동력: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AI, 자율주행차, 드론, 맞춤형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현실·증강현실, 지능형로봇,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 디지털 뉴딜 정책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D.N.A) 생태계 기능 강화,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초연결 신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로 구성

나. 신산업 정책 체계

(1) 법제도

■ (법적 근거) 신산업 정책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기반

-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며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해당 법은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의 책무(제3조), 산업기술혁신계획(제5조), 혁신계획 등의 추진체계(제6조),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재원의 확충(제7조), 산업기술 환경예측(제8조),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제9조) 등을 포함

■ (법정계획) 상기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산업기술혁신계획이 수립됨

- 이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제도 수립 및 정비, 사업화 촉진 등을 포괄하는 중장기 전략 정보를 제시
-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19~'23)이 진행 중이며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

- ① 투자전략: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전략적 투자 배분
- ② R&D 체계: 도전·축적·속도 중심의 기술개발 체계 구축
- ③ 산업기술 인프라: 플랫폼·표준화·실증 위주로 기반구축 방식 전환
- ④ 성과 창출형 생태계: 신기술의 신속 시장진출 지원시스템 구축

(2) 정책 목표 및 수단

■ (정책목표) 과학기술, 산업·경제, 교육·훈련, 사회·제도의 혁신과 대외경쟁력의 제고

- (과학기술 혁신)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을 목표로 4차 산업혁명 기반인 DNA(Data-Network-AI)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빅데이터 활용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이나 분석 시스템을 구축
- (산업·경제혁신) 경제 전반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코스닥 시장 및 기술금융 활성화하거나 미래형 신산업으로서 환경산업, 스마트팜, 헬스케어, 미래차 등을 육성
- (교육·훈련 혁신) 미래사회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기초·고등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인적자본 고도화를 위한 직업훈련 체계 개선 및 참여 촉진
- (사회·제도혁신)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 인프라 마련을 목표로 노사상생형 일자리 확산 등 노동시장 역동성 회복과 핵심 선도사업 등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의 추진
- (대외경쟁력 제고) 우리 경제의 대외경쟁력 제고와 전략적 해외진출 촉진을 목표로 신시장 개척을 통해 특정국가 의존도를 완화하고 시장을 다변화하며, 중소·중견기업과 스타트업 해외 진출을 지원

■ (정책수단) 재정·조세·금융지원, 제도정비 및 규제개선 등이 해당

- (재정지원) 정부는 2020~2025년 동안 디지털 뉴딜에 약 49조원을 투입할 계획¹⁴
 - 정부는 2021년까지 14.7만개의 공공데이터 개방,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85개시 주요 행정동에 5G 구축, 5대 분야¹⁵ 융합서비스 시범운용 및 실증 실시, 381종의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을 실시
- (제도정비 및 규제개선) 이와 관련한 법 개정 추진과 규제를 변경
 - 2020년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2021년 10월 「데이터 산업법」을 제정

14) 관계부처합동, "경제·산업의 체질과 국민 삶을 바꿔 온 디지털 뉴딜, 2022년에도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끌어 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22. 1. 26

15)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실감콘텐츠,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시티를 포함

[표 II-2] 2022년 한국판 뉴딜 재정투자 및 제도개선 계획

	2020	2021	2022	2020~2025	제도정비 규제개혁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D.N.A.) 생태계 강화	1.3	5.4	5.9	33.5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0.7	0.6	0.5	3.2	원격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0.5	0.8	2.6	블록체인 확산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 등
SOC 디지털화	0.4	1.8	1.8	9.7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 지원 및 수산물 유통법 개정 등
	2.5	8.3	9.0	49.0	

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22.1.26

- (조세지원) 정부는 2022년 반도체·배터리·백신 분야와 관련된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여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할 계획이며, 기존의 신성장 및 원천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 일반기술의 연구개발 세액공제가 2022년 기준 최대 25%인 반면,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최대 40%까지 지원¹⁶⁾
 - 시설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일반기술의 경우 최대 10%이나 국가전략기술은 16%, 신성장 원천기술의 경우 12%까지 가능
- (금융지원) 첨단융합펀드 등 신성장동력 펀드를 통해 낮은 금리로 자금 대출

16)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배터리·백신 분야 39개 기술이 해당되고 탄소중립 분야 신규 도입 신성장 원천기술은 수소·산업공정·E효율·수송분야의 19개 기술이 해당

4. 신산업 정책과 재정

■ 2022년도 디지털 뉴딜 예산은 8조 9,591억원 규모

- 주요 사업으로 데이터 구축 및 지식산업 인프라 조성, 자금 출자 및 융자, 생산시설 현대화, 연구개발(R&D) 등을 포함
 - 인공지능학습용데이터구축(5,797억원), 뉴딜펀드(6,000억원), 제조현장스마트화(6,000억원), 첨단도로교통체계 마련(5,324억원),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3,374억원) 등으로 구성

[표 II-3] 디지털 뉴딜 관련 주요 사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부처	세부사업	2020년	2021년	2022년	
		추경 (순증)	추경 (A)	예산 (B)	증감 (B-A)
디지털 뉴딜		24,327	75,931	89,591	13,660
과기부	인공지능학습용데이터구축	2,925	3,705	5,797	2,092
금융위	산업은행 출자(뉴딜펀드)	0	5,100	6,000	900
중기부	신성장기반자금(융자): 제조현장스마트화	0	6,000	6,000	0
국토부	첨단도로교통체계	500	5,179	5,324	145
중기부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0	4,183	3,374	-809
중기부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4,000	4,000	2,000	-500
국토부	일반철도안전및시설개량: 일반철도 스마트 SOC	1,733	1,890	2,525	635
행안부	중앙행정기관 등 노후장비 통합구축 (정보화)	25	510	2,399	1,889
농림부	축사시설현대화	0	1,912	1,688	-224
국토부	스마트시티확산사업	0	834	1,176	342
과기부	지능정보산업인프라조성: AI 바우처지원	560	560	980	2092
중기부	지역특화산업육성+(R&D)	96	1,227	1,001	-226

자료: 기획재정부 내부자료

■ 2022년 미래산업 전략R&D 예산안은 6.2조원, 혁신형 인재양성은 2.0조원

- 전체R&D 예산(29.8조원)의 20.8%를 차지하는 미래산업 전략R&D는 뉴딜 R&D(3.6조원), 미래주력산업 BIG3(2.8조원), 프론티어 전략기술(0.7조원), 도전적 기초연구(2.6조원)로 구성
- 미래주력산업에는 국가신약개발(1,384억원),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2,038억원),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1,204억원),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1,455억원) 등을 포함
 - 이밖에도 PIM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509억원), 차세대전력반도체(292억원) 등을 포함
- 혁신형 인재양성은 혁신인재 양성(1.6조원), 실전형 인재교육(0.6조원), 신기술 직업훈련(0.5조원)으로 구성

[표 II-4] 미래산업 전략R&D 투자 및 혁신형 인재양성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1년(A)	2022년안(B)	증감(B-A)
미래산업 전략 R&D 투자	4.7조원	6.2조원	1.5조원
뉴딜 R&D	24,028	35,589	11,561
미래주력산업(BIG3)	24,336	27,573	3,237
프론티어형 전략기술	5,085	7,277	2,192
도전적 기초연구	23,689	25,857	2,168
혁신형 인재양성	1.6조원	2.0조원	0.4조원
핵심인재 양성	11,884	16,164	4,280
실전형 인재교육	5,449	6,367	918
신기술 직업훈련	2,014	4,669	2,655

주: 분야별로 세부사업이 중복집계되어 합계와 다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 2021.10.27., p.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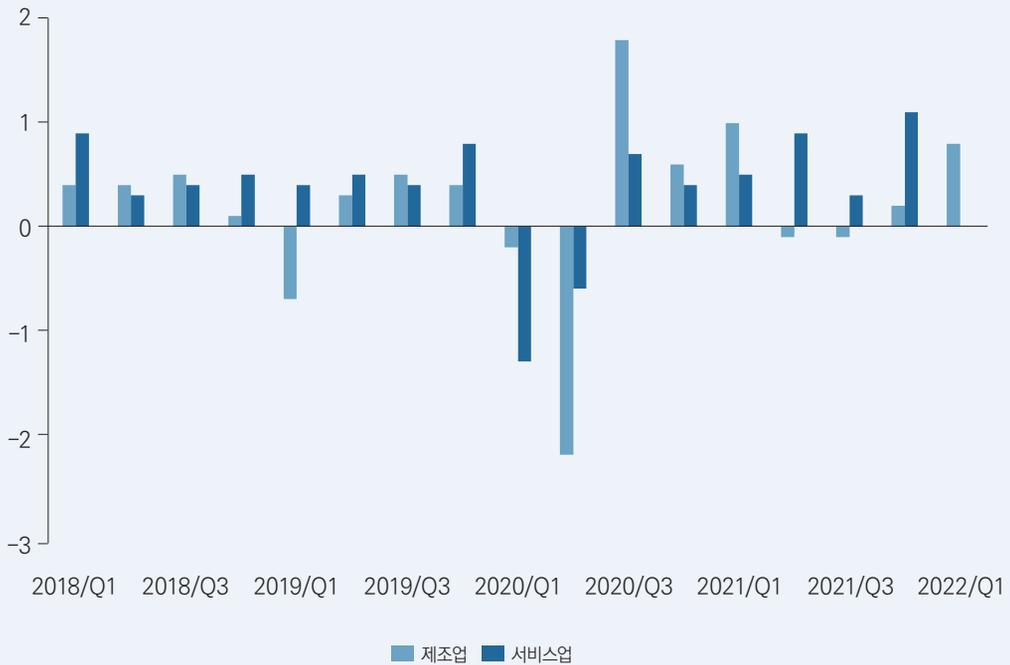
BOX 8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제조업 성장기여도

■ 팬데믹(Pandemic) 기간 중 제조업 성장기여도가 서비스업을 상회

- 한국의 GDP 내 제조업 비중은 주요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
 - 2019년 GDP 내 제조업 비중(%)¹⁷⁾: 한국(27.5%), 일본(20.7%), 독일(19.1%), 미국(10.9), 프랑스(9.8%)
- 코로나19의 충격 속에 제조업은 서비스업을 상회하는 성장기여도를 시현
 - 서비스업은 GDP 내 비중이 제조업보다 높아서 성장기여도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대면 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의 특성상 코로나19의 상대적인 피해 규모가 크게 나타남
 -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2020년 3분기~2021년 1분기 중에는 제조업의 성장기여도가 서비스업보다 높게 나타남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기여도 추이]

(단위: %p)



주: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17) 통계청

■ 제조업은 ICT의 성장세로 경기회복을 주도

- 제조업은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의 호조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
 - 2021년 ICT 생산지수는 전년대비 20.2% 상승한 가운데, 2022년 1분기에도 전년동기대비 21.1% 증가
 - 반면, 비ICT 생산지수는 2021년 전년대비 4.0% 증가하였으나, 2022년 1분기에는 소폭(0.1%) 증가에 그침
 - ※ ICT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등을 의미
- ICT는 PC, 모바일, 서버 등 전방산업의 수요 호조로 빠르게 회복되면서 2021년에는 역대 최대 수출실적(2,276억달러)을 달성
 - 2021년 전체 수출 중 ICT가 35.0%의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ICT 수출은 전년대비 24.0% 증가

[제조업·ICT·비ICT 산업의 생산지수 추이]



자료: 통계청

제2절 서비스업: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¹⁸

1. 국민계정 상 서비스업

■ 서비스업의 부가가치는 국민계정 상 국민소득통계와 생산계정에서 확인

- 생산국민소득에는 서비스업을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정보통신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의료·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등으로 구분

■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60% 수준에서 정체 중임

- 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59.8%에서 2021년에는 61.1%로 소폭(1.4%p) 확대
- 다만, 2021년에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에서 벗어나 전년대비 3.8% 상승한 61.1%의 비중을 기록하였으나, 제조업의 상승폭(6.9%)에 비해 저조하여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대비 0.3%p 하락

[그림 II-16] GDP 대비 서비스업 비중 추이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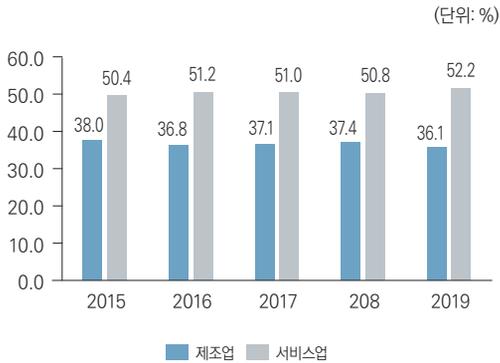
18) 서비스업은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에 의하여 타 경제주체나 경제객체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무형의 경제재 생산활동을 의미하므로 생산 부문으로 분류

2.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주요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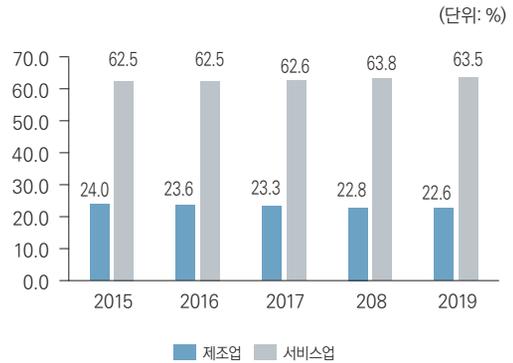
가. 주요 현황지표

- **종사자 수**는 고용주와 상용·임시·일용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합계를 의미
- **매출액**은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총 수익을 의미

[그림 II-17] 산업별 매출액 비중 추이



[그림 II-18] 산업별 종사자 수 비중 추이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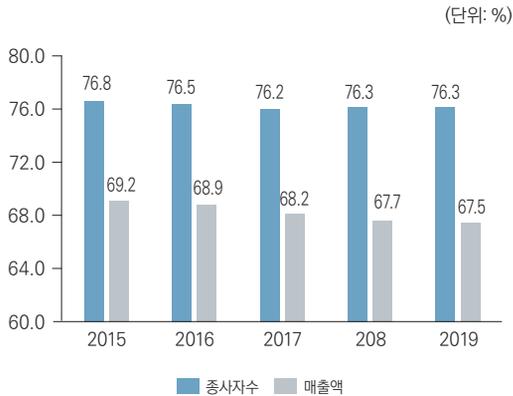
■ 서비스업은 매출액과 고용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2019년 기준 서비스업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2.2%로 제조업(36.1%)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
- 2019년 기준 서비스업이 전체 종사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3.4%로 제조업(22.5%)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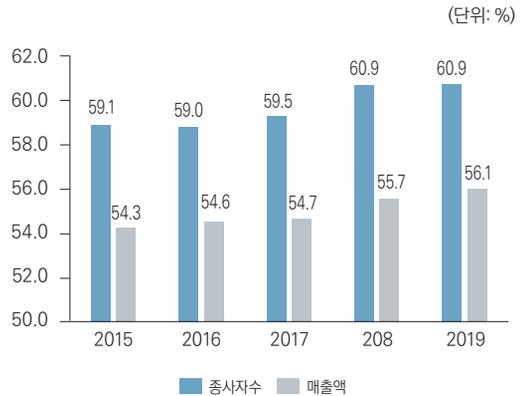
■ 서비스업 부문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 실적은 고용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

- 2019년 기준 중소기업 종사자의 60.9%와 소상공인의 76.2%가 서비스업 부문에서 종사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매출의 56.1%와 소상공인 매출의 67.5%가 서비스업에서 발생

[그림 II-19] 서비스업 중 소상공인의 비중 추이 (종사자 수, 매출액)



[그림 II-20] 서비스업 중 중소기업의 비중 추이 (종사자 수, 매출액)



주: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5인 미만(기타 업종)인 기업을 의미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통계.

■ 소상공인 종사자 수 비중은 변동이 없으나, 매출액 비중은 감소세

- 서비스업 중 소상공인의 종사자 수 비중은 2015년 76.8%에서 2019년 76.3%로 변동폭이 적으나, 매출액 비중은 2015년 69.2%에서 2019년 67.5%로 감소
- 서비스업 중 중소기업의 종사자 수 비중은 2015년 59.1%에서 2019년 60.9%로 증가하였으며, 매출액 비중도 2015년 54.3%에서 2019년 56.1%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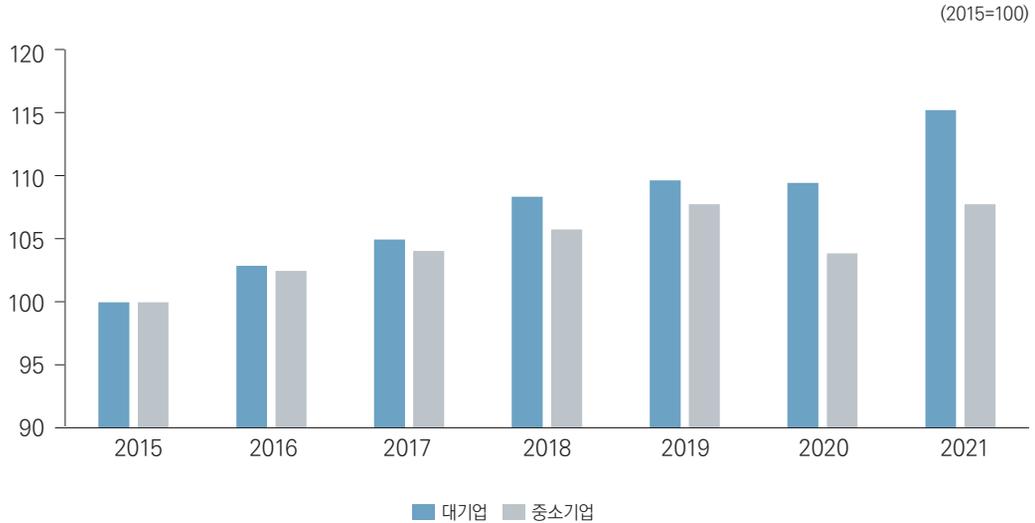
■ 도매 및 소매업이 매출액과 종사자 수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2019년 소상공인 매출액 중 도매 및 소매업이 37.4%, 중소기업이 31.1%의 비중을 차지
 - 소상공인 매출액 업종별 상위 비중(%): 도매 및 소매업(37.4), 숙박 및 음식점업(8.5), 운수 및 창고업(6.1)
 - 중소기업 종사자 수 업종별 상위 비중(%): 도매 및 소매업(31.1),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3.4), 보건업 및 사회복지(3.2)
- 2019년 소상공인 종사자 수 중 도매 및 소매업이 23.7%, 중소기업이 13.4%의 비중을 차지
 - 소상공인 종사자 수 업종별 상위 비중(%): 도매 및 소매업(23.7), 숙박 및 음식점업(13.8), 부동산업(13.3)
 - 중소기업 종사자 수 업종별 상위 비중(%): 도매 및 소매업(13.4),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11.1), 숙박 및 음식점업(6.9)

나. 생산지표

-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서비스업 전체와 개별 업종의 생산활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개별 업종의 상대적 중요도인 부가가치 기준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수화한 것

[그림 II-21] 기업규모별 서비스업 생산지수 추이



주: 「중소기업기본법」상의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 동향조사.

■ 중소기업의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감소폭이 크고 회복세는 낮은 수준

- 2020년 중소기업의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전년대비 3.7% 감소하였으나, 대기업은 소폭(0.2%) 감소
- 2021년 중소기업의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전년대비 3.7% 증가하였으나, 대기업의 생산지수는 전년대비 큰 폭(5.3%)으로 증가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서비스업 생산지수 격차가 확대

- 2021년 서비스업 부문의 대기업(115.3)과 중소기업(107.8) 간의 생산지수 차이는 7.5p로 전년대비 1.9p 증가
 - 2021년 대기업 생산지수는 전년대비 5.2% 증가하였으나, 중소기업은 3.8% 증가에 그침

3. 대한민국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정책 개요 및 필요성

■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정책은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생산에 영향

- 지역기반 혁신 플랫폼 활성화, 신사업 전환 등의 지원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
 -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발굴 등을 통해 상생협력 기반 확충
 -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과 우수한 청년인재의 중소기업 유입·유지
- 소상공인 경영안전망 구축과 재기지원, 온라인·스마트화 지원 등을 통해 경영회복 및 경쟁력 강화를 목표
 -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여 전 주기 지원 강화
 - 온라인 진출 역량을 강화하고 스마트상점 보급 확대 등으로 디지털화 촉진

나.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체계

(1) 법·제도

■ (법적근거)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법제화

-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 「중소기업기본법」제18조는 정부가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 및 재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

■ (법정계획)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등을 포함

■ (법적근거)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법제화

-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

■ (법정계획)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

(2) 정책 목표 및 수단

■ (정책목표)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여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추구

- 중소기업의 환경변화 대응 및 성장기반 구축
- 미래를 선도할 혁신 벤처기업 육성

■ (정책수단)¹⁹ 기술개발과 인력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성장 지원

- (기술개발) 한국판 뉴딜 및 BIG3²⁰ 등 혁신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하고, 스마트 제조혁신 증 디지털 혁신을 위한 지원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 등
- (인력지원) 산학협력을 통한 현장 맞춤형 직업교육으로 우수인력을 양성
 - 산학협력인력양성, 마이스터고 육성, 제조데이터 촉진자 양성사업 등
- (수출촉진) 중소기업의 수출확대 및 수출역량강화 등을 지원
 - 중소기업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수출컨소시엄, 대중소기업동반진출등
 - 국제운송비, 법률자문, 컨설터 등 수출지원기반을 지원
- (판로지원) 중소기업의 자사몰 구축, 온라인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으로 패키지로 지원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마케팅 지원사업, 공공구매제도 운영
- (동반성장지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사회적경제기업²¹을 발굴하여 지원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구축, 여성기업육성, 장애인기업육성,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 등

19)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정리

20)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21)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 (산업금융지원) 신용보증·기술보증 등을 지원하고 채무불이행 시 보험금을 지급하여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
- (창업 및 벤처 활성화) 비대면, BIG3²², 소재·부품·장비산업 등 혁신분야 스타트업의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고, 아기 유니콘기업 발굴을 확대
 - 창업사업화지원, 민관협력창업자육성,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

■ (정책목표)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경쟁력 강화

- 소상공인 경영안전망 구축과 재기지원
- 강한 소상공인 육성과 온라인·스마트화 지원
- 지역상권의 자생력 제고

■ (정책수단)²³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

- (용자사업) 성장기반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스마트소상공인자금 등을 편성
- (경상사업) 소상공인성장지원, 시장경영혁신지원, 지역신보재보증출연 등을 편성

22)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23)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정리

4.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과 재정

■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기술개발 및 인력개발 비중이 가장 높음

- 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2022년 3.5조원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
 - 기술개발 및 인력지원, 수출촉진 및 판로지원, 지역경제 및 동반성장 지원, 산업금융지원, 정책수립 및 행정지원
- 2022년 기술개발 및 인력지원 예산은 2.5조원으로 전년대비 1.9% 증가
- 반면, 전체 중소기업 지원정책 예산규모(3.5조원)는 산업금융지원이 전년대비 큰 폭(-54.0%)으로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8.9% 감소

[표 II-5] 중소기업·벤처기업 지원 관련 사업 분야별 예산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2020 추경	2021 추경(A)	2022 본예산(B)	증감률 (B/A)-1
예산	기술개발 및 인력지원	23,445	25,907	25,576	1.9
	수출촉진 및 판로지원	2,026	2,943	2,952	4.2
	지역경제 및 동반성장 지원	2,368	2,085	2,032	-2.5
	산업금융지원	4,500	7,650	3,520	-54.0
	정책수립 및 행정지원	1,687	1,817	1,889	4.0
	합계	34,026	39,483	35,969	-8.9

자료: 중소기업부,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21, 2022

■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관련 재정 투입규모는 전년대비 크게 감소

-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예산은 6.5조원으로 전년대비 58.4% 감소
 - 소상공인지원(용자)이 전년대비 25.0% 감소한 4.2조원
 - 소상공인 비대면·디지털화 등 경상사업이 전년대비 78.4% 감소한 3.7조원
 - 기금운영비가 전년대비 22.9% 증가한 632억원

[표 II-6]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총지출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2020 추경	2021 추경(A)	2022 본예산(B)	증감률 (B/A)-1
예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96,672	193,140	80,292	-58.4

자료: 중소기업부,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21, 2022

BOX 9 중소기업 대출 현황

■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대출 상환부담 가중

-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가 6개월 연장되어 2022년 9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나, 향후 기준금리 추가 인상으로 채무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됨
 -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경영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등을 지원
 -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50%에서 1.75%로 상향 조정(5월 26일)

■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상승폭이 커지면서 대기업과의 대출금리 격차 확대

- 2020년 4월 중소기업의 평균대출금리(신규)는 전월대비 0.10%p 상승한 3.67%로 전년동월 대비로는 0.85% 상승
 - 반면, 대기업의 평균대출금리(신규)는 전월대비 0.05%p 상승한 3.17%로 전년동월대비로는 0.73%p 상승
- 2022년 4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평균 대출금리(신규) 차이는 0.50%p로 전월대비 0.05%p 상승
 - 2021년 4월 평균 대출금리 차이(0.38%p)보다도 0.12%p 상승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대출금리차]

(단위: %)



주: 1. 대출금리차(예금은행 기준) = 중소기업 대출금리 - 대기업 대출금리
 2. 예금은행 기준
 자료: 한국은행

■ 중소기업의 대출잔액 증가폭이 대기업을 상회

- 2022년 1분기 중소기업의 대출잔액(940조원)은 전년동기대비 23.5% 증가한 반면, 대기업은 회사채 발행 등 직접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대출잔액(201조원)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적은 10.7%를 기록



주: 예금은행 기준
자료: 한국은행

■ 중소기업의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대출잔액도 증가세

- 2022년 1분기 중소기업의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대출잔액(356조원)은 전년동기대비 33.9% 증가

*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자료: 한국은행

제3절 전기가스업: 에너지·자원 정책²⁴

1. 국민계정 상 전기가스업

가. 개요

■ 전기가스업의 부가가치는 국민계정 상 국민소득통계와 생산계정에서 확인

- 한국은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를 가지며 전기가스업은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계
 - 한국 산업의 생산구조는 에너지집약적이며,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산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61.8%
 - 2018년 기준 1차에너지 공급 세계 9위, 석유소비와 전력소비는 모두 7위
- 국내 에너지 소비의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수입에너지의 대부분이 화석연료
 - 2021년 기준, 에너지 수입 의존도, 석유 의존도는 각각 92.8%, 38.6%이며, 화석연료가 1차에너지 공급량의 82.0%를 차지

■ 전기가스업 관련 정책은 안정적·효율적·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을 목표로 함²⁵

-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복리향상을 위해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보급 및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과 제도를 설계함

나.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

■ 에너지 안보는 한국경제의 생산과 성장에 필수적

- 에너지 안보는 산업, 수송, 가정·상업, 공공 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확보·공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협은 경제성장 및 에너지 사용과 관련된 국민의 기본생활권 보장 등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
 - 정부는 에너지 안보를 위해 전력 수급 안정화 정책, 전략적 석유비축, 국내외 자원 개발 등의 정책을 수립·시행

24) 전기가스업은 한국 산업의 생산활동에 있어 에너지원인 가장 기초적인 생산요소를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생산해 내기에 생산부문으로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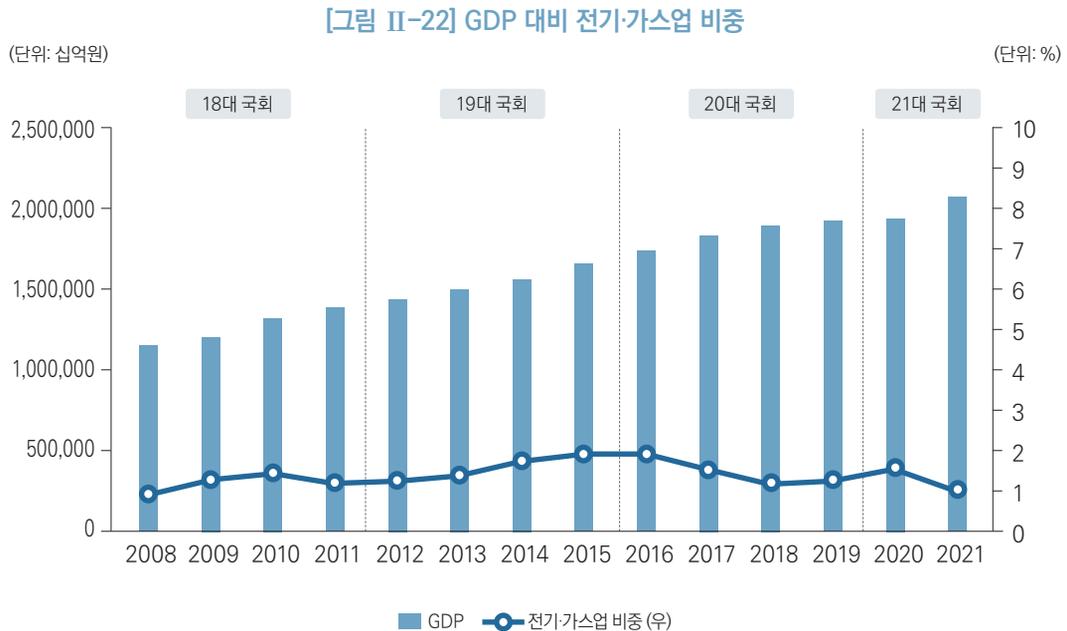
25) 「에너지법」 제1조

2. 전기가스업 관련 주요 지표²⁶

가. GDP 대비 전기가스업 비중

○ GDP 대비 전기가스업 비중은 국민계정 중 국민총생산에서 전기가스업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

(1) 현황



자료: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GDP 대비 전기가스업 비중은 변동성이 크지 않은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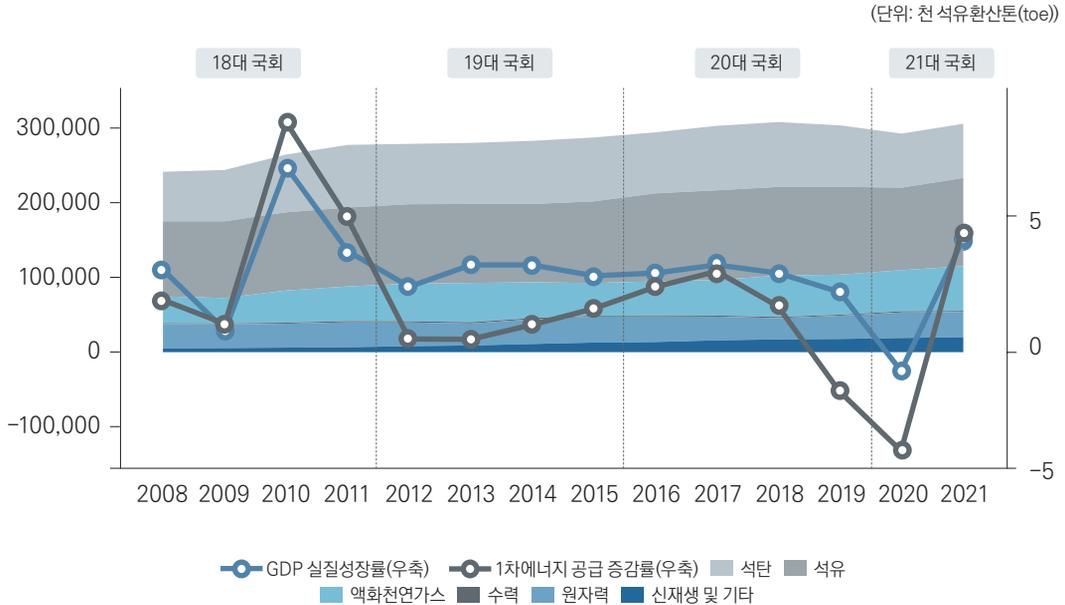
- 전기가스업은 한국경제의 생산활동에 있어 필수적인 부문이기에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변동성이 크지 않은 모습을 보이며 생산활동에 이바지

26) 전기가스업 부문은 에너지 '공급'과 '소비'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으며, 아래에서 살펴볼 지표들을 이에 따라 구분하면, 에너지 공급 측면의 지표에는 1차에너지 공급, 에너지 수입 의존도 등이 있으며, 에너지 수요 측면의 지표에는 최종에너지 소비, 에너지 원단위 등이 있음. 하지만 에너지 부문에서 공급과 소비는 동전의 양면으로 볼 수 있으며, 에너지 부문에서는 많은 경우, 에너지 공급과 소비가 일치한다고 간주함. 그런 이유로, 에너지 소비 측면으로 구분한 에너지 원단위 지표를 계산할 때, 국가 총 에너지 소비 값으로 '1차에너지 공급'을 사용함.

나. 1차에너지 공급

○ 1차에너지 공급은 생산, 수출입 및 재고증감에 의해 국내 공급된 에너지를 나타내는 지표

[그림 II-23] 1차에너지 공급 추이(에너지원별)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동계월보」,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1차에너지 공급은 장기적으로 증가세이며, 2021년은 전년대비 증가

○ 1차에너지 공급은 2018년 3억 756만 석유환산톤(toe)²⁷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2019년, 2020년 연속해서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3억 525만 석유환산톤(toe)으로 전년대비 4.5% 증가

- 2021년 1차에너지 공급 에너지원별 비중(%): 석탄(23.8), 석유(38.6), 액화천연가스(19.6), 수력(0.5), 원자력(11.0), 신재생 및 기타(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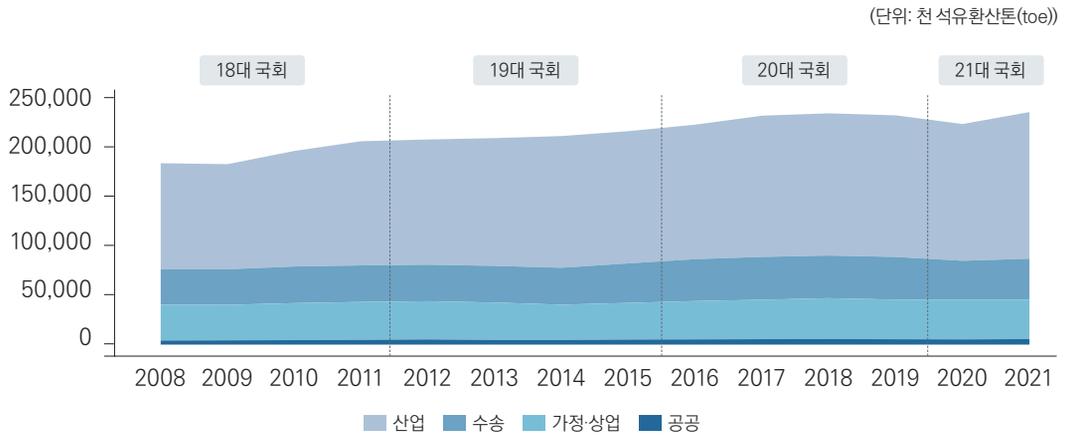
27) 석유환산톤(Tonne of Oil Equivalent, toe)이란 원유 1톤이 갖는 열량으로 107kcal를 말함.

다. 최종에너지 소비

(1) 현황

- **최종에너지 소비**는 산업, 수송, 가정·상업, 그리고 공공 부문 등 최종에너지 소비 부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량을 나타낸 것
 - 일반적으로 실물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사용됨

[그림 II-24] 최종에너지 소비 추이(부문별)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최종에너지 소비는 장기적으로 증가세이며, 2021년은 전년대비 증가

- 최종에너지 소비는 2018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9년, 2020년 연속해서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2억 3,465만 석유환산톤(toe)으로 전년대비 5.4% 증가
 - 2021년 최종에너지 소비 부문별 비중(%): 산업(63.1), 수송(17.0), 가정·상업(17.6), 공공(2.0)

[표 II-7] 2021년 에너지밸런스 플로우

에너지 수입	1차에너지 공급 (A)	전환·손실 (B)	최종에너지 소비 (A-B=C)
1,372억달러	3억 525만 toe	7,060만 toe	2억 3,465만 to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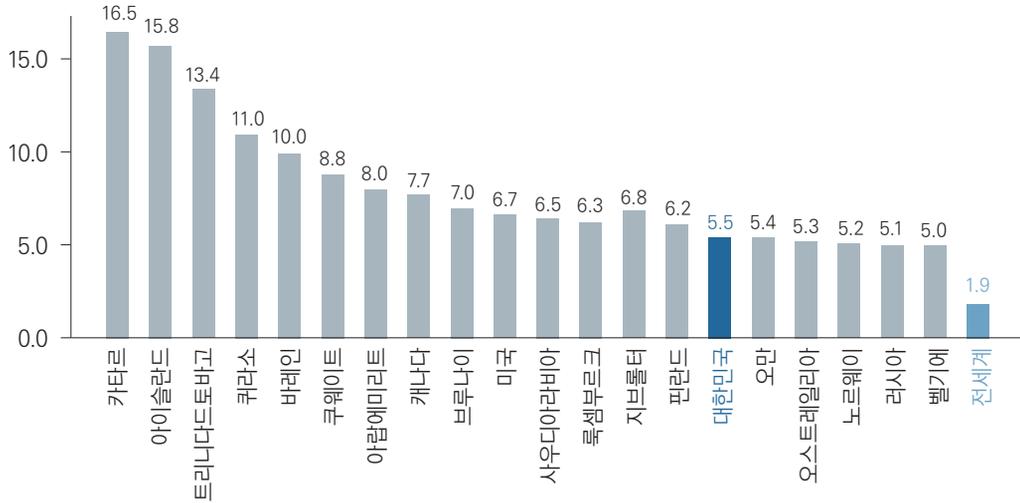
주: 전환·손실은 최종소비자가 사용하기 더 편리한 에너지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사용·손실된 에너지로, 발전, 지역난방, 가스제조, 자가소비 및 손실을 포함.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비교

[그림 II-25] 주요국가 1인당 에너지소비량 순위(2018년 기준)

(단위: 석유환산톤(toe)/인)



자료: IEA, World Energy Balance(2021), 「EG-TIPS 에너지온실가스종합정보 플랫폼」에서 재인용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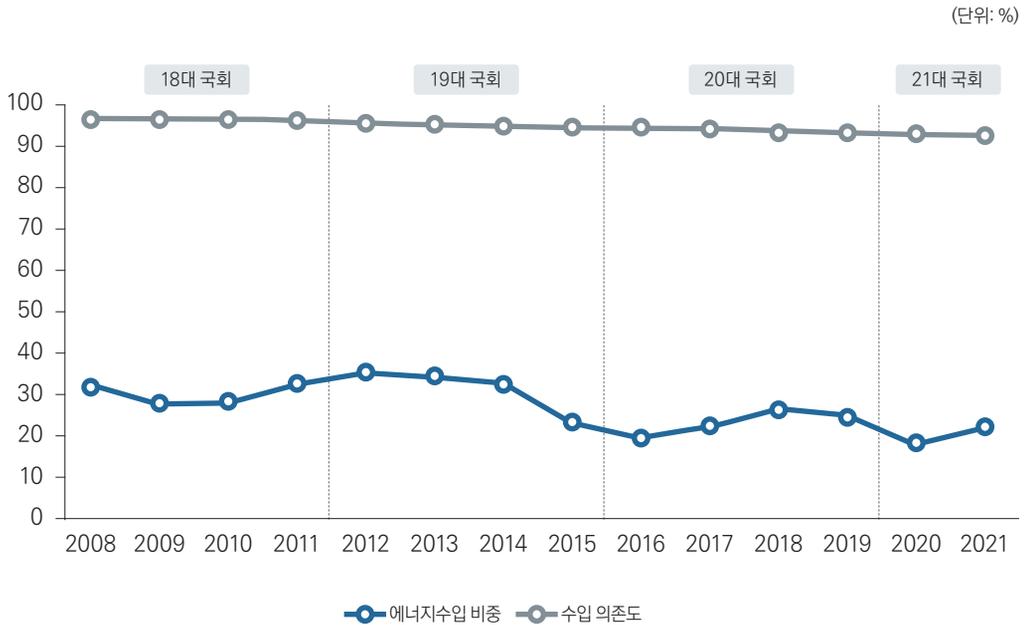
■ 2018년 대한민국의 1인당 에너지소비량(toe/인)은 5.5로 전 세계 15위

- 석유, 천연가스 등의 주요 자원 부국을 제외하면, 대한민국의 1인당 에너지소비량이 전 세계적으로 월등히 높은 편
 - 전 세계 평균 1인당 에너지소비량(1.9)의 약 2.9배에 해당

라. 에너지 수입 의존도 및 총수입 대비 에너지 수입 비중

-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1차에너지 공급 중 수입에너지의 비중을 나타낸 것
 - 대한민국 경제가 대외 경제 및 에너지 국제 가격 변화·충격에 대해 민감한 정도를 예상할 수 있음
- **총수입 대비 에너지 수입 비중**은 모든 총 수입금액 중 에너지 수입액의 비중을 나타낸 것

[그림 II-26] 에너지 수입 의존도 및 총수입 대비 에너지 수입 비중 추이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 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완만한 감소하는 가운데 에너지 수입 비중은 최근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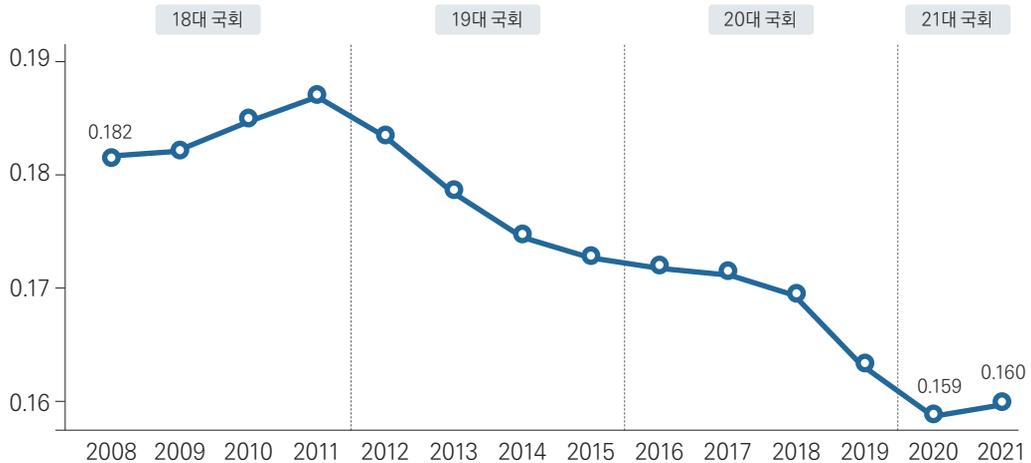
-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에너지 가격 변화에 따라 총수입 대비 에너지 수입 비중은 변동성을 보임
 -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 영향으로 총수입 대비 에너지 수입 비중은 증가

마. 에너지 원단위²⁸

- 에너지 원단위(=GDP단위당 에너지 소비)는 총부가가치(GDP) 대비 1차에너지 공급량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경제활동에 투입된 에너지소비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
- 에너지 이용 효율이 좋을수록 에너지 원단위가 낮아짐

[그림 II-27] 에너지 원단위 추이

(단위: 석유환산톤(toe)/백만원)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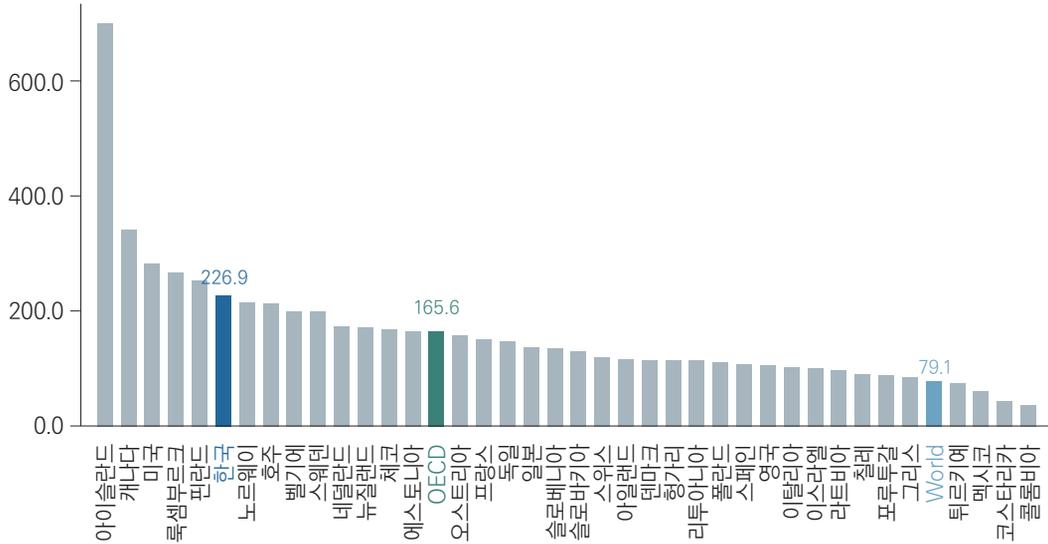
■ 에너지 원단위(toe/백만원)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감소 추세

- 에너지 원단위(toe/백만원)는 2011년 0.187에서 2020년 0.159로 감소하여 에너지소비 효율이 향상되었으나, 2021년에는 0.160으로 소폭 증가

28) '에너지 원단위'는 통상 띄어쓰기 없이 '에너지원단위'로도 많이 표기하는데, 그런 경우, '에너지원 단위' 등으로 읽혀 혼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에너지 원단위'로 띄어 씀

[그림 II-28] OECD 국가 1인당 에너지소비량(2019년 기준)

(단위: GJ/인)



주: 에너지소비량의 단위가 GJ(gigajoule)임을 주의
 자료: IEA, Key World Energy Statistics 2021, 2021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19년 대한민국의 1인당 에너지소비량(GJ/인)은 226.9로 OECD 6위

- 석유·석탄·천연가스 등의 주요 자원 부국을 제외하면, 대한민국의 1인당 에너지소비량이 OECD 및 전 세계적으로 월등히 높은 편
 - OECD 평균 1인당 에너지소비량(165.6GJ)의 약 1.4배, 전 세계 평균 1인당 에너지소비량 (79.1GJ)의 약 2.9배에 해당

3. 대한민국 에너지·자원 정책

가. 에너지·자원 정책 개요

■ 에너지·자원 정책은 에너지 수급을 관여하여 한국경제와 산업의 생산에 영향

- 에너지 효율 제고, 전력수급 안정화, 수요 관리,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정책
 - 2040년까지 에너지 소비효율 38% 개선, 수요 18.6% 감축, 재생에너지 비중을 30~35%로 확대, 재생에너지·수소·효율연계 등 미래에너지산업 육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

■ 전략적 석유 비축, 에너지 자원 확보 및 국내외 해외 자원 개발 정책

- 정부는 1980년부터 정부 석유비축기지 건설을 추진해 왔으며, 울산 석유 비축기지 준공('21.11.19.)으로 대한민국은 전국 9개 석유비축기지, 총 1억 4,600만배럴 규모의 저장능력을 확보²⁹
- 기존의 자원 '개발' 중심 정책에서 자원 '안보' 중심으로 전환하고, 북미, 중동, 신남방, 신북방, 중남미, 동남아·대양주 등 6대 전략지역을 설정

나. 에너지·자원 정책 체계

■ (법적근거) 「에너지법」은 에너지정책 및 계획의 기본적인 사항³⁰을 법제화

- 「에너지법」 아래 「전기사업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을 제정하여 여러 기본계획을 법제화

■ (법정계획) 「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원별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여 중장기 정책 방향 수립

-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2019.06.04.)³¹은 소비, 생산, 시스템, 산업 기반 등 5대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

29) 울산, 거제, 여수, 서산, 구리, 평택, 용인, 동해, 곡성에 위치해 있으며, '21년 11월 기준, 총 9,700만배럴 규모의 정부 비축유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추가적인 외부 석유도입 없이도 106일 가량을 지속할 수 있는 규모에 해당

30) 「에너지법」, 제1조(목적).

3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되기 전 에너지·환경 분야의 최상위법이었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었으나,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발효됨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면서, 에너지기본계획의 법적 근거가 상실됨

-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2년 주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 「전기사업법」 제25조에 근거하며, 전력수급 전망, 수요관리, 전력설비 계획, 전력시장제도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을 포함
 -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³²에서는 에너지 전환 정책, 온실가스 추가감축을 위한 전환부문 이행방안,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을 포함
-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석유비축계획」³³을 수립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5조(석유비축계획)에 근거
- 국내·외 자원의 합리적 개발을 위해 10년 단위 중장기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4조와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2조의2에 근거
 - 「제6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과 「제3차 해저광물자원 기본계획」을 통해 해외와 국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함

32)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을 구체화하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2021.12.17.).

33) 「석유비축계획」은 전략적인 이유로 대외비로 분류하여 대중에게 공개하지는 않음.

4. 에너지·자원 정책과 재정

- 국가 에너지 정책 지원을 위한 회계·기금으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전력산업기반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등이 있음

[표 II-8]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영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수정(A)	2022 예산/수정(B)	증감률 (B-A)/A
에너지·자원 재정지출 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4,821	29,899	17,672	-40.9
전력산업기반기금	49,652	63,940	62,324	-2.5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57,202	64,812	72,118	11.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2 대한민국 재정」, 2022, pp.555-556

■ 2022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40.9% 감소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는 에너지 수급, 가격 안정,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설치·운영

■ 2022년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계획 규모는 2021년에 비해 2.5% 감소

-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운영하며,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부담금,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과징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에너지신산업 육성, 에너지 복지, 전력 수급 안정화, 에너지안전관리, 발전소주변지역지원,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

■ 2022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용계획 규모는 2021년에 비해 11.3% 증가

-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해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 설치하고, 납입금, 부담금 및 가산금, 출연금 및 기부금 등을 통해 재원을 조성

BOX 10 최근 에너지 및 자원 가격 상승 동향

■ 한국은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

- 2020년 기준 한국의 1차산품 수입비중은 18.4%로 비슷한 산업구조를 가지며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일본(16.6%)과 독일(8.2%)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
- 2021년 한국의 수입 품목 중에서는 원유(10.9%), 천연가스(4.1%), 석탄(2.3%) 등 에너지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큼

■ 원자재 수입 단가의 급등은 한국의 무역수지 악화로 이어짐

- 1차산품, 중간재 등이 투입되어 생산된 최종재화를 수출하는 한국경제로서는 원자재 가격의 급등은 수입액 증가로 이어짐
-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한국 경제는 2022년 3월 역대 월 수출 최고 실적을 달성 하였음에도 이를 상회하는 수입액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

[수입금액에 따른 무역수지 변화]



주: 2022. 6. 기준

자료: 한국은행,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국제 에너지 가격은 2020년 후반 이후 상승하였으며 최근 급등세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

(단위: US \$/unit(좌축), US \$/MMbtu(우축))



자료: 세계은행 및 석유수출국기구 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 농산물, 식품, 금속·광물 가격은 2020년 초부터 상승하여 최근 급등

[원자재 가격지수 추이]

(2010=100)



자료: 세계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 투입재화 가격 상승은 생산원가 상승 유발

- 원자재 가격 10% 상승은 기업의 생산원가의 평균 0.43% 상승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³⁴
- 비철금속, 철강제품, 석유화학, 금속제품 업종의 생산원가 상승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남

34) 무역협회, 주요 원자재 공급 구조 분석 및 가격상승의 영향, Trade Focus 2022년 6호

[그림 II-29] 분배 관련 주요 현안과 경제지표

구 분	현 안	경제지표
가계-기업-정부간 분배: 소득	➤ (1) 가계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 소득증가율
	➤ (2) 소득분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니계수 ◦ 5분위배율
	➤ (3) 빈곤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적 빈곤율 및 국제비교 ◦ 연령대별 빈곤율 및 국제비교 ◦ 빈곤갭
노동-자본간 분배: 고용	➤ (1) 고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자수 ◦ 고용률 ◦ 경제활동참가율 ◦ 실업률
	➤ (2) 노동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당평균취업시간 ◦ 단시간 근로자 수 및 비중 ◦ 노동시간 및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 (3) 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평균임금 및 상승률 ◦ 고용형태별 상대임금 ◦ 종사자규모별 상대임금
	➤ (4) 청년 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실업률 ◦ 청년확장실업률
소비-저축간 분배: 주택	➤ (1) 주택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경제 주택자산 비중 ◦ 가계의 주택자산 비중
	➤ (2) 주택 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매매 수급지수
	➤ (3) 주택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보급률 추이 ◦ 지역별 주택보급률 ◦ 자가보유율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 (4) 주택 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 주택가격 상승률 ◦ 주요국 주택가격상승률 ◦ 주요국 공공임대주택 비중

○ GDP분배부문은 요소소득, 순생산 및 수입세, 고정자본소모로 구성

- 분배부문은 GDP순환과정 중 생산요소를 제공한 경제주체에게 부가가치가 어떻게 분배되었는가를 파악한 것으로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순생산 및 수입세, 고정자본소모로 구성

[분배국민소득의 구성]

부문	구성	주요정책
피용자보수	가계 소득	소득 정책 고용 정책 주택 정책
영업잉여	가계 소유의 비법인 기업(자영업자) 소득,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 단체 소득, 법인 소득	소득 정책
순생산 및 수입세	정부 소득	-
고정자본소모	-	-

- (가계부문: 피용자보수) GDP 분배계정 상 피용자보수는 생산된 부가가치가 노동이라는 경로를 통해 가계로 분배된 몫을 의미하며 가계소득을 구성
 - 피용자보수는 2021년 기준, GDP의 47.4%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동을 통한 소득의 안정을 위해 고용증진, 적정임금 보장 등의 고용정책이 추진
 - 가계부문 소득의 안정과 소득분배 개선 등을 통해 국민들이 일정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 정책을 추진
 - 가계는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여 주택을 구매하는데 사용하며 주택은 가계 자산분배의 핵심으로 가계의 소비-저축 결정에 영향 미치는 주요 요인
- (기업부문: 영업잉여) GDP 분배계정 상 영업잉여는 생산된 부가가치가 자본으로 분배되는 몫을 나타냄
 - 영업잉여는 GDP의 약 2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영업자 및 비영리단체, 법인의 소득을 의미
 - 자영업자의 소득이 모두 영업잉여로 분류되어 노동소득 중 일부가 영업잉여에 포함되어 있다는 비판이 존재
- (정부부문: 순생산 및 수입세) GDP 분배계정 상 순생산 및 수입세는 생산된 부가가치가 정부에 1차 분배되는 부분을 의미
 - 순생산 및 수입세는 GDP의 약 10.1%를 차지
 - 가계 및 기업의 소득·부 등에 대한 경상세 등은 2차 분배를 통해 정부부문으로 이전

- (고정자본소모) 생산활동에 투입된 고정자산의 가치 감소분으로, 생산활동 과정에서 소모되는 가치의 화폐평가액
 - 고정자본소모는 2021년 기준, GDP의 약 20.6%를 차지
 - 유형고정자산의 경우, 생산에 따른 노후화와 시대 변화에 따른 진부화 등으로 가치가 지속 감소

● **가계소득, 고용, 주택시장 등 분배부문이 당면한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개선추세이지만, 아직까지 매우 높은 수준이며, 특히 노인 빈곤율이 월등히 높아 전체 빈곤율을 높이는 상황
-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OECD국가 중 3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의 약 77.4% 수준으로 낮은 수준
- 2020년 우리나라의 실질 주택가격 상승률은 6.74%로 OECD평균(5.34%)보다 높으며, 2020~2021년에 주택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았음

제1절 가계-기업-정부간 분배: 소득 정책³⁵

1. 국민계정 상 가계-기업-정부간 분배

■ 가계-기업-정부간 소득의 분배는 국민소득통계와 소득계정에서 확인

- 소득계정은 생산된 부가가치가 기업, 정부, 가계부문의 소득으로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보여 주고, 제1차 및 제2차 소득분배계정, 현물소득재분배계정으로 구성
- 제1차 소득분배계정에서 생산된 부가가치(GDP) 중 가계로의 분배는 피용자보수, 정부로의 분배는 생산 및 수입세, 남은 금액은 생산 주체인 기업의 소득(영업잉여나 혼합소득)으로 계상됨
 - 본원소득분배(가계): 영업잉여/혼합소득 + 피용자보수 + 수취재산소득
- 제2차 소득분배계정은 제도단위 또는 제도부문간 현금이전을 통한 소득재분배 과정을 나타냄
 - 2차 소득분배(가계): 본원소득 잔액 + 사회수혜금 + 기타경상이전
- 현물소득재분배계정은 공공교육 및 보건 등 현물이전을 통한 소득재분배 과정을 나타냄
 - 처분가능소득 + 사회적 현물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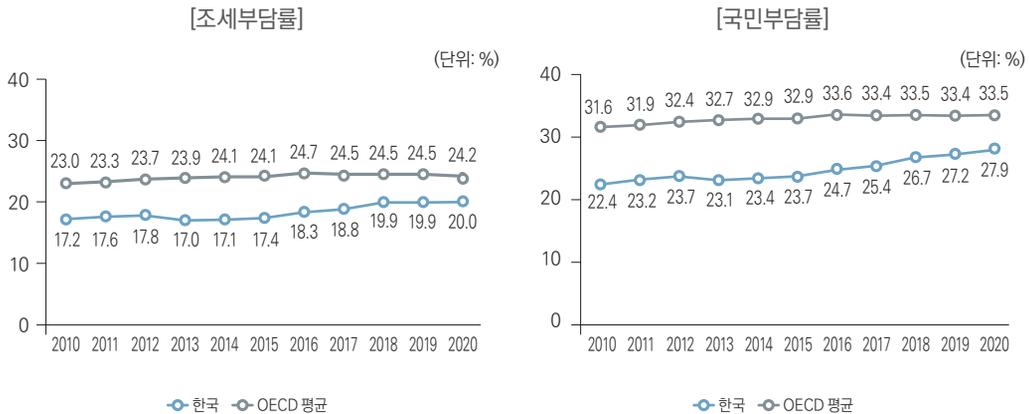
■ 기업-가계 간 분배는 피용자보수와 '고용 정책'을 통해 반영³⁶

- 제1차 소득분배계정에서는 기업-가계 간 분배는 피용자보수, 기업-정부 간 분배는 생산 및 수입세로 나타남
 - 기업-가계 간 분배인 피용자보수는 노동공급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되는 일체의 보수를 의미하고, 가계부문의 소득(임금)으로 측정됨에 따라 피용자보수는 '고용 정책' 부문에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

35) 소득은 가계가 생산부문에 노동력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가계에 분배되는 피용자보수(임금)가 대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국민계정 상 분배 부문에 편성됨. 또한 정부는 가계의 본원소득(시장소득)에서 조세, 연금, 사회보험료 등을 징수하여, 이를 저소득층 등에 대한 소득지원(이전소득)에 총당함으로써 소득계층 간 소득(처분가능소득)분배 수준 결정에 개입

36) 상세한 내용은 '고용 정책'의 피용자보수 설명 참조

[그림 II-30]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국제비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2 조세수첩」, 2022

■ 기업 및 가계-정부간 분배 상황을 나타내는 국민부담률 등은 증가 추세

- 기업-정부 간 분배는 제1차 소득분배계정에서 생산 및 수입세, 가계-정부 간 분배는 2차 분배계정에서 소득·부 등에 대한 경상세와 사회부담금으로 나타남
 - 조세부담률³⁷은 2010년 17.2%에서 2020년 20.0%로 2.8%p 증가하였고, 국민부담률³⁸은 2010년 22.4%에서 2020년 27.9%로 5.5%p 증가
- 2020년 기준 우리나라와 OECD 국가와의 격차는 조세부담률은 4.2%p, 국민부담률은 5.6%p로 우리나라가 낮은 수준

■ 정부는 조세수입을 가계에 사회수혜금, 기업에 보조금 등으로 분배

- 가계가 질병, 실직, 정년 등에 처할 경우, 정부가 사회보장수혜금, 사회보험수혜금, 사회부조수혜금의 형태로 사회수혜금을 이전
- 정부가 기업의 생산활동 수준이나 수입한 재화 및 서비스의 양 또는 금액 등을 기준으로 기업에게 대가 없이 보조금을 제공
- 단, 정부가 납세자(가계 및 기업)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납세자가 지급하는 납세금액과 비례하지는 않음

37) 국내총생산(GDP)에서 조세(국세+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며, 정부가 국민(가계 및 기업)에게 어느 정도의 조세를 징수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

38)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조세부담률+사회보장부담률)으로, 조세부담률보다 포괄적으로 국민부담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

2. 소득 분배 관련 주요 지표

가. 주요 가계소득 지표

- **가계(가구)소득**은 한 가구나 그 가구의 개별 구성원이 1년간 또는 정기적으로 벌어들이는 현금 또는 현물 등의 모든 수입
 - 가구소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천하는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균등화 개인소득'을 사용하여 분석
 - 처분가능소득은 총소득에서 비소비지출(조세,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한 가구의 소비지출과 저축에 사용 가능한 금액

[그림 II-31]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주: 1) 균등화 처분가능소득(명목소득)
 2)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자료는 2011년부터 생산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은행, 「국민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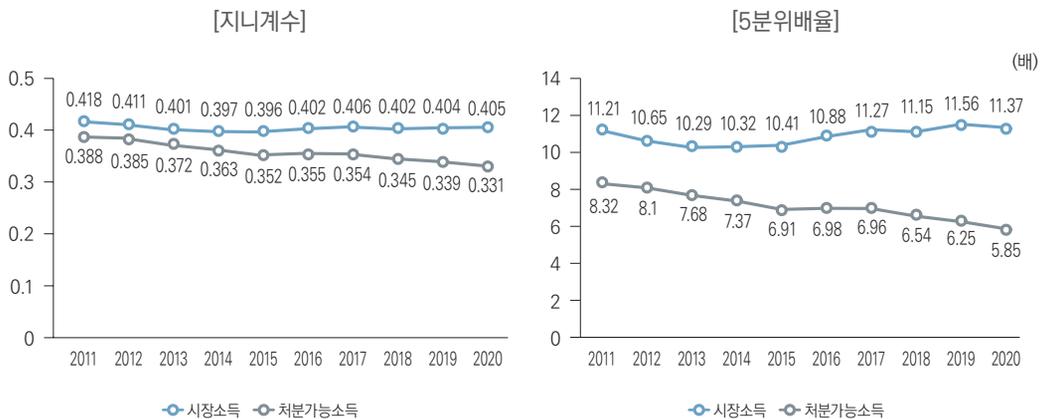
■ 처분가능소득은 꾸준히 증가, 2020년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증가

-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2011년 2,558만원에서 2020년 3,450만원으로 연평균(CAGR) 4.6% 증가
-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2014~2015년을 제외하고는 GDP성장률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

나. 소득분배 지표

-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는 전체 소득 계층을 모아놓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비율을 통해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 0은 소득분배가 완전평등한 경우, 1은 완전불평등한 경우를 의미
- **5분위배율**은 균등화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를 5개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소득이 높은 5분위에 해당하는 개인들의 평균소득과 소득이 낮은 1분위에 해당하는 개인들의 평균소득 사이의 비율
 - 5분위 소득이 1분위 소득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고, 5분위배율이 클수록 불평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

[그림 II-32] 소득분배 지표



주: 1) 균등화 처분가능소득(명목소득)

2)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자료는 2011년부터 생산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비자물가조사」

■ 지니계수는 시장소득,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모두 개선

- 지니계수가 하락한 것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분배 수준이 시장소득,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모두 개선되었음을 보여줌
 - 시장소득은 정부가 지급하는 연금, 수당, 장려금 등 공적이전소득을 뺀 것이므로, 정부의 지원금을 제외하고도 소득불평등도가 개선
- 지니계수는 시장소득 기준으로 2011년 0.418에서 2020년 0.405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2011년 0.388에서 2020년 0.331로 큰 폭으로 개선
 - 처분가능소득의 큰 폭 하락은 소득분배가 크게 개선되었음을 보여줌

■ 5분위배율은 시장소득 기준 악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개선

- 시장소득 기준 5분위배율의 증가는 정부의 정책개입이 없는 경우 소득 상위계층(5분위)과 하위계층(1분위)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의미
 -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개선되었는데, 정부의 개입으로 상위계층(5분위)과 하위계층(1분위)간 소득격차가 큰 폭으로 완화
- 5분위배율은 시장소득 기준으로 2011년 11.21배에서 2020년 11.37배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2011년 8.32배에서 2020년 5.85배로 큰 폭으로 개선

다. 상대적 빈곤율과 빈곤갭

-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인구 중 빈곤 위험에 처한 인구의 비율을 의미
 - 중위소득(처분가능소득)의 50% 이하를 상대적 빈곤선으로 하고, 전체인구 대비 상대적 빈곤선 보다 소득이 적은 인구의 비율로 계산
 - 빈곤율은 다른 소득분배지표와 달리 노인 빈곤율이나 아동 빈곤율 같은 특정 계층에 대한 빈곤율을 많이 이용
- **빈곤갭(poverty-gap)**은 상대적 빈곤선에 해당하는 소득과 하위소득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 차이 정도를 나타낸 지표
 - 빈곤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소득을 벌어야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 부족한 소득의 정도를 나타낸 값(즉, 빈곤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1) 현황

[그림 II-33] 상대적 빈곤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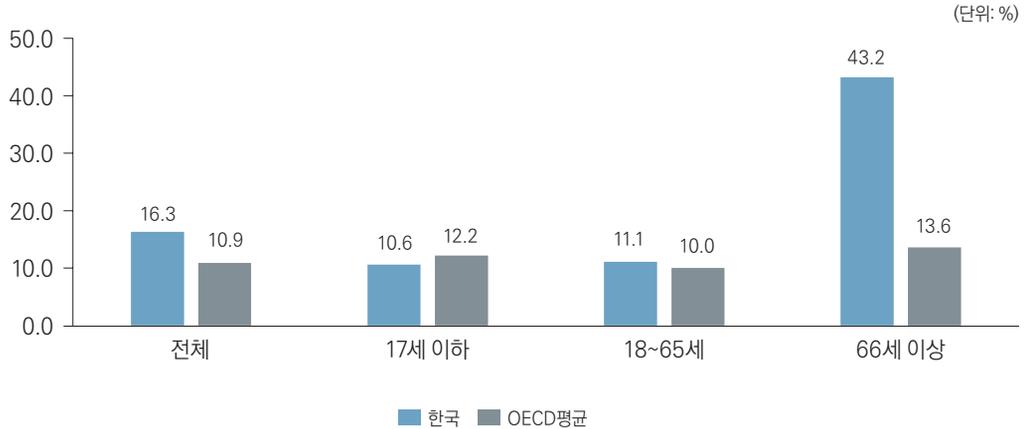
주: 소득수준이 빈곤선(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 50%)보다 낮은 인구의 비중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 우리나라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개선되는 추세

- 시장소득으로는 상대적 빈곤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하락
 - 최근 1인 노인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소득 하위계층의 소득 증가 폭이 인구 전체의 소득 증가 폭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이 증가

- 따라서 정부가 기초생활급여의 기준 중위소득 인상,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등을 통해 공적이전소득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빈곤율이 하락
- 전체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으로 2011년 19.6%에서 2020년 21.3%로 증가하였으나,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2011년 18.6%에서 15.3%로 하락

[그림 II-34] 연령대별 빈곤율(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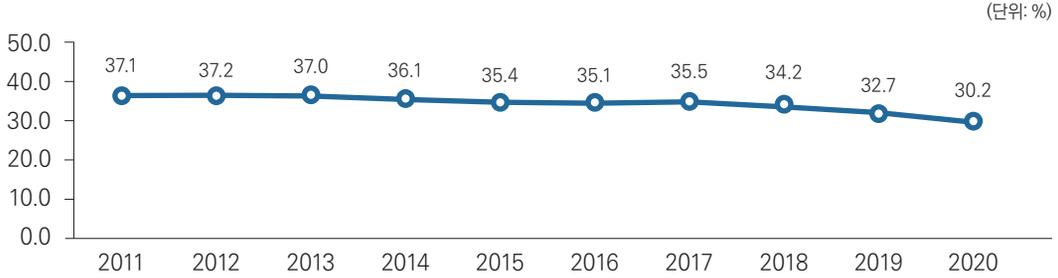


자료: OECD,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Data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월등히 높아 전체 빈곤율을 높이는 상황

- 우리나라의 17세 이하 및 근로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
- 반면, 66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OECD 평균의 3.18배로 다른 연령대의 빈곤율에 비해 월등히 높아 우리나라 전체 빈곤율 수준을 높이고 있음
 - 2019년 기준 전체인구 상대적 빈곤율은 OECD(한국 외 29개국) 평균은 10.9%이고, 우리나라는 16.3%로 5.4%p 높은 수준
 - 2019년 기준 66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이 OECD(한국 외 29개국) 평균은 13.6%이고, 우리나라는 43.2%로 29.6%p 높은 수준

[그림 II-35] 빈곤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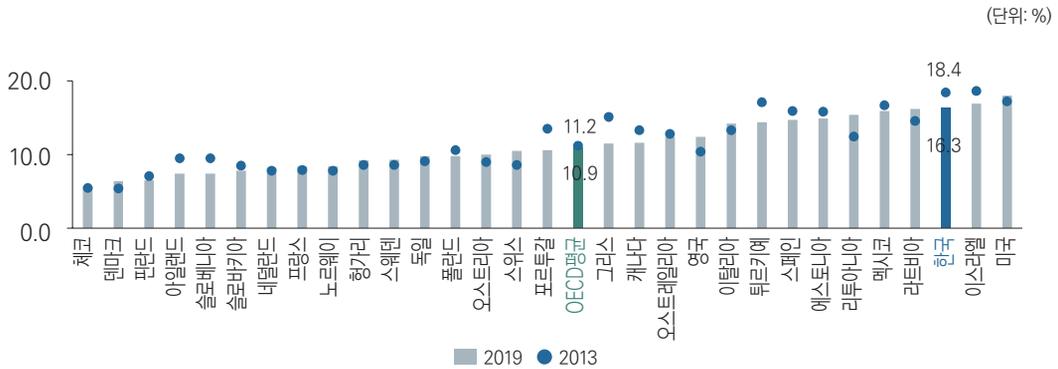
주: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빈곤 인구의 평균소득과 빈곤선의 차이를 빈곤선으로 나눈 값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 처분가능소득 기준 평균 빈곤갭은 2011~2020년 기간 중 하락 추세

- 전체 인구의 평균 빈곤갭은 2011년 37.1%에서 2020년 30.2%로 하락하여, 빈곤의 정도가 개선되는 추세
 - 2017년 이후 대상자가 확대되고, 기준 중위소득 인상,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등을 통해 최저생계 보장수준이 강화 등에 따라 빈곤갭도 하락

(2) 비교

[그림 II-36] OECD 국가 전체인구의 상대적 빈곤율 변화(2013~2019년)



주: OECD 평균은 한국 외 29개국의 평균
 자료: OECD,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Data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개선 추세이나 매우 높은 수준

-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처분가능소득 기준)은 2013년 18.4%에서 2019년 16.3%로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OECD 평균(한국 외 29개국)인 10.9%보다 높은 수준

3. 대한민국 경제와 소득보장 정책

가. 소득보장정책 개요 및 필요성

■ 소득보장정책은 일정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보장을 목표로 함

- 소득보장정책은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회보장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
- 소득보장정책은 소득의 안정과 소득분배 개선 등의 방법을 통해 국민들이 일정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
 - 실업·질병·재해에 의한 수입 중단, 노령으로 퇴직이나 부양자의 사망 등으로 수입이 상실 되는 등의 상황에서도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
- 「대한민국 헌법」은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국가에게 부여하고 있음³⁹⁾

■ 소득보장제도는 30여 년간 꾸준히 개선되어 현재와 같은 구조를 갖추

-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의 발전수준과 국민의 복지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여 국민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1963년 제정)」을 폐지하고, 「사회보장기본법(1995년)」을 제정
-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실업과 빈곤 문제가 심각했던 상황에서, 빈곤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1999년 제정(2000년 10월 1일 시행)
- 국민연금(1988년)과 직역연금으로 구성된 공적연금제도, 기초연금 도입(2008년), 장애인연금과 수당,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수당 등

■ 소득불평등, 빈곤 문제 등은 우리 경제의 성장과 사회적 통합을 저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도입한지 20여 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빈곤은 우리 사회의 위협요인으로 작용
 - 우리나라 전체 빈곤율은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고, 특히 노인빈곤율은 2019년 43.2%로 OECD 국가(한국외29개국) 가운데 가장 높음

39)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제2항

나. 소득보장정책 체계

(1) 법·제도

■ (법적근거) 「사회보장기본법」을 최상위 근거법으로 소득보장 정책 시행

-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규정
 - 1960년대 초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보호를 실시한 이후, 산업재해보험, 의료보험, 연금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제도 등이 사회적 욕구와 재정 형편에 따라 단편적으로 도입·실시
 - 당시 이미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사회보장적 사업의 균형 유지·발전 및 조정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1963년)
 - 「사회보장기본법」이 입법, 제정되며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폐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국가가 지급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
 -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인해 실업과 빈곤 문제가 심각했던 상황에서, 빈곤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행(2000. 10. 1.)
- 「사회보장기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차이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사회보장 관련 법률의 최상위 근거법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주요 정책 대상이 경제적 약자임

■ (법정계획)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최상위 계획으로 소득보장 정책 추진

-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현재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19~2023)」이 수립되어 추진 중
 - 고용·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 등 4개 부문으로 구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년 제정)」 제20조의2에 따라 정부는 3년마다 소관별로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현재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이 수립되어 추진 중
 - 생계, 주거, 의료, 교육 4개 부문에서 정책 시행

(2) 정책 목표 및 수단

■ (정책목표) 소득보장 수준 제고를 통해 소득분배 및 빈곤 개선

- 「제2차 계획 사회보장기본계획」을 통해 2019~2023년 기간의 상대빈곤율 축소, 소득보장대체율 제고 등의 정책목표를 제시
 - 상대빈곤율을 2017년 17.4%에서 2040년 11.3%로 완화⁴⁰
 - 취약계층 대상 소득보장 부문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을 (2018년) 89만명에서 (2023년) 47만명으로 축소
 - 노후소득보장 부문에서는 소득보장대체율을 (2017년) 48.3%에서 (2023년) 52.0%로 상향
-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사회통합과 포용국가의 기틀을 확고하게 하기 위한 3년간(2021~2023년)의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
 -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 확대
 -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본생활보장 수준 제고
 - 탈빈곤 지원을 위한 빈곤 예방과 자립을 위한 다각적 지원
 - 제도 내실화를 위한 수급관리 및 전달체계 강화 등의 정책

■ (정책수단) 취약계층 소득보장 등 3개 부문의 정책과제로 구성

-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취약계층 대상 소득보장, 근로연령층 소득보장체계 확충,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등
- (취약계층 대상 소득보장) 기초생활보장제도(생활급여, 자활급여), 긴급복지,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등으로 구성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포괄범위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 폐지 및 추가 완화, 기준 중위 소득 산출 가구 기준(현행 4인) 변경, 보유재산 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선(생계 30%, 의료 40%, 주거 44%, 교육 50%) 조정
 - 자활사업의 효과성 제고: 자활급여 단가 현실화(최저임금의 80%), 자활근로소득공제 제도 도입 등
 -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단계적 인상(월 30만원)

40) (2017년) 17.4% → (2023년) 15.5% → (2040년) 11.3%

- (노후 소득보장) 기초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퇴직연금, 농지연금·주택연금 등 다층체계를 구축해 노후 소득보장 대체율 상향
 - 저소득 노인 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을 소득하위 20% 어르신(2019년), 소득하위 40% 어르신(2020년), 소득하위 70% 어르신(2021년)으로 확대
 -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기능 강화: 저소득 지역 가입자(납부예외자) 등에 대한 보험료 지원 신설, 사회적 논의를 통한 연금제도 개선 등
 -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 (0층) 공공부조, (1층) 공적연금, (2층) 직역연금, (3층) 보충형연금(주택·농지연금) 등 4층으로 구성
 - 노인일자리 확대: (2018년) 51만개 → (2022년) 80만개
- (근로연령층 소득보장) 주로 고용(EITC, 일자리 등)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다음 절의 고용정책에서 제시

4. 소득보장정책과 재정

- **소득보장 제도**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성
 -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구성
 - 공공부조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구성
 - 사회서비스는 노인복지서비스, 장애인복지서비스, 아동복지서비스, 가정복지서비스로 구성

[표 II-9] 소득보장 관련 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기초생활급여	40,327	46,888	52,996	13.0
생계급여	40,011	46,555	52,648	13.1
해산·장제급여	316	333	348	4.5
기초연금	131,760	149,635	161,140	7.7
장애인연금	7,861	8,291	161,140	0.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2 대한민국 재정」, 2022.

■ 정부의 소득보장 관련 예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

- 2022년 기초생활급여(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예산은 5조 2,996억원으로, 2021년 대비 6,108억원(13.0%) 증가
 - 생계급여는 2021년 예산 대비 13.1% 증가하였는데,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최대급여액이 약 5.5% 인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등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
- 2022년 기초연금 예산은 16조 1,140억원으로 2021년 대비 1조 1,503억원 증가, 지원대상은 628.3만명으로 2021년 597.6만명 대비 30.7만명 증가
 -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
 - 장애인연금 사업은 장애에 따른 근로능력의 감소로 인한 소득상실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

BOX 11 노인빈곤 국제 비교

■ 우리나라 노인(66세 이상)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

-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19년 43.2%로 OECD 평균(한국 외 29개국) 13.6%의 3.14배 수준으로 가장 높음
 - 2013~2019년 기간 중 OECD 국가 평균은 11.6%에서 13.6%로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는 47.7%에서 43.2%로 하락

[OECD 국가 노인인구의 빈곤율 변화(2013~2019년)]



주: OECD 평균은 한국 외 29개국의 평균
 자료: OECD,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Data

■ 노인 빈곤갭(poverty-gap)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

-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갭은 37.6%(2018년)로 미국의 37.7%(2019년) 다음으로 높아 빈곤의 정도가 심함

[66세 이상 인구의 빈곤갭(2019년)]



주: OECD 평균은 한국 외 29개국의 평균
 자료: OECD,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Data

제2절 노동-자본간 분배: 고용 정책⁴¹

1. 국민계정 상 노동-자본간 분배

■ 노동-자본간 분배구조는 국민소득통계와 소득계정을 통해 파악

- 피용자보수는 한 국가의 생산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노동을 대가로 가계에 분배되는 임금과 급여 등을 의미
 - 노동의 대가로 피고용자에게 지급되는 현금과 현물 등 일체의 보수⁴²
- 영업잉여는 생산활동을 주관한 생산주체에게 돌아가는 몫을 의미

■ 노동-자본간 분배 중 노동(피용자보수)의 비율은 2010년 이후 상승 추세

- 피용자보수는 2008년 506.0조원에서 추세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991.9조원을 기록하여 485.9조원(약 96%) 증가
- 피용자보수비율은 2008년 61.1%에서 2010년 58.9%로 하락하였으나 이후 추세적으로 상승하여 2021년 68.4%를 기록⁴³

[그림 II-37] 피용자보수 및 피용자보수비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41) 고용은 노동이 생산에 투입되는 경로나자 경제적 성과가 노동자에게 분배되는 경로라는 점에서, 성장과 분배 부문에 모두 포함할 수 있음. 다만, 고용은 생산의 파생수요로 생산이 고용에 영향을 주는 반면, 분배는 고용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고용을 분배 부문에 포함하였음.

42) 임금보급금과 기타 급여와 수당, 사회보험 고용주부담 등으로 구분되며 고용주가 납부한 사회보장기금과 연금기금 및 보험 등도 포함

43) 피용자보수비율은 요소비용국민소득(피용자보수+영업잉여)에서 피용자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기존에는 노동소득분배율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2022년 6월 30일 이후 피용자보수비율로 용어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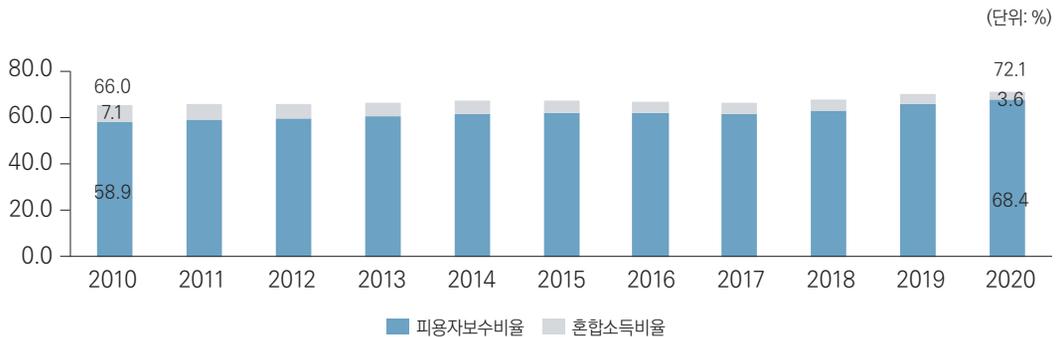
■ 자영업자의 노동소득을 반영하여 노동-자본간 분배를 살펴볼 필요

- 피용자보수는 임금근로자의 소득만을 반영하고 자영업자의 소득을 포함하지 않아 노동에 대한 보상을 모두 반영하지 못함
 - 전체 취업자 중 약 20%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소득이 영업잉여에 포함되어, 피용자보수만을 고려할 경우 노동에 분배되는 비중이 과소평가됨
 -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기존 노동소득분배율⁴⁴의 명칭을 피용자보수비율로 변경하였고, 향후 새로운 노동소득분배율 지표 발표 예정
- 국민계정상 가계 비법인기업(주로 자영업자)의 혼합소득⁴⁵을 통해, 자영업자의 소득을 반영한 노동소득분배율을 간접적으로 검토

■ 자영업자의 소득을 반영한 경우에도 노동에 분배되는 비중은 상승세⁴⁶

- 자영업자의 혼합소득을 반영하여 노동-자본간 분배를 살펴보아도, 최근 10년간 노동에 분배되는 비중은 상승
 - 요소비용국민소득에서 피용자보수+혼합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66.0%에서 2020년 72.1%로 약 6.1%p 상승
 - 다만, 혼합소득의 비율은 2010년 7.1%에서 2020년 3.6%로 감소
- 노동-자본간 분배 변화의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노동 투입의 양(취업자 수, 노동시간)과 가격(임금) 등을 살펴볼 필요

[그림 II-38] 피용자보수비율 및 혼합소득비율 추이



주: 혼합소득은 현재 2010~2020년에 대한 자료가 제공되고 있음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44) 피용자보수/요소비용국민소득*100

45) 혼합소득이라는 용어는 자영업자는 경영자와 노동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여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가 혼합되어 있음을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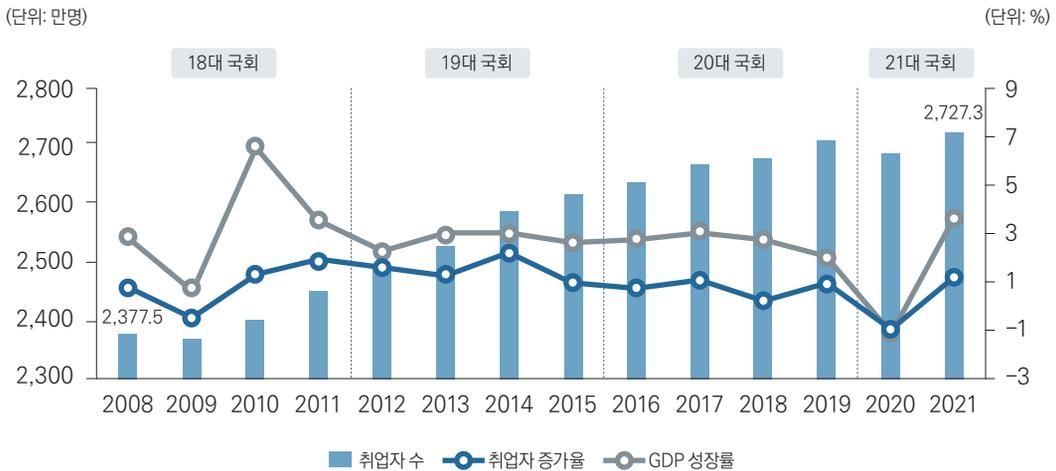
46) 혼합소득은 자영업자의 노동소득뿐만 아니라 자본소득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석에 유의할 필요

2. 노동 분배 관련 주요 지표

가. 주요 고용지표

- **취업자 수**는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의 수로 정의되며, 생산에 투입된 노동력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수 비중으로 한 국가의 노동력 활용정도를 나타냄
- **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을 희망하는 인구)의 비중으로 노동공급의 척도가 됨
-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

[그림 II-39] 취업자 수 및 GDP성장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은행, 「국민계정」

■ 취업자 수는 추세적 증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감소 이후 2021년 반등

- 2021년 기준 취업자 수는 2,727.3만명으로 18대 국회 시작 시점인 2008년(2,377.5만명) 대비 약 349.8만명(14.7%) 증가
 - 취업자 증가율(연평균): 18대 1.0% 19대 1.6%, 20대 0.9%, 21대 0.3%
- GDP성장률과 취업자 수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
 - 취업자 수는 경기 후행지표로, 경기가 호황일 때 증가하고 불황일 때 감소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상관계수: 0.6953)

[그림 II-40] 주요 고용지표 변화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은 2009년 이후, 실업률*은 2013년 이후 추세적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인구 수/15세 이상 인구 수

* 고용률: 취업자 수/15세 이상 인구 수

* 실업률: (경제활동인구 수-취업자 수)/경제활동인구 수

- 2021년 경제활동참가율(62.8%) 및 고용률(60.5%)은 2008년 대비 각각 1.1%p, 0.7%p 상승
 - 2009년 이후 추세적으로 상승하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2020년에 하락했지만 2021년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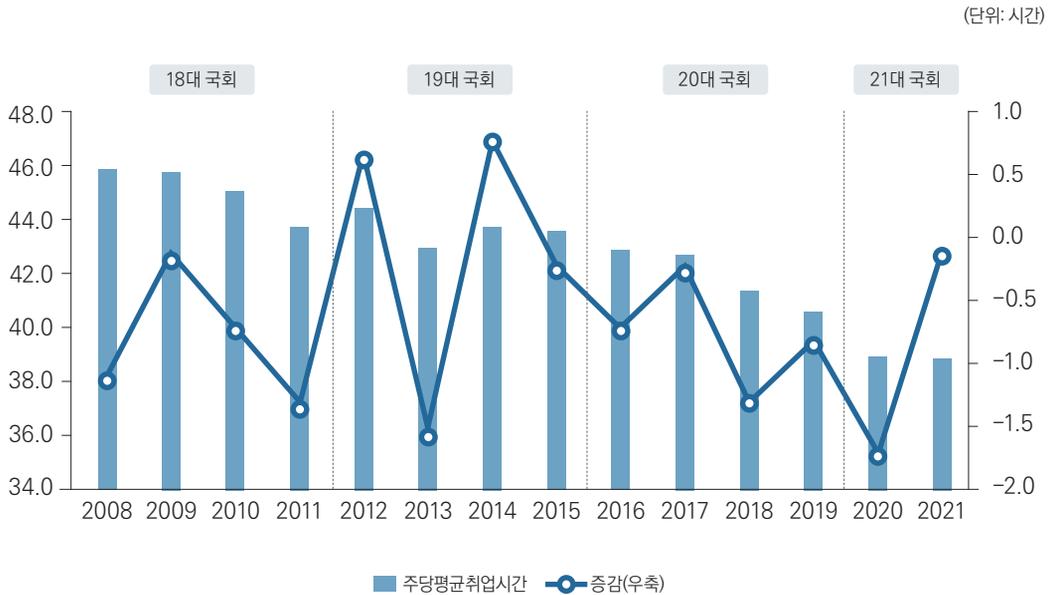
- 실업률은 2010년 3.7%에서 2013년 3.1%로 하락하였으나 이후 추세적으로 상승하여 2021년 3.7%를 기록
 - 고용률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이 더욱 빠른 속도로 상승하여 실업률 상승

나. 노동시간

○ **노동시간**은 노동자가 노동력을 투입한 시간을 의미하며,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노동시간이 긴 국가 중 하나

(1) 현황

[그림 II-41] 노동시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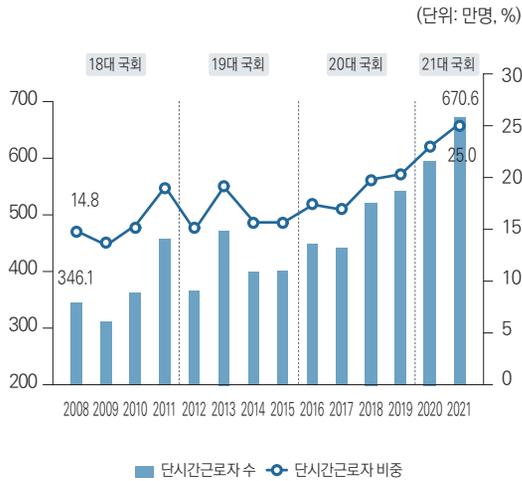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노동시간은 정책적 노력 등을 바탕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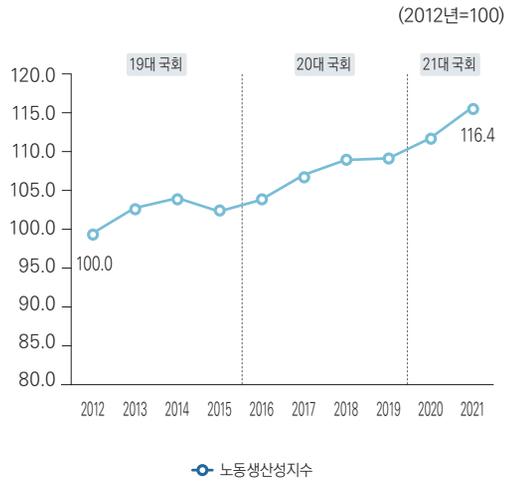
- 2021년 취업자의 1주 평균 노동시간은 38.9시간으로 2008년(46.0시간) 대비 7.1시간 (15.4%) 감소
 - 노동시간 증감(연평균): 18대 -0.8시간, 19대 -0.05시간, 20대 -0.75시간, 21대 -0.9시간

[그림 II-42] 단시간 근로자 수 및 비중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II-43] 시간당 노동생산성지수



자료: 한국생산성본부

■ 노동시간의 지속적인 감소는 단시간 근로자의 증가에서도 일부 기인

- 단시간 취업자 수는 2008년 346.1만명에서 2021년 670.6만명으로 약 324.5만명(93.8%) 증가
 - 동 기간, 단시간 취업자 비중은 14.8%에서 25.0%로 10.3%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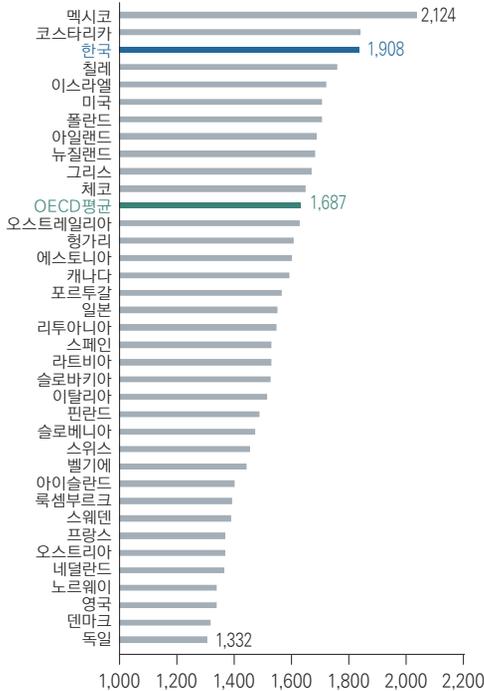
■ 노동시간 감소로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지속 상승

- 노동자가 투입한 노동시간 1시간 당 생산되는 부가가치는 추세적 증가
 - 2021년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12년 대비 16.4% 상승

(2)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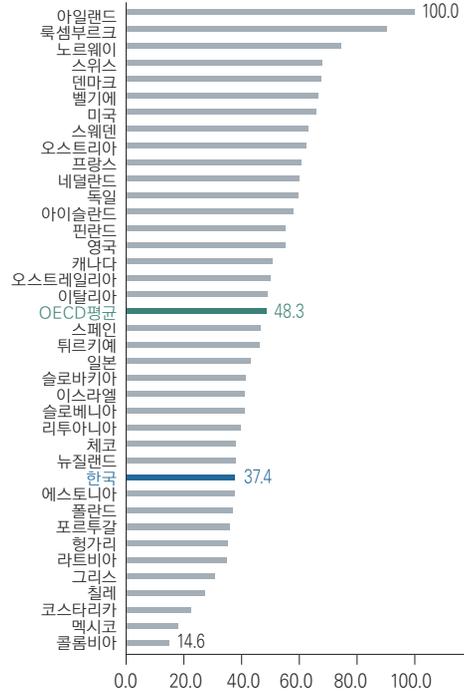
[그림 II-44] OECD국가 연평균 노동시간

(단위: 시간)



[그림 II-45] OECD국가 시간당 노동생산성

(2020년 기준, 아일랜드=100)



주: 1) 근로시간은 임금근로자가 노동에 투입한 시간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위에서 제시한 노동시간과는 차이가 있음
 2) 근로시간의 경우, 자료의 한계로 콜롬비아와 튀르키예는 반영하지 못하였음
 3)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20년 노동생산성이 가장 높은 아일랜드를 100으로 설정한 상대값
 자료: OECD, *OECD Statistics*

■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OECD국가 중 3번째로 높음

- 2020년,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908시간
 - OECD 국가 중 멕시코(2,124시간), 코스타리카(1,913시간)에 이어 3위를 기록하였고 OECD평균보다 약 221시간 높은 수준

■ 최근 노동생산성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는 낮은 수준

- 2020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국가 중 가장 노동생산성이 높은 아일랜드의 약 37.4% 수준
 - OECD 평균과 비교해도 약 77.4% 수준(37.4/48.3)에 그쳐,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냄

다. 임금

○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노동의 가격을 나타냄

(1) 현황

[그림 II-46] 월평균 임금 수준 및 상승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

■ 평균 임금은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임금상승률은 지속 하락

- 2021년 기준 월평균 임금은 273.4만원으로 2008년(184.7만원) 대비 88.7만원(48.0%) 상승
- 다만, 18대 국회 시기에 3.9%였던 임금상승률은 21대 국회 때 1.7%로 하락
 - 임금 증가율(연평균): 18대 3.9%, 19대 3.2%, 20대 3.5%, 21대 1.7%

(2) 비교

[그림 II-47] 고용형태별·종사자규모별 상대임금(시간당 임금 기준)

(단위: %)



주: 비정규직 상대임금은 정규직 임금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중을 의미하며, 중소기업 상대임금은 300인 이상 대기업 대비 300인 미만 중소기업 종사자의 임금 비중을 의미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고용형태 및 종사자규모 등에 따른 임금수준의 격차가 존재⁴⁷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시간당 임금 기준)은 추세적으로 상승
 - 2021년,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은 72.9%로 2008년(55.5%) 대비 17.4%p 상승
- 중소기업(300인 미만) 종사자의 대기업(300인 이상) 대비 시간당 임금은 2015년 이후 개선되는 양상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상대임금은 2008년 53.1%에서 2015년 48.5%로 하락한 후 점차 개선되어 2021년 57.6%를 기록

47) 월평균 임금은 노동시간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노동투입에 대한 보상 수준의 차이를 보기 위해 시간당 임금을 활용하였음.

3. 대한민국 고용 정책

가. 고용 정책 개요 및 필요성

■ 고용 정책은 노동 투입량과 가격에 모두 영향을 미쳐 노동-자본간 분배에 영향

- 국가는 일자리 창출, 고용안전망 확충,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
 - 「대한민국헌법」은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조건인 설정 등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⁴⁸
- 노동시장의 실패로 나타날 수 있는 실업의 증가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적 개입이 필요
 - 경제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인력의 효율적 배분 등 노동시장의 자율적 조정기능이 훼손되어 실업이 증가
 - 노사 간 교섭력 차이로 인한 불공정 계약 및 불평등 고용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이 형성되어,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지속가능성을 저해

■ 고용 정책은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성장의 원동력 창출에 기여

- 노동시장 구조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창출
 - 산업구조 고도화, 기술발전, 저탄소정책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 구조 변화로 고용의 질 악화 및 양극화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원활한 노동이동을 지원하고 노동자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
 -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자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유망 산업 및 기업에 인적자원을 공급하여 경제 활성화
- 고용정책을 통해 지속가능 성장 여건을 제고하고 사회 안정성을 높이는 등 사회·경제적 편익 창출
 -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노동자를 보호하고, 사회의 노동력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환경을 조성
 - 노동시장 격차 해소로 인한 양극화를 완화 등을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

48) 「대한민국헌법」 제32조

나. 고용정책 체계

(1) 법·제도

■ (법적 근거) 「고용정책 기본법」을 바탕으로 고용정책을 수립

- 「고용정책 기본법」은 1993년 제정되어 국가의 고용정책 수립·시행에서 지향해야 할 목표를 제시하고, 효율적 정책 시행을 위한 임무 부여
 - 산업구조 변화 및 생산시설 자동화, 국내외 경기 변동 등으로 인한 고용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고용정책의 실시 근거를 마련
- 노동시장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이는 고용정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 의무화(제6조)
 - 고용안정과 실업자 생활안정, 직업 훈련, 고용서비스 확대 등 노동자 보호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ALMPs)의 수립 및 시행을 명시

■ (법정 계획)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과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 「고용정책 기본법」 제8조에 따라 5년마다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현재 2017년에 발표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바탕으로 고용정책이 추진 중⁴⁹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목표
 - 2020년에 「후반기 일자리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기존계획을 보완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서도 고용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

(2) 정책 목표 및 수단

■ (정책목표) 일자리 창출, 삶의 질 개선, 노동시장 및 고용 효율성 제고

- 고용 증대
- 고용안전망 강화
- 근로조건 개선
- 노동시장 효율성 제고

49) 다음 고용정책 기본계획은 2022년 후반기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

■ (정책수단) 정부 지원을 통한 고용 증대와 법 개정을 통한 근로여건 개선 등⁵⁰

- (고용 증대) 재정 및 세제지원, 정책금융 등 정부 지원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과 직접일자리 사업을 통한 공공일자리 확충
 - (민간 지원체계 개편) 세제 및 정책금융 지원제도를 고용창출 중심으로 개편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게 지원 강화
 - (공공일자리 확충) 경찰, 소방관 등 현장·민생 공무원과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 자리를 확충하고 노인 등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
- (고용안전망 강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통한 고용 안전망 강화
 -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기존 임금근로자에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자영업자, 예술인 등으로 확대하고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
 -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 실업급여의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확대
- (근로조건 개선)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상한 설정 등을 통한 근로여건개선
 - (근로시간 상한 설정) 휴일을 포함한 근로시간의 상한을 주 52시간으로 규정하고 적용을 확대하되, 유연화 등 효율성 제고 방안 모색
- (노동시장 효율성 제고)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확대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를 통한 노동시장 효율성 제고
 - (맞춤형 지원 강화) 맞춤형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를 통해 청년, 여성, 신중년 등 대상별 취업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취업, 인적자본축적 및 노동이동 등을 지원

50)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후반기 일자리정책 추진방향」, 등을 바탕으로 작성

4. 고용 정책과 재정

■ 정부의 고용정책 관련 재정 투입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
 - 고용 증대를 위한 직접 일자리 사업과 창업지원
 -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장려금과 실업소득
 - 노동시장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지원
- 2022년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규모는 약 31.5조원으로 2021년(30.5조원) 대비 1조원(3.4%) 증가
 - 2021년 고용정책 관련 예산은 빠르게 증가하였으나(전년대비 +5조원, +19.7%), 2022년에는 증가세가 둔화
 - 2022년 기준, 실업소득(40.3%) 관련 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장려금(25.5%)도 높은 비중을 차지

[표 II-10]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규모

(단위: 억원, %, %p)

	2020	2021(A)	2022(B)	
				증감(B-A)
합계	254,998 (100)	305,131 (100)	315,809 (100)	10,678 (0)
직접 일자리	28,587 (11.2)	31,599 (10.4)	33,932 (10.7)	2,333 (0.3)
직업훈련	22,434 (8.8)	22,648 (7.4)	25,491 (8.1)	2,843 (0.7)
고용서비스	11,994 (4.7)	17,330 (5.7)	20,207 (6.4)	2,877 (0.7)
고용장려금	64,950 (25.5)	84,106 (27.6)	80,496 (25.5)	-3,610 (-2.1)
창업지원	23,585 (9.2)	24,071 (7.9)	28,433 (9)	4,362 (1.1)
실업소득	103,447 (40.6)	125,377 (41.1)	127,249 (40.3)	1,872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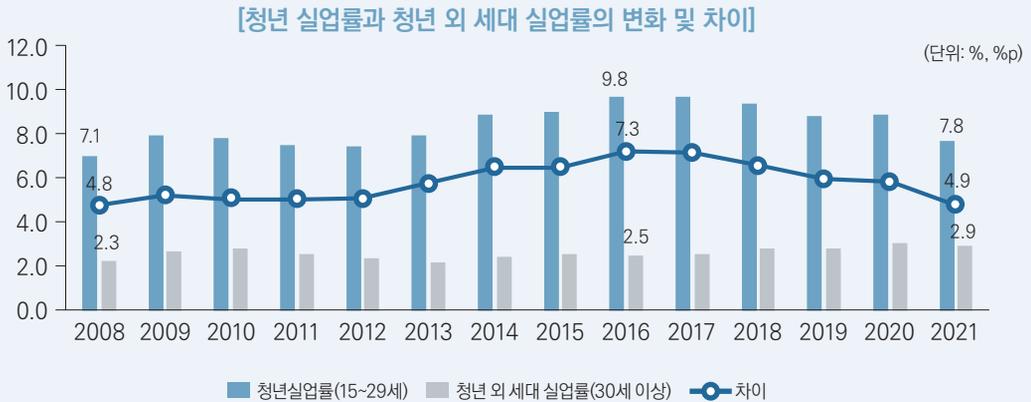
주: 괄호 안의 값은 전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해당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자료: 고용노동부

BOX 12 청년실업

■ 청년 실업률*은 최근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다른 연령대 대비 높은 양상

※ 청년 실업률은 청년층(15~29세)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인구(경제활동인구) 중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하며,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반영

- 2021년 기준 청년 실업률은 7.8%로 2017년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
 - 청년 실업률은 2008년 7.1%에서 상승하여 2016~2017년 9.8%를 기록한 후 추세적으로 하락하여 2021년 7.8%를 기록
- 청년 실업률과 다른 연령대의 실업률 간 격차 또한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 청년 실업률과 청년 외 세대 실업률 간의 격차는 2008년 4.8%p에서 2016년 7.3%p까지 확대된 후 점차 감소하여 2021년 4.9%p로 축소
 - 최근의 격차 축소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준 청년 실업률은 청년 외 세대 실업률의 약 2.6배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청년 실업률은 하락한 반면, 청년 확장실업률⁵¹은 추세 상승⁵¹

※ 확장실업률은 '일하고 싶은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현재 노동시장 참여자들이 체감하는 실업률

- 청년 실업률은 2017년 이후 하락하고 있지만, 체감 실업률에 보다 가까운 확장실업률은 추세적으로 상승
 - 청년 확장실업률은 데이터 제공이 시작된 2015년 21.9%에서 2021년 23.1%로 상승
 - 청년 실업률과 확장실업률 간의 격차 또한 확대되고 있어, 청년층의 어려움이 실업률을 통해 파악되는 것보다 심각할 수 있음을 시사
- 청년 실업률과 확장실업률 간 격차는 2015년 12.8%p에서 2021년 15.3%p로 확대

[청년 실업률과 청년 확장실업률의 변화 및 차이]

(단위: %, %p)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51)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다음과 같이 정의

- 확장실업률: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실업자+잠재경제활동인구)/확장경제활동인구×100
-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취업 시간이 36시간 미만(일시휴직자 포함)이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실제 추가 취업이 가능한 사람
- 잠재경제활동인구 = 잠재취업가능자* + 잠재구직자*
- * 잠재취업가능자 = 지난 4주 간 구직활동을 했으나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사람
- * 잠재구직자 =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사람
- 확장경제활동인구 = 경제활동인구 + 잠재경제활동인구

제3절 소비-저축간 배분: 주택 정책⁵²

1. 국민계정 상 소비-저축간 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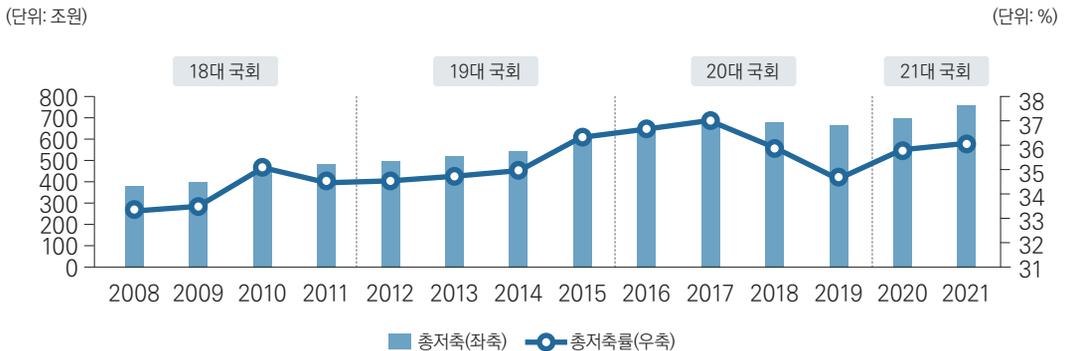
■ 소비-저축간 배분구조는 소득계정과 국민대차대조표를 통해 파악

- 국민소득계정의 소득에서 소비를 차감한 저축은 투자로 이어짐
- 총저축은 국민총가처분소득 중 소비되지 않고 남는 부분(저축)으로 국내의 고정자본형성(국내 총투자율⁵³에 사용되어 차기 생산을 증가시키는 데 이용되거나 대외자산 구입(국외투자율⁵⁴에 이용됨
 - 저축액이 투자되면 국민대차대조표 상의 비금융자산 증가를 가져오며, 비금융자산 중에서 주택과 관련한 자산의 비중이 30.4%에 달함

■ 총저축율은 2017~2019년 기간 감소했으나 이외 기간은 상승 추세

- 총저축은 2008년 386.2조원에서 추세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758.7조원으로 372.5조원(약 96.5%) 증가
- 총저축율은 2008년 33.4%에서 2017년 37.1%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이후 감소했으나 2021년 36.1%를 기록
 - 2018~2019년 소비 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넘어서면서 저축률 하락

[그림 II-48] 총저축액과 총저축률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계정

52) 주택은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필수적인 요소로 가계는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여 주택을 구매하는데 사용하므로 가계소득의 소비-저축 결정에 영향 미치는 요인인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

53) 국내 총투자율 = 총자본형성/국민총처분가능소득

54) 국외투자율 = 경상계정잉여 / 국민총처분가능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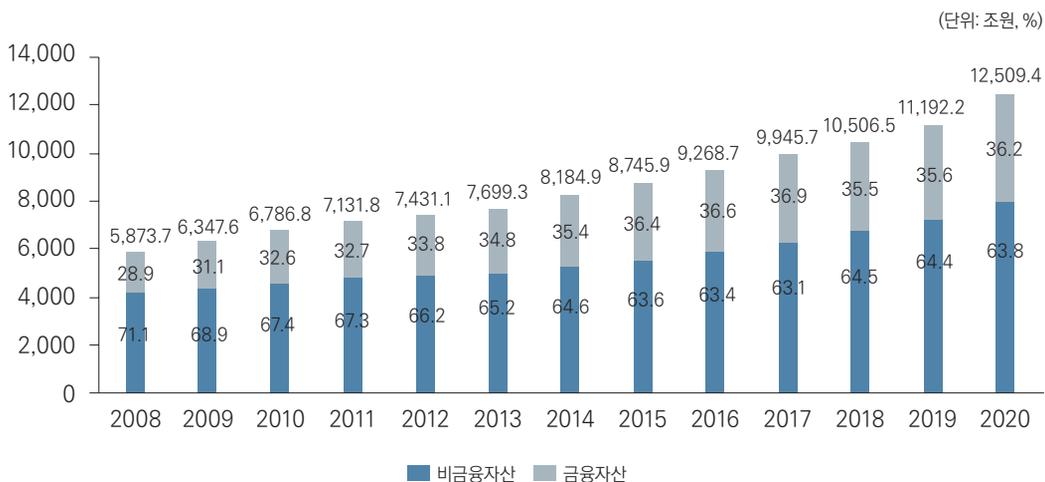
■ 주택은 가계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으로 가계 소비-저축간의 배분에 영향

- 가계가 소득 중 소비하고 남은 저축액은 자산(금융자산 및 비금융자산)으로 축적하게 되며, 이는 국민대차대조표 상의 순자산 증대를 가져옴
 - 가계는 주택보유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며, 주택은 가계의 자산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소득증가 및 여유자금의 생겼을 때 부동산 투자 의사가 있는 가구주의 비중은 50%를 상회(가계금융복지조사)
 - 2018년 53.5% → 2019년 52.3% → 2020년 52.8% → 2021년 57.6%

■ 2020년 가계의 총자산(1경 2,509조원)중에서 비금융자산이 63.8%를 차지

- 우리나라 가계의 총자산은 2008년 5,874조원에서 2020년 1경 2,509조원으로 2배이상 증가
 - 2020년 금융자산은 4,533조원, 비금융자산은 7,977조원임
- 2020년 우리나라 가계의 총자산 중에서 비금융자산(실물자산)의 비중이 63.8%로 금융자산(36.2%) 보다 높은 수준
 - 비금융자산의 비중은 2008년 71.1%로 더 높은 수준이었으나, 12년동안 7.3%p 감소 추이를 보임
 - 2020년 가계의 비금융자산 세부 구성비: 토지자산 73.2%, 건설자산 24.9%, 설비자산 0.8%, 지식재산생산물 0.4%, 재고자산 0.4% 등임

[그림 II-49]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자산 및 비금융자산 금액 및 비중



주: 금융자산 및 비금융자산 막대그래프의 레이블은 비중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국민대차대조표

2. 주택 관련 주요 지표

가. 가계 주택자산 비중

○ **가계의 주택자산 비중**은 가계의 총 자산(금융자산+비금융자산) 중에서 주택자산(주거용건물 + 주거용건물의 부속토지)의 비중

(1) 현황

[그림 II-50] 국내 및 가계의 주택자산 비중



주: 총자산 중 주택자산 비중 = 주택자산(주택 및 주택부속토지) ÷ 총자산 × 100

자료: 한국은행 국민대차대조표

■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주택자산 비중은 2020년 42.6% 수준

-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총자산 중에서 주택자산의 비중은 2008년 43.2%였으나 이후 감소추이를 보이다가, 2015년 40.3%로 최저 비율을 기록한 뒤 증가하는 추이를 보임
- 국내(가계, 정부, 기업) 총자산 중 주택자산의 비중은 2020년 15.7%로 가계의 자산중에서 주택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나. 주택매매 수급지수

○ **주택매매 수급지수**는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비중을 점수화한 수치로 0에 가까울수록 공급우위,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우위, 100에 가까울수록 수요와 공급이 비슷함을 나타내는 지표

(1) 현황

[그림 II-51] 주택매매 수급 지수



주: 주택매매의 수요와 공급의 비중(매도·임대문의 많음, 매도·임대문의 약간 있음, 비슷함, 매수·임차문의 약간 있음, 매수·임차문의 많음)을 선택하게 하여 점수화한 수치로 0에 가까울수록 공급 많음,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 많음, 100에 가까울수록 수요와 공급이 비슷함을 의미
 자료: 한국부동산원

■ 전국의 주택 매매수급은 2020~2021년에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았음

- 주택매매수급 지수는 2020년 7월~2021년 11월 기간동안 100을 상회하여 수요가 공급을 초과

■ 주택공급 측면인 인허가·착공·분양이 감소하면서 2018년 이후 준공물량이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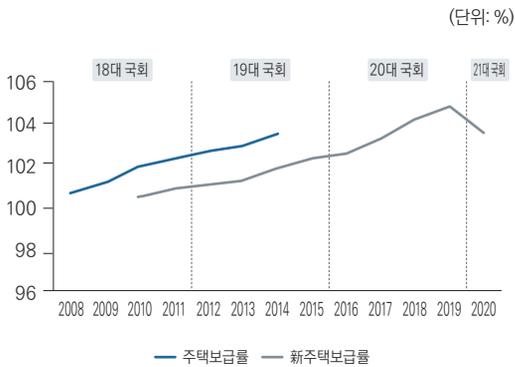
- 인허가물량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나, 2021년은 전년보다 8.7만호 증가하여 54.5만호임
- 착공은 2018년까지 하락세를 보였으나 이후 증가하여 2021년 58.4만호임
- 분양은 2016년 46.9만호였으나, 2018년 28.3만호로 가장 적었으며 이후 증가하여 2021년 33.7만호이며, 준공은 2021년 47.1만호임

다. 주택보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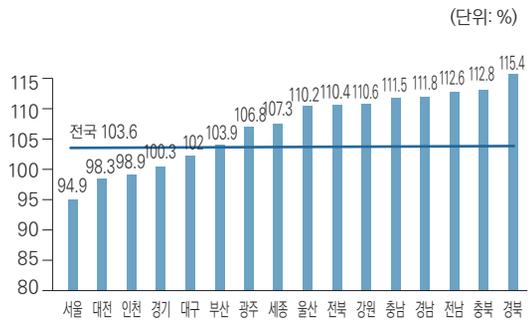
- **주택보급률**은 주택의 수를 주택 수요자인 가구 수로 나눈 비율로 주택이 보급된 정도를 파악하는 지표
 - 국가 또는 지역에 있어서 주택재고가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들의 수에 비하여 얼마나 부족한지 또는 여유가 있는지를 총괄적으로 보여주는 양적 지표
 - 200년부터 가구와 주택 수 산정방식의 개선으로 **신주택보급률** 도입

(1) 현황

[그림 II-52] 주택보급률 추이



[그림 II-53] 지역별 신주택보급률(2020년)



주: 1) 주택보급률 = 보통가구 수(일반가구-1인가구-5인이하 비혈연가구)/주택수(다가구 주택을 1동으로 계산)

2) 신주택보급률 = 일반가구 수(총가구-집단가구(보육원 등)-외국인가구)/주택수(준주택 및 비주택 제외)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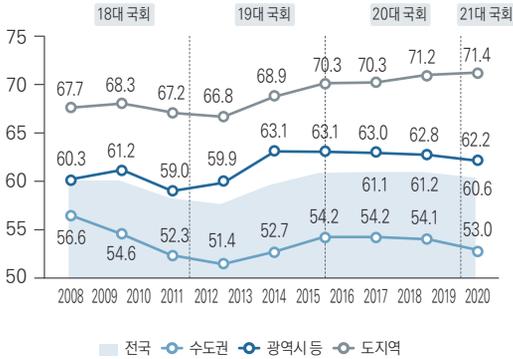
■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2008년 이후 100%를 넘어서며 증가하는 추이

- 2020년 전국의 가구수는 2,093만가구이며, 주택수는 2,167만가구로 주택보급률은 103.6%에 달함
 - 지역별로는 서울 94.9%로 가장 낮고, 대전, 인천 등 대도시의 주택보급률은 100%에 미치지 못하며 경북은 115.4%로 가장 높은 수준임
 - 과거 절대적인 주택 부족 문제가 심각했던 시기의 주택정책목표 달성도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 주택보급률을 활용하였으나 주택의 배분상태(자가보유율)나 거주상태(주거수준)를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

(2)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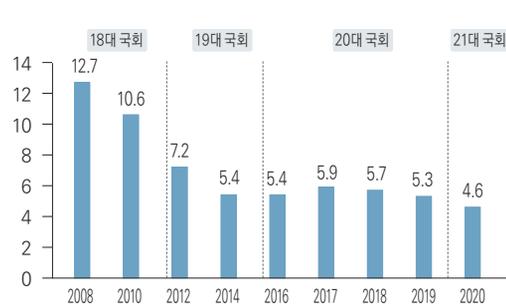
[그림 II-54] 자가보유율

(단위: %)



[그림 II-55]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 자가보유율*은 2020년 전국 60.6%이며, 수도권은 이보다 낮은 53.0%

- 자가보유율은 전국을 기준으로 2006년 59.3%에서 2020년 60.6%로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수도권(56.8% → 53.0%)은 오히려 감소

※ 자가보유율은 가구를 대상으로 법적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자가 소유 인식을 조사한 것으로 '자가주택점유가구 + 임대가구중 타주택소유가구'의 비율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2006년 16.6% 수준에서 2014년까지 급속히 감소하여 5%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0년 4.6%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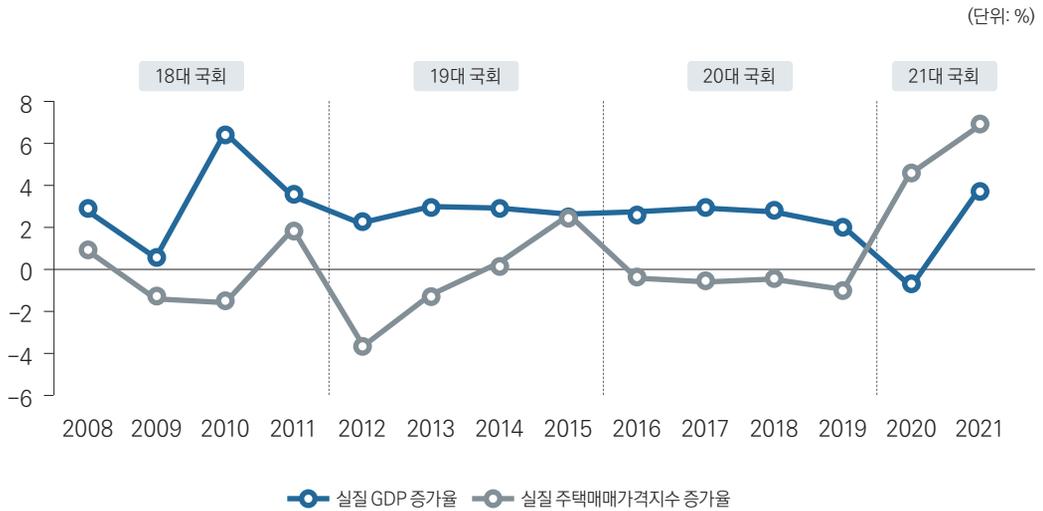
※ 최저주거는 가구원수별 방의 개수, 가구원수별 최소면적, 설비기준(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시설 중 1개라도 없는 경우) 중에 하나라도 미달인 경우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로 규정

라. 주택가격 상승률

- **실질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매매가격변화를 측정하는 지표인 명목 주택가격 지수를 소비자 물가지수로 나누어 실질적인 주택가격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
 - 실질 주택매매가격지수 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비교

(1) 현황

[그림 II-56] 경제성장률과 실질 주택가격 상승률



주: 실질 주택매매가격지수 증가율은 명목지수를 소비자물가지수(CPI)로 나누어 계산
 자료: 한국은행, 한국부동산원

■ 2021년 실질주택가격 상승률(7.3%)이 경제성장률(4.0%)을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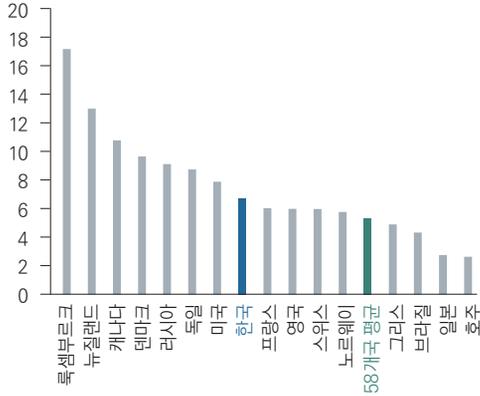
-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주거불안정성을 심화시키므로 주택가격 안정화에 대한 필요성이 확대

(2) 비교

[그림 II-57] 주요국의 주택가격상승률과 공공임대주택 비중

[주요국 실질 주택가격 상승률(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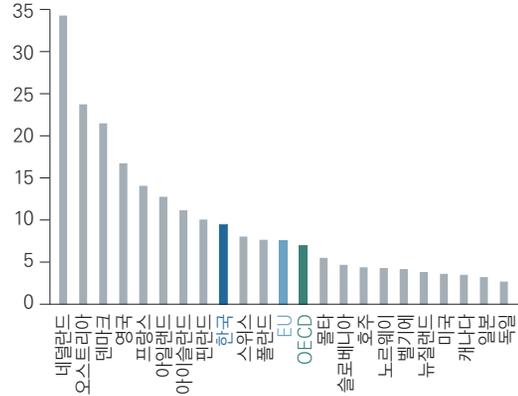
(단위: %)



자료: IM, Global Housing Watch

[공공임대주택 비율]

(단위: %)



자료: OECD, Affordable Housing Database

■ 우리나라의 실질 주택가격 상승률은 6.74%로 OECD평균(5.34%)보다 높음

- 2020년 우리나라의 실질 주택가격 상승률은 6.74%로 일본(2.77%), 영국(6.00%)보다 높으나 독일(8.75%), 미국(7.89%)보다는 낮은 수준임(IMF)
- 2020년 세계 58개국 중 실질 주택가격이 하락세를 기록한 국가는 인도네시아, 페루, 세르비아, 필리핀, 인도, 아랍에미리트 6개국이며 52개 국가의 실질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기록

■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상대적 높은편

- 2020년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9.4%로 OECD 평균(7.0%)보다 높은 수준
- 2020년 독일(2.7%), 일본(3.2%), 미국(3.6%)보다 높으나 네덜란드(34.1%), 영국(16.7%)보다 낮은 수준(OECD)

3. 대한민국 주택 정책

가. 주택 정책 개요 및 필요성⁵⁵

■ 주택정책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목표로 함

- 목표달성을 위해 조세제도, 금융제도, 분양제도, 재건축제도 등의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
- 주택은 욕구에 비해 양이 적은 희소 재화(scarcity goods)로서 공급탄력성이 낮아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재화임
 - 주택은 부동산성, 영속성, 개별성 등의 특성 때문에 일반 경제재와는 다른 생산과 소비의 대상으로 취급되며, 외부효과*의 영향을 많이 받는 특성으로 완전경쟁시장에서 생산과 배분의 적절한 기능 발휘가 어려움
 - ※ 경제주체의 행위가 다른 경제주체에게 기대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발생시키는 효과로 주택은 움직이지 않는 성질(부동산성, 不動性)로 인해 주변의 환경요인 변화가 주택가격에 영향 미침
- 주택정책은 정책수단 면에서 직접개입 및 간접개입 방식으로 나뉨
 - 주택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직접개입 방식(수용제도, 거래 허가제, 소유 제한제)과, 경제적 동기를 통해 수요나 공급을 변화시키는 간접개입 방식(조세 및 부담금제도, 보조금제도, 금융규제나 지원 등)이 있음

■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해서는 주택시장 안정화와 주거복지 향상이 필요

-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높고(OECD 국가 중 1위) 산지비중이 높아(국토의 약 70%) 과거에는 충분한 주택 공급이 중요하였으나, 최근에는 주택수준 및 주거환경의 질적 수준 향상에 대한 주거복지 수요가 증대됨

55) 주택정책의 정의 및 특성은 아래의 책을 참조하여 작성
유용순·정종철·마개좌·박철환, 「부동산 정책」, 2013.

나. 주택정책 체계

(1) 법·제도

■ (법적근거) 「주거기본법」을 최상위 법으로 주거종합계획을 법제화⁵⁶

-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권을 보장(제2조)하고,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제3조), 주거종합계획의 수립(제5조), 주택의 건설·공급(제10조) 등 주택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기존 「주택법」 제7조에 따른 장기주택종합계획을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으로 개정

■ (법정계획)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수립, 5년마다 타당성 검토

- 장기 주택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기본목표 및 정책방향을 제시
- 세부시행계획과 연도별 주택종합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인 주택정책을 추진
 - 인구·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주택시장 환경 변화, 주거문화 변화 등을 통합적으로 반영하여 새로운 주택정책 비전 수립과 정책방향 재정립, 중장기 과제 및 추진방향 제시를 위해 「주거종합계획」을 수립

[표 II-11]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법정계획

계획	주요 법정계획	차기 계획수립년도	주관부서
기본계획	제1차 장기주택종합계획(2003~2012)	2013년	국토교통부
	제2차 장기주택종합계획(2013~2022)	2023년	국토교통부
이행계획	2018년 주거종합계획	-	국토교통부
	2019년 주거종합계획	-	국토교통부
	2020년 주거종합계획	-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

56) 이외에도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관련법으로 「주택법」, 「주거급여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관리법」,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이 존재

(2) 정책 목표 및 수단

■ (정책목표) 주거복지 향상, 주택수준 및 주거환경 개선, 주택시장 안정⁵⁷

- 주택정책은 '더 나은 주거환경, 행복한 주거생활'이라는 비전을 위해 3가지 목표를 설정
 - ① 주거복지 향상
 - ② 주택수준 및 주거환경 개선
 - ③ 주택시장 안정

■ (정책수단) 수급안정화 및 재정제도 등을 통해 시장 안정화 및 주거복지 추진

- (주거복지 향상) 주택, 주거장소, 주거환경 등에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여 안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수준별 주거지원 방식을 다변화하는 정책을 추진⁵⁸
 - (공공임대주택) 2020년 현재 170만호인 공공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 240만호 확보(주거복지로드맵),
 - (분양제도) 2014년 민간택지 분양가 자율화 실시 이후 2020년 7월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서민·실수요자의 특별공급 확대⁵⁹ 및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 예정(새정부 경제정책 방향)⁶⁰
 - (임대차 보호제도)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 및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2020.7월)를 시행하고, 주택 임대차 신고제(2021.6월)를 도입하였으며⁶¹, 계약갱신청구권 소진 시점(2022.8월) 도래로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 예정(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 (주택수준 및 주거환경 개선)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들의 주거시설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및 1인당 주거면적 등을 파악하고, 주택수준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

57) 「제2차 장기주택종합계획(2013-2022년)」의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을 정리

58) 주거복지로드맵(2017.11, 2020.3),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 방안(2018.7) 등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2022.6.16.)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 명시

59)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 확대(국민주택 20% → 25%, 민영주택 공공택지 15%, 민영택지 7%),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월평균소득 100% → 분양가별 비율 차등 최대 130%)

60) 새정부 경제정책방향(2022.6.16.)에서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방안을 6월 중 발표예정임을 명시했다. 이외에도 무주택 세대주 월세액 세액 공제율 상향, 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해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61)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2021.6.1.이후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의무화

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공동이용시설 확충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사업⁶²

- (주택시장 안정) 주택가격의 급등지역의 규제지역 지정, LTV·DTI등의 금융규제⁶³ 및 조세제도 등을 통해 주택수요를 조절하고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수급관리로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을 추진
 - (규제지역 지정) 부동산 가격 급등 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을 지정하고 대출규제와 세제 등을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해서는 규제 및 세제 완화⁶⁴
 - (금융규제) 부동산 가격 급등 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상향하고, 가격 침체 시에는 비율을 하향조정하는 등 금융규제(LTV·DTI·DSR) 조절을 통해 주택가격 안정화 노력⁶⁵
 - (조세제도)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강화 및 완화를 통해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수요를 조절⁶⁶
 - (공급확충 방안) 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까지 전국에 80만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는 대책(2021.2.4.) 등을 발표⁶⁷

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정비사업

63)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인정비율, DTI(Debt to Income): 총부채부채상환비율,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64) 2021년 12월까지 투기지역 16개, 투기과열지구 49개, 조정대상지역 112개 지정

65) 생애최초 LTV 상한 80%로 완화(지역, 주택가, 소득에 무관), 대출한도 확대(4억 → 6억), DSR산정시 장래소득 반영방식 개선(2022.3분기) 등을 발표(새정부 경제정책방향(2022.6.16.))

66) 2019~2021년 기간 동안은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가격 안정화를 위해 조세를 강화하였으나, 최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새정부 경제정책(2022.6.16.)에서는 강화되었던 세제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함. 부동산 관련 세금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하향조정(1주택자 재산세 60 → 45%, 종부세 100 → 60%), 양도세 및 취득세 종과배제를 위한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확대(1년 → 2년) 등

67) 2021.2.4. 3080 + 공급대책: 서울 32만호 등 전국 대도시권에 83.6만호 공급 대책 발표

4. 주택 정책과 재정

■ 정부의 서민주거안정지원 관련 재정 투입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

- 재정지원 주거안정 사업 예산은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지원과 주택도시기금의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용자사업등이 있음
- 2022년도 서민 주거안정 지원 관련 사업 예산은 42조 7,807억원 수준
 - 저소득 빈곤가구 등에 주택 임차료를 보조하는 주거급여(2.2조원), 청년 월세(20만원씩 12개월) 한시 특별지원(8.2조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용·출자 사업(22.5조원),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용자(9.5조원) 등으로 구성

■ 필요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지원이 1순위

- 필요 주거지원 1순위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34.6%), 전세자금 대출지원(24.5%),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11.6%) 등으로 응답(주거실태조사)
 - 그 다음으로는 월세보조금 지원(9.8%), 주택개량보수지원(6.9%),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5.4%), 공공분양 주택공급(5.3%) 등임

[표 II-12] 서민 주거안정 지원 관련 사업 주요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회계 기금	세부사업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 회계	주거급여지원	17,240	19,879	21,819	9.8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	82,149	순증
주택 도시 기금	임대주택지원(출자)	44,301	64,606	68,794	6.5
	임대주택지원(용자)	106,168	157,299	156,487	△0.5
	구입전세자금지원(용자)	99,122	99,000	95,300	△3.7
	분양주택등지원(용자)	2,488	4,907	3,258	△33.6
합 계		269,319	345,691	427,807	23.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2 대한민국 재정」, 2022, p.605

BOX 13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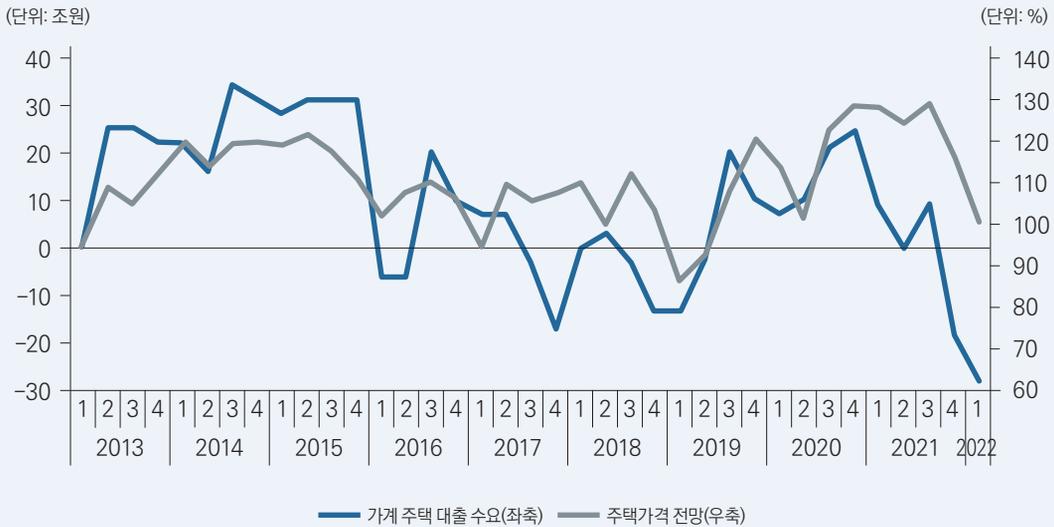
■ 주택가격 상승은 가구의 주택보유 선호를 높이게 됨

- 주택가격 상승은 주택보유 가구의 자산을 증가시키고, 주택 미보유 가구에는 주택구매 비용의 상승을 가져오게 되면서 주택구매 시점을 앞당기게 하는 계기로 작용
 -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지수*의 주택가격 전망과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자료의 국내은행 주택 대출 수요는 유사한 추이를 보임

※ 소비자동향지수(Consumer Survey Index: CSI)는 소비자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향후 소비지출전망 등을 설문조사하여 그 결과를 지수화한 통계자료로, 주택가격전망은 100보다 큰 경우 증가 또는 상승할 것으로 응답한 가구수가 감소 또는 하락할 것으로 응답한 가구수보다 많음을, 100보다 작은 경우 그 반대를 의미

※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는 대출태도, 신용위험 및 대출수요에 대한 지난 분기 동향 및 다음 분기 전망을 조사하여 지수를 산출한 자료로, 주택대출수요는 100과 -100 사이에 분포하며 지수가 양(+)이면 「증가」라고 응답한 금융기관의 수가 「감소」라고 응답한 금융기관의 수보다 많음을, 음(-)이면 그 반대를 의미

[주택가격 전망과 가계 주택 대출 수요]



주: 1)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국내은행 가계 주택 대출 수요
 2) 소비자동향조사 주택가격전망 CSI
 자료: 한국은행

■ 가계신용 중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53.2%(2022.Q1)를 차지

[한국은행 가계부채(가계신용) 구분]



주: 2022년 1분기 가계신용 금액이며, 괄호안은 가계신용 금액 대비 비중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 최근 20년 동안 가계부채 증가율이 명목GDP 증가율을 상회

- 2002~2021년 동안 가계부채 규모는 연평균 7.6%씩 증가하여 같은 기간 명목GDP 증가율(연평균 5.2%) 수준을 상회
- 경제발전과 금융심화는 경제주체의 금융제약을 완화하여 부채의 규모가 증가할 수 있으나 적정수준을 초과하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가계부채와 명목 GDP 증가율]

(단위: 조원)

(단위: %)



주: 1) 가계부채는 가계신용 전년대비 증감액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2022년 1분기 가계신용은 전년말 대비 증감액
 자료: 한국은행 가계신용통계

Economic Overview of the Republic of Korea 2022



지출 관련 주요 정책

[그림 II-58] 지출 관련 주요 현안과 경제지표

구분	현안	경제지표
가계부문: 소비활성화	➤ (1) 소비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소비 증가율 추이 ◦ GDP대비 민간소비 비중 ◦ OECD 국가별 비교
	➤ (2) 소비성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소비성향 ◦ 소득5분위 평균소비성향 ◦ 가구주 연령별 평균소비성향
	➤ (3) 소비심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심리지수
기업부문: 투자유인	➤ (1) 투자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비중 ◦ 투자 증가율 ◦ 경제주체별 투자 ◦ 주요국 비교
	➤ (2) 부문별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문별 투자 증가율 ◦ 부문별 투자 규모
	➤ (3) 투자여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주체별 저축-투자 갭
대외부문: 무역	➤ (1) 수출입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DP 대비 수출 비중 ◦ 수출입 증가율 ◦ OECD 국가별 비교
	➤ (2) 가공단계별 수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단계별 수출입
	➤ (3) 지역별 수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교역상대국으로의 수출
	➤ (4) 수출 경쟁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수출시장 1위 품목

○ GDP지출부문⁶⁸은 소비, 투자, 국외부문에 대한 순수출로 구성

- 지출부문은 GDP순환과정 중 경제주체에게 분배된 소득이 최종수요 측면에서 부문별로 처분되는 과정으로 가계의 소비, 기업의 투자, 순수출로 구성

[지출국민소득의 구성]

부문		구성	주요정책
최종소비	민간소비	가계소비,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소비	소비활성화 정책
	정부소비	-	-
총고정 자본형성	건설투자	건물건설, 토목건설	투자활성화 정책
	설비투자	운송장비, 기계류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연구개발(R&D), 기타지식재산생산물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재화수출, 서비스수출	무역정책
재화의 서비스의 수입		재화수입, 서비스수입	수출지원 정책

- (가계부문: 소비) GDP 지출계정상 최종소비지출은 소비주체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로 민간최종소비지출과 정부소비지출로 구분⁶⁹
 - 민간소비는 가계와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소비를 의미
 - 주요정책으로는 소비심리 회복, 지출여력 확대 등을 통한 소비활성화 정책이 있음
- (기업부문: 투자) GDP 지출계정상 총고정자본형성은 기업 등 생산자가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유형 또는 무형의 산출물
 - 취득 및 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형태에 따라 건설투자, 설비투자, 지식재산생산물투자로 구분
 - 주요정책으로는 경제활력 제고와 성장동력 확충을 목적으로 한 투자활성화 정책이 있음
- (대외부문: 수출) GDP 지출계정상 수출입은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거래를 의미하며 소유권 이전을 기준으로 작성
 -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한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거래는 우리나라의 성장을 주도해 왔으나, 최근들어 성장을 둔화의 주요요인으로 지적되면서 수출지원 정책을 추진
 - 주요정책으로는 대외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수출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한 수출지원 정책과 양자간·메가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같은 무역정책이 있음

68) 지출국민소득은 국민계정체계(국민소득통계,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민대차대조표, 국제수지표) 중 국민소득통계의 지출부문에 포함

69) 이 장에서는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살펴봄. 정부소비는 사회전체에 대해 공공행정, 국방, 법률의 시행, 공중보건 등과 같은 집합서비스를 무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행하는 지출과 가계에 무상 또는 낮은 가격으로 재화나 서비스(의료·보건·교육 등)를 제공하기 위한 개별 서비스로 구성

● 소비, 투자, 수출 등 지출부문이 당면한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소비는 2000년대 들어 GDP성장률을 하회하는 증가율을 보이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
- 투자는 경제의 장기적인 생산능력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성장동력이나 단기적인 변동성이 심하여 경기변동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수출은 경제성장률의 추세적 하락과 함께 수출증가율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며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정체

제1절 가계부문: 소비 활성화 정책

1. 국민계정 상 가계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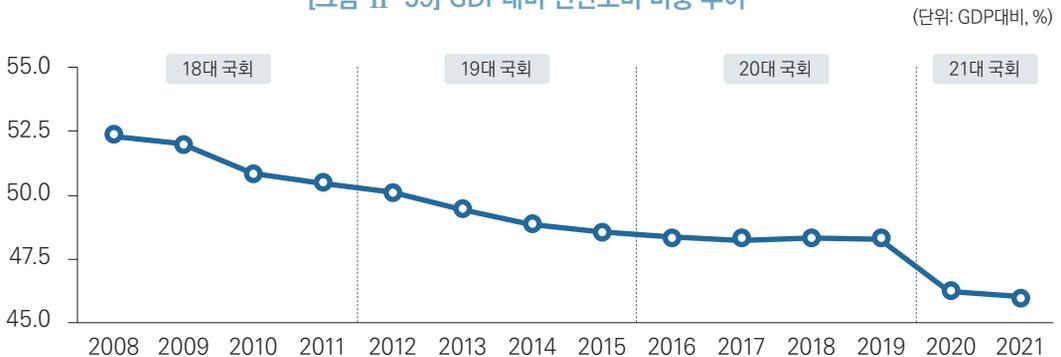
■ 가계의 소비는 국민소득통계의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을 통해 파악

- 국민계정 상 지출부문은 국민소득의 순환과정 중 경제주체에게 분배된 소득이 최종수요 측면에서 처분되는 과정이며 가계는 경제주체들이 생산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면서 소득을 지출
- 최종소비지출은 소비주체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로서 가계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최종소비지출과 정부 최종소비지출로 구분
 - 민간소비는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최종소비지출로 정의

■ 민간소비는 국내총생산 지출부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2021년 기준 민간소비(실질기준)는 국내총생산(GDP)의 46.0%를 차지하여 지출 부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냄
 - 지출부문별 GDP대비 비중(2021년 기준, %): 민간소비(46.0), 정부소비(17.6), 건설투자(13.6), 설비투자(9.4), 지식재산생산물투자(6.7), 총수출(44.0), 총수입(37.6)
- GDP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크지만, 2002년 57.8%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여 2012년 이후에는 50% 미만 수준을 지속
- 우리나라의 민간소비 증가율이 GDP성장률에 비해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GDP대비 민간소비 비중이 하락하는 모습
 -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중 민간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한 후 GDP에 비해 민간소비의 회복속도가 더뎠다 GDP대비 비중도 큰 폭 하락

[그림 II-59] GDP대비 민간소비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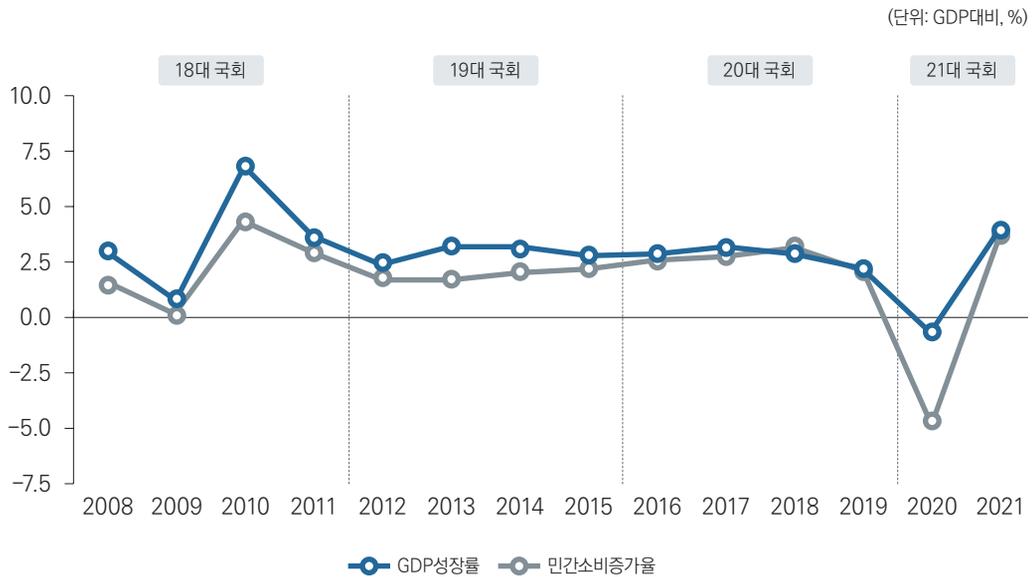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2. 소비활성화 정책의 주요 지표

가. GDP성장률과 민간소비 증가율

- **민간소비**는 가계의 최종소비지출과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최종소비지출의 합
 - 민간소비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 경제적 파급효과도 타 부문에 비해 높아 경제 성장의 중요한 요인

[그림 II-60] GDP성장률과 민간소비 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 2000년대 들어 민간소비 증가율은 GDP성장률을 지속적으로 하회

- 2000년대 들어 민간소비는 성장률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며 민간소비와 GDP규모 간 괴리도 확대
 - 2000~2021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9%이나 민간소비 증가율은 3.0%에 그침
 - 이에 따라 민간소비가 GDP성장에서 차지하는 기여도는 1991~2000년대 3.3%p, 2001~2010년 1.9%p, 2011~2021년 0.9%p로 하락

[그림 II-61] OECD 국가별 GDP대비 민간소비 비중

(단위: GDP대비, %)



주: 점선은 OECD 평균(59.6%), 2021년 기준
 자료: OECD

■ OECD 주요국에 비해 GDP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낮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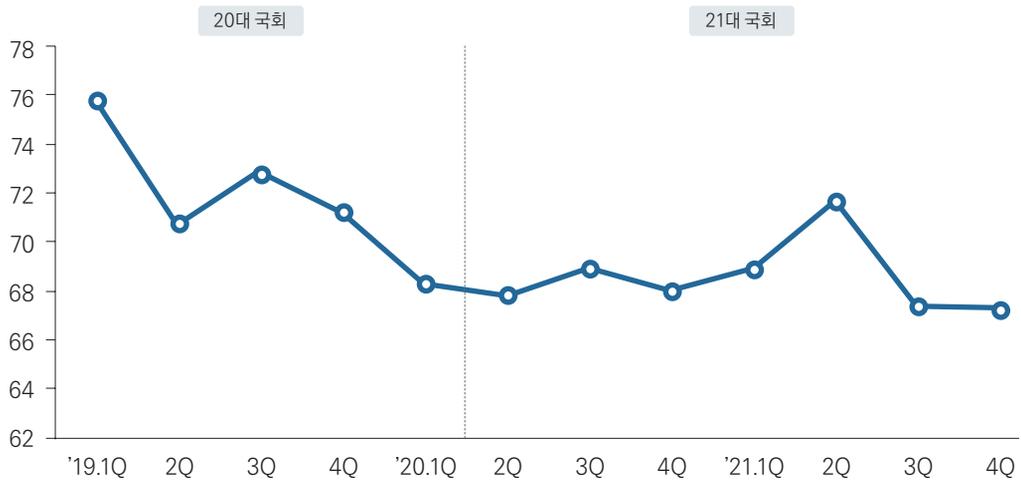
-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46.2%로 OECD 38개 회원국 평균 (59.6%)보다 낮으며, 38개 회원국 중 33번째 수준

나. 평균소비성향

- **평균소비성향**은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100)
- 가구 소득에서 세금 등 비소비지출을 차감한 처분가능 소득 가운데 얼마를 소비했는지 보여주는 지표

[그림 II-62] 평균소비성향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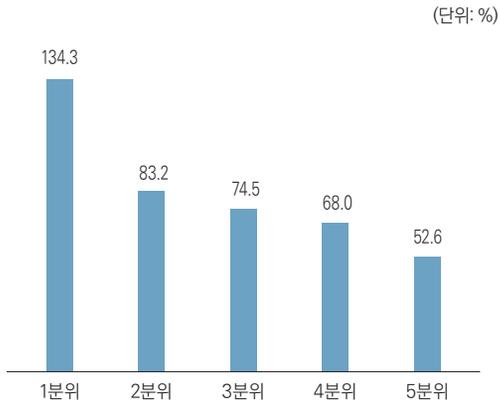


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의 표본이 2019년 전면 개편되어 2019년 이후의 자료 이용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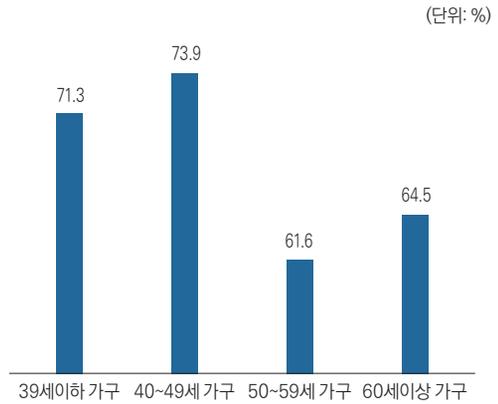
■ 우리나라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은 하락세

-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1/4분기 75.8에서 하락세를 보이며 2021년 4/4분기 67.3%를 기록
- 2021년 2/4분기 백신접종 등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 사회적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소비가 늘면서 평균소비성향이 일시적으로 상승
- 그러나 2021년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과 방역강화 등으로 소비지출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소비성향이 하락

[그림 II-63] 소득5분위별 평균소비성향



[그림 II-64] 가구주 연령별 평균소비성향



주: 2021년 4/4분기 기준
자료: 통계청

■ 평균소비성향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으며, 40대가 가장 높은 모습

- 2021년 4/4분기 기준 1분위 평균소비성향은 134.3%로 가장 높으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낮아져 5분위는 52.6%를 기록
 - 1분위 저소득층 가구는 가처분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많은 적자상태를 보이고 있음
- 가구주 연령별로는 40~49세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이 73.9%로 가장 높고, 50~59세가 61.6%로 가장 낮음
 - 60세 이상 가구의 평균소비성향도 64.5%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계층의 평균 소비성향이 낮은 편

다. 소비자심리지수

-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심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
 - 현재생활형편,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등 6개의 주요 개별지수를 표준화하여 합성한 지수

[그림 II-65]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주: 장기평균치(2003년 1월~2021년 12월)를 기준값(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 소비자심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폭으로 하락한 후 점차 회복

- 소비자심리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0월 121.5를 기록한 이후 저축은행부실과 유럽재정위기 등을 거치며 하락세
- 2012년 저점에서 회복세를 나타내던 소비자심리지수는 세월호참사, 메르스사태 등을 거치면서 하락세를 보임
- 2016년에는 대내외 불안 확대, 2018년에는 미·중무역분쟁 우려 고조 등으로 하락
-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자심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점차 회복하여 기준선(100)을 상회

BOX 14 소비심리와 소비간 상관관계 분석

■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와 상관관계가 높고 선행하는 모습

- 2008년부터 2022년 1/4분기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소비자심리지수는 해당분기와 1분기 후 민간소비 및 소매판매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계의 소비지출전망CSI도 소비지표들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
- 소비자심리지수는 민간소비에 선행하고 있으며 향후 소비를 예측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로 확인⁷⁰⁾

[소비자심리지표와 소비변수간 시차상관관계]

	민간소비		소매판매	
	소비자심리지수	소비지출전망	소비자심리지수	소비지출전망
당분기	0.75	0.79	0.68	0.66
1분기 후	0.67	0.57	0.65	0.62
2분기 후	0.50	0.13	0.45	0.26

주: 민간소비는 전년동기대비, 소매판매는 소매판매지수 불변지수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사용
 자료: 한국은행 및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소비자심리지수와 민간소비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70)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심리지수의 민간소비 예측력,”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 제7호, 2020 참고

3. 소비활성화 정책⁷¹

가. 소비활성화 정책 개요 및 필요성

■ 민간소비는 지출부문 중 비중이 크고 파급효과가 큰 성장의 주요동인

- 민간소비는 투자나 수출에 비해 부가가치 및 취업유발계수가 높아 여타 경제부문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성장의 주요동인⁷²
 - 최종수요 항목별 부가가치유발계수: 소비(0.85), 투자(0.81), 수출(0.65)⁷³
 -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유발계수: 소비(13.8), 투자(11.3), 수출(7.8)
 - ※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어떤 상품의 수요가 1단위 발생하였을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해당 상품을 만드는 부문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액의 크기
 - ※ 취업유발계수는 국산품 수요가 10억원 발생할 경우 이를 충족하기 위해 해당상품을 만드는 부문을 포함한 전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전업환산 취업자수

■ 소비증가를 통해 성장률을 제고하고 성장의 변동성을 낮출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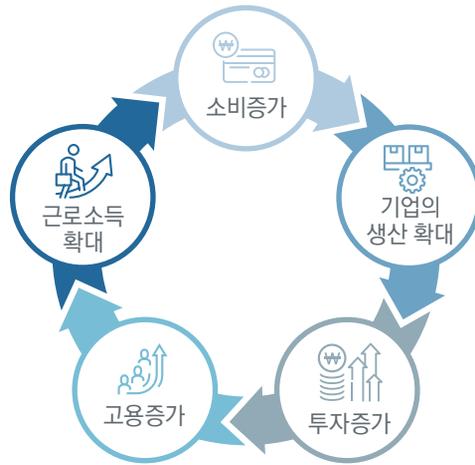
- 소비-투자-고용-소득 사이 경제선순환 형성을 통해 경제성장을 제고
 - 소비의 증가는 기업의 매출액 증가 및 생산 확대를 유발하며 그로인해 기업 및 정부의 투자가 촉진되고 일자리가 증가
 - 이와 같이 증가된 일자리를 통해 전체 국민의 근로소득이 커질 수 있으며, 증가된 소득에 따라 소비가 다시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
- 또한, 소비 등 내수활성화를 통해 경제성장률의 변동성을 낮출 수 있음
 - 수출 중심의 성장은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해외수요의 영향을 보다 크게 받을 수 있음
 -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출만으로 지속성장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어 소비 등 내수성장의 병행이 필요

71) 소비활성화는 꾸준히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나, 관련된 법적근거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예산 등이 따로 편성되지 않아 비정기적으로 추진된 정책들을 중심으로 정리

72) 한국은행, "대규모 자료를 이용한 월별 서비스소비 추정 방안," 2019

73) 2019년 기준

[그림 II-66] 소비증가를 통한 경제 선순환 형성



자료: 김윤하 진익, 「내수활성화 결정요인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17

나. 소비활성화 정책 내용

■ (기본방향) 소비심리 회복, 지출여력 확대를 통해 내수위축 방지⁷⁴

- 지출여력을 실제소비로 연결시키기 위해 소비심리를 회복
 - 소비분위기 조성, 관광활성화, 추가 재정보강을 통한 재정정책
- 가계소득 확충, 생계비 부담 완화 등으로 지출여력을 확대
 - 고용위축 대응, 저소득층 지원강화 등을 통해 가계소득을 확충하고 주거비·의료비·교육비·통신비 등 가계생계비를 경감

■ (조세정책) 개별소비세 인하, 소득공제율 상향 등 세제지원 시행

- 정부는 경기침체와 소비둔화시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 내구재의 개별소비세를 인하하여 소비를 진작하고자 함
 -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재정위기, 메르스사태, 코로나19 확산 등 경기침체기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19~70% 인하
 - 2015년 메르스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

74)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내수활성화 방안」, 2017.2. 참고

[표 II-13]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추이

인하시기	인하배경	인하폭(%)
2008.12~2009.6	글로벌금융위기	30
2012.9~2012.12	유럽재정위기	19~30
2015.8~2016.6	메르스사태	30
2018.7~2019.12	경제 불확실성 확대	30
2020.3~2022.6	코로나19 확산	30~70

-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추가 확대 시행
 -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2020년 중 신용카드 공제율을 30~80%까지 상향조정
 - 2021년에는 추가소비 특별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전년대비 5% 이상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시행⁷⁵

■ (재정정책)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재정정책 시행

- (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자 2020년 4월 정부는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⁷⁶
 - 위축된 소비심리를 제고하고 소비활동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14.3조 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
- (신용카드 캐시백) 2021년 7월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소비증가분의 10%를 상생소비지원금으로 한시적 지원
 - 2021년 2/4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으로 환급(1인당 최대 30만원)
- (대규모 할인행사) 제조·유통업 등 민간기업이 주도하고 정부·지자체가 지원하는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코리아세일페스타, 대한민국동행세일 등 실시
- (관광활성화) 여행주간 확대 실시, 대한민국 숙박대전 등

75) 전통신장 추가소비분에 대해 10% 추가 공제 신설

76) 2020.4월 추경에서는 '소비진작'이라는 목표가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음. 2021.7월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이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에 지급되었으나, 이는 '양극화 해소 및 소득분배 개선'이라는 목적에서 시행됨에 따라 소비활성화 정책에 포함시키지 않음

- (소비활력 제고방안) 상품권 발행규모 확대⁷⁷, 소비쿠폰⁷⁸ 도입, 가전기기 구매환급⁷⁹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소비활력을 제고하고자 함

■ 정부와 관련기관들은 소비활성화 관련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

- 소비활성화 정책과 관련된 법적근거나 예산편성은 따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소비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대책 등을 마련
- 경제부처 장관회의,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수기반 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

77)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및 10% 할인판매(2020년 제1차 및 제3차 추경)

78) 일자리·휴가·문화·관광·출산 등 5대 소비쿠폰(2020년 제1차 추경), 농수산물·숙박·관광·문화·외식 등 8대 할인소비쿠폰 제공(2020년 제3차 추경), 문화분야 소비쿠폰·바우처 5종과 농축수산물 소비쿠폰 발행(2021년 제2차 추경)

79) 가전제품 소비확대를 위해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시행(2019년 11월 시행, 2020년 제1차, 3차 추경)

[표 II-14] 소비활성화 관련 관계부처 회의

일자	기관	내용
2009.9.16	관계부처 합동	내수기반 확충방안 - 외국인관광객 유치 - 고소득층 소비여건 개선 - 신규시장 창출을 위한 규제완화 - 휴가문화 선진화 추진
2011.6.18	관계부처 합동	장차관 국정토론회 주요 논의(내수활성화 관련 부분) - 관광인프라 강화 및 확충
2012.7.23	관계부처 합동	내수활성화 민간합동 토론회 - 국내휴가문화 개선 및 국내여행 활성화 - 골목시장 및 전통시장 활성화
2013.8.27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구매 활성화 정책
2013.12.3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연말 온누리상품권 구매 촉진계획
2014.4.16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관광서비스 육성방안
2015.5.7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마리나산업 전략적 육성 대책, 크루즈 산업 활성화 대책
2015.7.2	제13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관광수요 조기 정상화 방안 - 공연티켓 1+1 지원, 코리아그랜드세일 등 메르스 관련 경제동향과 대응 - 온누리상품권 할인판매 -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용자 지원 확대 - 외식업계 지원 확대
2015.8.12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코리아그랜드 세일 시행 계획
2015.8.26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소비촉진방안 발표 - 개별소비세 부담 완화 - 대규모 세일행사 집중실시 - 가을철 관광여가활동 촉진 -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농산물 구매
2016.2.3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	-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재인하 - 문화여가 서비스에 대한 소비 촉진을 위한 할인 이벤트 개최
2016.9.21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코리아세일 페스타 종합 추진계획
2017.2.23	관계부처 합동	내수활성화 방안 - 소비심리 회복 - 가계소득 확충 - 가계 및 자영업 부담 경감

BOX 15 경기순환과 민간소비

■ 경기순환 과정상 수축기에 민간소비는 GDP보다 더 감소하는 모습

- 2000년대 들어 민간소비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경기수축기에 GDP보다 증가세가 더딘 모습
- 경기확장기에도 제8순환기를 제외하고는 GDP성장률에 비해 증가세가 낮은 모습

[경기순환기 GDP성장률과 민간소비 증가율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



주: 음영부분은 경기수축기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경기순환기 GDP성장률과 민간소비 평균 증가율]

(단위: 전년동기대비, %)

	기간	민간소비	GDP
제7순환기 경기수축기	2000.8~2001.7	5.5	5.7
제8순환기 경기확장기	2001.7~2002.12	9.6	7.2
제8순환기 경기수축기	2002.12~2005.4	1.2	4.4
제9순환기 경기확장기	2005.4~2008.1	5.2	5.5
제9순환기 경기수축기	2008.1~2009.2	0.5	2.1
제10순환기 경기확장기	2009.2~2011.8	3.4	4.7
제10순환기 경기수축기	2011.8~2013.3	2.0	2.7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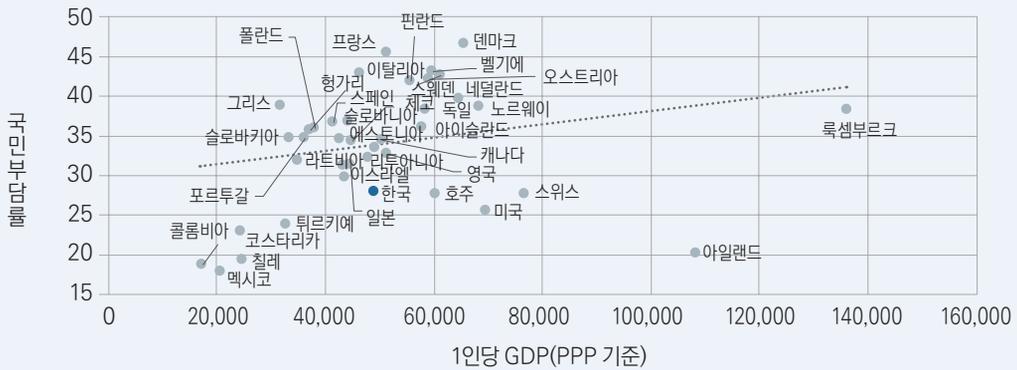
BOX 16 재정지출

■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경제규모 대비 빠른 상승세

-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2021년 기준으로 GDP 대비 28.0%로, 1인당 GDP가 비슷한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

[조세부담률 국제비교]

(단위: GDP 대비 %, US달러)



자료: OECD

- 인구고령화와 사회복지제도 확대에 따라 사회보장기여금을 중심으로 국민부담률이 2000~2021년 동안 GDP 대비 7.1%p 증가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임

[주요국의 국민부담률 추이]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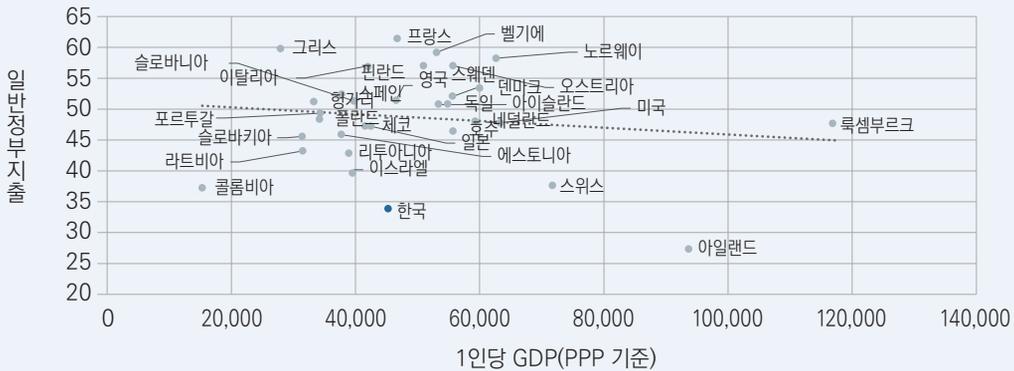
주: 2020년 기준
자료: OECD

재정지출 중 사회보호, 보건, 교육, 경제업무의 비중이 높음

- 일반정부지출은 2020년 기준 GDP 대비 33.9%로,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

[일반정부 재정지출의 국제비교]

(단위: GDP 대비 %, US달러)



제2절 기업부문: 투자 유인 정책⁸⁰

1. 국민계정 상 기업부문

■ 투자는 기업의 소비를 의미하며 국민소득통계의 지출측면GDP에 기록

- 기업은 국민계정에서 투자의 주요 경제주체
- 투자는 민간 및 정부가 생산을 위한 자본재를 확충하는 것으로 국민계정 지출부문의 한 구성요소
- 최근 5년 전제 투자의 약 85%는 기업 등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기업의 역할이 중요한 부문임

■ 투자⁸¹는 단기적인 경기변동과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중요

- 지출구조의 투자는 GDP의 약 30%로 민간소비에 비해 비중이 작지만 단기적인 변동성이 심하여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련
 - 2000년 이후 투자 증가율은 경제성장률보다 1.7배 높은 변동성을 나타냄
- 투자는 경제의 장기적인 생산능력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지출 부문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음
 - 투자는 자본축적을 통해 성장으로 이어지며, 1990년부터 2021년까지 고정투자율과 경제성장률의 상관계수는 0.6에 이룸
 - 투자 확대는 총수요를 증가시켜 경기를 부양할 뿐만 아니라 자본 축적으로 이어져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함
 - 반대로 투자 부진은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경제의 성장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투자 활성화 정책은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성장동력을 확충

- 생산적 투자처로 자금을 유도하는 투자 활성화 정책은 미래산업 발굴 통해 경제의 장기적 성장을 가능하게 함

80) 투자는 자본축적의 토대가 되어 생산능력을 확충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의 필수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본 보고서의 성장부문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투자(총고정자본형성)가 국민계정체계내의 지출국민소득의 한 항목이기 때문에 성장보다는 지출부문으로 분류

81) 본 절에서 투자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총자본형성에서 재고증감 및 귀중품순취득(재고투자)을 제외한 총고정자본형성(고정투자)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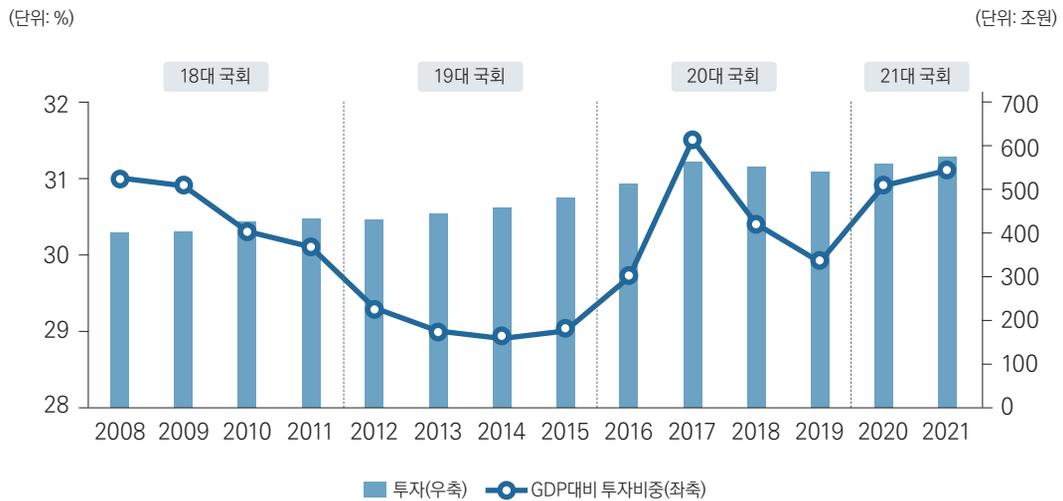
- 정부의 투자활동인 사회기반시설 공급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주요 정책 수단
 - 공공재인 사회기반시설은 생산, 소비 등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자본이나 과소 투자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의 사회기반시설 공급은 시장에 의한 과소 투자를 방지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
 - 또한 정부의 대규모 투자는 경기 부양을 통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는 2020년 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인 한국판 뉴딜을 추진

2. 투자 관련 주요 지표

가. 투자 현황

- **투자(총고정자본형성)**는 장기간에 걸쳐 생산과정에 반복적,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유형 또는 무형의 산출물인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
 - 투자는 생산능력을 변동시키는 요인으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총소득의 규모와 그 증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

[그림 II-67] 투자 비중



자료: 한국은행

■ 2008년 이후 감소하던 GDP대비 투자 비중은 2014년을 저점으로 증가

- 1997년 외환위기의 한 원인으로 과잉투자가 지목되며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GDP대비 투자 비중이 크게 하락
- 이후 2014년에 28.9%까지 하락하였으나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며 2021년 기준 31.6% 수준
 - 2014년 이후 설비투자(34.1%), 지식재산생산물투자(31.3%)에서 큰 폭의 증가를 나타냄

[그림 II-68] 투자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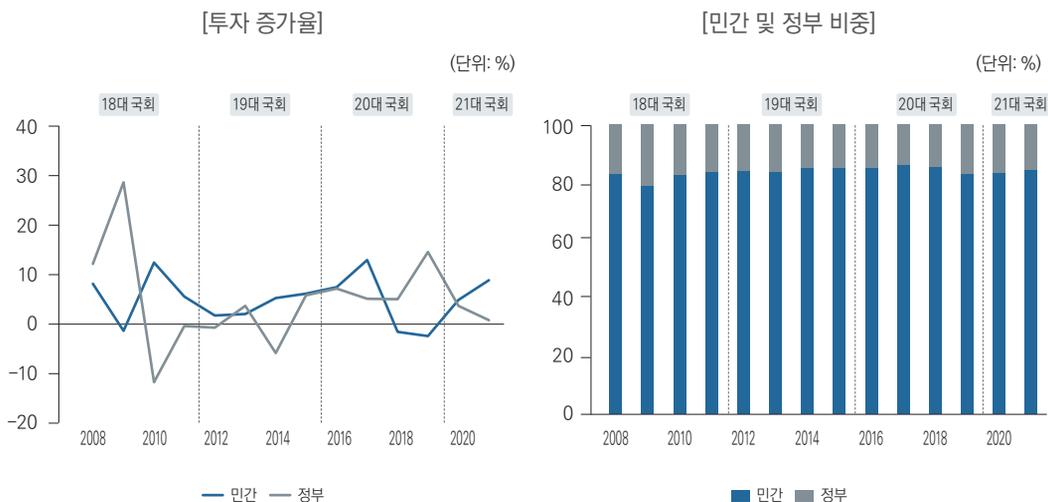


주: 투자 증가율은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 2008년 이후 투자는 GDP보다 증가율은 낮지만 변동성은 크게 나타남

- 2008년~2021년간 연평균 투자 증가율은 2.6%로 GDP 증가율(2.9%)을 하회
- 반면, 변동성 측면에서 동기간 GDP 증가율이 -0.9~6.8%의 수준에서 변동하였으나 투자는 -2.2 ~ 9.8%의 범위에서 변동하여 GDP 증가율보다 큰 변동폭을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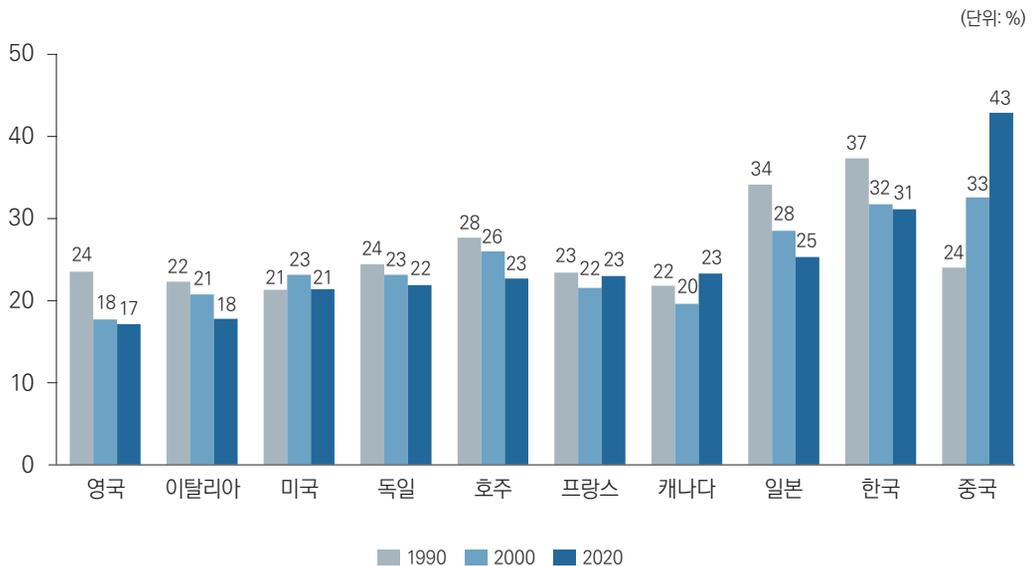
[그림 II-69] 경제주체별 투자



자료: 한국은행

- 경제주체별로 세분화하면, 민간과 정부의 투자는 보완적 관계를 보이며 변화해온 것을 알 수 있음
 - 민간투자 증가율이 크게 하락한 2009년, 2019년도에는 정부투자 증가율이 상승하였으며, 2008년~2021년 중 두 부문 간 상관계수는 -0.5로 나타남
 - 전체 투자에서 민간과 정부의 비중은 2021년 기준 각각 84.3%와 15.7%를 차지
 - 2000년대 정부 투자의 비중은 평균 17.5%였으나 2010년대 이후에는 15.8%로 완만하게 축소되는 모습

[그림 II-70] 주요국의 GDP대비 투자 비중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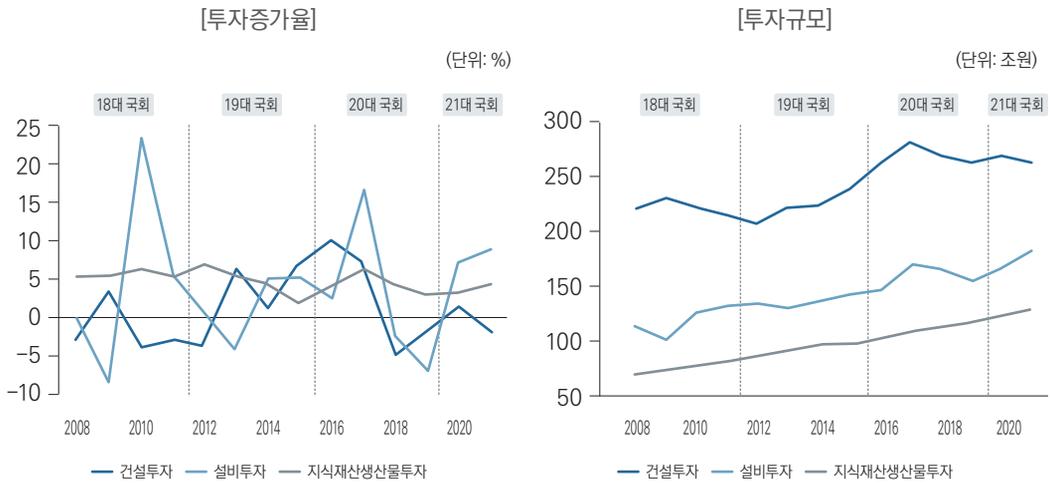
■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중국 다음으로 투자 비율이 높은 국가

- 한국의 GDP대비 투자 비중은 1990년 37%에서 2020년에 31%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2020년 기준 중국(43%) 다음으로 높은 국가에 해당
 -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3개국은 서구경제권에 비해 높은 투자율을 나타냄

나. 부문별 투자

- **부문별 투자**는 자산의 형태에 따라 건설투자, 설비투자, 지식재산생산물투자로 나눌 수 있음
 - 건설투자는 주택, 공장, 상가, 도로, 철도 따위의 건설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
 - 설비투자는 자동차, 항공기 등 운수장비와 제조업 등에서 생산설비로 사용되는 각종 기계류로 구성
 -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1년 이상 장기간 동안 생산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구개발, 오락,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

[그림 II-71] 부문별 투자



자료: 한국은행

■ 최근 투자는 건설부문이 부진한 가운데 설비와 지식재산생산물에서 증가

- 건설투자는 2012년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부동산 규제강화와 정부의 SOC투자 축소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지속
- 설비투자는 2020년 이후 반도체 경기회복, 세계경제회복에 따른 수출호조 등으로 투자규모가 확대됨
-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전세계 IT산업 호조에 따른 R&D 투자 증가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

다. 투자여력

- **경제의 투자여력**은 잉여 투자자원인 저축-투자 갭으로 평가
 - 저축-투자 갭은 총저축에서 국내총투자를 차감한 후 국민총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누어 계산
 - 투자여력이 부족하면 투자자원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투자 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

[그림 II-72] 경제의 저축-투자 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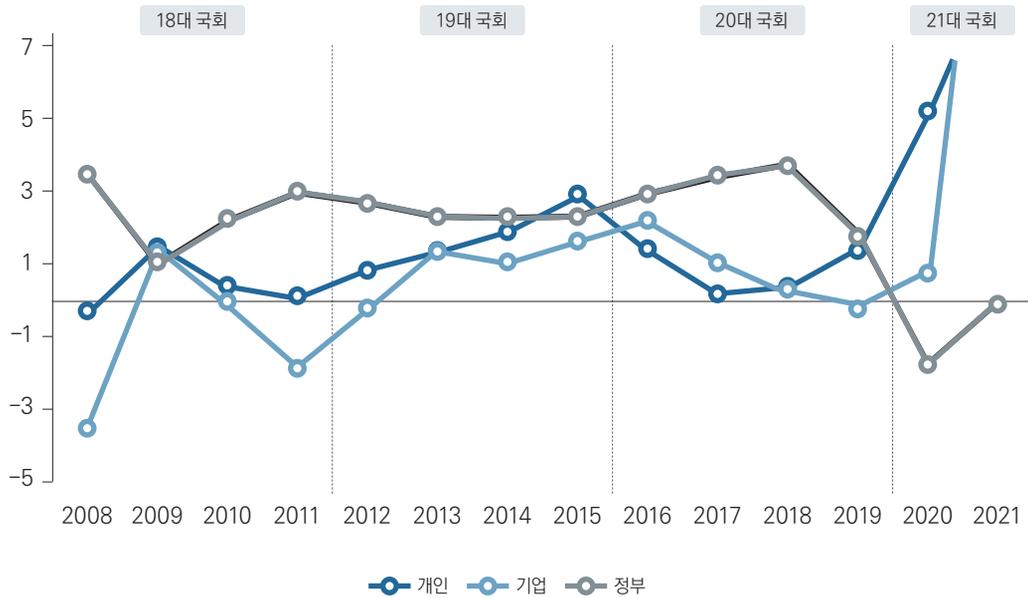


주: 개인, 기업, 정부부문 저축-투자 갭의 합
 자료: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저축-투자 갭은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를 지속

- 최근에는 저축-투자 갭이 (+)를 나타내는데, 이는 경제에 투자를 위한 잉여재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
 - 반면, 외환위기 이전 고도 성장기에는 부족한 투자자원을 해외에서 조달하였기 때문에 저축-투자 갭이 (-)를 나타내었음
- 한편, 경제위기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예비적 저축이 증가하고 투자가 감소하여 저축-투자 갭이 확대되는 경향
 - 이 같은 이유로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코로나19 이후 저축-투자 갭이 증가

[그림 II-73] 경제 주체별 저축-투자 갭



주: 개인은 가계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자료: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최근 개인과 기업의 저축-투자 갭은 확대되었으나 정부는 축소됨

-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민간부문은 저축을 늘리고 투자를 축소 및 지연시켜 개인 및 기업의 저축-투자 갭이 큰 폭으로 높아짐
- 반면, 정부는 복지지출 증가의 영향으로 기초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를 기록

3. 대한민국 투자 정책

■ (투자환경 조성) 규제완화, 세제 혜택, 투자 환경 개선 등의 정책을 시행

- (규제샌드박스)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
 - 규제 관련 불확실성을 완화하여 글로벌 혁신경쟁에서 우위 선점에 유리한 환경 조성
 - 규제샌드박스 승인(건수): ('19)195 → ('20)209 → ('21)228
- (유턴기업 세제지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지원
 - 2013년 투자 촉진과 지역발전 등을 위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 정부는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 완화, 유턴기업 대상업종 및 생산제품 범위 확대하여 국내 투자 유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법률을 개정해옴
 -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는 기업들은 투자보조금, 법인세 등 세제감면, 고용창출장려금을 비롯한 각종 지원자격을 갖추
 - 2022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턴범위를 확대*하여 국내복귀 및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 * 개정안에서는 국내사업장의 신·증설의 개념을 ① 공장의 신설 ② 공장의 증설 ③ 기존(타인 소유) 공장을 매입·임차후 제조시설 설치 뿐만 아니라 ④ 기존(자가) 공장 또는 사업장 내 제조시설 설치로 확대
- (투자세액공제)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 분야에 투자했을 때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산출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
 - 2020년 「세법」개정에서는 기업들의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
 - 기존에는 특정 사업분야의 투자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제공했지만 이를 기업의 모든 투자로 확대
 -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지출(억원): ('20)6,226 → ('21전망)13,354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초기 창업자에 대한 투자와 회수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규제는 완화하고, 투자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법률
 - 벤처투자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2021년 신규벤처투자금액은 창업투자회사 설립자본금 요건 완화와 혁신성장펀드 조성으로 사상 최고치 경신
 - 신규투자금액(억원): ('19)42,777 → ('20)43,045 → ('21)76,802

■ (투자 활성화 대책) 민간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

- 정부에서는 메르스, 코로나19 등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투자를 촉진하거나, 벤처·창업, 신산업 등 특정 부문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거나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

[표 II-15] 정부의 주요 투자 활성화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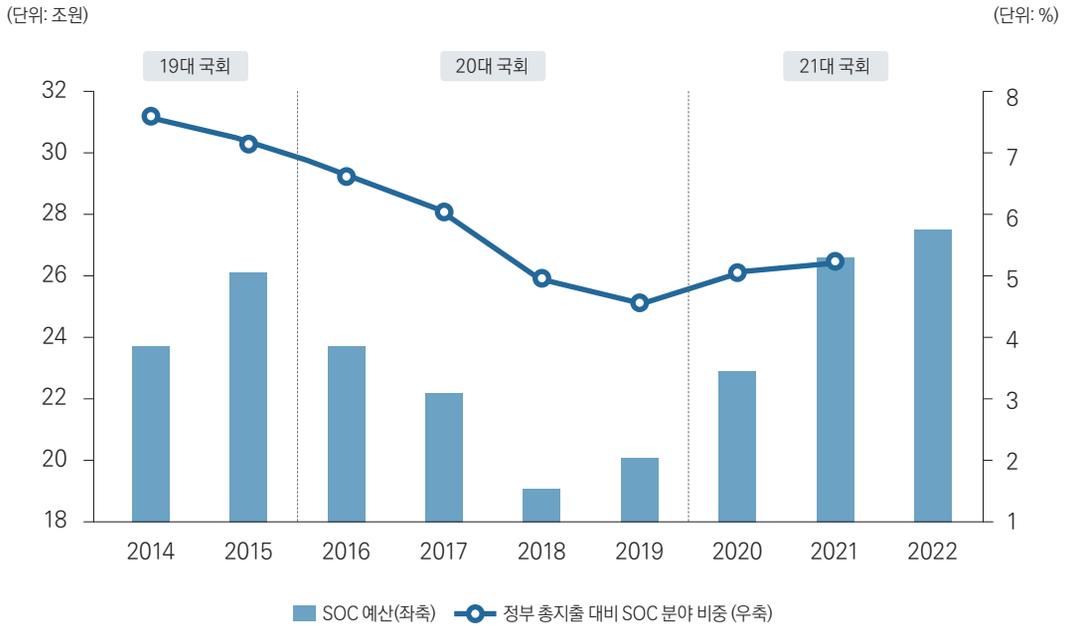
시기	투자 활성화 대책	주요 내용
2013.5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활동이 저조한 상황에서 투자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검·관리·평가하는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
2013.5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 기술창업 활성화, 벤처·창업 규제개선 등 벤처·창업 활성화
2013.5~12	투자활성화 대책	· 1차~4차 대책에서 규제개선, 현장 대기 프로젝트,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
2015.7	투자활성화 대책 - 관광산업·벤처·건축투자 활성화	· 메르스 사태가 소비 침체 및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관광·벤처·건축 등 성과의 조기 확산이 가능한 분야의 투자 회복을 추진
2016.2	투자활성화 대책	· 투자 촉진을 위해서 투자 프로젝트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신산업 육성을으로 다양한 투자와 일자리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2017.8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지원제도 개선	· 4차 산업혁명 투융자 확대 등으로 투자 활력 제고
2017.9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 한전·발전공기업 투자, 재정 융자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지원 확대
2017.12	제약산업 5개년 종합계획	· 정책금융지원, 세제지원 등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2018.7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	· 국내외 기업, 비수도권·낙후지역 등 지역균형을 고려하며, 고용 창출·신산업 등을 중심으로 지원
2018.2.	현장체감형 규제혁신	· 행정입법, 고시·지침·내규 및 유권해석 등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여 신규투자 촉진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정부 R&D투자 혁신방안	· '패키지형 연구개발 투자플랫폼' 도입하고 R&D 사업기획의 개방성 확대하며, 정책·제도·인력양성과 투자 간 연계성 강화
2018.4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지자체 투자 프로젝트 지원방안	· 지역이 당면한 투자 애로를 해소하여 실제 투자·일자리 창출
2018.8 2018.11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방안	· 국·공유재산 복합개발, SOC 관련 규제 혁신, 공공기관·민간 자본 투자를 통한 생활 SOC 투자 확대
2018.10	경제활력·일자리 확충을 위한 투자 활성화	· 민간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조기 착공 등 민간투자 활성화 · 지역 투자프로젝트 선정 지원 및 입지규제 개선하여 공공투자 확대
2019.8	'2020 전략투자 방향'	· 혁신성장의 확산·가속화를 위해 2020년 혁신성장 분야 3+1 전략 투자(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 혁신인재 양성) 방향 마련
2021.3	투자 활성화 프로젝트	· 투자 활성화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회복 지원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정부 투자지출) 정부가 경제주체의 하나로 직접 투자를 집행

-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규모가 크고 자본 회수에 오랜 기일이 소요되며, 그 효과가 사회전반에 미치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이뤄짐
 - 도로, 항만, 토지개발, 환경위생시설, 철도, 전기, 지하철 등 사회기반 시설에 투자
 - 정부 SOC 예산은 '단계적 정상화'와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6년부터 감소하였으나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2019년부터 증가하는 추이
 - SOC 예산(조원, 본예산 기준): ('20)23.2 → ('21)26.5 → ('22)28.0

[그림 II-74] SOC 예산



주: 1) 본예산 기준 2) 총지출 기준
 자료: nabosta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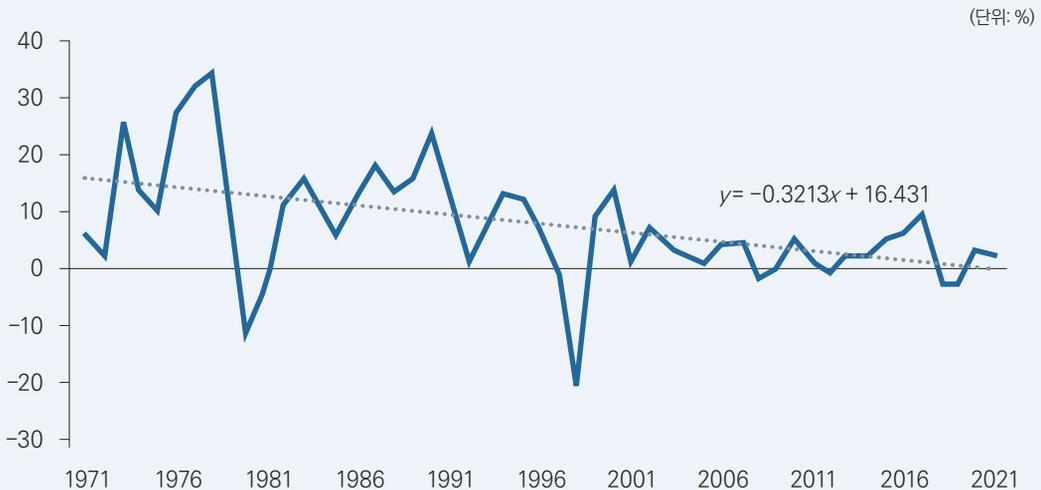
- 한편, 정부가 국가발전전략의 하나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기도 함
 - 정부는 2020년 7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종합계획'을 발표

BOX 17 최근 국내 투자 부진

■ 우리나라의 투자 증가율은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모습

- 1970년대는 연평균 13%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최근 10년(2012-2021년)에는 3%까지 하락
- 다만, 최근에는 IT부문과 R&D부분을 중심으로 설비투자과 지식재산생산물투자가 증가
- 투자증가율 하락은 경제가 발전할수록 자본의 투자수익률이 하락하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가파른 감소에 대한 우려도 함께 높아지고 있음

[투자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최근 투자 부진은 경제 불확실성, 건설투자 부진, FDI 증가 등에 기인

- (불확실성 증대) 2018년 이후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 공급망 차질 등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투자증가율이 낮은 수준을 지속
 -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투자의 임계 기대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음(Dixit, Pindyck, 1994)
- (건설투자비중 감소) 2018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건설투자 조정국면이 전체 투자 감소로 이어짐
 - 2000년까지만 해도 건설투자는 전체 투자 가운데 약 60%에 달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21년 기준 전체 투자의 46%만을 차지

- 1인당 소득이 증가할수록 GDP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역 U자 형태 (Kuznets(1961))나 증가하다가 일정 수준을 유지(Bon(1992))하는 것으로 알려져 건설 투자의 비중 감소는 추세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FDI 증가) 2000년 이후 해외직접투자가 빠르게 증가하며 국내 설비 투자를 대체
 - 한국은행(2013)은 해외직접투자의 1% 증가는 국내 설비투자를 0.08%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

제3절 대외부문: 무역 정책⁸²

1. 국민계정 상 대외부문

■ 대외부문의 기여도는 국민소득통계의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에서 확인

- 대외부문은 지출부문의 주요 항목으로 수출과 수입으로 구성
- 국민계정 상 수출입은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거래를 의미하며 소유권 이전을 기준으로 작성
 - 국민계정의 국외거래(경상거래+자본거래)계정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만이 국내총생산의 지출로 계상되며, 본선인도(F.O.B) 가격으로 평가
 - 통관수출입에서 소유권이전 기준으로 조정하고, 통관수입(C.I.F 가격 기준)은 운임 및 보험료를 차감하여 FOB 가격으로 전환 필요
- 수출입은 관련 기업의 생산과 영업영여, 피용자보수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생산과 분배에도 관련 있음
- 또한 우리 경제가 수출을 통한 생산 및 투자 확대, 고용과 소득 증가로 성장을 견인하였다는 점에서 성장에도 관련이 있음

82) 무역은 한국의 산업에서 생산된 재화를 수출하고 재화 생산에 필요한 투입재화를 수입하는 대외교역행위를 일컫음. 산업구조와 재화의 생산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어 생산 부문에 포함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수출입이라는 교역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국민소득통계상의 지출계정에서 다루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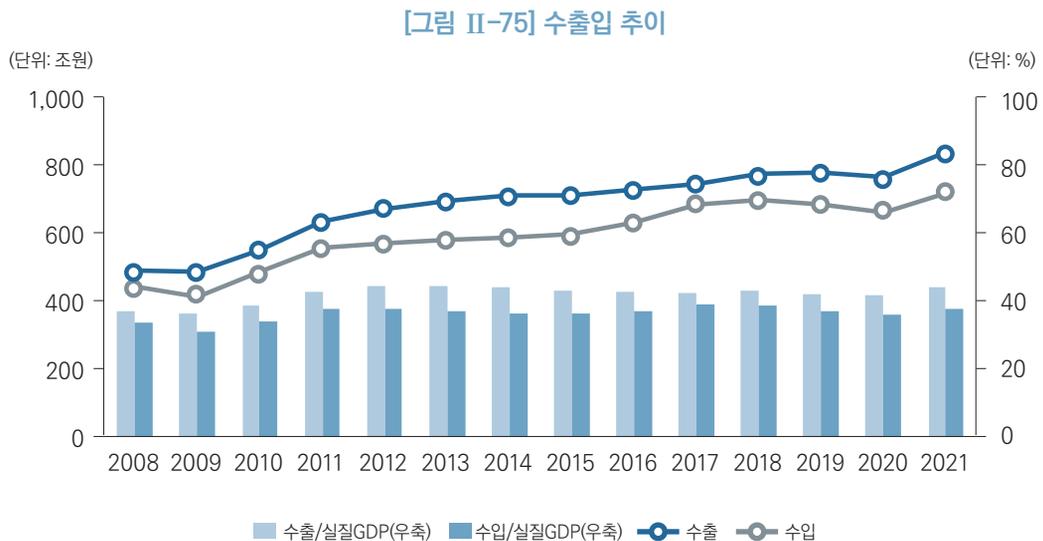
2. 대외부문의 주요 지표

가. 수출입과 경제성장

■ 국내총생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금융위기 이후 40% 초반에서 정체

- 수출/실질GDP 비중은 2000년대 들어 2001년 22.7%에서 2010년 38.5%까지 지속적으로 상승
- 수출/실질GDP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2년 44.6%를 정점으로 최근 5년 기간 중 연평균 42.6% 수준에서 정체
 - 수출/실질GDP 비중(%): ('17)42.5 → ('18)42.9 → ('19)42.1 → ('20)41.6 → ('21)44.0
 - 수입/실질GDP 비중(%): ('17)39.0 → ('18)38.5 → ('19)36.9 → ('20)36.0 → ('21)37.6

(1)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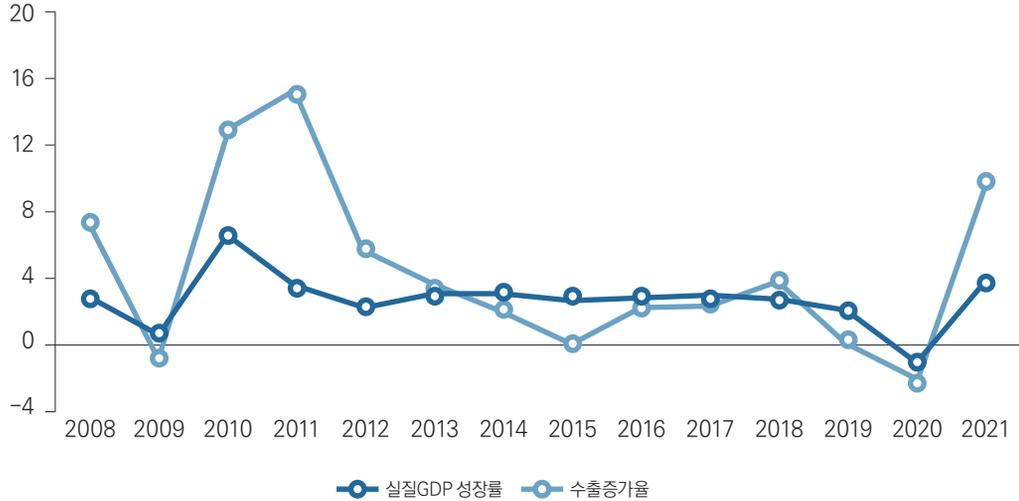


■ 경제성장률의 추세적 하락과 함께 수출증가율도 하락

- 실질GDP성장률(기간평균,%):('01~'05)5.0 → ('06~'10)4.3 → ('11~'15)3.1 → ('16~'20)2.1
- 수출증가율(기간평균,%):('01~'05)10.7 → ('06~'10)9.0 → ('11~'15)5.5 → ('16~'20)1.4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의 변동성은 줄었지만 경제성장률과의 동행성은 커짐

[그림 II-76] 실질GDP 성장률과 수출증가율

(단위: %)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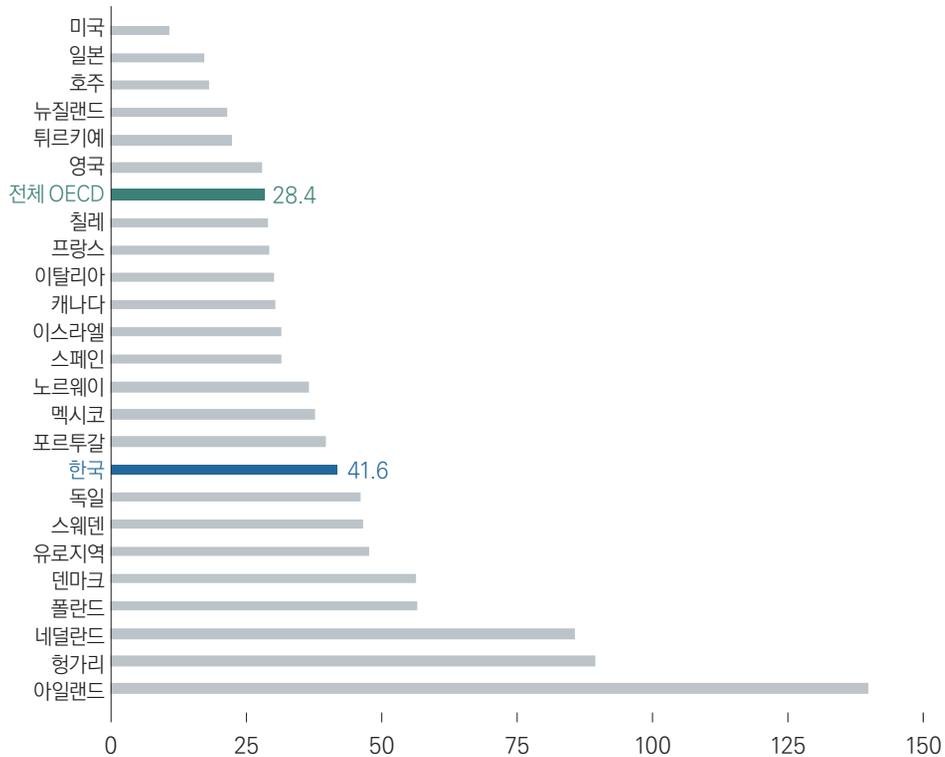
(2) OECD 주요국과의 수출/실질GDP 비중 비교

■ 한국의 수출/실질GDP 비중은 OECD 평균을 큰 폭으로 상회

- 전체 OECD 국가의 수출이 실질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 28.4%
- OECD 주요국 수출/실질GDP 비중(2020년 기준, %): 아일랜드 140.1, 네덜란드 85.8, 독일 46.2, 한국 41.6, 스페인 31.5, 프랑스 29.4, 일본 17.4, 미국 10.9

[그림 II-77] OECD국가 수출/실질GDP 비중(2020년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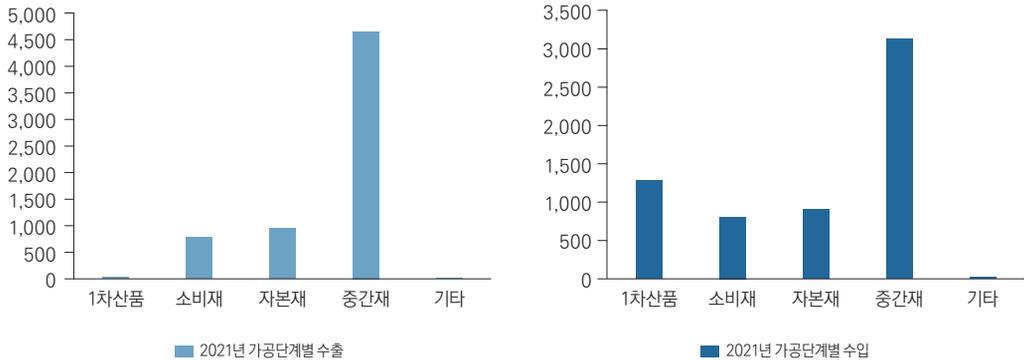
주: 불변가격 구매력평가(PPP), 미 달러화 기준
자료: OECD database

나. 가공단계별 수출입

○ **가공단계별 수출입**은 1차산품, 소비재, 자본재, 중간재 등 재화의 생산 과정 중 가공단계별 수출과 수입을 보여주는 지표

[그림 II-78] 가공단계별 수출 및 수입

(단위: 억달러)



자료: 무역협회

■ 대외거래 시 중간재의 수출 및 수입이 매우 큰 구조를 보임

- 대한민국의 가공단계별 수출 및 수입은 중간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외부충격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
 - 원자재 생산국의 경제여건 변화와 중간재 생산, 소비국의 경제여건 변화에 큰 영향을 받음
 - 대외경제변화에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소비재 수출의 비중을 늘리는 등 가공단계별 수출 다변화를 추구할 필요 있음⁸³⁾

83) 이유진, "세계 소비재시장 잠재력 분석 및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 현황," Trade Focus 36호, 한국무역협회, 2019

BOX 18 글로벌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 세계화의 추세 속 세계 무역 중 GVC의 비중은 성장 지속

- WTO 체제 하에서의 세계화 추세에 힘입어 단계별 재화 생산 행위가 여러 국가에 걸쳐 이루어지는 GVC는 크게 성장
 - 기술진보에 따라 물류, 정보, 통신의 비용이 감소하면서 1990년부터 2007년까지 매우 가파르게 성장⁸⁴
 - GVC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고도의 생산 ‘특화’를 통한 ‘파편화(fragmentation)’가 이루어지며 공급망 단계간 상호의존성 심화⁸⁵
 - 중국의 WTO 참여로 급속도로 GVC가 성장

[세계 무역 중 GVC 비중 성장 추이]



주: GVC 비중은 세계 총 무역 중 GVC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World Bank

■ 가파른 증가 이후 GVC 성장세는 최근 둔화 추세

-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세계 경기 침체로 GVC 성장세 또한 둔화
 -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 총수출과 간접수출은 각각 8.7%, 9.7% 성장하던 것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3.7%, 3.8%로 성장세 둔화⁸⁶

84)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2020: Trading for Development in the Age of Global Value Chains*, 2020

85) Antras, Pol, "Conceptual Aspects of Global Value Chains,"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Series 9114*, The World Bank, 2020

86) WTO, *Global Value Chain Development Report 2021-Beyond Production*, 2020

- 최근 무역 보호주의와 무역을 국가 안보적 관점에서의 대외 정책 수단으로 바라보는 추세가 대두됨⁸⁷
 - 미국 트럼프 정부가 명시적으로 무역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전세계적으로 무역에 있어 보호주의와 지역주의 기조가 나타남

[무역정책 수단 도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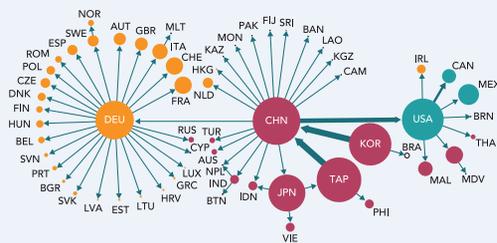


자료: Global Trade Alert

■ 대외충격은 고도화된 상호의존성을 통하여 전파

- GVC의 성장세는 둔화되었지만, 이미 세계의 공급망은 고도의 상호의존성을 보임
 - 공급망의 한 단계, 특히 중국에서 교란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충격은 공급망의 상호의존성을 통하여 각국으로 전파
- 유럽과 북미의 지역 내 GVC 활동은 감소하여 '세계의 공장'인 아시아와의 GVC 활동이 증가
 - 재화의 생산 단계에서의 '효율성'을 우선시했던 추세를 반영

[2017년 정보통신기술(ICT)부문의 세계 공급망 구조]



주: 원의 크기는 수출되는 부가가치의 상대적 크기를, 국가 간 화살표의 두께는 양국 간 부가가치 흐름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냄

자료: WTO, *Global Value Chain Development Report 2019*, 2019

87) De Ville, F., "Global Value Chains and EU-East Asia Trade: An Antidote for Geo-Economic Competition," In: Adriaenssen, J., Postnikov, E. (eds) *A Geo-Economic Turn in Trade Policy*, The European Union in International Affairs, 2022

■ 국제교역시장의 교란으로 인하여 GVC의 취약점 노출

-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GVC를 통한 '이득(gain)'이 많은 상황이었지만, 동시에 고도로 상호 연결된 공급망의 교란으로 인하여 '위험(risk)'과 '불안정성(instability)' 요소가 드러남
 - 판매에 있어서의 해외수요 의존과 생산에 있어서의 해외 부가가치 의존의 정도에 따라 각각 해외 수요와 공급 충격에의 위험 노출 정도에 영향을 미침
 - 특정 '허브(hub)'에 집중된 GVC는 충격을 증대시킬 수 있음
- GVC 자체를 파기하고 국제적 상호의존성을 최소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경제적 비용도 크게 들지만, 오히려 경제적 피해를 더 증대시킬 수도 있음⁸⁸
 - GVC는 부정적 충격의 전파 경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완충효과도 있어 경제 피해를 줄여 주며 안정성을 제공하기도 함
 - GVC로 인한 공급의 병목현상을 초래하기보다는 오히려 GVC로 인한 해결방법을 제공 (한국의 COVID-19 검사 키트 수출의 예시)

■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 GVC 구성 방향성의 변화

- 코로나19의 범세계적 대유행, 자연재해,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대외여건의 악화는 GVC를 크게 교란
- GVC의 구성은 효율성을 우선시하던 재화 생산의 초특화(hyper-specialization) 추세에서 공급망의 강건성(robustness)과 복원력(resiliency) 강화에 더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환⁸⁹
 - GVC는 교역 상대국 간의 물리적 거리가 보다 짧아지고 동일한 생산 단계를 다수의 국가에 나누어 두터워지는 경향을 보임
 - 공급망 교란으로부터 자국의 산업을 최대한 보호(insulate)함과 동시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정상화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
 - 경제위험을 보다 더 기민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할 필요

88) OECD, "Global Value Chains: Efficiency and Risks in the Context of COVID-19," *OECD Policy Responses to Coronavirus (COVID-19)*,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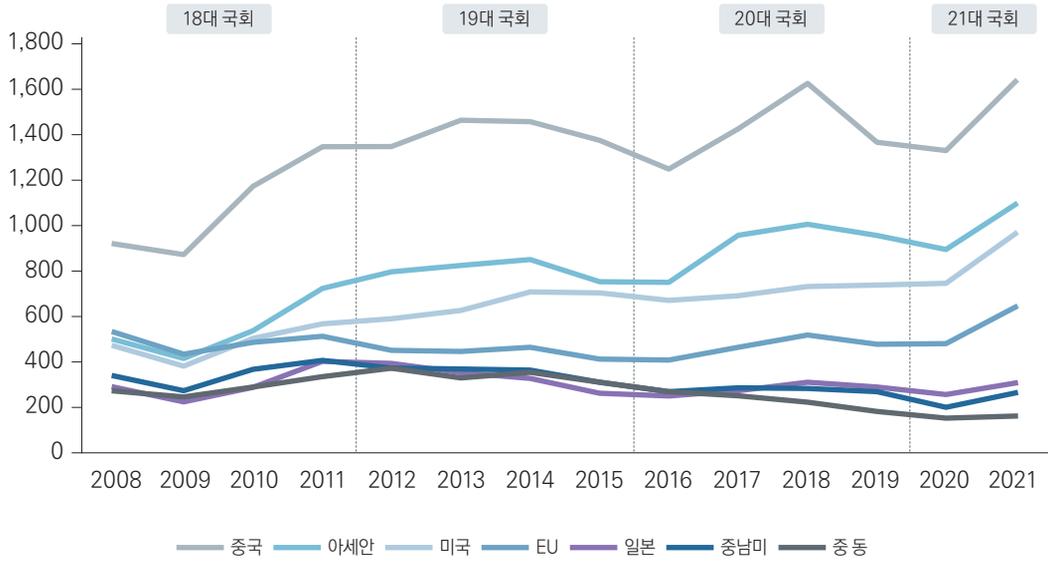
89) OECD, "COVID-19 and Global Value Chains: Policy Options to Build More Resilient Production Networks," 2020

다. 지역별 수출

- 주요 지역에 대한 수출은 중국, 미국, EU, 아세안, 일본, 중남미, 중동 등으로의 수출을 보여주는 지표

[그림 II-79] 주요 교역 상대국으로의 수출 추이

(단위: 억달러)



자료: 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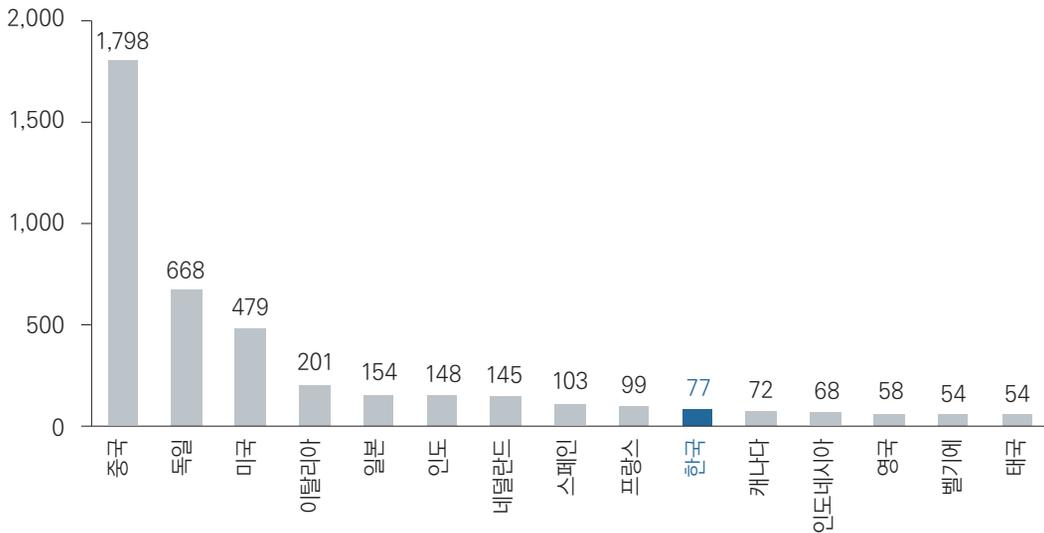
■ 주요 대상국에 고른 수출을 통하여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 필요

- 국가별 경제상황, 자연재해, 지정학적 위험요인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며 안정적인 수출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통적 주력시장은 물론, 신흥시장 개발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
 - 중국으로의 높은 수출 의존도에서 벗어나 신남방정책과 같은 신흥시장 개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라. 수출경쟁력 비교 지표

- **수출경쟁력**은 상대국 상품과의 가격경쟁력, 혹은 상품에 내재된 품질, 브랜드 등과 같은 비가격적 요인 등을 지수화하여 측정 가능
 - 여기서는 비가격적 요인과 무관한 수출규모 및 점유율 이용하여 계산한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을 통해 수출경쟁력 비교

[그림 II-80] 세계 수출시장 1위 품목 수(2020년 기준)



주: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UN Comtrade의 HS 상품코드 6단위(5,204개)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
 자료: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시장 1위 품목은 2020년 기준 77개

- 2020년 한국의 세계 수출 1위 품목 수는 77개로 전년대비 6개 증가
 - 한국의 세계수출 1위 품목수(개): ('16)74 → ('17)78 → ('18)65 → ('19)71 → ('20)77
 - 화학제품(29개)과 철강·비철금속(20개) 품목 군이 1위 품목수(77개)의 63.6% 차지
- 세계 수출 1위 품목 수로 평가한 우리 경제의 상품경쟁력은 2020년 기준 세계 10위
 - 한국의 세계수출 1위 품목수 순위: ('16)11 → ('17)10 → ('18)12 → ('19)10 → ('20)10

BOX 19 우리나라 주요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 분석⁹⁰

■ 우리나라 주요 주력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양적·질적 지표를 통해 분석

- 수출경쟁력을 평가하는 지표 중 양적인 측면을 고려한 지표 2개와 질적인 측면을 고려한 지표 3개를 선정하여 분석
- 양적 지표는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alization Index)⁹¹와 수출시장점유율(MS: Market Share)⁹², 질적 지표는 고부가가치화지수⁹³, 기술무역수지(Technology Trade Balance)⁹⁴, 수출입단가비율(Rate of Unit Price)임
-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3대 주력 산업을 살펴봄

■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경쟁력 확보

- 무역특화지수는 2015년 이후 조금씩 상승하다가 2019년 소폭 하락하였으며, 메모리반도체 부문 이외에는 낮은 수출시장점유율을 나타냄
- 고부가가치화지수는 상승세를 보이지만 기술무역수지 적자폭은 큰 것으로 나타남
 - 기술무역수지는 기술수출액보다 기술도입액이 훨씬 커서 적자를 지속

[반도체 산업의 수출경쟁력 추이]



주: 1. 기술무역수지는 기준년도(2016년)의 절대값으로 나누어 변화추이를 나타냄

2. 고부가가치화지수와 수출시장점유율은 %를 소숫값으로 전환함(100% → 1.0)

자료: 관세청과 UN comtrade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90) 국회예산정책처, 「주요 주력산업과 신산업의 동향 및 수출경쟁력 분석」, 경제현안분석 제100호 (2020. 12). 보고서의 제 3장 “주요 주력산업의 동향 및 수출경쟁력 분석”을 요약 재정리하였음

91) 무역특화지수는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를 무역액(수출액+수입액)으로 나눈 값으로 1은 수출만 있는 완전 수출특화, -1은 수입만 있는 완전 수입특화를 의미

92) 수출시장점유율은 특정 국가의 수출액이 세계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해당 산업에 대한 시장 지배력을 반영

93) 고부가가치화지수는 수출단가지수를 수출물가지수로 나눈 값으로 기준년도 대비 높아지는 경우 해당물품의 부가가치가 높아진 것을 의미

94) 기술무역수지는 특허 판매 및 사용료, 발명, 노하우의 전수, 기술지도, 엔지니어링 컨설팅, 연구개발 서비스 등의 기술수출액에서 기술도입액을 빼서 산정

■ 자동차 산업은 양적 수출경쟁력 지표가 하락 추세

- 자동차 산업의 수출특화도와 수출시장점유율은 하락 추세이고, 고부가가치화 수준도 승용차 부문을 제외하고는 약화
 - 무역특화지수는 수출특화로 나타나지만, 주요 부문에서 약화 추세
 - 자동차 부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승용차 부문의 수출시장점유율은 2015년 6.1%에서 2019년 5.3%로 하락세를 보임
 - 고부가가치화지수는 승용차, 자동차엔진 부문을 제외한 세부부문에서 하락 추세
- 기술무역수지는 승용차·버스 부문과 자동차부품에서 흑자를 보이고 있으며, 자동차엔진 부문도 적자 폭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자동차 산업의 수출경쟁력 추이]



주: 1. 기술무역수지는 기준년도(2016년)의 절대값으로 나누어 변화추이를 나타냄
 2. 고부가가치화지수와 수출시장점유율은 %를 소숫값으로 전환함(100% → 1.0)
 자료: 관세청과 UN comtrade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조선 산업은 양적·질적 측면 모두에서 양호한 수출경쟁력 확보

- 무역특화지수는 2015년 이후 전반적으로 0.88 수준의 강한 수출특화 상태를 지속
- 중국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수출시장점유율 등 양적 지표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수출시장점유율은 2017년 30.8%를 정점으로 하락하여 2019년 17.3%를 기록
- 수출입단가지수비율은 2017년을 제외하고, 100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조선 산업의 수출경쟁력 추이]



주: 1. 기술무역수지는 기준년도(2016년)의 절대값으로 나누어 변화추이를 나타냄
 2. 고부가가치화지수와 수출시장점유율은 %를 소숫값으로 전환함(100% → 1.0)
 자료: 관세청과 UN comtrade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대한민국 경제와 무역정책

가. 개요

■ 국민경제 발전을 위하여 국가가 대외경제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말함

- 2021년 기준 수출, 수입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각각 35.8%, 34.2%를 기록하며 무역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를 보여줌
- 단기적으로는 관세수입의 증대 및 국제수지 조정 등을,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 개선 등을 목표로 함
- 대외 경제여건 변화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한국 경제를 보호하고 원활한 대외 무역을 지원함

■ 무역정책은 국가 간 관계성과 국제경제 환경 하에서의 산업구조를 다룸

- 한국 산업의 각 생산 단계에서 여러 국가와의 국제관계성이 높아지면서 대외 경제여건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음
 - 글로벌가치사슬⁹⁵ 참여도가 높아지며 각국의 경제환경 변화, 범세계적 감염병의 대유행, 자연재해, 지정학적 위험 등 다양한 대외교역 환경 변화요인들의 영향에 노출
- 재화의 안정적인 판매망 확보뿐 아니라, 최종재화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 공급의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무역정책의 필요성이 대두

나. 중요성

■ 대한민국 경제에 대외 무역은 매우 중요한 성장의 동력

- 한국 경제는 대외 수출에 크게 기대어 경제성장을 이루어왔고, 또한 향후 지속적 성장에 있어서도 대외 수출은 중요한 동력임
- 재화 생산에 필요한 자원의 자국산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필수적인 투입 재화의 원활한 공급은 중요

95)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이란 기획에서부터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중간재 및 서비스가 여러 국가나 지역에 걸쳐 투입되어 최종재화를 완성하는 분업체계를 일컫음

■ 소규모개방경제인 대한민국은 대외 경제여건 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음

- WTO⁹⁶ 체제 하에서 강한 세계화 추세를 보이던 국제교역 시장에 1990년대 들어 지역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무역정책의 중요성이 대두⁹⁷
 - 지역주의의 발현으로 다자간 협정인 WTO 체제에서 벗어나 양자간, 지역 중심의 무역협정 체결을 통하여 국가 간 무역 문제 해결 추세가 나타남
- 국제교역의 시장기능 교란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비하며 위험을 분산시키고 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 필요
 - 대외교역 환경 변화로 인한 수입 및 수출 재화 가격 변화의 영향이 큼

다. 주요 내용

(1) 법·제도

■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을 기본법으로 삼음

-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에 있어 제반 개념을 확립하고 실질적인 체계를 확립
 -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 「관세법」은 국가 간 재화의 이동에 있어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 「외국환거래법」은 국제교역에 있어 원활한 거래를 위한 지급수단에 대한 정의와 실질적 거래 활동을 위한 기틀을 마련
 -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96)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는 국제 교역에 있어 국가간 분쟁을 중재하는 단체로 이를 중심으로 다자간 무역협정체제를 구축

97) Hyun, Jung Taik, 2003, "Free Trade Agreements and Korea's Trade Policy,"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Volume 10, pp.21-37

■ 법률 제정을 통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보장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법)」은 체약상대국과의 관세행정 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의 부과, 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자유무역협정 사항을 규정
- 해당 법률은 자유무역협정을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할 것을 명시
 -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만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

(2) 주요 무역정책

■ 최근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양자간, 메가 자유무역협정⁹⁸ 체결이 증가

- 지역경제통합 등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이 꾸준히 늘어나며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나 산업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 다수 존재
- 수출촉진 정책은 직접 지원보다는 대외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며, 관세 및 비관세장벽 등 수입에 관한 정책 중심으로 활용

■ 양자간(bilateral)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 개별국가 및 지역경제권과의 양자간 무역협정 체결
- 자유무역협정(FTA) 17건 발효 중
 - 칠레, 싱가포르, EFTA⁹⁹, ASEAN¹⁰⁰, 인도, EU(27개국)¹⁰¹, 페루, 미국, 튀르키예,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콜롬비아, 중미¹⁰², 영국 등 17개 국가 및 경제권

98) 3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99)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100)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101) 영국 제외

102)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 메가 자유무역협정(Mega FTA)의 체결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참여
 - 1975년 방콕협정이라는 명칭으로 발효 (2005년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으로 명칭 변경)
 -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라오스, 방글라데시, 몽골 참여
-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가입 준비 중
 - 참여 11개국은 2020년 기준 5.1억명(6.6%), 교역규모 5.2조달러(14.9%), 명목 GDP 10.7조달러(12.7%)의 경제권 (괄호는 전세계 비중)
 - 일본, 호주, 캐나다, 멕시코, 칠레,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페루, 베트남, 브루나이 등 11개국이 2018년 발효에 참여
 - 영국, 중국, 에콰도르, 대만의 참가 신청
 - 대한민국, 태국, 필리핀 참가 의사
 - 정부는 2022년 4월15일 'CPTPP 가입 추진계획' 서면의결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참여
 - 2021년 12월 3일 비준서를 ASEAN 사무국에 기탁하여 발효규정에 따라 2022년 2월 1일부터 발효
 - ASEAN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참여

(3) 수출지원 정책

■ 수출지원 정책은 대외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수출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함

- 단기적으로 코로나19, 수출 감소 등의 대외 무역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 장기적으로 대외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목·시장 다변화, 무역 디지털 시스템 구축 등 추진
- 수출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주무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 정부 부처외에 수출지원 공공기관은 무역협회, KOTRA,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있음
 -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을 통한 무역보험 지원 확대
 -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정책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형을 이루며 상생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수출생태계를 조성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지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 확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해외네트워크와 진출노하우를 공유
- 수출품목의 고도화, 다변화를 통해 수출 부가가치와 고용효과를 제고
 -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의 해외진출을 위한 규제개선·R&D 지원·세제 지원 등을 강화하고, 서비스와 소비재산업의 수출지원을 확대
-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출구조를 확립
 - 수출대체시장인 아세안·인도 등의 수출비중 확대를 통해 수출시장의 저변 확장

■ 수출기업의 무역보험·보증 지원 정책

- (정책 개요)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수출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 제도
- (지원 내용) 단기수출보험, 중장기수출보험 등 12개 보험종목과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중견수출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쉽게 무역금융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2개 보증종목 운영

[표 II-16] 2022년 기관별 수출금융 공급 계획

(단위: 조원)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보험	기타	합 계
2021	72.1	167.0	13.0	3.7	255.8
2022	69.0	175.0	13.5	3.7	261.2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 경제정책방향」

■ 전자무역 활성화

- (정책 개요) 외환업무를 비롯한 통관 및 수출입물류에 이르는 전자무역시스템 구축을 추진
 - 무역업계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8만여 무역업체를 비롯한 은행, 보험사, 관세사, 선사, 항공사, 보세창고와 무역유관기관을 연계한 무역 커뮤니티를 구축
- (정책 목표) 기업이 전자무역을 활용하여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무역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자무역 인프라 확산
 - 권역별 경제통합 가속화, 전자상거래 등 무역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모든 무역절차가 실시간 전자적으로 실현되는 범세계적인 무역정보망의 구축제2절 노동-자본 간 분배: 고용 정책

Economic Overview of the Republic of Korea 2022



[그림 II-81] 성장 관련 주요 현안과 경제지표

구분	현안	경제지표
노동: 저출산고령사회	> (1) 총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인구 및 인구증가율 ◦ 인구동태(출생아수, 사망자수)
	> (2) 저출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 OECD 국가별 비교] ◦ OECD 첫째아 평균 출산연령
	> (3) 고령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총인구 비중 ◦ 생산연령인구 비중 ◦ 성별 기대수명 추이
자본: 저탄소경제	> (1) 온실가스배출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배출량과 GDP ◦ OECD 비교 ◦ 주요국 온실가스 감축목표
	> (2) 저탄소 경제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집약도 ◦ 재생에너지 비중 ◦ GDP대비 제조업 비중
중소요생산성: 과학기술	> (1) 연구개발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비 ◦ 주요국 연구개발비 비교
	> (2) 연구개발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원수 추이 ◦ 주요국 연구원수 비교
	> (3) 연구개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 논문수 ◦ 특허수 ◦ 논문수 및 특허수 국제비교

● 성장부문은 저출산고령화사회, 저탄소경제, 과학기술로 구성

- 성장부문은 국가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중장기 경제성장구조나 성장경로 설정시 고려해야하는 분야로 구성
- 성장은 자본 축적, 인구 증가, 기술 진보 등을 통해 한 경제의 생산수준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생산수준의 향상은 국민소득 증가로 이어짐
 - 대표적인 성장이론인 솔로우의 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인구와 자본, 기술진보와 경제성장의 관계식을 설정
 - 보편적으로 콥-더글라스 형태의 생산함수를 가정하고, 실질GDP(Y_t)는 총요소생산성(A_t), 노동투입량(L_t), 자본투입량(K_t)의 함수로 정의

$$Y_t = A_t L_t^\alpha K_t^{1-\alpha}$$

- 완전경쟁과 규모에 대한 보수불변 가정하에서 α 는 노동소득분배율을, $(1-\alpha)$ 는 자본소득분배율을 나타냄
- 생산요소 중 인구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비중 감소와 고령인구 비중 증가를 주요 현안으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다룸
- 생산요소 중 자본은 중장기적으로 저탄소경제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탄소경제는 에너지 공급과 이용, 생산에 저탄소 기술을 이용하기 위한 신규 투자와 자본축적을 수반하기 때문임
- 총요소생산성은 과학기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의미하므로, 정부와 민간부문의 기술혁신전략을 다룸

● 저출산고령화, 저탄소경제, 과학기술 등 성장부문이 당면한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저출산·고령사회는 세계 최저 수준인 합계출산율과 급격히 높아지는 노인인구 비중으로 인해 2021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하고 인구구조가 크게 변화함에 따라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고 혁신역량도 줄어들음
- 저탄소경제는 주요국 대비 낮은 탄소집약도와 낮은 신재생에너지 보급량, 에너지다소비 산업의 높은 비중 등으로 경제성장과 온실가스배출량의 탈동조화에 어려움이 있음
- 과학기술은 우리나라 기술력이 빠른 추격자 전략에서 선도형 기술혁신 전략으로 이행하도록 물적·인적 투자가 필요

제1절 노동: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1. 국민계정 상 노동과 저출산·고령사회

■ 경제성장은 국민계정 상 국내총생산이 장기에 걸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성장은 장기에 걸쳐 한 나라의 총생산, 총소득, 총지출이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음
 - 국민경제 3면 등가의 법칙에 의해 생산·분배·지출 측면의 총생산, 총소득, 총지출의 규모가 동일하며, 경제성장은 총생산, 총소득, 총지출이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생산측면에서 경제성장은 총생산수준이 장기에 걸쳐 확대되는 것을 의미
- 총생산수준의 확대는 물가상승을 제거한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경제성장은 실질국내총생산의 증가를 의미
- 경제성장은 속도는 실질GDP 증가율로 측정함
 - 실질GDP의 증가율은 1년 동안 총생산수준의 얼마나 확대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경제성장률 혹은 실질GDP 성장률로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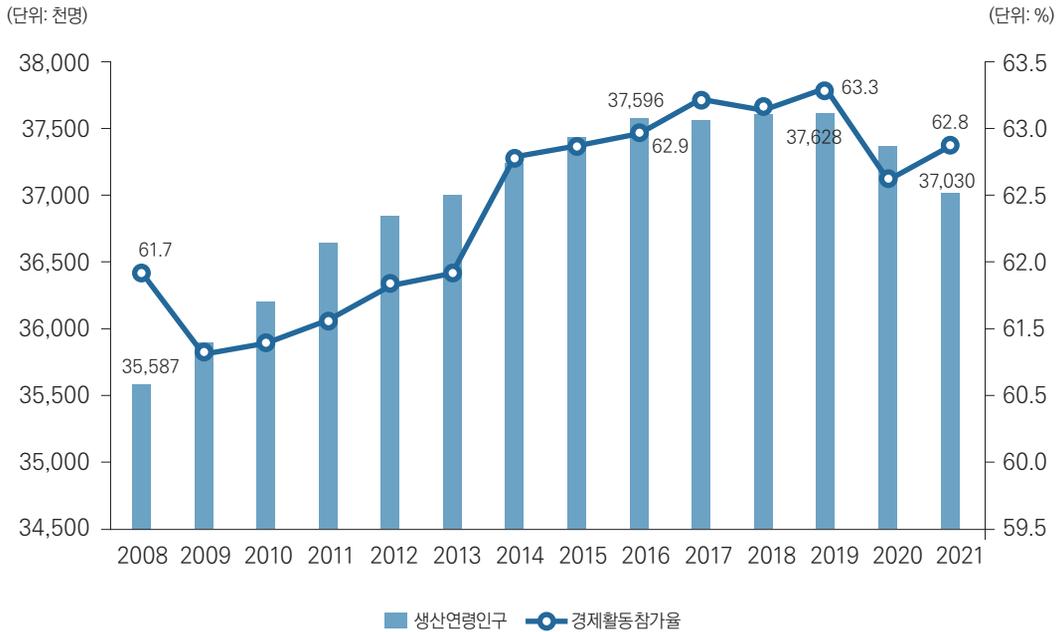
■ 노동은 생산의 가장 중요한 투입요소이자 경제성장의 원동력

- 생산요소는 생산과정에서 투입되는 것으로 노동과 자본이 대표적이며, 경제성장, 즉, 실질 GDP가 늘어나려면 생산요소의 투입량이 늘어나야 함
- 장기간에 걸친 노동과 자본 투입량의 변화는 경제성장의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특히 최근 총인구와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노동 투입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노동투입량을 결정하는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부터 감소 추세

- 노동투입량은 총노동투입시간으로 측정하며, 중장기적으로 총노동투입시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생산연령인구와 경제활동참가율임
 - 총노동투입시간 = 취업자수 × 주당근로시간 × (365/7)
 - 취업자수 = 생산가능인구 × 경제활동참가율 × (1 - 실업률)
- 생산연령인구(15~64세 인구)는 2019년 3,763만명 정점을 기록

[그림 II-82] 생산연령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저출산·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로 노동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하락

- 경제성장 요인을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 등의 투입요소로 분해할 때, 2016~2020년 간 실질GDP 성장률 2.1% 중 자본과 총요소생산성은 각각 1.5%p와 1.6%p의 성장률을 담당한 반면, 노동은 1.0%p 감소하게 함
- 생산연령인구 증가율 감소, 고령층 인구비중의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가 총노동투입시간의 정체 혹은 감소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노동의 성장기여도를 감소시켰다고 볼 수 있음

2. 성장과 노동 관련 주요 지표

가. 성장과 노동 관련 주요 지표

- **총인구**는 일정시점에 일정한 지역 내에 살고 있는 모든 인구(외국인 포함)를 의미, 인구와 관련된 각종 경제·사회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됨

(1) 현황

[그림 II-83] 연도별 총인구 및 인구증가율



주: 내국인과 외국인을 모두 포함한 인구이며, 2020년까지는 확정치, 2021년은 추계치임
자료: 통계청

■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21년부터 감소하기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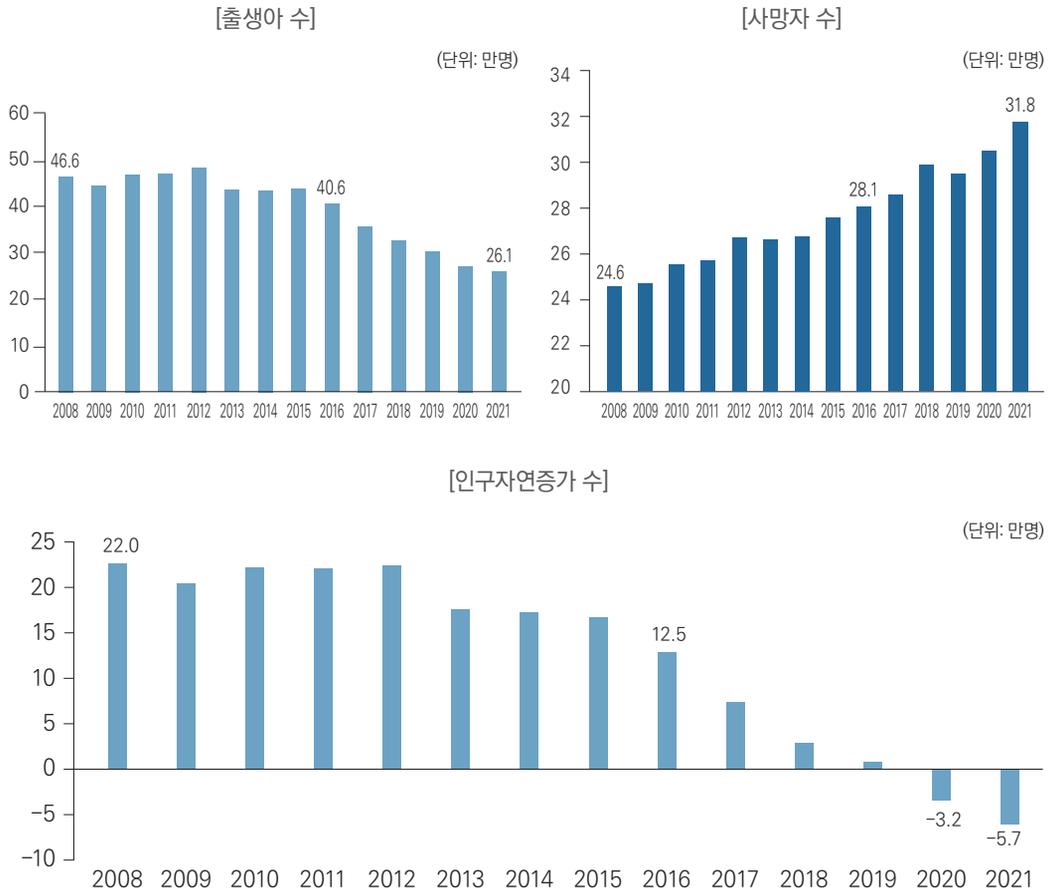
- 총인구는 2008년 4,905만명, 2020년 5,184만명으로 증가, 이후 2021년에는 5,174만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전년대비 감소
- 인구의 전년대비 증감률을 나타내는 인구증가율은 2016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2021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추정
 - 인구증가율: 2008년 0.76%, 2012년 0.53%, 2016년 0.4%, 2021년 -0.18%

■ 저출산·고령화의 심화가 총인구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

- 합계출산율이 급락하기 시작했던 2016년 이후 인구증가율도 급락

(2) 비교

[그림 II-84] 연도별 인구동태 현황



자료: 통계청

■ 2020년에는 처음으로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보다 많은 인구자연감소가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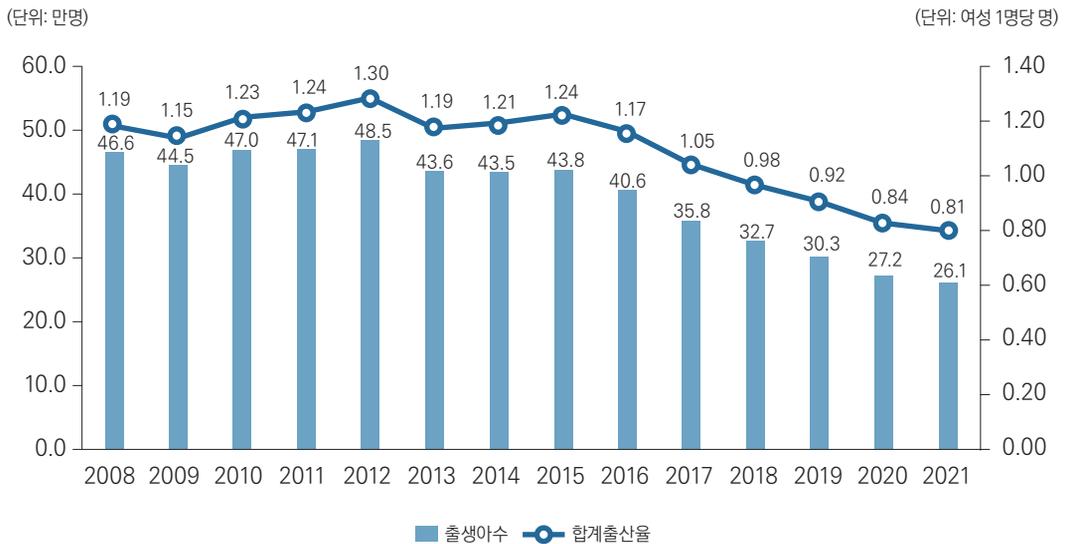
-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출생아 수는 감소하고 사망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사망자 수에 증가폭에 비해 출생아 수의 감소폭이 더 컸음
 - 출생아 수는 2016년 40.6만명에서 2021년 20.1만명으로 20.0만명 감소
 - 사망자 수는 2016년 28.1만명에서 2021년 31.8만명으로 3.7만명 증가
- 사망자 수 증가에 비해 출생아 수의 감소가 커서 인구자연증가(출생아 수 - 사망자 수)는 2016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여 2020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즉, 인구자연감소가 나타남
 - 2020년 인구자연감소가 나타났으나, 국제 인구 순유입으로 총인구는 2021년 부터 감소 시작

나. 합계출산율

○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로서, 여성 나이가 15세부터 49세까지를 기준으로, 각 연령별 출산율을 모두 합해서 산출

(1) 현황

[그림 II-85] 연도별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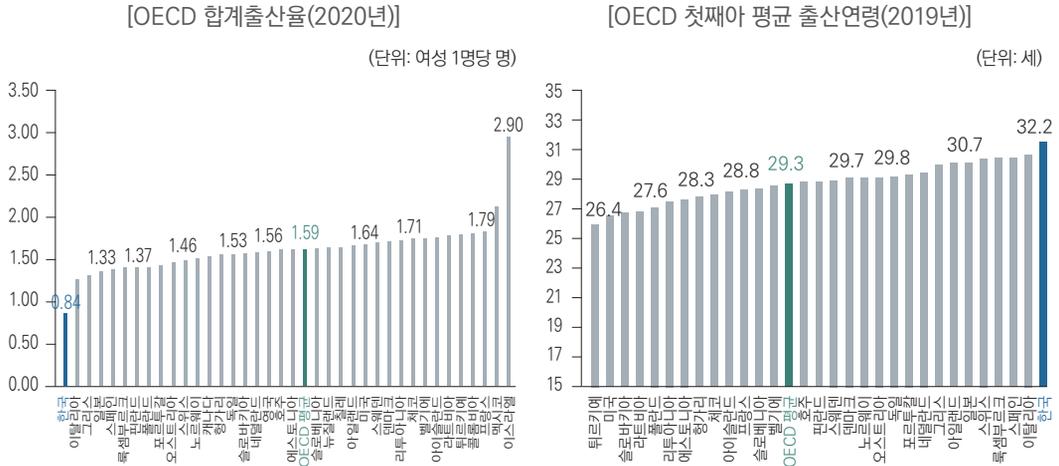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합계출산율은 2016년부터 급격하게 하락하여 2021년에는 0.81명을 기록

- 2008년부터 2015년까지는 평균 1.22명 수준, 2016년부터 하락하여 2018년에는 0.98명으로 1.0명 이하로 하락
- 합계출산율 하락과 더불어 출생아 수도 2016년 40.6만명에서 2021년 26.1만명으로 급격하게 하락
- 2020년 이후 출생세대는 이전 출생세대에 비해 급격한 인구축소(혹은 인구절벽)가 나타날 가능성이 큼
 - 2016년까지 출생아 수는 연간 40만명 이상, 2019년 이후에는 30만명 이하

(2) 비교

[그림 II-86] OECD 회원국 합계출산율(2020년) 및 첫째아 출산연령(2019년)



자료: OECD Family Data Base

■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

- OECD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OECD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탈리아 등 남 유럽 국가들보다도 상당폭 낮은 수준

■ 2019년 기준 첫째아 평균 출산연령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

- OECD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첫째아 평균 출산연령은 32.2세로 OECD 평균 (29.3세)뿐만 아니라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
- 첫째아 평균 출산연령이 늦어지면 둘째아 이상의 가임기간이 줄어들게 되어 전체적인 합계 출산율을 낮추게 됨
- 우리나라는 첫째아 평균 출산연령이 늦어지게 된 것은 혼인을 지연 혹은 연기시키거나 늦은 나이에 혼인(만혼)하는 빈도가 높아졌기 때문임

다. 고령층인구비중과 생산연령인구비중

- **고령층인구비중**은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을 나타낸 지표로서, 특정 시점에서 65세 이상 인구수를 총인구로 나누어 산출
- **생산연령인구비중**은 총인구 중 생산연령인구(15~64세 인구)의 비중을 나타낸 지표로서, 특정 시점에서 생산연령인구를 총인구로 나누어 산출

(1) 현황

[그림 II-87] 연도별 고령층인구 비중과 생산연령인구 비중



자료: 통계청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기와 맞물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고령층인구 비중은 2019년 14.9%에서 2022년 17.5%로 빠르게 증가
 - 2019~2020년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는 시기로 예상됨
- 우리나라는 이미 2018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 UN은 65세 이상 고령층인구 비중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사회, 14% 이상인 사회는 고령사회, 20% 이상인 사회는 초고령사회로 정의
 - 통계청은 고령층인구 비중이 2025년에 20%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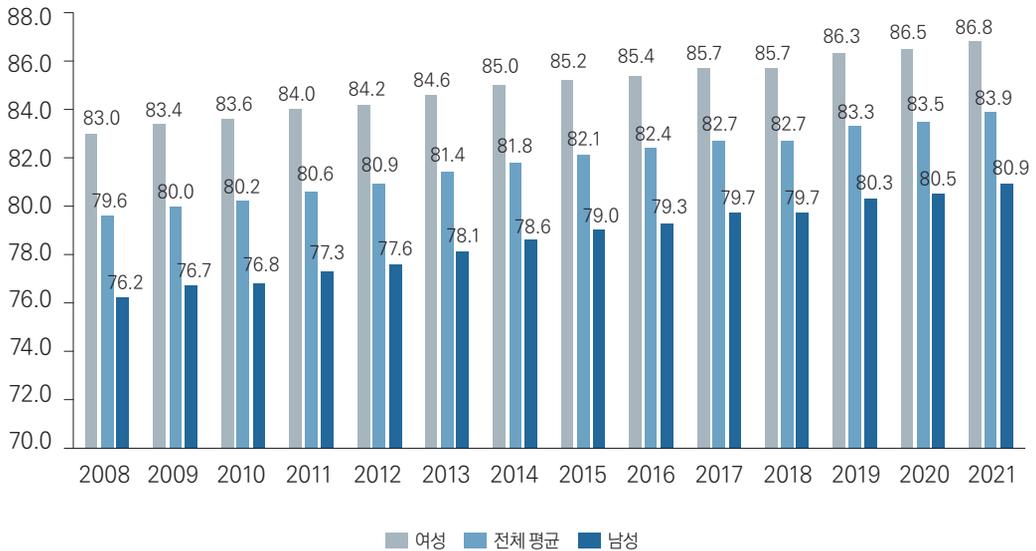
■ 생산연령인구는 2019년 정점으로 감소, 생산연령인구 비중도 감소전망

- 생산연령인구는 2008년 3,559만명에서 2019년 3,763만명으로 증가, 이후 감소하여 2022년은 3,668명일 것으로 전망됨
 -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08년 72.5%, 2018년 72.9%, 2022년 71.0%로 감소

(2) 비교

[그림 II-88] 성별 기대수명 추이

(단위: 세)



주: 2020년까지는 확정치, 2021년은 추계치임
자료: 통계청

■ 의학기술 발달과 고령층 사망률 개선으로 기대수명은 점진적으로 증가

- 기대수명은 0세의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를 의미
- 전체 평균 기대수명은 2008년 79.6세에서 2021년 83.9세로 4.3세 증가
 - 남성의 기대수명은 2008년 76.2세에서 2021년 80.9세로 4.7세 증가, 여성의 기대수명은 83.0세에서 86.8세로 3.8세 증가
- 의학기술 발달로 과거 사망원인이었던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령층 사망률이 개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대수명도 증가

3. 대한민국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개요 및 필요성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을 의미¹⁰³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은 정부가 적절한 인구구조 및 인구규모에 도달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인구정책”의 일종
 - 역사적으로 적정 인구규모를 유지 혹은 도달하기 위해 OECD 국가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인구정책”을 추진
 - 특히 저출산·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정책으로 “인구정책”을 추진
- 2000년대 초반까지는 적정 인구를 위한 “인구정책”을, 2000년대 중반 이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변화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을 추진
 - 2003년까지의 인구정책은 경제개발 초기(1962~1995)에 인구증가 억제를 위해 가족계획, 이후 2003년까지는 성비 불균형 해소 등 인구자질향상을 추진
 - 2001년 합계출산율 1.30명으로 하락하고, 고령층 인구비중이 높아지면서 2004년 이후에는 저출산·고령화를 모두 고려한 인구정책을 추진

■ 저출산 추세를 완화하고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

- 현재와 같은 지속적인 저출산·고령화는 총인구·생산연령인구 감소, 성장잠재력 저하, 축소사회 및 지역소멸 위기를 가져올 수 있음
 - 출생아 수 감소, 사망자 수 증가 등으로 생산연령인구는 2018년부터 감소했으며, 총인구¹⁰⁴는 2021년부터 감소
 - 인구감소는 노동공급과 생산성을 악화시켜 성장경로에 부정적인 영향
 - 연간 출생아 수가 20만명대로 하락하면서 최근 태어난 출생아가 학령인구(6~20세), 생산연령인구(15~64세), 병역자원(20세 남성인구) 등이 되는 시점에서는 해당 연령대 인구가 대폭 감소하는 축소사회가 예상됨
 -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과 맞물려 지방인구의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심화

103)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3조(정의)

104) 총인구 변화 = 인구자연증감(=출생아수-사망자수) + 인구국제순이동

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체계

(1) 법·제도

■ (법적근거)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기반

-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인구 구성의 향상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규정(제2조)
-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수립·시행을 의무로 규정(제4조)
-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설정, 이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추진의 의무를 규정(20조)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구성(23조)

■ (법정계획)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시행계획」

-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연도별로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시행계획」을 수립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년): 출산·양육의 장애 요인 제거를 위한 저출산 대책, 저소득 가정을 주요 대상으로 보육 지원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년): 맞벌이 등 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정책의 대상을 중산층 이상으로 확대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 합계출산율 목표를 2020년 1.5명으로 설정, ‘청년 일자리·주거 대책 강화’ 등을 제시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6년): 단위지표(합계출산율 등) 제고보다 모든 세대의 삶의 질 보장과 인구감소 적응력 강화를 추진

(2) 정책 목표 및 수단

■ (정책목표)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인구변화 대응 사회혁신’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추진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전략을 제시

- ①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 ②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 ③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 ④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 (정책수단) 생산연령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 고령사회 대비, 초저출산대응 등을 제시¹⁰⁵

- (생산연령인구 확충) 여성·외국인·고령층 고용률 제고, 생산성 향상
 - ① 코로나19 경력단절여성 조기복귀 지원, 양성평등 노동시장 여건 개선
 - ② 코로나19 단기적 외국인력 부족 대응, 미래수요 대비 중장기 인력수급파악 및 활용
 - ③ 고령자계속고용 제도 추진, 고령자 연령계층별 고용활성화 지원
 - ④ 신기술 분야 청년 인재양성, 생산적 노동시장 구현 등으로 생산성 향상
-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 학령인구, 병역자원 감소 개선, 지역인구 증가
 - ① 교육부문 재원·시설·인력 효율화, 교육교부금 제도 개선 방안
 - ② 간부중심 병력구조 정예화, 군 인력 충원체계 개선
 - ③ 초광역권 성장 위한 거점도시 활성화, 소멸위험지역 자립역량 강화
- (고령사회 대비) 재정, 노후소득, 제도인프라 개선으로 고령사회 대비
 - ① 인구구조 변화 고려한 재정운용계획 수립, 국민연금 수익성 제고 및 건강보험 지출 관리
 - ②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간 연계 강화
 - ③ 의료·돌봄인력 확충 및 중앙-지자체 연계 협력
 - ④ 노령층 은퇴후 소득 종합적 파악,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 강화
- (초저출산 대응) 지원강화로 초저출산 대응
 - ① 결혼·출산 인센티브 강력 보완 및 영아기 집중투자 보완
 - ② 중앙-지자체 협업 통한 지원 재정비·강화
 - ③ 다양한 가족형태 수용성 제고

105)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연구중심의 대통령소속 위원회라는 점에서 실행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문재인정부 이후 부처합동으로 예산을 통한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인구정책TF”를 구성하였음. 이러한 “인구정책TF”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총 4번에 걸쳐서 제시 하였음

라.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재정정책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재정정책은 2021년 재정소요액 기준으로 저출산 분야에 64%(46.7조원), 고령사회 분야에 36%(26.0조원)의 재정이 투입되었음

(1) 현황

[표 II-17]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재정소요액 현황

(단위: 억원)

	2020	2021	2022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333,112	364,027	386,820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205,716	232,130	247,025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73,986	91,261	85,645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13,653	18,185	22,229
합계	626,467	705,603	741,719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0.12.

■ 2020~2025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으로 383조 8,158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전망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의하면 2022년 기준으로 아동수당 등 돌봄관련 분야(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재정소요액이 38조 6,820억원
- 고령사회 대응 분야(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재정소요액이 24조 7,025억원
- 축소사회 대응 분야(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재정소요액이 8조 5,645억원
- 인구구조 변화 적응 분야(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재정소요액이 2조 2,229억원

(2) 비교

[표 II-18] 2021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예산(지방비 포함)

(단위: 억원)

구분		2021년 예산	비율
중앙부처 시행계획 총계		726,799	100.0
저출산 분야		466,846	64.2
직접지원		179,399	24.7
현금	육아휴직급여, 출산휴가급여, 아동수당 등	61,791	8.5
서비스	영유아보육료, 누리과정 등	114,570	15.8
의료비	임신부, 영아 건강관리, 난임지원 등	3,038	0.4
간접지원		287,446	39.5
고용	청년 구직활동 및 창업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저축계좌 등	42,198	5.8
주거	신혼부부 주거 구입, 전세 자금 대출, 다자녀 가구 주거지원, 청년임대 출자·용자 등	229,833	31.6
교육	교육급여 등	6,496	0.9
기타	인식 개선, 시스템 구축 등	8,919	1.2
고령사회 분야		259,953	35.8
기초연금	기초연금	188,581	25.9
취업지원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44,181	6.1
복지·의료	생계급여, 치매관리 등	21,557	3.0
기타	노인보호구역 확대 등	5,635	0.8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0.12.

■ 2021년 예산 기준으로 저출산 분야 예산이 46조 6,846억원(64.2%)

- 고령사회 분야 예산은 25조 9,953억원(35.8%)
- 저출산 분야 현금성 직접지원(육아휴직급여, 출산휴가급여, 아동수당 등)의 예산은 6조 1,791억원
- 저출산 분야 서비스 직접지원(영유아보육료, 누리과정 등)의 예산은 11조 4,57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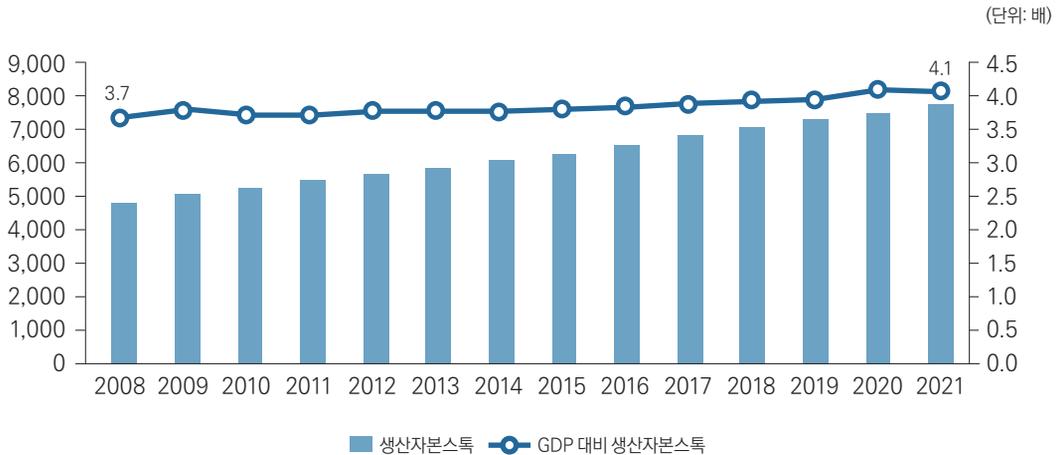
제2절 자본: 저탄소경제¹⁰⁶

1. 국민계정 상 자본과 저탄소경제

■ 국민경제 생산함수의 자본투입은 국민계정 생산자본스톡에서 확인

- 국민경제 생산함수는 노동투입, 자본투입 및 생산성의 함수관계로 표현할 수 있음¹⁰⁷
- 자본투입은 국민계정의 생산자본스톡을 이용하며 저탄소경제는 향후 생산자본스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음
 -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투자로 인해 기존 자산이 좌초자산이 되고, 신규 저탄소 기술 투자가 발생하므로 이를 생산자본스톡¹⁰⁸으로 반영
- GDP 대비 생산자본스톡은 2008년 3.7배에서 2021년 4.1배로 증가하였으며, 향후 탄소중립 투자방향에 따른 생산자본스톡의 변화를 검토할 필요¹⁰⁹

[그림 II-89] GDP 대비 생산자본스톡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국민대차대조표

106) 저탄소경제는 온실가스배출량을 줄이기위해 에너지공급·이용·소비에 저탄소기술을 이용하도록 하는 정책분야를 의미하며, 저탄소 경제구조 전환과정에서 기존자산이 좌초자산이 되며 대체투자가 일어나는 등 경제 전반에 파급효과가 있으므로 생산·분배·지출 등 개별 부문 외에 별도의 부문인 성장부문으로 분류·정리

107) $Y = A(t) \cdot f(X, L, K)$
 Y, X, L, K, A 는 산출량, 중간투입, 노동투입, 자본투입, 생산성을 각각 의미

108) 생산자본스톡은 시간 경과에 따른 자본재의 생산능력(효율)하락을 반영한 평가액으로 자산의 폐기액과 생산능력 저하분을 모두 제하므로 생산성 분석에 사용됨

109) 박호정(2021)은 탄소중립정책을 자본축적의 장기적·동태적 관계에서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자료: 박호정, “탄소중립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양립하는가?” 「자원·환경경제연구」, 제30권 제2호, 2021)

■ 저탄소경제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경제구조를 전환하는 정책

- 탄소중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함
 -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저탄소 경제구조, 저탄소 에너지 공급과 소비,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함
- 국가 에너지기후정책의 중장기 비전으로 온실가스배출량과 경제성장의 탈동조화를 추구
 - ※ 탄소중립(carbon-neutral)은 경제활동으로 배출되는 탄소의 양이 전혀 없는 상태

■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제출하여 국제사회에 탄소중립을 선언

- 2021년 유엔에 제출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장기 비전과 국가전략을 포함
 -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 및 대외수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제 체제하에서도 전 지구적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2030년까지 2017년 온실가스배출량(709.1백만톤 CO₂eq) 대비 24.4%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수립
- ※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은 파리협정 4조19항에 따라 모든 회원국이 제출

■ 탄소중립 목표를 국가경제의 성장과 연계하기 위한 저탄소 정책 필요

- 탄소중립은 저탄소 에너지 공급뿐 아니라 관련 산업구조와 수송방식, 발전시스템, 건물 에너지 등 경제 전반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음
- 국내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이 대부분 저탄소 전략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장 여건을 확보하는 정책이 필요
 - 탄소중립 정책은 국가 규모의 장기적인 자본축적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고려하여 성장자본을 확충하는 전략으로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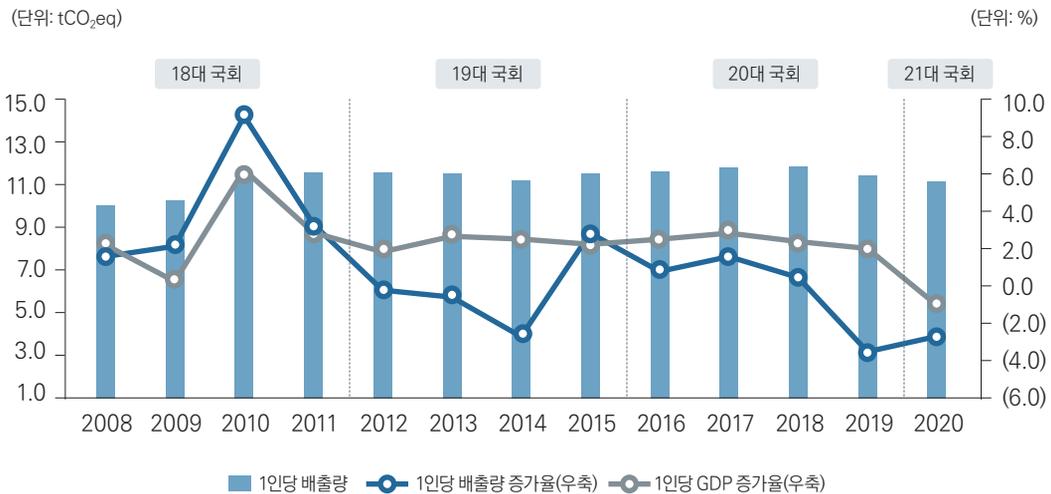
2. 저탄소경제 관련 주요 지표

가. 온실가스배출량과 경제성장

- 온실가스배출량은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6개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를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환산한 배출총량

(1) 현황

[그림 II-90] 온실가스배출량과 GDP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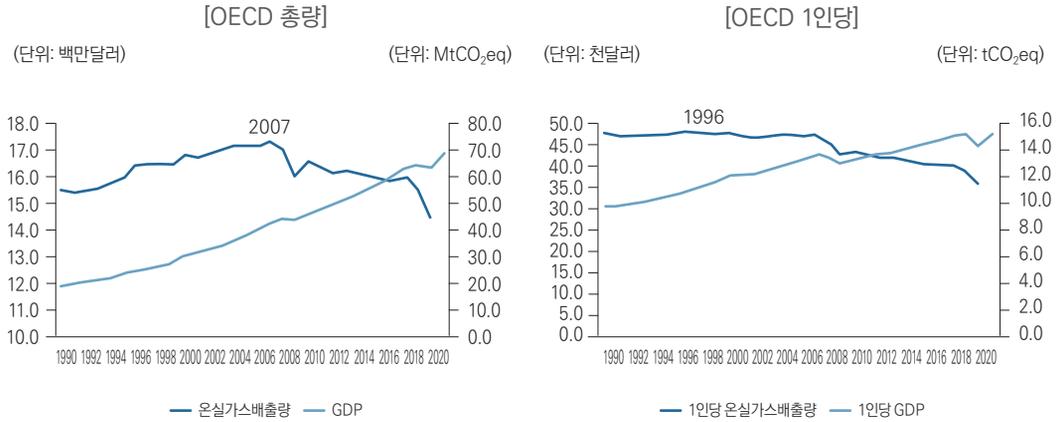
자료: OECD database

■ 온실가스배출량 증가율은 2011년 이후 GDP 증가율을 하회

-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보다 온실가스배출량 증가율이 낮은 약한 탈동조화 단계에 들어섰으나, 여전히 경제규모에 비해 온실가스배출량이 많은 상황
 - 2010년까지는 온실가스배출량 증가율이 GDP증가율보다 높았으나, 2011년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 이후에는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
-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별개로 온실가스배출량이 연평균 4.2% 감소해야함

(2) 비교

[그림 II-91] OECD국가의 온실가스배출량과 GDP 변화



자료: OECD database

■ 우리나라와 달리 OECD 주요국의 온실가스배출량은 감소하는 추세

- OECD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은 1990년 대비 2.6배 상승하였으나, 온실가스배출량은 2007년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7년 배출량은 1990년 수준
 - 경제는 성장하고 있지만 온실가스 총배출량과 1인당 배출량은 모두 감소하는 추세
-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한 국가 중 우리나라의 연평균 감축률이 가장 높음
 - EU는 매년 1.98%를 감축해야하며, 영국과 미국은 2.81%, 일본은 3.56%를 감축한다고 발표했으며, 우리나라의 감축목표는 연평균 4.17%

[표 II-19] 주요국의 연도별 온실가스배출량과 연평균 감축률

국가	연도	연도별 배출량(백만톤CO ₂ eq)					연평균 감축률(%)
		1990	2005	2013	2018	2030 (NDC목표)	기준연도 → 2030년
EU		5,648.0	5,240.0	4,477.1	4,224.4	2,541.6	1.98
영국		797.8	695.4	570.2	465.9	255.3	2.81
미국		6,437.0	7,391.8	6,769.6	6,676.6	3,622.0	2.81
캐나다		603.2	729.7	720.9	729.3	419.6	2.19
일본		1,270.0	1,378.8	1,407.8	1,238.3	760.2	3.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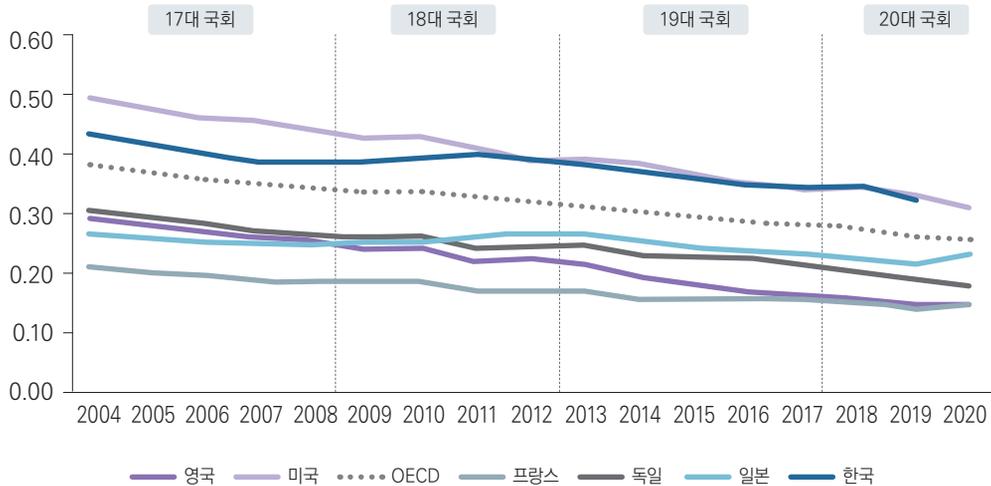
자료: 2050 탄소중립위원회 토론회, 2021.10.8.

나. 탄소집약도

- **탄소집약도**는 1인당 GDP 대비 온실가스배출량을 의미
 - 탄소집약도는 동일한 부가가치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온실가스배출량으로, 탄소집약도가 낮을수록 저탄소경제 및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를 의미

(1) 현황

[그림 II-92] 탄소집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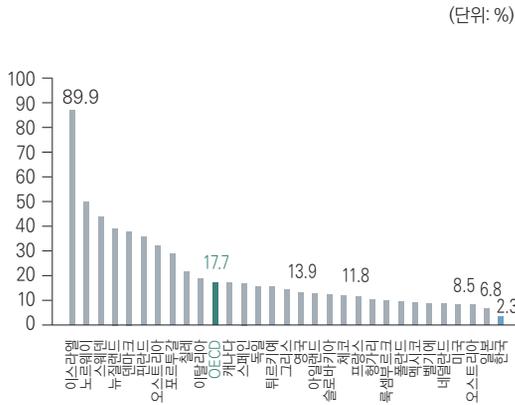
주: 한국의 2020년 데이터는 OECD 통계에 업데이트되지 않음
 자료: OECD database

■ 우리나라 탄소집약도는 주요 OECD국가 중 미국과 함께 가장 높음

- 2019년 한국의 탄소집약도는 0.33으로 미국(0.33), OECD 평균(0.26), 일본(0.22), 독일(0.19)보다 높은 수준
- 2010년까지는 미국의 탄소집약도가 한국보다 명확히 높았으나 2011년 이후 한국과 미국의 탄소집약도가 유사해짐
 - 탄소집약도의 변화를 통해 저탄소 기술 확산 및 산업구조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데, 주요국의 탄소집약도가 한국보다 빨리 낮아지고 있음
 - 탄소집약도변화(2008년 → 2019년): OECD(0.32 → 0.26), 미국(0.39 → 0.33), 영국(0.26 → 0.15), 독일(0.27 → 0.19), 일본(0.25 → 0.22), 한국(0.35 → 0.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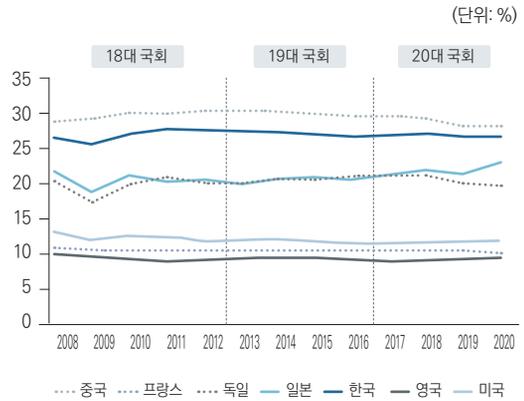
(2) 비교

[그림 II-93] 1차 에너지 중 재생에너지 비중



자료: OECD

[그림 II-94]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자료: UN statistics

■ 에너지 공급 및 소비구조에 저탄소경제 비중이 낮음

- 우리나라의 에너지 공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평균(17.7%)에 미치지 못함
 - 2020년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2.3%)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차하위인 일본(6.8%)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며, 독일(16.4%), 프랑스(11.8%), 미국(8.5%)과 차이가 큰 편
- 2018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중국을 제외하고 독일, 일본, 미국, 프랑스 등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
 - 업종별 탄소집약도는 1차금속 제조업(2012년 3.6 → 2018년 4.2), 비금속광물제조업,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제조업 순으로 높음
 -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국가 중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이 가장 높음

3. 대한민국 저탄소경제 정책

가. 법·제도

■ (법적근거)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하기 위해 기본법을 제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최상위 법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
- 탄소중립 이행을 국가비전으로 설정(제7조)하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제8조), 이행전략(제7조), 이행주체(제15조), 재원(제69조) 등 법적근거를 제공
 -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를 기존 목표(2017년 대비 24.4% 감축)보다 상향하여 법제화

■ (법정계획) 탄소중립 목표를 에너지계획과 에너지원별 이행계획에 반영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통해 부문별 탄소중립 이행방안을 제시
-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수송 등 각 분야의 법정계획을 수립
 - 에너지 공급 및 소비에 대한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19~2040)」과 저탄소전략 이행을 위한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예정)」이 있음

[표 II-20]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법정계획

계획	주요 법정계획	차기계획 수립년도	주관부서
기본계획	「제4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2021~2040)」	2026년	지속가능위원회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19~2040)」	2024년	산업부
	「제2차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2019~2040)」	2024년	환경부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예정)」	2022년	환경부
이행계획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	2022년	산업부
	「제10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2020~2034)」	2025년	산업부
	「제2차 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2021~2050)」	2026년	산업부
	「제3차 국가배출권 할당계획(2021~2025)」	2024년	환경부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25)」	2026년	산업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정리

나. 주요 정책

■ (정책목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기반과 저탄소경제구조를 마련¹¹⁰

-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 에너지 효율의 혁신적인 향상
- 탄소 제거 등 미래기술의 상용화
- 순환경제 확대로 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 탄소 흡수수단 강화

■ (정책수단) 법정계획과 재정지출, 기후금융, 배출권거래제 등을 이용

- 법정계획을 통해 연도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할 뿐 아니라, 지역에너지계획을 통해 지역별 온실가스 감축 현황을 점검
 - 산업·수송·건물·발전부문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통해 저탄소에너지원을 공급하고, 차세대 저탄소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방향을 설정
-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공정전환, 녹색금융 및 제도적 기반마련 등에 11.4 조원의 재정투자과 관련 제도를 구축
 - 기후대응기금(2.4조원)을 신설하여 탄소감축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세제·부담금·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배출에 비용을 부과하여 탄소배출량이 많을수록 비용이 증가하는 제도를 활용
- 온실가스배출권의 유상할당금, 내연기관차 규제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행조치를 시행
 - 산업부문과 발전부문은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총 배출량을 규제하며, 수송부문은 내연기관차 규제의 영향을 받음
- 녹색금융을 활성화 하고 민간부문의 ESG 경영 및 저탄소 투자를 촉진
 - 정부는 K-ESG 가이드라인*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마련하여 녹색 투자를 위한 기반을 조성

※ K-ESG 가이드라인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정보공시 방식과 범위, 환경경영 목표 및 추진체계, 친환경 인증, 사회책임경영 목표, 윤리경영, 지배구조 관련 지표로 산업부 발표(2021.12)

※ 녹색분류체계는 친환경 산업의 기준을 제시하여 녹색금융자금이 유입되도록 기준을 제시함

110) 「2050 장기저탄소 발전전략」의 '탄소중립 기본방향'을 정리

4. 저탄소경제 정책과 재정

[표 II-21] 저탄소경제 분야 예산 및 예산안

(단위: 십억원, 개)

	2020		2021		2022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A)	예산안(B)	증감(B-A)	사업수
경제구조 저탄소화	2,962	3,530	5,219	5,222	8,176	2,954	135
신유망 저탄소 생태계	316	439	641	737	855	118	71
취약계층·산업·지역의 공정한 전환	284	284	281	281	552	271	21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35	966	1,574	1,600	2,289	690	177
계	4,298	5,219	7,715	7,840	11,872	4,033	40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도 예산안 총괄분석II」, 2021, p.134

■ 2022년도 저탄소경제 분야 예산은 11.9조원으로 계획

- 저탄소경제 분야의 주요 사업은 경제구조 저탄소화(8.2조, 68.9%), 신유망·저탄소 생태계(0.8조, 7.2%), 취약계층·산업·지역의 공정한 전환(0.5조, 4.6%),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강화(2.3조, 19.3%) 등으로 구성
 - 경제구조 저탄소화 관련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중소기업기업 감축설비 지원, 무공해차 보급확대,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등을 포함
 - 신유망·저탄소 생태계 분야의 사업으로는 CCU 생산기술 실증사업과 중소기업 유망기업 사업화 지원, 폐플라스틱 공공 열분해 시설 설치 등이 있음
- 부처별로는 환경부(4.2조원), 산업통상자원부(2.8조원), 기획재정부(2.4조원), 교육부(0.6조원), 국토교통부(0.5조원) 등 13개 부처에서 담당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1.4조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3.6조원), 기후대응기금(2.4조원), 전력산업기반기금(1.8조원), 환경개선특별회계(1.4조원) 등으로 구성

■ ‘2023년도 예산안’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시행¹¹¹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1년 5월에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도입 및 시행이 명문화
-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온실가스 감축 기대효과와 성과목표 등의 내용을 포함

111) 국회예산정책처, 「2022 대한민국 재정」, 2022, p.1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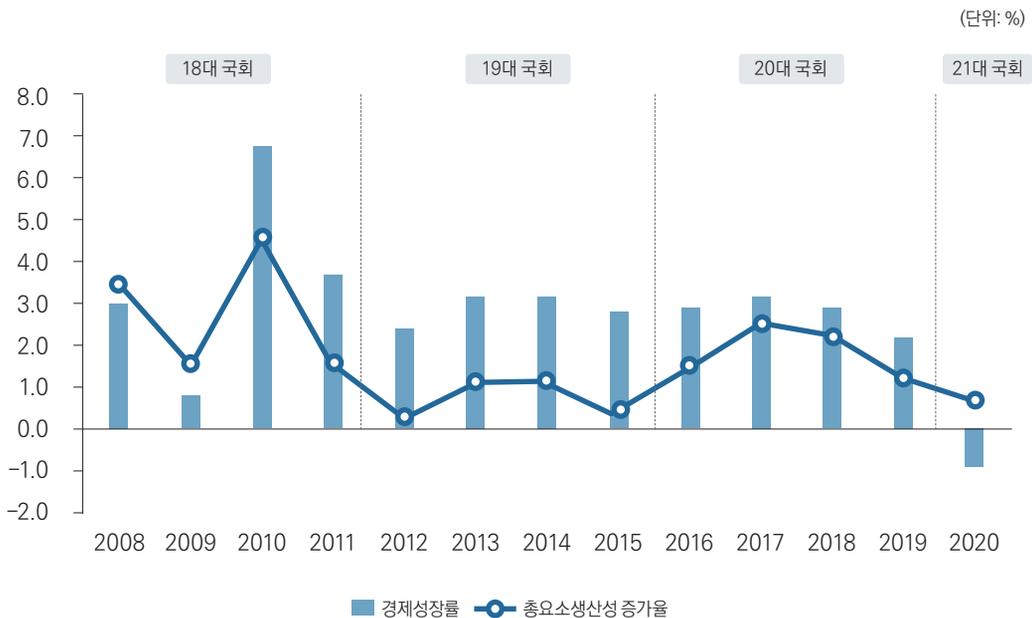
제3절 총요소생산성: 과학기술 정책¹¹²

1. 국민계정 상 총요소생산성과 과학기술

■ 과학기술 투자는 총요소생산성 증가를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¹¹³

- 경제성장률은 크게 노동과 자본의 요소투입과 생산성의 증가로 구분
 - 총요소생산성은 전체 생산성에서 노동과 자본 투입의 직접적인 기여분을 제외한 생산성의 증가분을 의미
- 내생적 성장이론에 따르면 총요소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장 대표적 수단은 과학기술 (연구개발) 투자
 - 총요소생산성의 증가는 궁극적으로 기술혁신에 의해서 가능한데 기술혁신은 과학기술 (연구개발) 투자의 결과로 이루어지기 때문

[그림 II-95] 총요소생산성과 경제성장



자료: OECD, 한국은행

112) 과학기술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혁신을 창출하는 경제활동이며 내생성장이론에 의하면 과학기술(연구개발)은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구성 요소. 과학기술은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경제구조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계정의 성장 부문에 분류

113) 하준경 이은석, "총요소생산성과 성장잠재력: OECD 국가들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거시적 분석," 「경제분석」, 제19권 제2호,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20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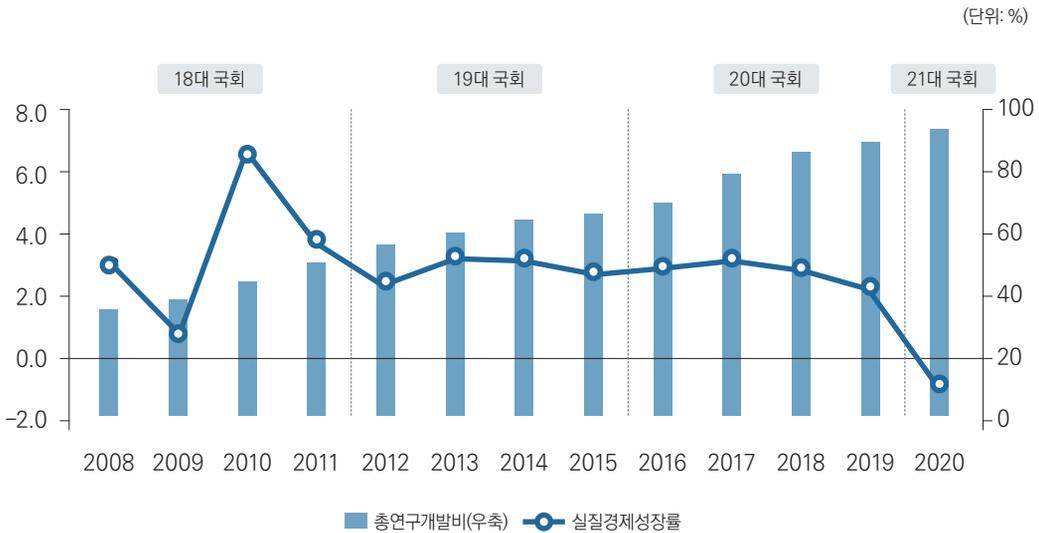
2. 과학기술 관련 주요 지표

가. 연구개발비와 경제성장

○ **연구개발비**는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거나 기존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창조적인 노력 및 탐구활동으로 상업화하기 이전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의 지출

(1) 현황

[그림 II-96] 실질 GDP증가율과 연구개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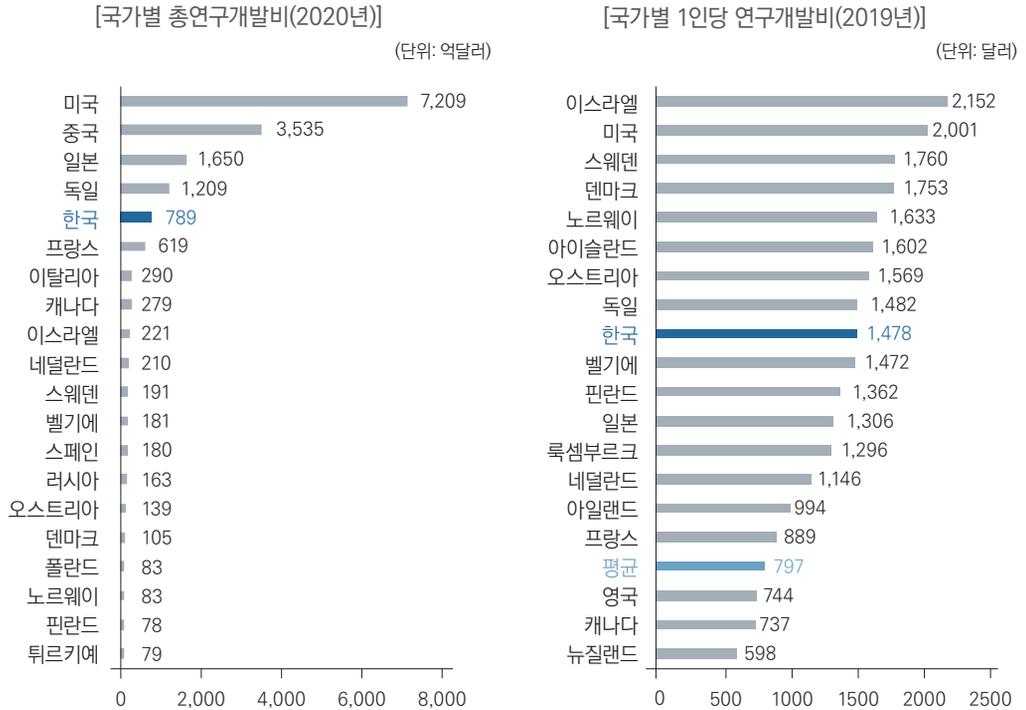
자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 경제성장률이 전반적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연구개발비는 증가 지속

- 연구개발비 지출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경쟁력 유지 및 개선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인으로 성장률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증가세
-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총연구개발비는 93조원 수준으로 2008년 대비 169.8% 증가

(2) 비교

[그림 II-97] 국가별 연구개발비와 1인당 연구개발비 비중



자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자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총연구개발비는 세계 5위 수준

- 2020년 기준 총 연구개발비 규모에서 우리나라를 앞선 국가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 반면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이스라엘 등의 연구개발비는 우리나라 연구개발비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 다만 우리나라와 수출경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중국, 일본 대비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 규모는 각각 1/5, 1/2 수준

■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연구개발비 수준은 세계 9위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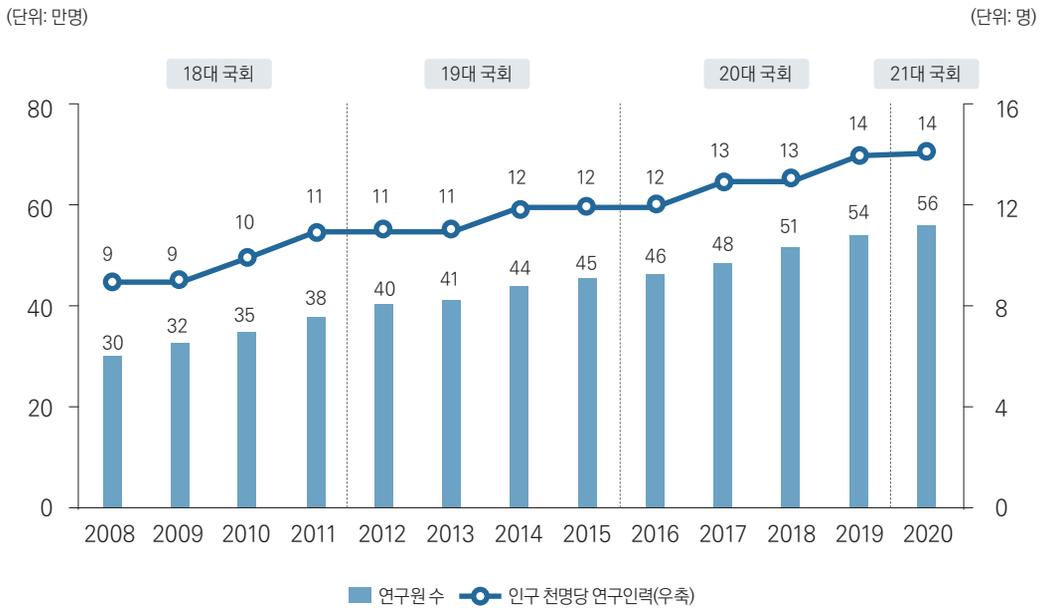
- 2019년 우리나라 인구 1인당 연구개발비 수준은 1,478달러로 이스라엘, 미국, 독일 대비 적은 수준이나 일본, 영국대비 높은 수준

나. 연구원 수

- **연구원**은 새로운 지식, 생산품, 처리공정, 방법론, 시스템의 고안과 창조에 종사하거나 직접적으로 프로젝트의 관리와 연관되어 있는 전문가
 -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 또는 동등 학위 이상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사람
 - 대학의 경우 연구참여 박사과정학생, 전임연구원, 전임강사 이상 교수

(1) 현황

[그림 II-98] 우리나라 연구원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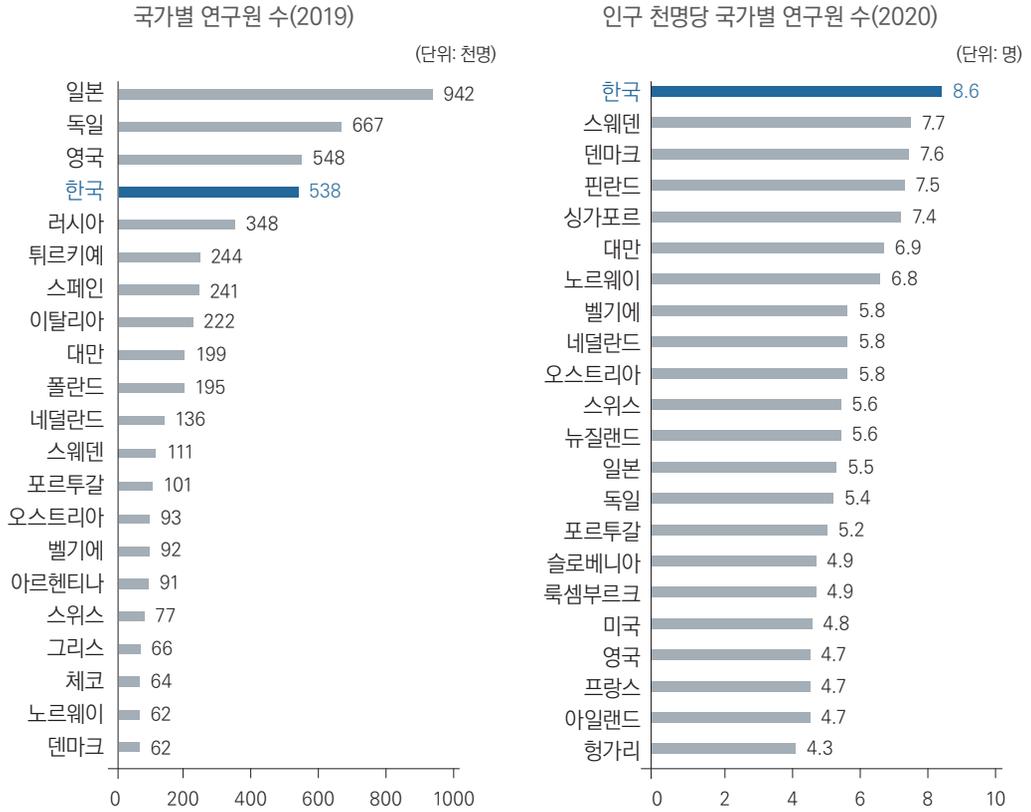
자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 우리나라 연구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 우리나라 총 연구원은 2008년 30만명 수준에서 2020년 56만명 수준으로 85.0% 증가
- 인구 천명당 연구원 수도 전반적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2008년 9명 수준에서 2020년 14명 수준으로 증가

(2) 비교

[그림 II-99] 국가별 연구원 수



자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주: 미국, 영국, 뉴질랜드, 스위스, 싱가포르는 2019년 기준
 자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연구원 수는 54만명 수준이며 세계 4위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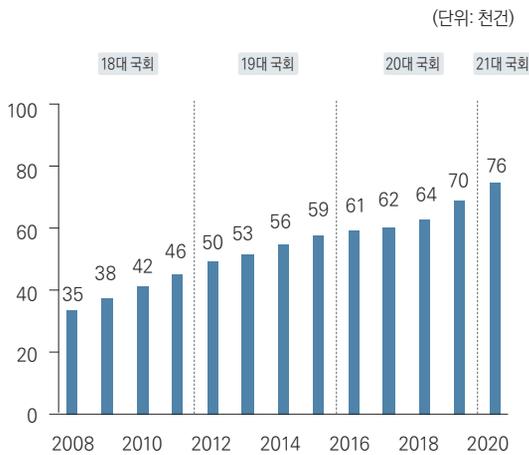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총 연구원 수는 일본, 독일, 영국에 이어 4위 수준
- 한편 2020년 기준 인구 천명당 연구원 수는 세계 최고 수준
 - 한국의 인구 천명당 연구원 수는 8.6명으로 스웨덴 7.7명, 대만 6.9명, 일본 5.5명, 미국 4.8명 대비 많은 수준

다. 논문 및 특허 수

- **논문 수와 특허 성과 지표**는 국가의 과학기술 수준을 정량화하여 측정하는 수단으로 활용
 - 논문 수는 과학기술분야 전반에 걸친 SCI 기반의 InCites와 SCI Web 데이터베이스 기반
 - 특허출원은 특허청에 특허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말하며 특허등록은 심사를 거쳐 특허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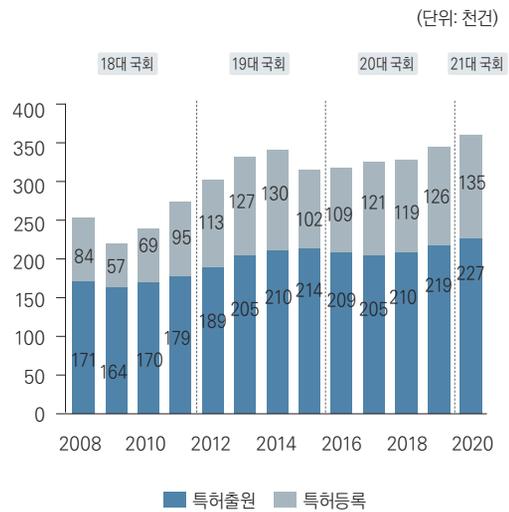
(1) 현황

[그림 II-100] 과학기술 논문 수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 논문성과 분석연구(2021)

[그림 II-101] 특허 수¹¹⁴



자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 한국 과학기술 분야 논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세

- 한국의 2020년 기준 과학기술 분야 논문 수는 76,408편으로 2008년 37,509편 대비 121.4% 증가
- 최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분야 논문 수 증가율이 상승세를 보임
 - 우리나라의 논문 수는 2016~2018년 연평균 3.0% 증가하였으나 2019~2020년 기간 연평균 8.9% 증가
 - 정부는 SCI논문을 과학기술 산출 평가의 주요 항목으로 활용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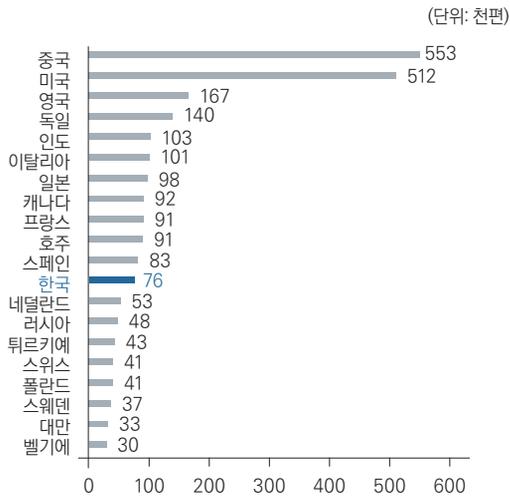
114) 특허출원은 특허청에 특허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말하며 특허등록은 심사를 거쳐 특허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을 의미

■ 한국 특허 수는 2015년 이후 증가세

-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을 합제한 특허 수는 2015년 31.6천건에서 2020년 36.2천건으로 14.6% 증가
- 동기간 특허출원은 21.4천건에서 22.7천건으로 6.1% 증가하였으며 특허등록은 10.2천건에서 13.5천건으로 32.3%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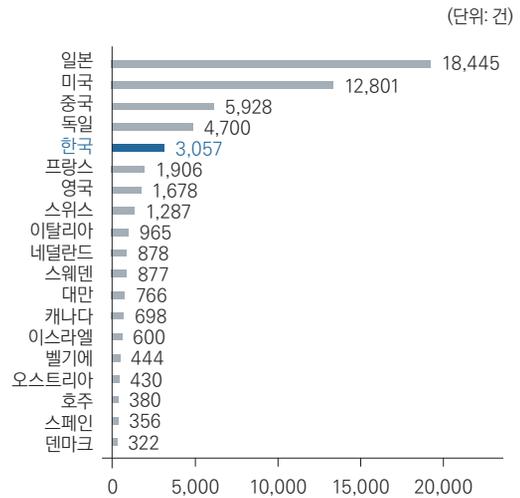
(2) 비교

[그림 II-102] 국가별 과학기술논문 발표 수(2020)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그림 II-103] 국가별 삼극특허¹¹⁵ 수(2019)



자료: OECD

■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논문 수 세계 순위는 12위

- 우리나라의 논문수는 국가별 논문 수 합계 3,156,404편의 2.42%를 점유
 - 한국의 세계 논문점유율은 2006년 2.24%에서 2016년 2.54%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7년 이후 2.4% 내외를 유지
- 한편 2019년 기준 한국의 삼극특허건 수는 세계 5위 수준
 - 2019년 우리나라 삼극특허건 수는 3,057건으로 일본(18,445건), 미국 (12,801건), 중국 (5,928건) 대비 적으나 프랑스, 영국 등 대비 많은 상황

115) 삼극특허(Triadic patent family): OECD에서 동일한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럽특허청(EPO), 일본특허청(JPO), 미국특허상표청(USPTO)에 출원된 특허 수로 정의

3. 대한민국 과학기술 정책

■ 과학기술정책은 정부의 과학기술, 혁신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을 의미

- 과학기술정책은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부가 과학과 기술, 기술혁신 과정에 개입 혹은 회피하는 일련의 활동을 나타냄¹¹⁶
 - 최근 과학기술정책은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술혁신은 경제, 사회분야로 정책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 또한 최근 들어 과학기술 정책수단들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며, 여러 정책분야와 연계성도 강화되는 추세

■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서 과학기술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인으로 부각

- 연구개발은 한 국가가 혁신주도형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
-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등 글로벌 환경 변화는 삶의 질과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는 상황
 - 또한 국가 간 발전 격차나 사회적 빈부 격차 등의 갈등과 각종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하는 과제를 제기

■ 이에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현황과 방향성을 점검할 필요

- 생산성 및 성장 동력 저하, 고용창출력 약화 등에서 기인한 한국 경제 위기와 전 세계적 저성장 상황에서 연구개발 역량 강화가 필요
-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기술경쟁력 확보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미래성장동력 분야 육성을 위해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이 중요
 - 지구 기후변화, 감염병의 확산 등 국가적 난제에 대응하여 과학기술(R&D)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정립도 필요한 시점

116) 이장재·현병환·최영훈(2011)

4. 과학기술 정책의 주요 내용

가. 법·제도

■ (법적근거)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을 기반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

- 「과학기술기본법」제4조에서 ‘국가는 과학기술혁신과 이를 통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
- 동법 제5조에서는 ‘정부가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문제 해결 등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창의적 연구개발과 개방형 과학기술혁신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 할 것을 규정
- 또한 동법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시행령 제3조~제5조에 따라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
 -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 설정·공표
 -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 (법정계획) 과학기술기본계획은 5년 단위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법정계획

- 5년 기간의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비전, 목표, 방향 등을 제시하는 중장기 발전전략
 - 기본계획에서는 연구개발, 성과확산, 인력양성, 국제협력, 지역혁신, 제도개선, 과학문화 등 과학기술정책 전반의 방향성을 제시
- 또한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수립

나. 주요 정책¹¹⁷

■ (정책계획) 정부는 2018년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

-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과학기술의 중장기 비전과 미래 모습을 제안
 - 또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 19대 중점추진과제, 70개 세부추진과제, 120개 중점과학기술을 제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년마다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을 수립

1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 2018.2

- 또한 산업·인력·지역 등 과학기술혁신과 관련된 분야별 정책의 추진방향, 현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 등의 기본계획을 수립

■ (정책방향)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정책방향은 혁신적 연구개발 등

-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는 연구개발
 - 정부 R&D 시스템을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문제해결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주력
- 활발한 혁신생태계 조성
 - 주체 간, 분야 간 융합과 협력을 활성화하고 도전과 성장이 활발히 일어나는 혁신생태계 조성
-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 가속
 - 주력산업을 이어갈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 등
- 삶의 질 향상과 인류문제해결에 기여 확대

■ (4대 전략)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전략은 과학기술역량 확충 등

- 미래도전을 위한 과학기술역량 확충
 - 연구자들이 파괴적 혁신을 이끌어낼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 및 관리제도를 혁신
-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는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우수한 지식재산이 창출되고 연구결과가 성장동력 창출과 사업화로 신속히 연결될 수 있는 체계 구축 등
-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신산업·일자리 창출
 - 4차 산업혁명 대비라는 국가적 당면과제에 적극 대처하고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미래성장동력 육성 등
- 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 구현
 - 국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삶을 위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ICT 기반의 융합기술과 서비스를 확산

다. 과학기술(연구개발) 정책과 재정¹¹⁸

- **정부연구개발예산**은 다양한 관점에서 개념정의가 존재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새로운 지식축적과 기술혁신을 촉진하는데 지원하는 예산'을 의미

[표 II-22] 2022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일반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2022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A)	B-A	(B-A)/A
전체R&D사업	241,064	274,005	275,131	297,770	297,770	22,639	8.2
주요R&D사업	196,695	224,894	226,020	242,363	242,363	16,343	7.2
일반R&D사업	44,369	49,112	49,112	55,407	55,407	6,296	12.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2 대한민국 재정」, 2022.4.7., p.157

■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은 29조 7,770억원 수준

- 한국판 뉴딜, 미래주력산업, 프론티어형 전략기술, 도전적 기초 연구 등 미래산업 선도적 지원의 도약을 위한 전략 R&D투자를 확대
 - 이를 위해 10대 중점 투자분야에 전년대비 1.4조원이 증가한 12.8조원
- 주요R&D사업은 24조 2,363억원, 일반R&D사업은 5조 5,407억원 수준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¹¹⁹ 21조 4,752억원, 특별회계¹²⁰ 5조 7,655억원, 기금 2조 5,333억원이 편성

118) 국회예산정책처, 「2022 대한민국 재정」, 2022.4.7.

119) 일반회계는 국가가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처리하는 회계를 의미하며 특별회계와 구별되어 일반적 국가활동에 관한 세입·세출을 포괄하는 회계이며 정부회계의 기간

120) 특별회계는 특정의 수입·지출을 구분하여 경리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독립시킨 회계단위로 일반회계에 상대되는 개념

Economic Overview of the Republic of Korea 2022



[그림 II-104] 금융·통화 관련 주요 현안과 경제지표

구분	현안	경제지표
통화	➤ (1) 금리	➤ ◦ 기준금리
	➤ (2) 통화	➤ ◦ 통화증가율 ◦ 통화승수
	➤ (3) 물가	➤ ◦ 소비자물가 상승률
금융시장: 금융건전성	➤ (1) 신용	➤ ◦ 민간신용 ◦ 가계신용 ◦ 기업부채
	➤ (2) 외환	➤ ◦ 외환보유액 ◦ 단기외채비율
	➤ (3) 시장	➤ ◦ 주가 ◦ 국고채금리
정책금융	➤ (1) 정책금융 공급	➤ ◦ GDP와 정책금융 공급 잔액
	➤ (2) 기업 및 가계 대출	➤ ◦ 중소기업 및 주택금융 공급 ◦ 기업 및 가계대출 금리
	➤ (3) 금융발전과 정책금융	➤ ◦ 우리나라 발전과 정책금융 ◦ 주요국 실물·금융 발전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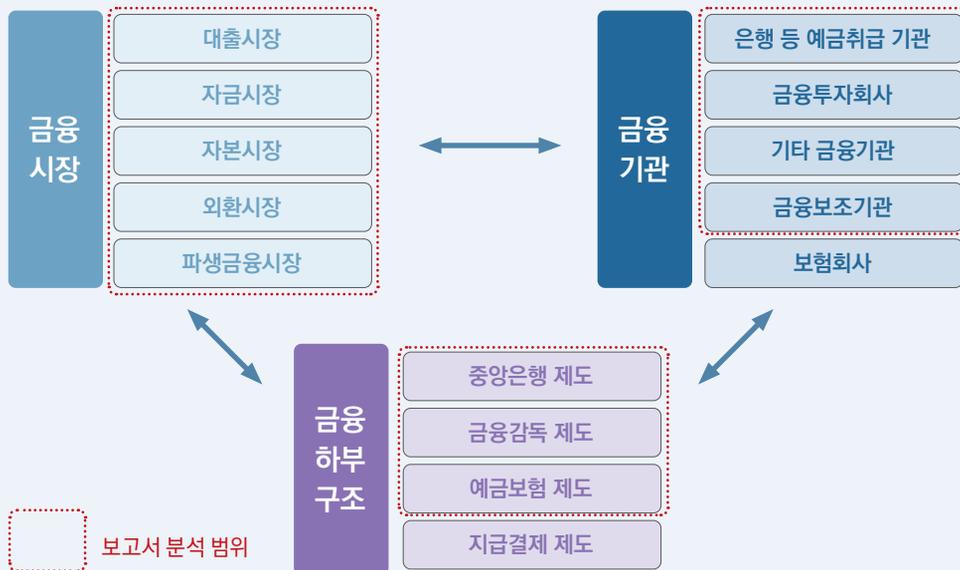
○ 금융시스템은 금융시장, 금융기관, 금융하부구조로 구성

- 금융시장은 대출시장, 단기금융시장¹²¹, 자본시장, 외환시장, 파생금융시장으로 구분 가능
- 금융기관은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기타 금융기관, 금융보조기관 등으로 분류 가능
- 금융하부구조는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이 본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토대를 의미
 - 금융규제 및 감독제도, 금융안전망, 지급결제시스템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

○ 통화·금융부문은 금융시스템의 전반을 다루나 지급결제 제도 등은 제외

- 금융시장은 대출시장, 자금시장, 자본시장, 외환시장, 파생금융시장 전반을 분석 범위에 포괄
- 금융기관은 예금취급 기관, 금융투자회사, 정책금융기관이 포함된 기타 금융기관 등을 분석 범위에 포괄하나 생명·손해 보험사는 분석 범위에 미포함
- 금융하부구조의 경우 중앙은행 제도, 금융감독 제도, 예금보험 제도 등이 분석범위에 포함
 - 다만 지급결제 제도는 지급결제 관련 금융망의 성격이 크고 여타 통화·금융 부문과의 연계성이 낮아 분석범위에 미포함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구조와 보고서의 분석 범위¹²²]



121) 콜시장, 한국은행 환매조건부증권매매시장, 환매조건부증권매매시장, 양도성예금증서시장, 기업어음시장 등이 자금시장에 해당

122) 1절과 2절은 금융시장, 금융하부구조를, 3절에서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주로 설명

○ 통화·금융부문은 통화정책, 금융건전성 정책, 정책금융으로 구성

- 통화·금융부문은 국민계정에 따른 부문별 분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경제성장 또는 경기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통화정책, 금융건전성 정책으로 구성
 - 통화정책을 통해 중앙은행은 통화량, 금리 등을 조절하여 물가·경기·금융안정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경제발전에 기여
 - 금융건전성 정책을 통해 금융당국은 개별 금융기관의 미시적 건전성, 전체 금융시장의 거시적 건전성을 관리하고 정책금융을 통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지원

○ 통화부문의 현안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 최근의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수요측 충격과 공급측 충격이 모두 물가상방압력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주요국 중앙은행은 정책금리 인상 등의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대응
 - (수요측 충격)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속되었던 저금리 기조, 코로나19 관련 규제의 완화에 따른 경제활동 정상화 등
 - (공급측 충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인상과 중국의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봉쇄조치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 등
 - 2022년 6월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미국 9.1%, 유로 8.6%, 한국 6.0%

○ 금융부문의 현안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건전성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글로벌 인플레이션, 중국의 경제둔화 등에 따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시중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 가계 등의 건전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존재
 - 기준금리 인상 추이(2021년 12월 대비 2022년 6월): 한국 1.00% → 1.75%, 미국 0%~0.25% → 1.5~1.75%

제1절 금융인프라: 통화¹²³

1. 국민계정 상 통화

■ 통화의 흐름은 국민계정의 자금순환표를 통해 확인 가능

- 자금순환표는 실물경제활동을 통한 자금의 잉여 및 부족,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의 조달·운용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전체 경제부문별 운용금액의 합계와 조달금액의 합계는 동일
 - 자금순환표 중 일정기간 각 경제부문의 자금 조달·운용 상황을 보여주는 유량 지표인 금융거래표를 통해 경제부문별 자금의 조달·운용을 확인 가능
- 경제부문별(비금융법인, 금융법인, 일반정부, 가계 및 비영리단체, 국외)로 항목별(현금 및 예금, 채권,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대출금, 정부용자, 보험 및 연금준비금, 직접투자 등) 자금의 조달·운용 확인이 가능
 - 비금융법인은 채권, 대출금,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등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여 현금 및 예금 등으로 운용
 - 가계 및 비영리 단체는 대출금을 통한 자본조달이 가장 크며, 현금 및 예금,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등으로 운용

[표 II-23] 2021년 금융거래표(잠정치)

(단위: 조원)

구분	비금융법인		금융법인		일반정부		가계 및 비영리단체		국외	
	운용	조달	운용	조달	운용	조달	운용	조달	운용	조달
합계	268.8	335.1	734.6	716.2	129.4	140.5	340.3	193.3	118.2	206.1
현금 및 예금	125.5	-	91.5	410.7	27.8	12.9	173.7	-	5.1	-
채권	14.2	34.7	148.3	84.7	31.6	117.4	-29.7	-	83.8	11.5
대출금	-	174.3	383.5	18.4	-	2.8	-	189.6	2.1	0.6
지분증권및 투자펀드	48.6	63.2	90.5	120.8	22.0	0.9	118.6	-	-16.7	78.2
기타항목	80.4	63	20.8	81.6	47.9	6.4	77.6	3.9	44	115.9

주: 기타항목은 정부용자, 보험 및 연금 준비금, 직접투자, 기타 대외 채권채무, 기타금융자산부채, 기타(금과 SDRs, 파생금융상품, 상거래신용)로 구성
 자료: 한국은행

123) 통화정책은 통화량·금리 조절 등을 통하여 생산·분배·지출 등의 개별 부문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들과 별도의 부문인 통화·금융부문으로 분류·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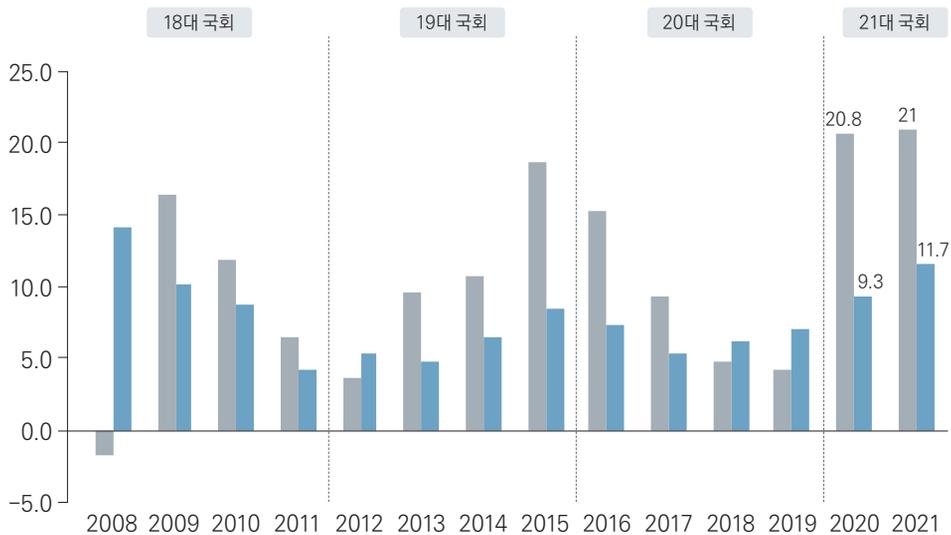
2. 통화정책의 주요 지표

가. 통화증가율

- **통화량**은 경제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을 의미하며, 포함되는 화폐의 종류에 따라 M0, M1, M2, LF 등으로 분류
 - M0(본원통화)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화폐발행액과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으로 구성
 - M1(협의통화)은 현금통화,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으로 구성
 - M2(광의통화)는 M1, MMF, 2년 미만 정기예적금, 금융채, 금융신탁 등으로 구성
 - LF(금융기관 유동성)는 M2, 2년 이상 정기예적금 및 금융채, 생명보험회사 계약준비금, 증권회사 예수금 등으로 구성

[그림 II-105] 통화량 증가율(M1, M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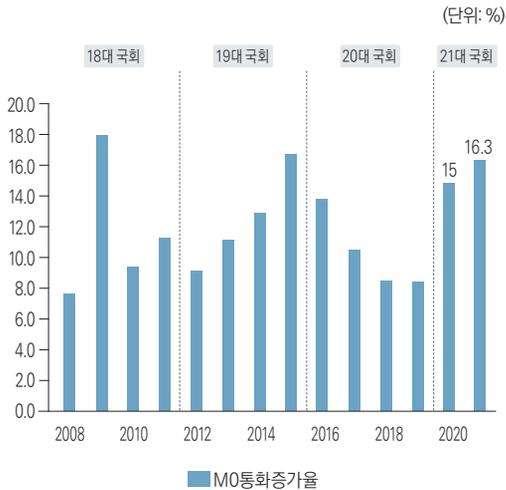
(단위: %)



자료: 한국은행 ECOS

■ M1 통화증가율 ■ M2 통화증가율

[그림 II-106] 본원통화 증가율



[그림 II-107] 금융기관 유동성



자료: 한국은행 EC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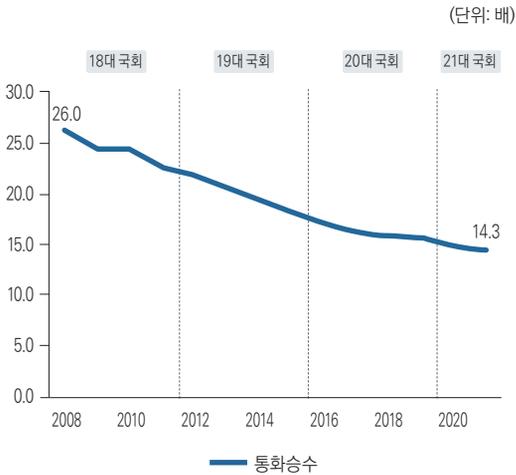
■ 2021년 M1통화 증가율은 21%, M2통화 증가율은 11.7%를 기록

- 2009년부터 2019년까지 M1통화 증가율은 16.3%에서 4.3%, M2통화 증가율은 10.3%에서 7%까지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와 같은 확장적 통화정책의 영향 등으로 2020~2021년 M1통화 증가율은 각각 20.8%, 21%, M2통화 증가율은 9.3%, 11.7%를 기록
 - 본원통화와 금융기관 유동성의 2020~2021년 증가율 역시 이전보다 높은 15%와 16.3%, 8.3%와 9.8%를 기록
 - 2021년 기준 통화량(평균, 원계열)은 M0통화 239.4조원, M1통화 1281.6조원, M2통화 3430.4조원, LF 4733.3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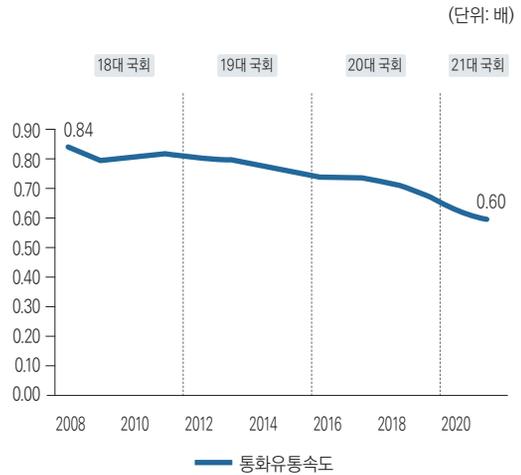
나. 통화승수와 통화유통속도

- **통화승수**는 통화량을 본원통화로 나눈 값으로, 중앙은행의 본원통화 공급을 통해 경제에 창출되는 통화량을 나타내는 지표
 - 일반적으로 M2(광의통화)를 본원통화로 나누어 산출
- **통화유통속도**는 명목GDP를 M2로 나눈 값으로, 통화가 상품, 서비스 생산에 사용된 횟수를 나타내는 지표

[그림 II-108] 통화승수



[그림 II-109] 통화유통속도



자료: 한국은행 ECOS

■ 통화승수는 2008년 26.0에서 2021년 14.3까지 지속적으로 하락

- 통화승수의 하락은 경제주체의 현금보유성향이 강화되고 신용창출이 과거보다 활발히 이뤄지지 않는 것을 의미

■ 통화유통속도 역시 2008년 0.84에서 2021년 0.60까지 점진적 하락추세

- 화폐유통속도의 하락은 시중의 자금이 소비, 투자 등에 사용되지 않고 금융부문에 머물러 있을 때 주로 발생

다. 기준금리

-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
 - 기준금리의 인상은 물가안정, 경기과열방지, 자산가격 과열방지 등을 위하여 활용되며, 기준금리의 인하는 물가하방압력, 경기침체 또는 경제성장세 둔화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짐

[그림 II-110] 한국은행 기준금리

(단위: %)



주: 한국은행 정책금리는 2008.2월까지의 콜금리, 2008.3월부터는 기준금리
 자료: 한국은행 ECOS

■ 2022년 6월 기준금리는 1.75%로, 2021년 8월부터 단계적으로 인상

- 한국은행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기준금리를 1.25%에서 0.5%로 인하
- 물가상방압력, 경기회복세, 미국 등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등으로 인해 2021년 8·11월, 2022년 1·4·5월 각각 0.25%p씩 인상
 - 기준금리의 인상은 물가상승압력 완화, 경기과열방지, 가계부채의 중장기적 조정 등에 기여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가계부채의 부담 증가, 기업투자 위축 등을 야기 가능¹²⁴

124) 2022.5.26.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0.25%p 인상 시 가계부담 3조, 기업부담 2.7조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라. 소비자물가상승률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소비자물가지수의 변화율로,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의 기초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하는 주요변수 중 하나
 - 소비자물가지수는 가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작성

[그림 II-111] 소비자물가상승률

(단위: 전년동월대비, %)



자료: 한국은행 ECOS

■ 2022년 6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0%로, 최근 높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되는 추세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경제활동 정상화, 중국 상하이 봉쇄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대란 장기화 등이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하면서 2022년 월별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은 1월 3.6%, 2월 3.7%, 3월 4.1%, 4월 4.8%, 5월 5.4%, 6월 6.0%를 기록

[그림 II-112] 근원물가지수상승률

(단위: 전년동월대비, %)



자료: 한국은행 ECOS

■ 물가변동의 장기적 추세 파악을 위해 활용되는 근원물가지수상승률 역시 상승세

- 근원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의 조사품목 중 계절적 영향을 받는 농산물과 외부 요인의 영향력이 큰 석유류 관련 품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물가변동의 장기적 추세 파악에 용이하나, 제외되는 품목으로 인해 체감물가와 일부 괴리 가능
 - 2022년 근원물가지수상승률(전월동월대비): 1월 2.6%, 2월 2.9%, 3월 2.9%, 4월 3.1%, 5월 4.1%, 6월 4.4%

3. 대한민국 통화정책

가. 통화정책 개요 및 필요성

■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으로 통화량·금리 등을 조절하여 물가안정·경제발전에 기여

- 중앙은행은 화폐의 독점적 발행권을 지니고 이를 기반으로 통화량, 금리 등을 조절하는 통화정책을 수행하며,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한국은행법」에 따라 독점적 화폐의 발행권을 지니고 기준금리 등 통화정책을 결정
 - 한국은행은 물가상승률, 경기상황, 금융여건, 세계경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결정하며, 2022년 6월 기준 기준금리는 1.75%

■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독립성 보유

- 물가안정 등을 위한 통화정책의 효과성은 민간의 기대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중앙은행은 외부로부터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하여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
 - 「한국은행법」 제3조는 한국은행의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의 예산과 달리 한국은행의 예산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¹²⁵⁾ 되고 기준금리 등 주요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 7인¹²⁶⁾ 중 정부 추천위원의 수는 2인¹²⁷⁾
- 독립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를 위해 한국은행은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의 대상이 되며, 매년 2회 이상 통화정책과 금융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한국은행 총재는 보고서와 관련된 국회의 요구 시 의무적으로 출석하여 답변

■ 통화정책은 물가안정, 금융안정, 경기안정 등의 기능을 수행

-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통한 물가안정은 경제의 효율적 자원배분, 기대인플레이션·장기금리·금융시장의 안정 등을 통하여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일조

125) 다만, 급여성 경비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이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126)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 부총재, 기획재정부장관 추천위원 1명, 한국은행 총재 추천위원 1명, 금융위원회 위원장 추천위원 1명,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위원 1명,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추천위원 1명으로 구성

127) 1998년 4월 이전까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9인 중 5인이 정부 추천위원이었음

- 중앙은행은 금융시장의 상황 및 통화정책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통화정책을 추진하고, 경기 침체 또는 과열에 대해 기준금리 인하 또는 인상 등의 통화정책으로 대응하여 경기 안정화에 기여 가능
 - 「한국은행법」 제1조는 한국은행이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 금융안정에 유의하도록 규정

나. 통화정책의 주요내용

(1) 물가안정목표제

■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하고 금리 중심의 통화정책을 운용

- 「한국은행법」 제6조는 한국은행이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를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준(전년동기 대비) 2%로 설정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해당 목표에 근접하도록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금리 중심의 통화정책을 운용
 - (물가안정목표제 도입배경) 과거 한국은행은 통화량을 관리하는 통화량목표제를 통해 물가안정을 추구하였으나, 통화량의 불안정성 확대, 통화량과 물가의 관계 약화, 물가안정의 중요성 강화 등에 따라 1998년부터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
 - (물가안정목표 설정근거)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중장기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 주요 선진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를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준(전년동기대비) 2%로 설정하고 적용기간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설명^{128 129}
 - (중기적 통화정책 운용) 한국은행은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해당 목표에 근접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하며, 이는 물가동향 외에 국내외 경제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통화정책을 신축적으로 수행함을 의미
- ※ 참고로 한국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기준금리를 1.25%에서 0.50%로 인하한 후, 경기회복세, 물가상승압력 등을 고려하여 2021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75%로 기준금리를 인상

128)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 설정」, 한국은행 보도자료(2018.12.26) 참고

129) 다만 예상치 못한 국내외 경제충격,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물가안정목표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정부와 협의를 통해 물가목표를 재설정하겠다는 입장임

- (기준금리 조정방식) 한국은행은 원칙적으로 연 8회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결정하되, 필요시 임시회의를 통해서도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으며, 기준금리의 조정은 콜금리, 시장금리 등의 변동으로 이어져 실물경제에 영향

※ 기준금리: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RP¹³⁰ 매매, 자금조정예금·대출¹³¹ 등의 거래에 있어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

- (커뮤니케이션)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가 통화정책을 신뢰할 경우 정책의 효과성도 증진되므로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의결문, 의사록 등을 공개하고 총재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준금리 결정사유 등을 설명

(2) 공개시장운영

■ 한국은행은 주로 공개시장운영을 활용하여 유동성을 조절

- 금융기관은 일반적으로 지급준비금의 과부족을 자금거래시장인 콜시장을 통해 해소하므로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 규모가 콜시장의 금리인 콜금리에 주로 영향을 미치며, 한국은행은 콜금리가 기준금리에 근접하도록 다음과 같은 방식의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유동성 조절
 - (통화안정증권)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의 발행 또는 환매를 통해 유동성을 흡수 또는 공급하며, 통화안정증권의 만기는 14일물부터 2년물까지로, 주로 중장기적 유동성 조절을 위해 활용
 - (증권매매) 단순매매와 RP매매 중 한국은행이 보유한 국채를 RP매매¹³² 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되며, 최장만기는 91일이나 7일물 중심으로 단기적 유동성 조절을 위해 사용
 - (통화안정계정)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한국은행 통화안정계정에 자금을 예치하도록 하여 단기 유동성을 조절하는 수단¹³³ 으로, 최장만기는 91일이나 28일물 중심으로 운용

130) 매도·매수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해당 증권을 매수·매도

131) 금융기관의 여유자금 또는 부족자금을 한국은행을 통해 예치 또는 차입하는 제도

132) RP매도(매입)를 통해 유동성을 흡수(공급)하고 다시 매입하여 유동성을 공급(흡수)

133) 통화안정계정 예치는 일반적으로 경쟁입찰로 이루어지나, 급격한 신용팽창 등의 경우 강제예치 가능

[표 II-24] 2017~2021년간 공개시장운영 수단별 실적

(단위: 조원,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통화안정증권 발행잔액	170.2	171.5	168.1	163.1	150.6
	(84.7)	(86.9)	(89.8)	(90.3)	(84.7)
증권매매 (RP매매)	14.4	12.8	10.5	8.0	17.9
	(7.1)	(6.5)	(5.6)	(4.4)	(10.0)
통화안정계정 예치잔액	16.4	13.0	8.7	9.5	9.3
	(8.2)	(6.6)	(4.6)	(5.3)	(5.2)

주: 평잔 기준, ()내는 비중
자료: 한국은행

(3) 여·수신제도

■ 한국은행은 여·수신제도를 통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유동성 공급·흡수

-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일중당좌대출, 특별대출, 자금조정대출·예금 등의 여·수신제도를 통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흡수
 -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역의 금융동향,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한도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실적 등을 토대로 금융기관에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
 - (일중당좌대출) 당일 영업시간에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지원하여 금융기관의 자금거래를 원활히 하는 제도로, 원칙적으로 이자부담은 없으나 금융기관의 지나친 의존 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을 25% 초과할 경우 이자 부과¹³⁴
 - (특별대출) 유동성이 악화된 금융기관,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한 영리기업 등에 한국은행이 최종대부자로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4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지원
 - (자금조정대출·예금) 금융기관의 부족자금 또는 여유자금을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받거나 한국은행에 예치하는 제도로, 기준금리에서 100bp를 가감하여 대출·예금금리를 결정¹³⁵

134) 3년물 국고채 수익률 - 콜금리(무담보 익일물)를 차감한 금리

135) 다만, 기준금리가 1% 미만인 경우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의 2배, 예금금리의 최저한도는 0%

[표 II-25]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 현황

(단위: 조원)

구분	기능	한도	금리	만기
무역금융지원	수출금융 지원	1.5	0.75	1개월
신성장·일자리지원	창업기업, 일자리창출기업 지원	13.0	0.75	"
중소기업대출안정화	중소기업 대상 신용공급,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동	0.3	0.75	"
지방중소기업지원	지방중소기업 지원	5.9	0.75	"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13.0	0.25	"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6.0	0.25	"
합계		39.8	-	-

주: 1) 2022년 5월 기준

2) 합계 39.8조원에는 한도유보분(0.1조원) 포함

자료: 한국은행

(4) 지급준비제도

■ 한국은행은 지급준비제도를 통해 유동성 조절과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

- 지급준비제도는 금융기관이 예금채무 등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지급준비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로,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의 자금부족으로 인한 콜시장에서의 수요 급증이 야기하는 콜금리의 급변을 지급준비금을 통해 방지하고¹³⁶ 지급준비율의 조절을 통해 유동성을 조절
- 한국은행은 예금채무, 일부 금융채에 대하여 지급준비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시장 중심적인 통화정책을 위해 주로 공개시장운동을 활용
 - (지급준비금 적립대상채무) 예금채무와 만기 2년 이하의 채권으로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저한 통화팽창기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동안 발행되는 금융채
 - (지급준비금 적립비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급준비금 적립비율(지급준비율)을 정하며, 2022년 6월 기준 장기주택마련저축, 재형저축은 0%,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은 2%, 기타예금은 7%이며, 지급준비율은 모든 금융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¹³⁷
 - (기타) 「한국은행법」 제55조는 지급준비금에 대해 필요한 경우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은행은 2022년 6월 기준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지급준비율에 미달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평균 부족액의 1/50에 해당하는 과태금을 부과

136) 이외에도 고객의 인출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을 보호하는 기능도 지님

137) 현저한 통화팽창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준비율의 상한은 50%

BOX 20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한국경제

■ 2022년 세계경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당면한 상황

- 미국, 유로 등 주요국은 2021년부터 물가상승률이 높아졌으며, 2022년은 물가상승폭이 더욱 높아진 상황

[주요국 물가상승률 추이]

(단위: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1분기	2022년 6월
한국	0.5	2.5	3.8	6.0
미국	1.2	4.7	8.0	9.1
유로	0.7	2.9	6.5	8.6
OECD	1.3	3.9	7.9	9.6

자료: OECD

■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수요·공급측 충격이 모두 작용한 결과

- (수요측 충격)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실시되었던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인한 유동성 공급, 코로나19 관련 규제의 완화에 따른 경제활동 정상화 등
 - 한국,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은 2019년 대비 2020~2021년 높은 통화 증가율을 보임
 - 미 연준은 2020년 3월 기준금리를 1.50~1.75%에서 0~0.25%로 인하, 한국은행은 2020년 1월~5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0.50%로 인하

[주요국 광의통화(M2)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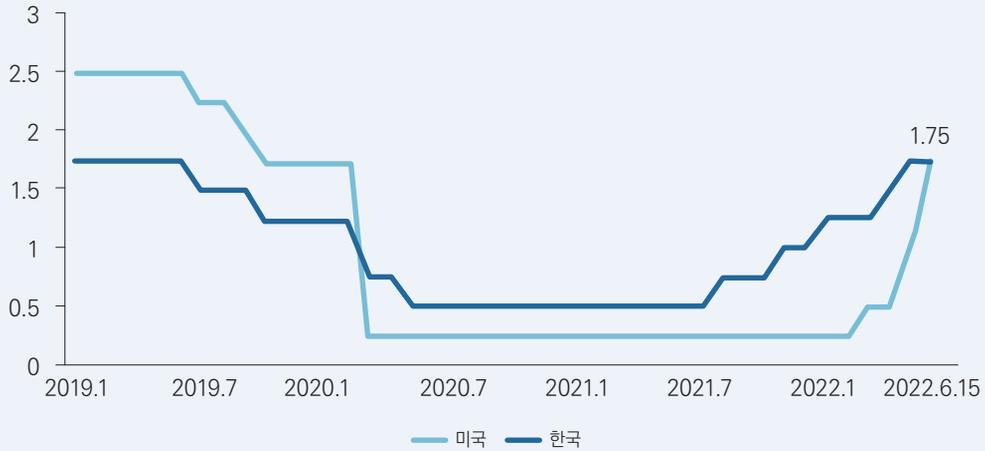
(단위: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한국	5.5	6.3	7.0	9.3	11.7
미국	4.8	3.7	6.7	24.8	12.3
독일	4.6	5.3	4.6	8.4	5.6
영국	2.9	2.9	1.1	14.7	6.2
중국	8.2	8.1	8.7	10.1	9.0
일본	3.3	2.4	2.7	9.1	3.6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한-미 기준금리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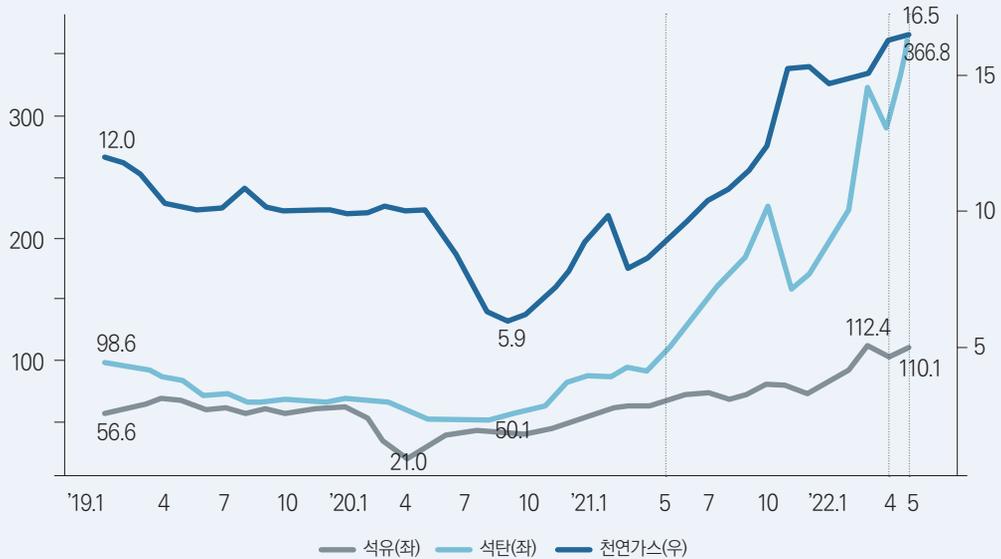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FRED

- (공급측 충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의 가격 인상, 중국의 코로나19 차단
을 위한 봉쇄조치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 등
- 천연가스, 석유, 석탄 등 에너지 가격은 2020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특히
천연가스는 러시아-우크라이나의 긴장국면으로 접어든 2021년 하반기부터 상승폭 확대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

(단위: US 달러/unit, US 달러/MMbtu(우축))



자료: World Bank, OPEC

■ 주요국 중앙은행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해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대응

- 중국, 일본 등 물가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국가¹³⁸를 제외한 주요국 중앙은행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여 2021년 말 또는 2022년 상반기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대응
 - 미 연준은 0.25%p 단위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물가상승압력이 완화되지 않음에 따라 2022년 5월 0.5%p(빅스텝), 2022년 6월 0.75%p(자이언트스텝) 기준금리를 인상
 - 한국은행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기준금리를 0.25%p씩 5번 인상하여 2022년 6월 기준금리는 1.75%

[주요국 기준금리 인상내역]

(단위: %)

구분	내용
한국	0.50(~21.7월) → 0.75(21.8월) → 1.00(21.11월) → 1.25(22.1월) → 1.50(22.4월) → 1.75(22.5월)
미국	0~0.25(~22.2월) → 0.25~0.50(22.3월) → 0.75~1.00(22.5월) → 1.50~1.75(22.6월)
유로	0.00 → 인상 예정(22.7월)
영국	0.1(~21.11월) → 0.25(21.12월) → 0.50(22.2월) → 0.75(22.3월) → 1.00(22.5월) → 1.25(22.6월)

주: ECB(유럽 중앙은행)은 2022년 7월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발표
 자료: 한국은행

■ 한국경제 역시 인플레이션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

- 한국경제는 코로나19 관련 규제의 완화에 따른 경제활동 정상화가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상승, 글로벌 공급망 병목현상 등이 가중되어 높은 물가상승률을 보이는 실정
 - 2017~2021년 5년간 물가상승률: 1.9%, 1.5%, 0.4%, 0.5%, 2.5%
 - 2022년 1~6월 물가상승률: 3.6%, 3.7%, 4.1%, 4.8%, 5.4%, 6.0%
- ※ 2022년의 경우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을 받는 공업제품 물가, 경제활동 정상화 및 원자재 가격상승 등의 영향을 받는 개인서비스 물가 등의 상승률이 높은 상황이며, 최근에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원화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수입물가가 상승하면서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

138) 일본과 중국 역시 2021년 대비 2022년 물가상승률이 높아진 상황임

* 2021년 물가상승률 일본 -0.03%, 중국 0.9%, 2022년 1분기 물가상승률 일본 0.9%, 중국 1.2%, 2022년 5월 물가상승률 일본 2.5%, 중국 2.1%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향후에도 계속될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거리두기 완화와 추경 등으로 인한 민간소비 회복 등은 앞으로의 물가상방압력으로 작용 가능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밀, 옥수수, 보리 등 곡물의 주요 수출국이며, 러시아는 천연가스, 원유 등 원자재의 주요 생산국으로,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곡물과 에너지의 공급여건이 더욱 악화될 전망

※ 곡물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¹³⁹⁾는 곡물 수입여건 악화 시 농축산물, 가공식품, 외식 등의 가격이 상승하는 애그플레이션¹⁴⁰⁾이 발생할 우려 존재

- 미 연준 점도표¹⁴¹⁾상 기준금리는 2022년 말 3% 중반까지 인상될 전망으로, 이는 향후에도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폭이 커질 수 있음을 의미

○ 다만, 경기회복세 둔화, 러시아-우크라이나 긴장 완화에 따른 원자재 공급여건 개선, 한국은 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은 물가하방압력으로 작용 가능

■ 정부와 한국은행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구조적 한계

○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억제, 유류세 인하 등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

- (정부) 식용유·돼지고기 등 식품원료 7종 대상 할당관세(0%) 적용, 커피 등 수입품 부가가치세 면제,¹⁴²⁾ 도로통행료, 철도요금, 광역상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 동결, 유류세 인하폭 확대(30 → 37%),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율 상향(40 → 80%), 주요 농산물의 긴급수입·비축물량 방출 등의 물가안정방안을 실시할 계획¹⁴³⁾

-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2021년 8월부터 다섯 차례 인상하여 2022년 6월 기준 1.75%이며, 당분간 물가에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는 입장¹⁴⁴⁾

○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적 불확실성과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 정상화 등에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책은 한계¹⁴⁵⁾가 있으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시중금리의 인상으로 이어져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가중할 가능성

139)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 20.2%

140) 애그플레이션: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

141) 점도표는 미 연준의 금리 조정을 예고해주는 지표로, 미 연준 위원들이 예상하는 금리를 나타냄

142)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관계부처 합동, 2022.5.30

143)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 관계부처 합동, 2022.6.19

144) 한국은행은 2022년 5월 통화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국내경제의 회복세 지속, 물가의 목표수준 상회 등으로 당분간 물가에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힘

145) 정부는 전기·가스요금은 인상폭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나, 인상 시 물가상승요인으로 작용 가능

제2절 금융시장: 금융건전성¹⁴⁶

1. 국민계정과 금융건전성

■ 금융건전성은 국민계정의 자금순환표와 연관

- 자금순환표는 실물경제활동을 통한 자금의 잉여 및 부족,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의 조달·운용을 체계적으로 기록
 - 자금순환표 중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각 경제부문의 금융자산 및 부채규모를 보여주는 저장 지표인 금융자산부채잔액표를 통해 경제부문별 자산 및 부채 규모를 확인 가능
 - 정부용자, 채권, 대출금을 기준으로 주요 부문별 부채를 살펴보면, 비금융법인은 대출금, 일반정부는 채권, 가계 및 비영리단체는 대출금의 비중이 가장 높음

[표 II-26] 2021년 금융자산부채잔액표(잠정치)

(단위: 조원)

구분	비금융법인		금융법인		일반정부		가계 및 비영리단체		국외	
	자산	부채	자산	부채	자산	부채	자산	부채	자산	부채
합계	3,586.3	6,686.2	10,348.6	10,080.3	2,213.8	1,279.2	4,924.4	2,245.4	1,800.6	2,576.8
현금 및 예금	925.2	—	1,186.8	4,475.6	277.8	96.3	2,139.1	—	43.0	—
정부용자	—	122.3	—	43.6	250.6	20.2	—	64.4	—	—
채권	93.0	588.8	2,398.6	1,512.4	374.7	999.0	113.1	—	408.9	288.0
대출금	—	1,644.2	4,050.7	214.0	—	9.5	—	2,127.2	8.6	64.5
기타항목	2,568.1	4,330.9	2,712.5	3,834.7	1,310.7	154.2	2,672.2	53.8	1,340.1	2,224.3
기타항목	1,472.8	4,330.9	1,317.3	944.8	560.8	131.1	39.8	118.2	574.2	1,522.8

주: 기타항목은 보험 및 연금준비금, 직접투자, 기타 대외 채권재무, 기타금융자산부채 등으로 구성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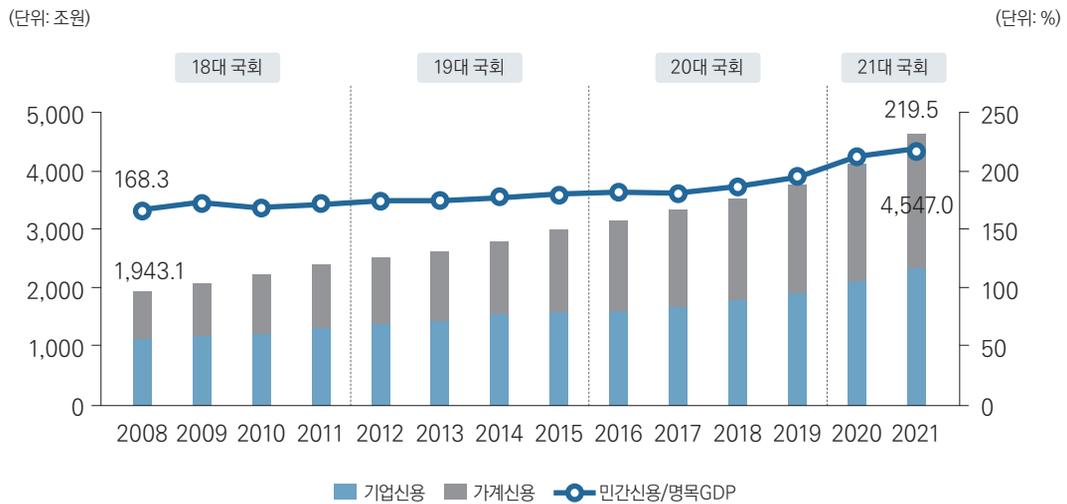
146)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생산·분배·지출 등의 개별 부문이 아니라 실물경제 전반으로 파급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건전성 정책은 이들과 별도의 부문인 통화·금융부문으로 분류·정리

2. 금융건전성 정책의 주요 지표

가. 민간신용

- **민간신용**은 가계와 기업의 부채 규모를 알 수 있는 지표로, 가계신용과 기업신용으로 구성
 - 민간신용은 자금순환통계상 가계(가계 및 비영리단체)와 기업(비금융법인)부문 부채(대출금, 정 부유자, 채권) 잔액을 의미

[그림 II-113] 민간신용



자료: 한국은행 EC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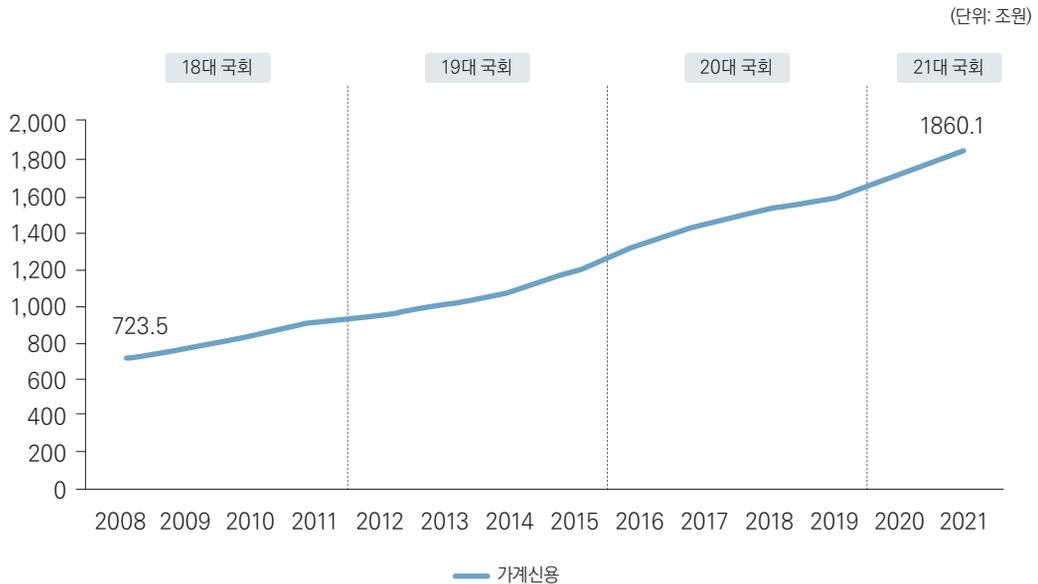
■ 민간신용은 2008년 1,943.1조원에서 2021년 4,547.0조원으로 상승

- 민간신용은 2008년 1,943.1조원에서 2021년 4,547.0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명목GDP 보다 민간신용의 증가율이 높은 추세로 인해 명목GDP대비 민간신용의 비율은 2008년 168.3%에서 2021년 219.5%로 상승

나. 가계신용과 기업부채

- **가계신용**은 금융기관이 가계에 제공한 신용규모를 알 수 있는 지표로, 금융기관의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으로 구성
 - 판매신용은 재화의 판매자나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외상거래를 포괄
- **기업부채**는 기업이 대출 등을 통해 외부로부터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 규모를 의미하며, 한국은행 자금순환표상 대출금, 채권, 정부융자의 합으로 구성

[그림 II-114] 가계신용



자료: 한국은행 ECOS

■ 가계신용은 2008년 725.3조원에서 2021년 1,860.1조원으로 상승세

- 가계신용은 2008년 725.3조원에서 2021년 1,860.1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경제규모 및 경제활동의 증가, 주택가격의 상승 등에 따른 주택담보대출규모 확대, 2020년 기준금리의 인하(1.25%→0.50%)에 따른 저금리 기조로 인한 가계대출 수요 증가 등으로 상승세

[그림 II-115] 기업부채

(단위: 조원)



자료: 한국은행 EC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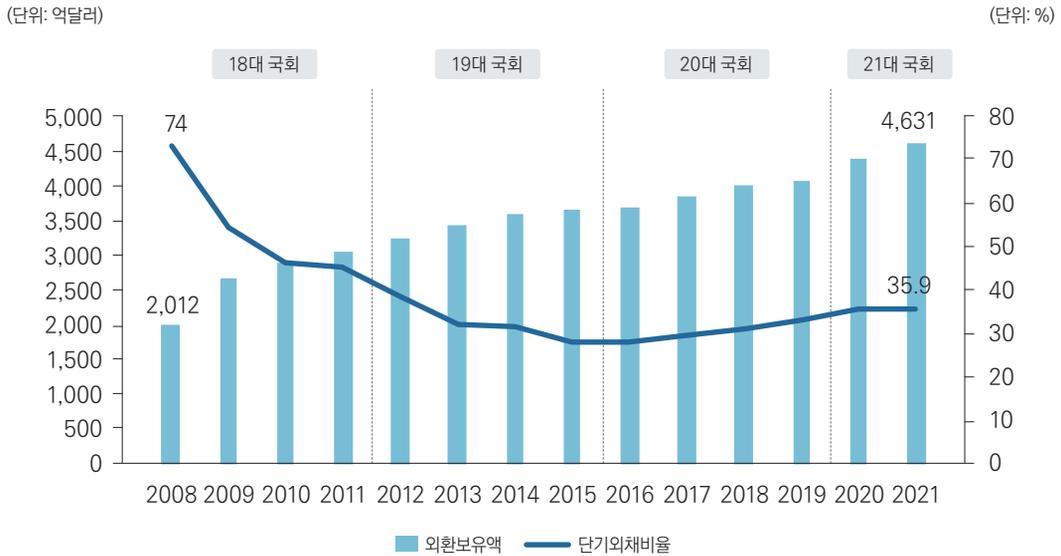
■ 2021년 기업부채는 2,355.3조원으로, 2008년 대비 109.8% 증가

- 2008년 기업부채는 1,122.8조원으로 당시 민간기업 부채는 959조원, 공기업 부채는 163.8조원이었으나, 2021년 기업부채는 2,355.3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민간기업 부채는 2,040.3조원, 공기업 부채는 315.1조원으로 확대

다. 외환 관련

- **외환보유액**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과 정부의 가용 가능한 대외 외화 금융자산
- **단기외채비율**은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채무가 차지하는 비율로, 국가의 대외지급능력 파악에 용이
- **환율**은 우리나라의 화폐와 외국 화폐 간의 교환비율을 의미

[그림 II-116] 외환보유액 및 단기외채비율



자료: 한국은행 ECOS

■ 2021년 외환보유액은 4,631억달러, 단기외채비율은 35.9%

- 2008년 외환보유액은 2,012억달러, 단기외채비율은 74% 수준이었으나 2021년 외환보유액은 130% 증가한 4,631억달러, 단기외채비율은 51.5% 감소한 35.9%를 기록

[그림 II-117] 원달러환율

(단위: 원/달러)



자료: 한국은행 ECOS

■ 환율은 2022년 6월 1,279.6원으로, 상승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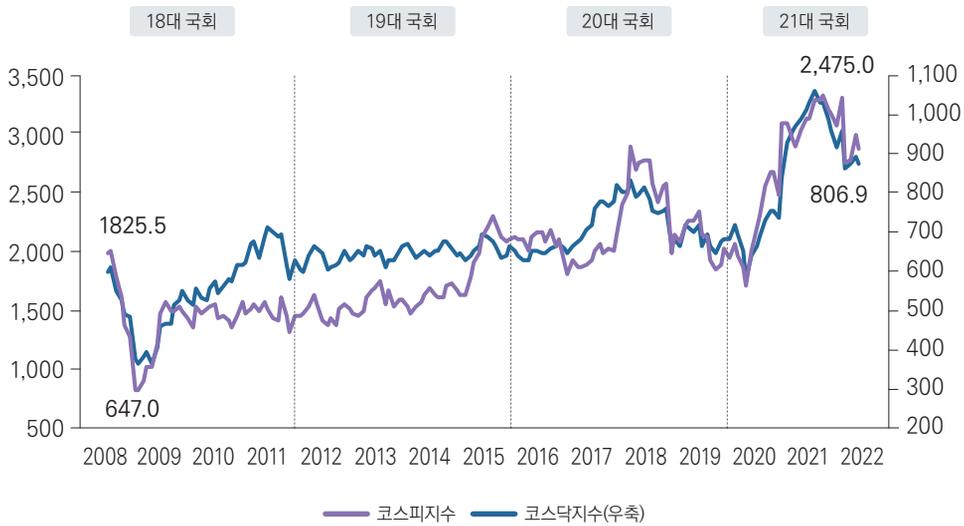
- 환율은 2008년 11월 글로벌 금융위기로 1,469원을 기록한 이후 2020년 평균 1,086.3원까지 하락하였으나 최근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달러 선호 강화,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 등으로 2022년 6월 평균 1,279.6원을 기록하며 상승 추세

라. 주가

- **주가**는 주식의 시장가격으로, 미래의 수익전망, 경제동향 및 전망 등을 고려한 주식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
 - 주가는 회사의 자산상태, 배당능력, 성장성, 자금수급 등의 내부요인, 정치·사회적 동향, 통화·물가·금리 등 외부요인의 영향을 받음

[그림 II-118] KOSPI 및 KOSDAQ 지수

(단위: P)



자료: 한국은행 ECOS

■ KOSPI지수와 KOSDAQ지수는 2021년 중순 이후 하락세

- KOSPI지수와 KOSDAQ지수는 각각 2008년 4월 1,825.5, 647.0에서 2021년 6월 평균 3,259.1, 2021년 7월 평균 1,043.3까지 상승한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코로나19 확산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의해 하락하여 2022년 6월 2,474.95, 806.94까지 하락

마. 국고채금리

- **국고채금리**는 정부가 자금조달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국채의 금리로, 정부의 자금조달비용, 국가채무, 국가신용도 등과 관련되는 지표
 - 정부는 발행한 국채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므로, 국고채금리는 정부의 자금조달비용, 국가채무와 관련되며, 일반적으로 국가신용도가 높을수록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므로 국고채금리가 낮아짐

[그림 II-119] 국고채금리(3년물·10년물)

(단위: %)



자료: 한국은행 ECOS

■ 최근 국고채금리는 미 연준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상승세

- 국고채 금리는 코로나19로 인한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2020년 0.99%(3년물), 1.5%(10년물)을 기록한 후, 미 연준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2021년 1.39%(3년물), 2.07%(10년물), 2022년 6월 기준 3.48%(3년물), 3.64%(10년물)까지 상승
 - 국고채 발행량, 기준금리, 안전자산 선호도 등이 국고채 금리에 영향

3. 대한민국 금융건전성 정책

가. 금융건전성 정책 개요 및 필요성

■ 금융건전성 정책은 금융시장내 경제주체의 여유·필요자금 운용·조달에 기여

- 예금, 주식, 채권 등 금융시장의 다양한 상품을 통해서 경제주체는 여유자금을 운용 또는 필요자금을 조달하며, 금융정책은 이러한 시장메커니즘의 원활한 작동에 일조
 - 금융시장은 크게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 장단기금융시장, 파생금융상품시장 등이 있으며, 최근 가상자산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금융시장 내 가상자산시장의 중요성도 커지는 상황

■ 금융건전성 정책의 목표는 금융시장의 불안정 방지와 원활한 작동

- 금융시장의 불안정은 자산가치 급락, 국가신용도 하락, 자본거래 위축 등으로부터 발생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부터 시작된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실물경제로 파급되면서 발발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금융시장의 거시적 안정성을 위한 금융건전성 정책의 필요성 증대
 - 2008년 4/4분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 실질GDP성장률(전기대비)은 -3.3%를 기록

나. 금융건전성 정책의 주요 내용

■ 개별 금융기관의 미시적 건전성과 전체 금융시장의 거시적 건전성 관리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은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와 이를 통한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
 - (기획재정부) 거시적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실물경제, 국제금융, 외화자금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 ※ 기획재정부는 2012년부터 거시건전성 점검과 관련기관의 협조 등을 위해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금융 관련기관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미시적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규제, 영업행위 규제, 재무건전성 규제 등을 실시하고 거시적 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거시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위험요인 분석, 외환건전성 부담금, 경기대응완충자본, LTV·DTI·DSR 비율조정 등을 추진
 - (한국은행) 금융시장의 위험요인 분석, 통화 스왑, 금융안정에 유의한 통화정책 수행 등을 통하여 금융시장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
 - ※ 한국은행은 2020년 3월 미 연준과 600억달러 한도의 통화스왑 체결, 2020년 10월 중국 인민은행과 4,000억 위안 규모의 통화스왑 연장계약 체결,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¹⁴⁷ 등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금융시장의 안전성 등을 확보

147) ASEAN 국가와 한국, 중국, 일본의 국제수지 보전 및 위기 시 단기유동성 지원 등을 위한 협정으로, 2,400억달러 규모

[표 II-27] 미시적·거시적 건전성 확보를 위한 주요 정책

구분		주요내용
미시적 건전성	금융기관 지배구조 규제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회 구성·운영, 내부통제 등을 규제
	영업행위 규제	고객의 이익을 해하는 이해상충, 부적절한 광고, 임직원의 불법적인 투자상품 매매,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한 임의매매 등 금융기관의 불법적인 영업행위 규제
	재무건전성 규제	BIS자기자본비율규제 등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규제 - BIS 자기자본비율은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로, 일정 비율에 미달할 경우 시정조치 부과
	경영실태평가	금융회사의 경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적, 건전성, 경영능력, 법규준수상황 등을 평가
	적기시정조치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의 시정조치 부과
거시적 건전성	위험요인 분석	거시경제금융회의(기획재정부 주재), 금융리스크 점검회의(금융위원회 주재), 분석모형·지수 등을 통해 금융시장, 금융회사 등의 위험요소 점검
	경기대응완충자본	과도한 신용팽창기에 위험가중자산의 0~2.5%를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로, 거시경제 여건, 금융기관의 건전성, 금융시장의 불균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립수준, 시기 등을 결정
	자본보전완충자본	위기에 대비하여 위험가중자산의 2.5%를 평상시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
	국내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관리	국내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D-SIB)을 선정하여 위험가중자산의 1%를 추가 적립하도록 하고 위기 대비 자체정상화계획 제출의무 부과 등
	외환건전성 부담금	금융기관이 보유한 비외국성 외화부채에 대해 일정한 요율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부과
	외환파생상품 포지션 규제	통화관련 파생금융거래 포지션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여 외환파생거래가 과도한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규제
	LTV·DTI·DSR ¹⁴⁸	가계부채의 관리를 위해 LTV, DTI, DSR의 비율·대상 조정 -LTV(주택담보인정비율) : 주택가격 대비 대출액의 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 연간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타대출 이자의 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연간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타대출 원리금의 비율

148) <참고자료: 규제지역별 LTV·DTI 현황>

구분	기존		일반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LTV	DTI	LTV	DTI	LTV	DTI	LTV	DTI	
서민·실수요자	9억원 이하분	70%	60%	70%	60%	60%	60%	50%	50%
	9억원 초과분					40%		30%	
무주택세대	9억원 이하분			70%	60%	50%	50%	40%	40%
	9억원 초과분			30%		20%			
처분조건 1주택 세대	9억원 이하분			60%	50%	50%	50%	40%	40%
	9억원 초과분			30%		20%			
주택 보유 세대			60%	50%	주담대 금지		주담대 금지		
15억원 초과 주택	-	-	-		-		주담대 금지		

* 다만,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LTV 상한을 지역, 주택가격 등에 무관하게 80%로 완화하고 대출 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며, 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방식을 개선할 계획임

■ 최종대부자와 최종출자자로서 유동성 위기 등에 대응

-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금융기관, 지급불능이 발생한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우려금융기관 등에 대해서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 등은 각각 최종대부자와 최종출자자로서 역할을 수행
 - (한국은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로 유동성이 악화된 금융기관,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한 영리기업 등에 특별대출을 통해 유동성 지원
 - ※ 1997년 9·10월 유동성 부족이 발생한 제일은행과 16개 종금사에 각각 1조원의 특별대출 실시
 - (예금보험공사 등)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은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공적자금 요청에 대한 출자, 부실채권 인수·정리 등의 역할 수행
 - ※ 1998년 1월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회사로 결정된 서울은행·제일은행에 각각 7,500억원을 출자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0.2조원의 부실채권을 인수
 - ※ 이외에도 예금보험공사는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하는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

■ 금융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

- 2021년 10월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규모 확대(2008년 723.5조원→2021년 1,860.1조원)에 따라 상환능력 중심 대출심사, 급증분야 맞춤형 관리,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라는 핵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목표별 3대 과제를 중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
 - (상환능력 중심 대출심사) 차주단위 DSR 2·3단계 조기시행, 2금융권 DSR 강화, DSR 산정 만기 현실화
 - ※ 차주단위 DSR 2단계(총대출액 2억원 이상) 시행시기 '22.7 → '22.1, 3단계(총대출액 1억원 이상) 시행시기 '23.7 → '22.7, 2금융권 DSR 기준 60% → 50%, DSR 산출 시 대출만기를 최대만기에서 대출별 평균만기로 변경
 - (급증분야 맞춤형 관리) 상호금융 비조합원 예대율¹⁴⁹ 정비, 차주단위 DSR 산정 시 카드론 포함, 카드론 다중채무자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 ※ 상호금융권 가계부채가 비조합원 위주로 확대되고 있어 예대율 산정에 있어 조합원·비조합원 대출가중치 차등화, 카드론 다중채무자의 카드론 취급 제한 등
 -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치 상향조정, 전세대출 및 신용대출 분할상환 유도
 - ※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 60% 설정, 전세대출 분할상환 우수 금융기관에 정책모기지 배정 우대, DSR 산정 시 분할상환 신용대출의 적용만기를 실제만기로 적용

149) 예대율: 예금잔액 대비 대출잔액의 비율

■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연착륙 유도

- 금융당국은 2020년 4월부터 4차례에 걸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과 협의
 - (연장기간) 당초 2020.4~2020.9 → 1차연장 ~2021.3, 2차연장 ~2021.9, 3차연장 ~2022.3, 4차연장 ~2022.9
 - (지원실적) 2020년 4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대출원리금은 291조원 규모
 - (대출잔액) 2022년 1월 기준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받고있는 대출잔액은 133.4조원
-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장기·분할상환 등을 통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

■ 금융시장의 질서 정립과 소비자 보호

- 가상화폐의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위하여 가상자산시장 관리 강화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 검사 등
- 금융시장 내 불법·부당한 영업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
 -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부과,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예방, 최고금리규제¹⁵⁰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등

150) 법정 최고금리 : 2016년 27.9% → 2018년 24% → 2021년 20%

BOX 21 2022년 한국경제와 금융시장

■ 2022년 금융시장은 대외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경제둔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으로 금융시장의 대외적 불확실성이 확대
- 이에 따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심화되고 안전자산 선호도가 강화되면서 주가는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환율은 상승하는 추세

[글로벌 주가 추이]



주: 선진국과 신중국 주가는 MSCI지수 기준
자료: Bloomberg

[KOSPI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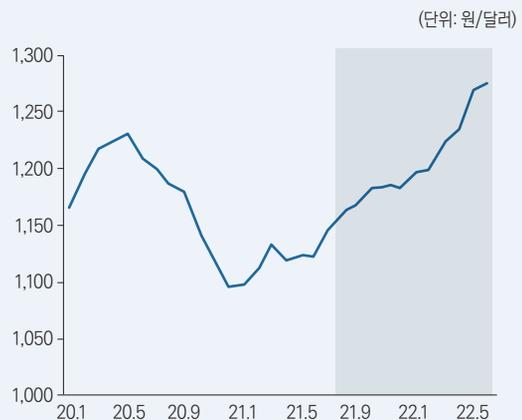
자료: 한국거래소

[달러 인덱스 추이]



주: 달러 인덱스는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의 교환비율을 의미
자료: Bloomberg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최근에는 미 연준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시장의 주요한 불안요인

- 미 연준은 당초 0.25%p 단위로 기준금리를 인상하였으나, 물가상승압력이 완화되지 않음에 따라 기준금리를 2022년 5월 0.5%p(빅스텝), 2022년 6월 0.75%p(자이언트스텝) 인상하여 6월 기준 기준금리는 1.50~1.75%
 - 미 연준 점도표¹⁵¹ 상 기준금리는 2022년 말 3% 중반까지 인상될 전망

[2022년 월별 미국 기준금리 및 물가상승률]

(단위: %)

구분	22.1월	22.2월	22.3월	22.4월	22.5월	22.6월
기준금리	0~0.25	0~0.25	0.25~0.50	0.25~0.50	0.75~1.00	1.50~1.75
물가상승률	7.5	7.9	8.5	8.3	8.6	9.1

자료: 한국은행, OECD

■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자본유출과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 가능

-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한·미간 금리차 축소는 자본유출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가능
 - 2022년 6월 기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1.75%로, 한·미간 기준금리차는 2022년 1월 0.75~1%에서 2022년 6월 0~0.25%로 축소
-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원화가치 하락과 그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을 야기하여 물가상승압력 발생 가능
 - 2022년 5월 원/달러 환율은 1,268원이었으나 자이언트스텝이 이루어진 이후 6월 원/달러 환율은 최고 1,303.7원까지 상승¹⁵²

151) 점도표는 미 연준의 금리 조정을 예고해주는 지표로, 미 연준 위원들이 예상하는 금리를 나타냄

152) 2022년 6월 30일 기준

[한·미 기준금리 추이]

(단위: %)



자료: 한국은행, FRED

■ 자본유출, 물가상승압력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요인으로 작용 가능

- 물가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미간 기준금리차 축소 등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 확대, 환율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압력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한국은행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기준금리를 0.25%p씩 5번 인상하여 2022년 6월 기준금리는 1.75%
 -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7월 13일, 8월 25일, 10월 12일, 11월 24일 개최될 예정¹⁵³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한국경제의 총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

- 기준금리의 인상은 금리, 자산경로 등을 통해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존재
 - (금리경로) 기준금리의 인상은 장단기 시장금리, 대출금리 등의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 투자가 축소될 가능성
 - ※ 2021년 말 대비 2022년 6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0.75%p 상승하였으며, 국고채(3년물)는 1.22%p, 기업대출금리는 0.31%p(4월 기준), 가계대출금리는 0.39%p(4월 기준) 상승
 - (자산경로) 기준금리의 인상은 주식, 채권 등 자산가격의 하락과 그로 인한 자산감소를 야기하여 소비, 투자 위축 가능

153) 다만 금융통화위원회 의장(한국은행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임시회의 개최 가능

■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기업의 상환부담 증가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검토 필요

○ 기준금리의 인상이 가계·기업의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

- (가계신용) 2021년 말 기준 가계신용은 1,860.1조원이며, 연체율은 0.52%로 양호한 수준이나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73.4%로 전년동기대비 4.3%p 상승하는 등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증가

- (기업신용) 2021년 말 기업신용은 2,355.3조원이며, 이자보상배율¹⁵⁴은 4.6배에서 8.9배로 상승하고 과다부채기업¹⁵⁵ 비중이 15.3%에서 14.6%로 감소하였으나, 부채비율이 77.2%에서 80.1%로 소폭 상승

- (상환부담)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은 74.2% 수준으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상당수의 가계가 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해 상환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0.25%p 인상 시 가계부담 3조, 기업부담 2.7조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¹⁵⁶

※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4월부터 4차례 만기연장·상환유예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이 2022년 9월 종료될 예정으로, 부실위험이 잠재되어 있을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만기연장·상환유예]

구분	주요내용
개요	2020년 4월부터 4차례에 걸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협의
연장기간	당초 2020.4 → 2020.9 1차연장 → 2021.3, 2차연장 → 2021.9 3차연장 → 2022.3, 4차연장 → 2022.9
지원실적	291조원
대출잔액	133.4조원

주: 1. 2020년 4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지원실적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대출원리금을 의미

2. 대출잔액은 2022년 1월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대출을 의미

자료: 금융위원회

○ 이에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기업에 미치는 영향,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가계·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한·미간 기준금리차 축소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할 필요

154)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총이자비용으로,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155) 부채/자기자본의 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기업

156) 2022.5.26. 한국은행 총재 기자회견담회

BOX 22 환율과 한국경제

■ 한국경제와 환율의 중요성

- 환율은 자국 통화와 다른 나라 통화의 교환비율을 의미하며, 환율의 변동은 경상수지, 물가, 외채상환 등 국민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침
 - 환율이 상승할 경우 일반적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나, 원자재 수입에 더 많은 자국 통화가 필요하게 되므로 원자재의 국내 가격이 상승하여 물가상방압력이 발생하고, 외채상환부담이 증가
- 한국경제는 높은 대외 의존도, 금융시장의 개방으로 인하여 환율의 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편이며, 최근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적 불확실성 속 안전자산인 달러 선호 강화로 인하여 환율이 상승하는 상황
 - 원달러 환율은 2020년 1,180.1원, 2021년 1,144.6원을 기록한 이후 2022년 1분기 1,205.3원, 2022년 6월 평균 1,279.6원까지 상승

※ 수출/실질GDP비중(2020년 기준): 한국 41.6%, 독일 46.2, 일본 17.4, 미국 10.9, OECD 평균 28.4%

※ 2021년 기준 한국 무역액은 1.26조달러로 세계무역순위는 8위

■ 환율의 변동요인

- 환율은 경제주체의 기대, 주요국의 환율, 대외거래, 통화정책, 외환당국의 개입 등에 따라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변화하며 변동¹⁵⁷⁾

[환율의 변동요인]

구분	주요내용
경제주체의 기대	경제주체가 환율상승(하락)을 예상할 경우 외환매입(매각)을 추진하므로 외환수요(공급)가 증가하여 환율상승(하락)
주요국 환율	주요 교역국의 통화가치 절상(절하) 시 수출경쟁력 상승(하락)으로 외환공급이 증가(감소)하여 환율이 하락(상승)

157) 변동환율제도 기준

[환율의 변동요인]

구분	주요내용
국내외 요인	브렉시트 등의 국외요인, 대북관계 등의 국내요인이 환율에 영향
대외거래	국제수지의 흑자(적자) 시 외환의 공급(수요) 증가로 환율이 하락(상승)
통화정책	기준금리 인하(인상) 등의 확장(긴축)적 통화정책 시 환율이 상승(하락), 다만 기준금리 조정에 따른 해외자본의 유출입 정도에 따라 그 효과가 상이
외환당국의 개입	외환당국이 환율의 급격한 상승(하락)을 막기 위해 보유외환을 매각(매입)하는 직접개입을 실시하거나 구두개입 * 구두개입: 외환당국이 환율 관련 의견을 표명하여 경제주체의 기대에 영향을 주는 방법

■ 환율제도의 변천과정

- 한국의 환율제도는 경제발전과 시장원리 강화 등에 따라 고정환율제도에서 현재의 자유변동환율제도까지 5차례 변경

[환율제도의 변천]

구분	주요내용
고정환율제도 (1945.10~1964.5)	복수환율제도와 단일환율제도가 번갈아 시행되었으며, 지속적인 원화가치의 하락으로 평가절하가 이뤄지고 환율이 외환 수급상황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한계 노출 * 복수환율제도: 정부보유외환과 기타외환에 다른 환율을 적용하는 제도
단일변동환율제도 (1964.5~1980.2)	외환증서제도를 통해 한국은행이 환율을 결정하되 외환증서의 수급불균형 발생 시 외환당국이 개입하였으나, 외환시장의 취약한 기반으로 인해 사실상의 고정환율제도가 유지 * 외환증서제도: 외환을 정부, 중앙은행에 집중시키면서 환율은 외환증서의 수급에 따라 변동
복수통화바스켓제도 (1980.2~1990.2)	주요 교역국인 미국, 영국, 서독, 프랑스, 일본 통화의 가치변동에 환율을 연동시키는 제도로, 한국은행은 주요 교역국의 환율바스켓, 물가상승률, 내외금리차, 국제수지, 외환수급전망 등을 고려하여 환율을 고시 * 기존에는 환율을 일시에 인상하여 누적된 변동압력을 해소하였으나, 환율의 안정적 변동, 미국 이외 교역국과의 무역확대, 환율의 국제수지 조정기능 강화 차원에서 도입
시장평균환율제도 (1990.3~1997.12)	환율이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되, 일일 변동범위를 제한하여 환율이 지나치게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 * 환율의 시장기능 제고를 통한 통상마찰의 소지 완화, 환율의 국제수지 조정기능 강화 등을 위해 도입
자유변동환율제도 (1997.12~현재)	일일 변동범위의 제한 없이 환율이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되도록 하는 제도, 다만 외환당국은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 * 외환위기, 외환시장의 자유화 등을 계기로 도입

자료: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한국은행), 국가기록원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 한국의 외환정책

- 한국의 외환정책은 모니터링, 시장개입, 유동성공급, 거시건전성 관리, 국제협력 등으로 분류 가능
 - (모니터링) 한국은행의 외환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외환당국이 외화자금 유출입 등을 모니터링하여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
 - (시장개입) 외환당국은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율 관련 의견을 표명하여 경제주체의 기대에 영향을 주는 구두개입, 외환을 매각 또는 원화를 매입하는 직접개입을 실시¹⁵⁸
 - (유동성공급)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부족 시 외화유동성을 공급하며, 한국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8.10~2009.1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266.2억달러를 공급
 - (거시건전성 관리) 외환시장의 불안정요소를 방지하여 전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정책으로, 금융기관이 보유한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외환건전성 부담금, 외환파생거래가 과도한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외환파생상품포지션 규제 등이 존재
 - (국제협력) 외국 중앙은행과의 통화 스왑, 차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협정 등의 지역 금융안정망 구축 등

■ 한국의 외환보유액 현황과 운용방식

- 외환보유액은 중앙은행,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대외지급준비자산으로, 환율의 안정, 국가 신용등급 등에 영향
 -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외환보유액이 2,012억달러까지 감소한 이후 외환보유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 기준 4,631억달러(세계 8위 수준)
- 한국은행은 안정성, 유동성을 우선으로 하며 적정 범위의 수익성을 목표로 외환보유액을 운용
 - (안정성) 투자 시 지나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외환보유액의 가치 보전
 - (유동성) 외환보유액은 외환당국이 대외지급준비자산으로 수시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현금화가 용이한 자산에 투자하여 유동성 확보
 -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외환보유액 운용을 통한 수익 추구

158) 다만 외환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주요 교역국과의 마찰로 이어질 수 있으며, 2022년 6월 미국은 한국을 독일, 일본, 중국 등과 함께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

[2021년 기준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운용 현황]

구분	주요내용	비중(%)
현금성자산	외화자금의 유출입, 일시적 외화자금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자산으로, 미 달러화 단기국채 등 단기금융상품 중심으로 구성되며, 한국은행이 직접 운용	5.2
직접투자자산	안정적인 수익을 위하여 주요국의 중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자산으로, 선진국의 중장기 국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등 유동성과 안정성이 높은 채권으로 구성되며, 한국은행이 직접 운용	72.0
위탁자산	전문적이고 다변화된 투자를 위해 자산운용사 등에 위탁운용하는 자산으로, 채권펀드, 주식펀드, 혼합펀드로 구성	22.8
합계		100.0

자료: 한국은행

[2017~2021년 한국은행 총수익]

(단위: 조원)

2017	2018	2019	2020	2021
12.39	13.84	16.43	19.87	19.08

주: 한국은행은 외화자산 운용규모, 운용수익률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 한국은행 총수익을 기재
 자료: 한국은행

BOX 23 가상자산과 한국경제

■ 2022년 가상자산은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불안정성 심화

- 2021년 말 전세계 가상자산시장의 시가총액은 2.3조달러였으나,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강화, 루나·테라 폭락사태 등으로 2022년 5월 기준 시가총액은 1.37조달러로 축소
 - 2021년 말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55.2조원으로,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2.1% 수준이었으나, 2022년 5월 기준 31조원 수준¹⁵⁹

■ 가상자산은 주식 등 다른 자산 대비 가격 변동성이 매우 높은 수준

- 대표적인 가상자산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은 2021년 말 대비 2022년 6월 각각 56.8%, 71.5% 감소하며 주식 대비 높은 하락률을 보임
 - 금융정보분석원의 가상자산시장 실태조사 결과 2021년 하반기 국내 유통 가상자산의 평균 MDD는 65%로,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높은 가격 변동성이 유지되는 상황

※ MDD(Max Draw Down)¹⁶⁰: 2021년 하반기 최고점 대비 가격하락률

[가상자산과 주식의 가격 변동성 비교]

(단위: 달러, %)

구분		2021년 말 (A)	2022년 6월 22일 기준(B)	변동성 (A-B/A*100)	
가상자산	비트코인	46,306	19,987	56.8	
	이더리움	3,683	1,051	71.5	
주가	해외	다우존스지수	36,338	30,483	16.1
	국내	KOSPI	2,978	2,343	21.3

주: 1.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가상자산 시가총액 각각 1:2위

2.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자료: Coinmarketca; FRED; 한국은행

159) 가상자산의 국내외 시가총액 관련 자료는 한국은행의 '최근 암호자산시장의 동향 및 리스크 요인 점검' 참고

160) 개별 가상자산의 [(최고가 - 최저가)/최고가]

■ 한국경제와 가산자산시장: 금융시장 관련성, 이용자 특성, 규제 현황 검토

- (금융시장 관련성) 금융시장과 가산자산시장의 관련성이 클 경우 가산자산시장의 불안정성이 금융시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나, 한국은 금융기관의 가산자산 보유, 매입, 담보투자, 지분투자를 금지하고 있어 해외¹⁶¹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가산자산시장과 금융시장의 관련성은 높지 않은 실정¹⁶²
 - 다만 일부 금융기관이 가산자산 관련 지분투자, 합작법인 설립 등을 추진하여 향후 두 시장의 관련성이 높아질 가능성
- (이용자 특성) 이용자별 가산자산 보유규모는 크지 않은 수준이나, 청년층의 이용률이 높아 가산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이 청년층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 있음
 - 2021년 하반기 가산자산 이용자 558만명 중 100만원 이하 보유자는 313만명, 1,000만원 이상 보유자는 14.7%인 82.4만명

[가산자산 보유규모별 비중]

(단위: 만명, %)

구분	보유 안함	1백만원 이하	1백만원 ~ 1천만원	1천만원 ~ 1억원	1억원 ~ 10억원	10억원 이상
이용자 수	37	276	163	73	9	0.4
비중	7	49	29	13	1.6	0.1

자료: 금융정보분석원

- 가산자산 이용자 중 20·30대 이용자의 비중은 55%

[가산자산 이용자 연령대별 비중]

(단위: 만명, %)

구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이용자 수	134	174	148	80	23
비중	24	31	27	14	4

자료: 금융정보분석원

161) 모건 스탠리, JP 모건 등이 가산자산 펀드 상품을 운용

162) 국내 가산자산 시가총액이 2021년 말 기준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2.1% 수준으로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

- (규제 현황) 현재 가상자산에 대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 자금세탁방지의무 등을 부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의 가상자산 관련 내용

구분	주요내용
정의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매도·매수·교환 등의 영업을 하는 자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자금세탁방지)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거래제한) ①가상자산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하는 가상자산 거래제한, ②가상 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의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거래제한 *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는 42개소 중 34개소가 심사 통과(2022.4.)
금융회사관련	(확인)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는 해당 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 신고여부, 예치금 분리보관 등을 확인 (거절) 가상자산사업자의 미신고, 자금세탁위험이 특별히 높은 경우 등에는 금융거래를 거절할 의무 부과
감독기관	금융정보분석원(감독), 금융감독원(검사)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그런데, ①가격 안정화로 인해 결제 활용도가 높았던 스테이블(stable)코인의 가치가 불안정 해지며 발생한 스테이블코인 테라 및 이와 연계된 루나코인의 폭락사태, ②디파이(defi)¹⁶³를 통한 레버리지 확대가 야기하는 가상자산시장의 불안정성, ③특정 거래소 단독상장 코인¹⁶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불공정거래행위, 시세조종행위 등으로 인해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

163) 가상자산을 담보로 스테이블코인 등을 대출받아 다른 코인에 투자

164)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국내 유통 가상자산 623종 중 403종(65%)가 단독상장되었으며, 단독상장 가상자산 중 219개의 MDD가 70% 이상일 정도로 단독상장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은 높은 수준

제3절 정책금융

1. 국민계정 상 정책금융

■ 정책금융은 국민계정의 자금순환표의 금융자산부채잔액표와 연관

- 자금순환표는 경제주체별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의 조달·운용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정책금융은 정부용자 항목에 포함
 - 정부용자 항목을 통해 정부가 기업(비금융법인, 금융법인) 및 가계(비영리단체 포함)에 대출해준 금액(부채)들의 합계를 확인할 수 있음
 - 일반정부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비영리 공공기관을 포괄하고 있으며, 일반정부내 기관들간의 거래가 포함됨

[표 II-28] 2021년 금융자산부채잔액표 정부용자(잠정치)

(단위: 조원)

구분	비금융법인		금융법인		일반정부		가계 및 비영리단체		국외	
	자산	부채	자산	부채	자산	부채	자산	부채	자산	부채
정부용자	-	122.3	-	43.6	250.6	20.2	-	64.4	-	-

주: 자금순환표의 금융자산부채잔액표의 정부용자 계정
 자료: 한국은행

■ 정책금융은 시장·금융원리를 기반으로 경제주체에게 지원하는 금융을 지칭

- 정책금융은 시장의 수요가 있음에도 민간금융기관이 공급하기 어려운 분야의 금융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직접투·용자, 간접대출(온렌딩), 이차보전, 보증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직접투·용자의 경우 중장기 대출, 민간자금 참여(신디케이션), 지분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지원
 - 간접대출(온렌딩)은 정책금융기관이 중개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하고, 중개금융기관이 대상을 선정 및 심사하여 대출을 실행
 - 이차보전은 저리대출 후 금리차를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

2. 정책금융 주요 지표

가. 정책금융 공급액

○ 정책금융 공급액은 금융공공기관이 융자(대출), 보증, 보험, 투자 등의 지원 방식을 통해 공급한 각 연도별 정책금융 공급 잔액

(1) 현황

[그림 II-120] 명목 GDP와 정책금융 공급 잔액

(단위: 조원)

(단위: %)



자료: 한국은행 ECOS, 안옥진(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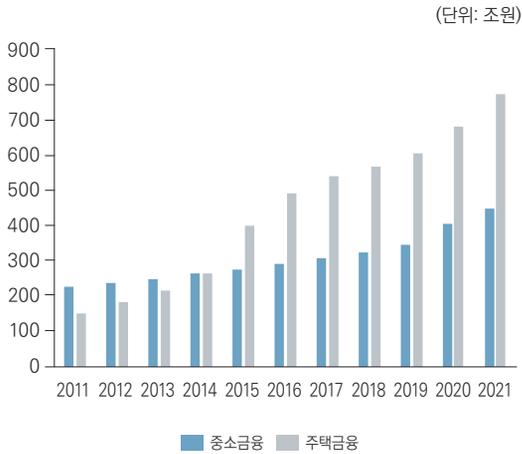
■ 정책금융 공급액은 2011년 662.7조원에서 2021년 1,647.2조원으로 증가¹⁶⁵

- 금융공공기관 연도별 융자(대출), 보증, 보험, 투자 총 잔액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명목 GDP의 79.5% 수준에 달함

165) 정책금융 공급액은 안옥진(2020)의 보고서의 '금융 공공기관의 연도별 융자(대출), 보증, 보험, 투자 잔액'을 인용하였는데, 이외에도 한국은행의 중소기업 금융증개지원 대출, 각 부처에서 운용중인 융자 및 이차지원 사업들이 존재하나 이를 취합한 통계는 부재하여 포함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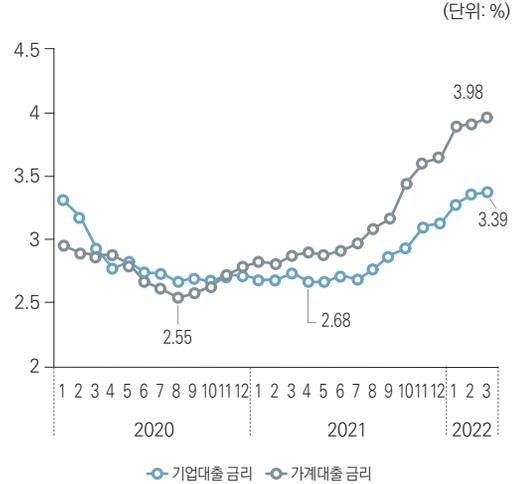
(2) 비교

[그림 II-121] 중소기업 및 주택금융 공급 잔액



자료: 안옥진(2022)

[그림 II-122] 기업대출 및 가계대출



자료: 한국은행 예금은행 대출금리(신규취급액)

■ 중소기업 금융 공급 잔액은 2021년 449.1조원으로 2011년의 약 2배 수준

- 중소기업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이 급증하면서 2020년 18.7%, 2021년 10.5%씩 증가
- 저금리 기조 등으로 최근 2년간의 연체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2021년 하반기 이후 금리 상승세와 대출만기연장 조치 지원이 종료¹⁶⁶ ('22.9월)에 따라 향후 부실화 우려가 존재¹⁶⁷

■ 주택금융 공급 잔액은 2021년 770.3조원으로 2011년 대비 4.12배 수준

- 주택금융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높았던 기간 동안 주택담보대출(용자) 및 보증(주택구입자금 보증, 주택분양보증, 전세금 반환보증 등)이 증가하면서 2020년 12.9%, 2021년 13.5%로 크게 증가
 - 주택금융의 확대는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접근성 제고 등의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만기가 길고, 주택가격 조정 등이 금융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금리 상승세는 가계의 이자상환 부담을 증가로 소비를 제약할 가능성

166) 금융위원회,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6개월 연장," 보도자료, 2022.3.23.

2020년 4월 정부는 코로나19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지원해왔으며, 이후 4차례 연장함. 당초 지원기간(2020.4.1.~2020.9.30.)→1차 연장('21.3.31.)→2차 연장('21.9.30.)→3차 연장('22.3.31.)→4차 연장('22.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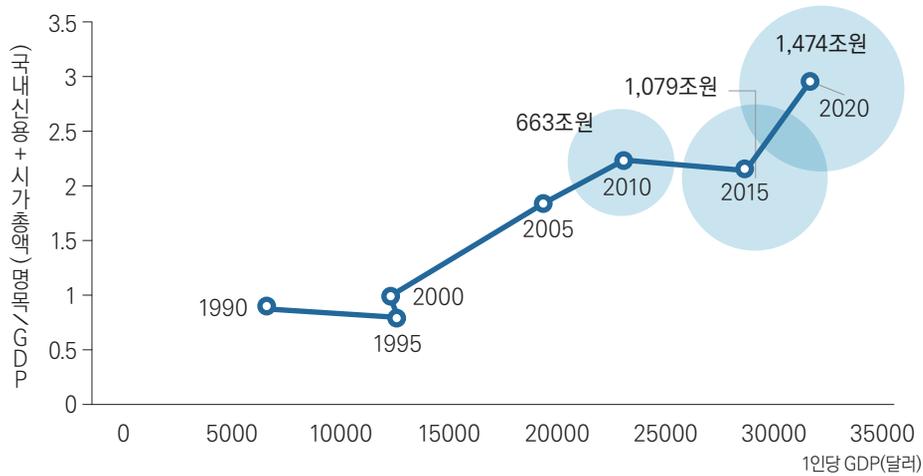
167) 한국은행, "향후 자영업자 재무건전성 전망," 「금융안정보고서」, 2020.12

나. 실물·금융발전 경로 따른 정책금융 규모 추이

- 실물·금융발전 경로와 정책금융 규모는 정책금융은 실물경제 및 금융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실물경제(1인당 GDP) 수준과 금융발전(GDP 대비 국내신용 및 시가총액 비중) 정도와 정책금융 규모를 기간별로 표시

(1) 현황

[그림 II-123] 우리나라 실물·금융 발전 경로와 정책금융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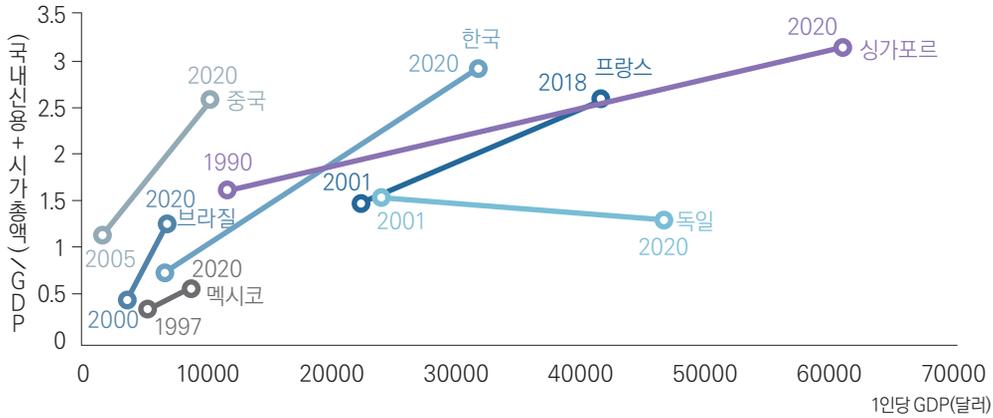
주: 1) 국내신용은 Domestic credit to private sector이며, 시가총액은 Market capitalization of listed domestic companies 자료임.
 2) 그래프내 원의 크기는 시점별 정책금융의 규모(조원)으로, 2010년도 정책금융은 2011년도 수치임
 자료: World Bank., 안옥진(2018), 장범식 외(2018) 자료를 재구성

■ 정책금융의 규모는 2011년 662조원에서 2020년 1,474조원으로 증가

- 1990~2020년 기간 우리나라는 금융부문은 실물부문보다 빠르게 성장
 -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1990년 6,610달러에서 2020년 3만 1,598달러로 크게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GDP 대비 금융부분(국내신용+시가총액)의 규모도 0.89배에서 2.98배로 크게 증가

(2) 비교

[그림 II-124] 국가별 실물·금융 발전 경로



주: 국내신용은 Domestic credit to private sector이며, 시가총액은 Market capitalization of listed domestic companies 자료임.
 자료: World Bank. 장범식 외(2018)자료를 재구성

■ 1990~2020년 기간 동안 대부분 실물과 금융부문의 발전경로는 양의 관계

-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1인당 GDP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부문이 증가하였으나, 국가별로 두 부문간 발전정도에는 차이가 존재
 - 독일은 1인당 GDP가 2001년 2만 4천달러 수준에서 2020년 4만 6천달러로 크게 증가했으나, 같은기간 금융부문의 비중은 1.67배에서 1.45배로 감소
 - 중국, 브라질 등 상대적으로 경제수준이 낮은 국가의 경우 경제성장에 따라 금융부문이 빠르게 증가하나, 선진국은 양(+)의 관계가 완만해짐

3. 주요 정책금융¹⁶⁸

가. 개요 및 필요성

■ 정책금융은 대출, 투자, 보증 등을 포함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제반 금융을 지칭

- 일반적으로 정책금융은 상업금융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다양한 시장실패로 인한 금융 수요를 보완하는 공공적 성격의 금융을 의미
 - 정책금융을 정의하는데 다양한 견해¹⁶⁹가 있으나, 대부분 민간의 시장실패의 보완이라는 역할과 그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기능에 초점
- 정부는 시장 수요가 있으나, 민간금융기관이 공급하기 어려운 금융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법령에 의해 정책금융기관을 설립하고 필요한 기능을 수행
 - 산업자본, 수출금융,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서민 지원 등 정부 지원 필요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정책금융기관을 설립하여 지원

■ 정책금융은 시장실패 보완하고, 기술지원 등 시장선도와 시장안정 역할 수행

- 정책금융은 중소기업 지원 등 시장실패 보완하고, 벤처·기술금융 지원 등으로 시장을 선도하며, 경기대응적 자금공급을 통한 시장안정 역할을 수행

[표 II-29] 정책금융 역할에 따른 지원분야

역할	지원분야
시장실패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지원 • 지방경제 활성화 지원 • 신용정보조회기관, 금융기관 지원 • 취약계층의 기본권 보장사업 지원 • 무담보대출, 소액금융, 중장기 대출 지원
시장 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술금융(모험자본) 지원 • 낙후지역 개발 지원 • 신재생에너지 개발, 기후금융 등 환경보호사업 지원 • PF 등 선진금융기법 도입 및 금융시장 발전 지원 • 기업R&D 및 기술개발 지원 • 해외 도매시장 개척 등 해외진출
시장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침체, 금융위기 시 경기대응적 자본 공급

자료: 장법식 외(2018)

168) 본 절은 아래의 자료를 바탕으로 발췌·정리하였다.

안옥진,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운영 현황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22.6.
 손상호, 「한국 정책금융의 평가와 분석 및 미래비전」, 한국금융연구원, 2013.12
 장법식·윤만호·박영석·신진영·박창균·강경훈, 「정책금융의 현황과 발전과제」, 한국산업은행, 2018.10

169) 전통적으로 자금공급 기능을 중심으로 한 시장실패 발생 영역의 공공성과 리스크를 중심으로 한 접근이 주를 이루었으며 최근에는 공급재원과 재정 간의 관계 및 공급형태에 대한 논의도 제시

■ 정책금융 수행 주체 측면에서 민간과 구별되는 정책금융기관이 존재

- 정책금융에 관한 연구들은 정부의 출자 또는 출연 등으로 설립된 정책금융기관들이 수행하는 기능을 정책금융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연구
 - 정책금융을 수행하는 공공금융기관은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설립되었기에 상업금융기관과의 차별성을 가지며, 금융원리에 의해 설정된 정책목적 달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재정사업과는 상이함¹⁷⁰

[참고] 재정정책 vs. 통화정책 vs. 금융정책

- ▶ (재정정책) 조세와 정부지출의 수준 및 배분 관리를 통하여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부가 사용하는 조치, 재정정책은 종종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통화정책과 함께 사용
- ▶ (통화정책)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절해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통화금융정책이라고도 함. 일반적인 수단으로서 공개시장 조작, 재할인율 정책, 지급준비율 정책 등이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대출활성화 차원에서 실행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재정정책성 측면이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준재정활동으로 보기도 함

- ▶ (금융정책) 협의로는 통화정책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나, 광의의 개념으로는 금융과 실물의 발전, 시스템리스크 완화 등 각종 경제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금융관련 정책으로서, 개별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구조조정, 금융산업과 시장 등 미시적 분야부터 통화 및 외환정책 등 거시정책까지 망라함
- ▶ (정책금융) 정부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수단의 일부로 인식되는 가운데, 정책금융은 자금을 인위적으로 공급한다는 의미에서 재정정책의 특성을 가지나, 신용창출을 통해 통화량과 금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특징도 일부 가지고 있음

자료: 정책금융연구회

170) 재정사업은 정부가 직접 사업의 주체로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 소득분배 개선, 경제안정 및 성장을 추구나 정책금융은 정책금융기관을 경유한 시장참여로 정책목적을 달성

나. 법·제도

■ (법적근거) 금융공공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법률이 존재

- 정책금융을 운영하는 공공금융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률이 존재하며 각 법률의 제1조에 정책금융기관의 설립에 대한 내용이 명시
 - 기술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중소기업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투자공사법, 한국해양진흥공사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관련 분야의 법률에 정책금융 기관의 설립에 대한 내용을 명시¹⁷¹
 - 무역보험법(37조, 한국무역보험공사 설립), 주택도시기금법(1조, 기금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설립), 예금자보호법(3조, 예금보험공사의 설립),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68조, 중소기업진흥공단 설립) 등

다. 주요 정책

■ 중소기업은 간접금융(대출·보증) 및 직접금융(투자)으로 지원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금융지원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대출 및 모태펀드, 벤처캐피탈(VC), 사모펀드(PEF)¹⁷² 등으로 투자, 출자를 통해 지원
 - 일반 시중은행 또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대출)을 수행하는데, 이 경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보험)을 바탕으로 대출이 이루어짐

171) 이외에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68조, 중소기업진흥공단 설립),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3조,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17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설립), 지역신용보증재단법(1조,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설립),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66조, 한국벤처투자 설립), 해외건설 촉진법(28조,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 등이 있음.

172) 모태펀드는 한국벤처투자가 관리하며,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은 기술력과 장래성은 있으나 경영기반이 약해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기 어려운 벤처기업에 주식투자 형식으로 투자하는 기업 또는 기업의 자본을 말함.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는 소수 투자자로 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임

■ 수출금융은 대외 실물거래를 지원하는 금융기관의 금융지원

- 국가 사이에 실물거래(상품, 선박, 플랜트 등)를 직·간접으로 지원하는 금융기관의 대출, 보증, 보험 등의 금융서비스를 지원
 - 우리나라의 공적수출신용기관(ECA: Export Credit Agency)은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로 수출입 및 해외투자 촉진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지원

■ 개발금융은 산업, 사회기반시설, 에너지 및 자원 등 다양한 분야 지원

- 산업의 개발·육성, 중소기업의 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개발, 기업·산업의 해외진출, 기업구조조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자금 지원
 - 한국산업은행이 개발금융 분야의 필요자금의 공급·관리 업무를 수행

■ 주택금융은 임대와 관련된 대출 보증 및 정책모기지 공급

- 주택구매 및 임대를 위한 자금을 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을 때 보증(보험) 서비스를 제공
 -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 관련 자금을 대한 보증을 실시¹⁷³

■ 서민금융은 저신용·저소득 계층의 여신, 채무감면, 신용회복 등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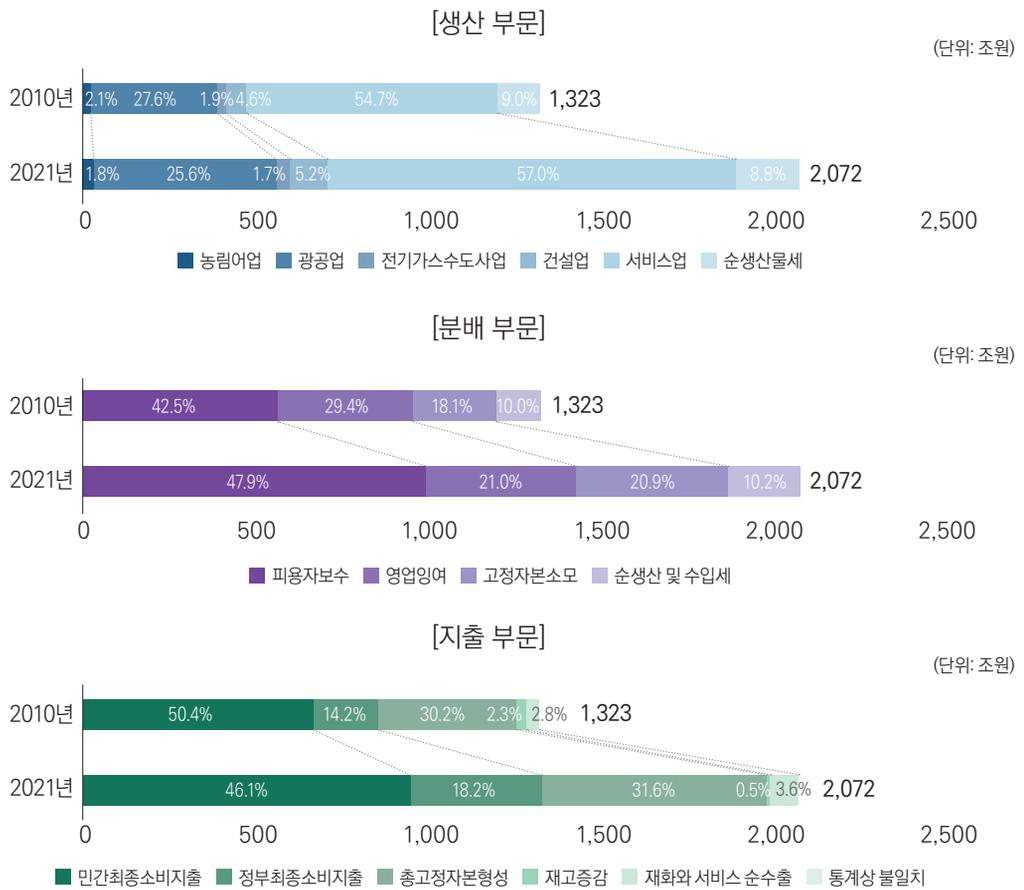
- 저신용·저소득 계층의 금융수요자 및 금융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여신, 채무감면, 신용회복 등을 지원
 -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미소금융중앙재단), 햇살론(지역신용보증기금 보증), 바퀴드립론(국민행복기금 보증), 새희망홀씨(은행 자체 재원)등의 서민자금 지원 기능을 수행

173) 이외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증권(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을 발행하여 주택자금 마련을 위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의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의 정책모기지를 제공함. MBS는 주택을 담보로 장기대출을 해준 주택저당채권을 대상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증권으로 발행한 MBS를 투자자에게 판매하여 주택 관련 자금의 유동성을 높이게 된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부채분양보증도 수행하고 있다.

■ 2010년 이후 2021년까지 명목GDP는 56% 증가

- 경제구조는 생산측면에서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한 특징이 있음
- 분배측면에서는 피용자보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여 임금근로자의 몫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지출측면에서는 정부지출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으며, 수출액의 비중도 다소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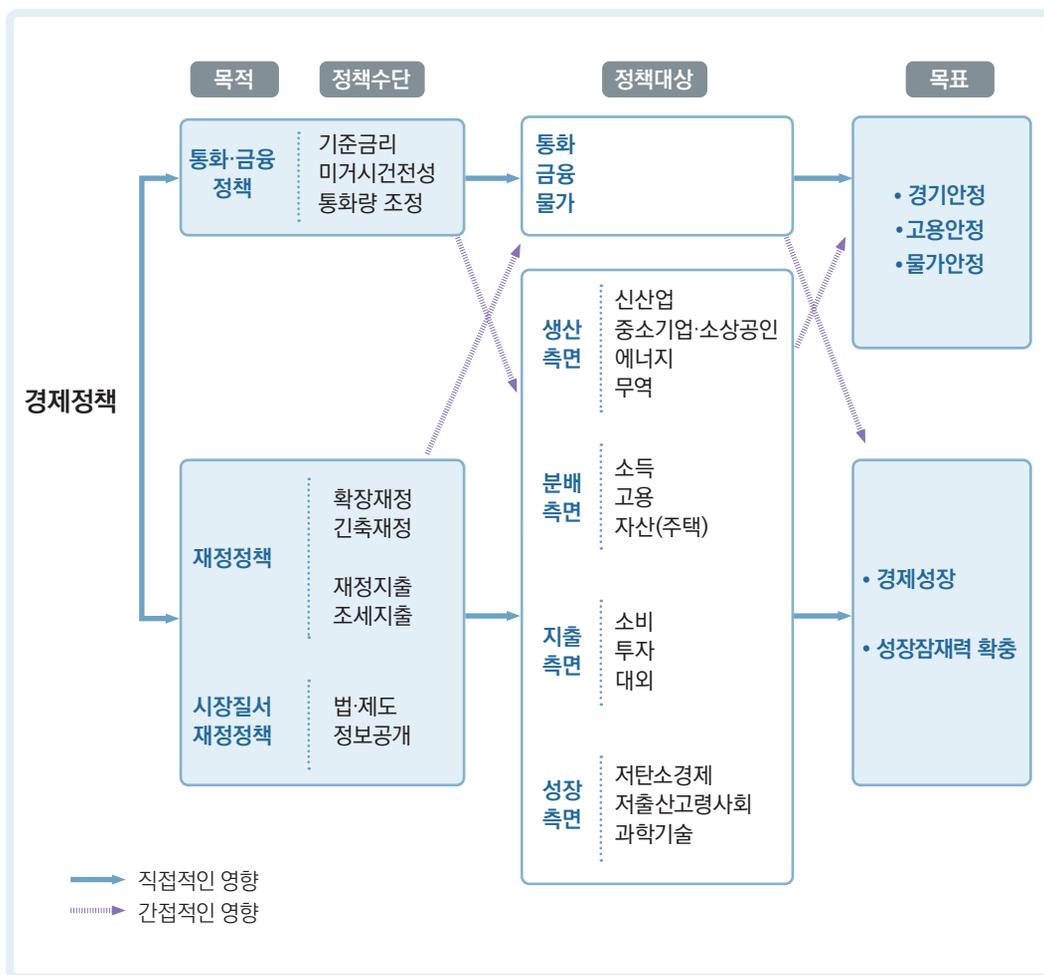
[그림 II-125] 경제성장 and 경제구조 변화



■ 경제정책은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경기안정과 경제성장을 목표

- 경제정책은 통화·금융정책과 재정정책, 법·제도를 의미하며 기준금리 조정과 미거시건전성 확보, 통화량 조정, 확장재정과 긴축재정 등을 통한 재정지출 총량관리, 조세지출 등을 정책 수단으로 이용
- 주요 정책분야는 생산·분배·지출·성장·통화·금융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경제성장과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기안정을 정책목표로 함
- 경제정책은 재정과 법·제도를 통해 생산·분배·지출·성장부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경제성장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목표로하며, 통화·금융·물가에는 간접적인 영향을 통해 경기와 고용, 물가를 안정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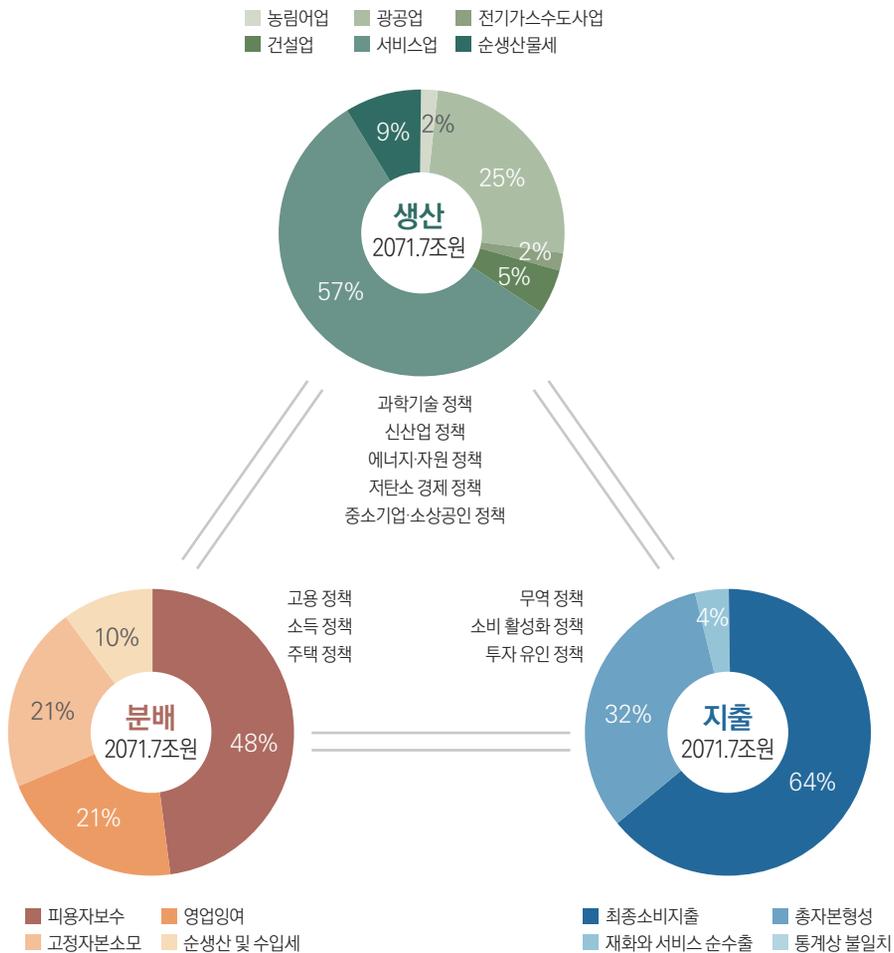
[그림 II-126] 경제정책·정책수단·정책목표 구조도



■ 경제정책은 생산·분배·지출 측면의 경제구조에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침

- 경제성장과 경기안정의 국가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정책은 이행단계에서 생산·분배·지출 측면 GDP의 구성요소에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됨
- 신산업 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은 제조업의 성장과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며, 에너지·자원 정책은 생산요소인 자원 공급의 안정성과 이용효율화를 목표로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은 생산 GDP의 57%를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생산성과 경영성과 확보를 위한 이행방안을 포함

[그림 II-127] 생산·분배·지출 GDP와 경제정책



- 국민소득의 48%를 차지하는 피용자보수는 고용 정책과 소득보장 정책을 통해 고용 안정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최저임금 등의 영향을 받으며, 소비와 투자간 분배를 통한 가계의 자산 축적은 주택 정책의 영향을 받음
- 지출측면의 GDP는 구성요소인 소비, 투자, 수출의 증가가 직접적으로 GDP 증가로 이어지므로 정부정책은 소비활성화, 투자확대, 수출 증가를 목적으로 함

■ 경제정책은 경제주체에 대한 영향을 통해 성장과 안정에 기여

- 경제정책은 국민경제의 세 경제주체에 대해서 개별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궁극적으로 국민경제 순환을 통해 상호연계되고 있음
- 생산측면 경제정책은 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분배측면 경제정책은 가계의 고용과 기업의 수익, 정부의 세수에 영향을 미침
- 경제주체의 소득이 소비되고 남은 금융자산이 축적되어 자산의 분배에 영향을 줌
- 경제정책은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해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지만, 시차를 두고 경기대응적 성격의 지출 운용도 다수 관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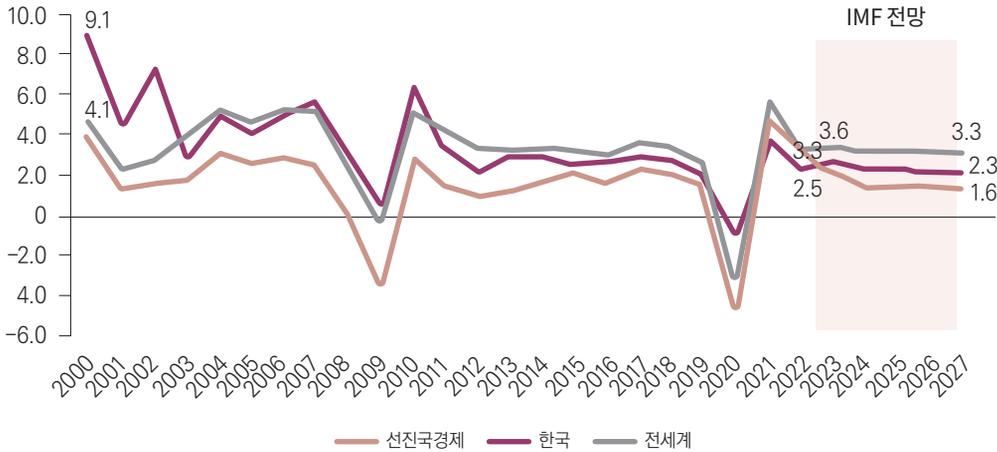
부록:

주요지표 국제비교

1. 경제 일반
2. 산업
3. 금융
4. 대외경제
5. 재정

[OECD 국가의 경제성장률]

(단위: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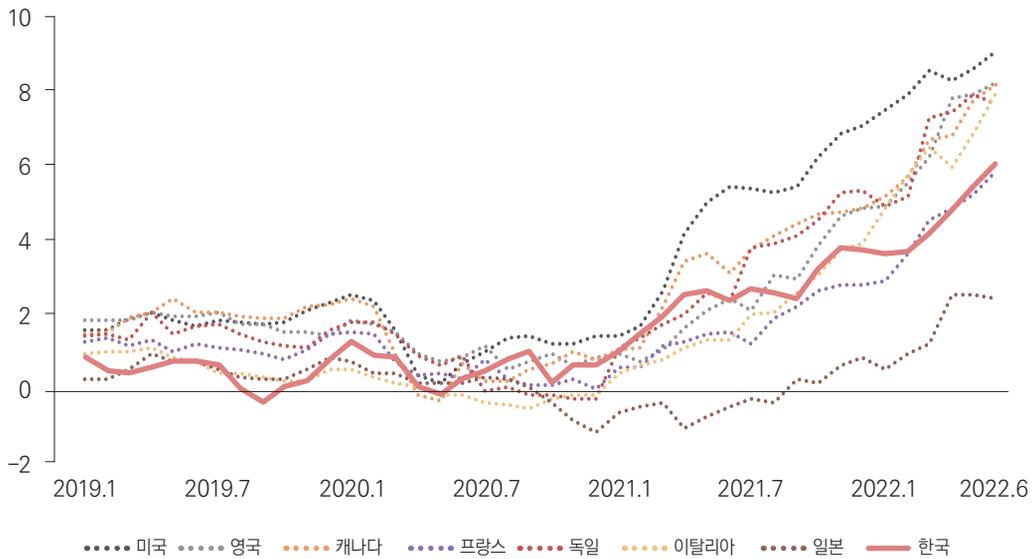
■ 한국의 향후 5년 성장률은 세계 평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

-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02년까지는 세계 평균을 상회하였으나 2010년 이후에는 세계 평균을 하회하고 있으며 향후 5년 성장률 차이는 커질 전망
- 세계금융위기 이후 성장률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면서 선진국경제의 평균성장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낮아짐
 - 2010년에는 한국과 선진국경제의 성장률 차이가 3.6%p였으나 2015년 이후에는 성장률 차이가 1.0%p 아래로 축소
- IMF는 2027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3%, 선진국경제의 경제성장률을 1.6%로 전망¹⁾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2.4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weo-database/2022/April> (접속일: 2022.6.5.)

[주요국 물가상승률 추이]

(단위: %)



자료: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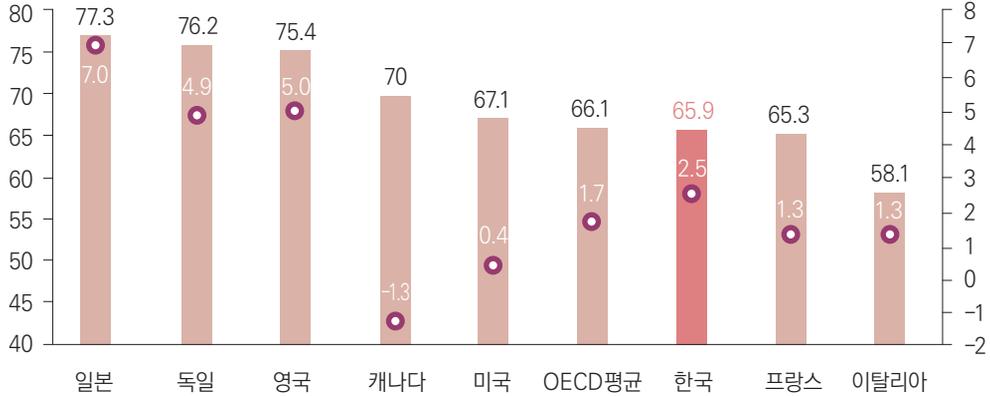
■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G7 대비 안정적이거나 최근에는 동반 상승세를 기록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회복 과정에서 주요국을 중심으로 높은 물가상승률이 나타나고 있음
 - 2021년 연간 소비자물가는 미국(4.7%), 독일(3.1%), 영국(2.5%) 등에서 모두 2%를 상회
- 한국의 경우 2020년 하반기까지 G7 대비 낮은 물가상승률을 유지하였으나 점차 상승폭이 확대되는 추세
 -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2021년 연간 2.5%를 기록한 뒤 2022년 7월에는 6.3%를 기록

[OECD국가별 고용률]

(단위: %)

(단위: %)



주: OECD 국가와의 비교를 위해 15~64세 고용률을 활용
 자료: OECD

■ 2020년 기준, 한국의 고용률은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1, 2}

- 한국의 2020년 고용률(15~64세 기준)은 65.9%로 프랑스, 이탈리아를 제외한 G7 국가보다 낮고, OECD 평균과는 비슷한 수준
 - 일본과 독일은 큰 경제 규모에도 불구하고 G7 국가 중 가장 높은 고용률을 유지
- 최근 10년간 한국의 고용률은 2.5%p 상승하여, 고용률이 높은 주요 선진국 대비 상승 속도가 빠르지 않은 양상

1)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의 비중으로 한 국가의 노동력 활용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를 15세 이상 인구로 정의한 반면, OECD는 15~64세로 정의. 아래는 국제비교를 위해 OECD 기준 고용률(15~64세)을 활용하였음.

2)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

생산가능인구(A) 4508.0만 명		
경제활동인구(B) 2831.0만 명		비경제활동인구 1677.0만 명
취업자(C) 2727.3만 명	실업자(D) 103.7만 명	

주: 1) 2021년 기준, 15세 이상 인구를 바탕으로 작성되어 국제비교를 위해 제시한 수치와 기준이 다름

2) 생산가능인구에 군인, 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등은 제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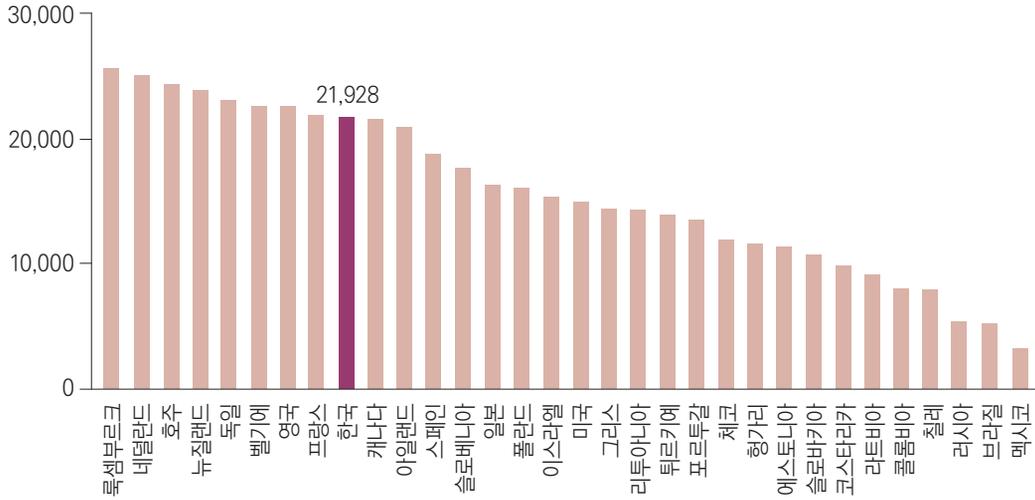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요 고용지표는 다음과 같이 정의

• 경제활동참가율: B/A • 고용률: C/A • 실업률: D/B

[OECD국가별 연간 실질최저임금]

(단위: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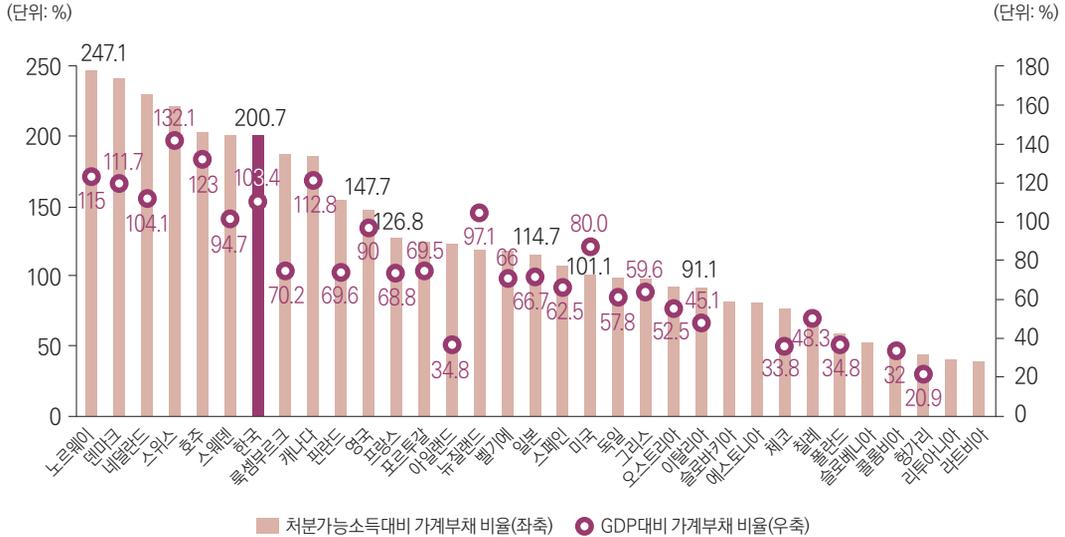


주: 2020년 가격 기준, PPP로 재조정
자료: OECD

■ 2020년 기준, 한국의 연간 실질최저임금은 21,928달러로 OECD 9위

- 실질최저임금은 정부에서 정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소임금을 의미하며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 OECD에서는 국가별 법정최저임금을 각국의 물가수준으로 조정하여 실질값으로 변환한 뒤 구매력환율(PPP)을 적용하여 재조정된 국가별 실질최저임금 통계를 제공
- 2020년 한국의 실질최저임금은 21,938달러로 룩셈부르크(25,808달러) 독일(23,379달러), 영국(22,782달러) 등에 이어 9위를 기록
 - 한국보다 낮은 실질최저임금을 기록한 국가로는 일본(16,422달러), 미국(15,080달러) 등이 있음

[처분가능소득대비 및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² (2020년)]



주: 1) 캐나다, 포르투갈, 스웨덴은 2021년, 칠레, 콜롬비아, 뉴질랜드는 2019년 자료임
 2)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OECD,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BIS 자료임
 자료: OECD, B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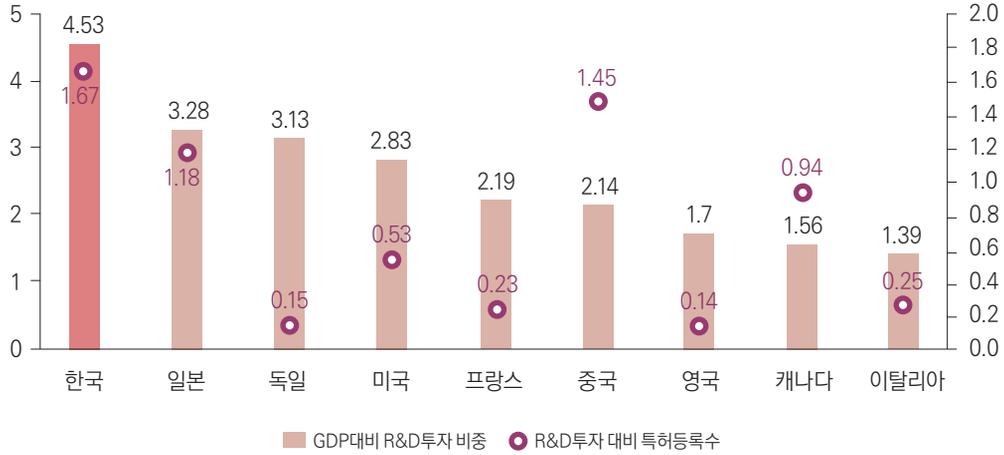
■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7%로 OECD 7위

- 2020년 우리나라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200.7%로 영국(147.7%), 미국(101.1%) 보다 높으나, 노르웨이(247.1%), 호주(203.0%) 보다 낮은 수준
 - OECD는 가계부채의 상환부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가계 및 비영리 단체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공표하고 있음
- 2020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는 103.4%로 경제규모를 넘어서는 수준의 가계부채를 기록한 7개 국가 중 하나임
 - BIS는 가계부채의 수준을 국가간 비교하기 위해 GDP 대비 가계부채(core debt) 비율을 공표하고 있음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스위스(132.1%), 호주(123.0%), 노르웨이(115.0%), 캐나다(112.8%), 덴마크(111.7%), 네덜란드(104.1%), 영국(90.0%), 미국(80.0%), 프랑스(68.8%), 독일(57.8%)

[GDP대비 R&D투자비중 및 R&D투자 대비 특허등록 수(2018년)]

(단위: %)

(단위: 건/100만USD)



주: 자료의 한계로 2018년 자료를 제시하였음

자료: UN Statistics Division과 산업연구원 ISTAT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 한국의 GDP 대비 R&D투자는 높은 수준이며, 투자 대비 성과도 우수

- 한국의 기업 및 정부는 GDP의 4.53%를 미래기술 등을 위한 R&D에 투자하고 있으며, 투자 100만달러당 1.67건의 특허를 개발하여 등록
 - G7 국가 및 중국과 비교할 때, 한국은 R&D투자액의 절대규모는 작지만 GDP 대비 비중 및 투자 대비 특허등록은 전반적으로 높음
- 다만, 지속적으로 기술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사용료 수입이 있는 기술 보유량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기술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10년 68.9억달러에서 2020년 43.2억달러로 감소

[기술무역수지 추이]

(단위: 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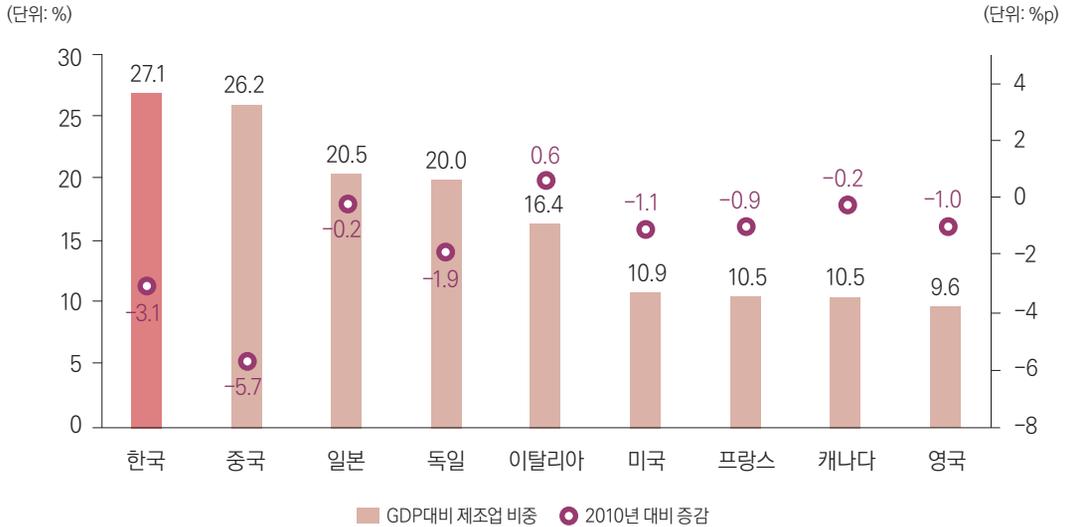
	2010	2015	2018	2019	2020
기술무역수지	-68.9	-60.0	-38.6	-41.2	-43.2

주: 기술무역은 기술 지식 및 기술 서비스 등과 관련된 국가 간 거래를 의미하며, 특허 판매 및 사용료, 연구개발 서비스 등이 포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무역통계

2. 산업

[주요국의 부가가치(GDP) 대비 제조업 비중 및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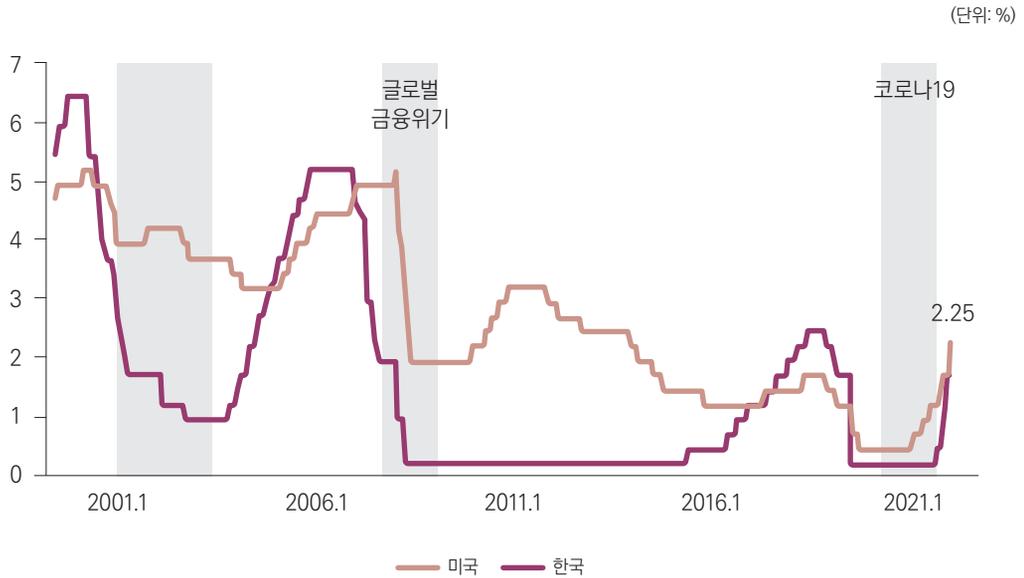
자료: UN Statistics Division(<https://unstats.un.org/>)

■ 한국 경제에서 제조업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

- 미국과 영국은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가 10% 내외로 낮으며 내수 서비스 비중이 높은 반면, 한국은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27.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제조업 비중을 유지
- G7국가 내에서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는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며, 코로나19 영향을 적게 받은 것으로 나타나, 최근 제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성장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선도 투자, 정부의 전략적 산업정책이 요구됨
-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는 제조업 경쟁력 순위를 독일, 중국, 미국, 일본, 한국으로 발표
- 최근 제조업의 경쟁력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산업의 융합과 저탄소 및 디지털 전환 기술을 포함
 - 미국은 '미국내 제조'를,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일본은 '제조기반 진흥정책'등 산업전략을 발표하며 첨단제조혁신을 목표로 설정

3. 금융

[한-미 기준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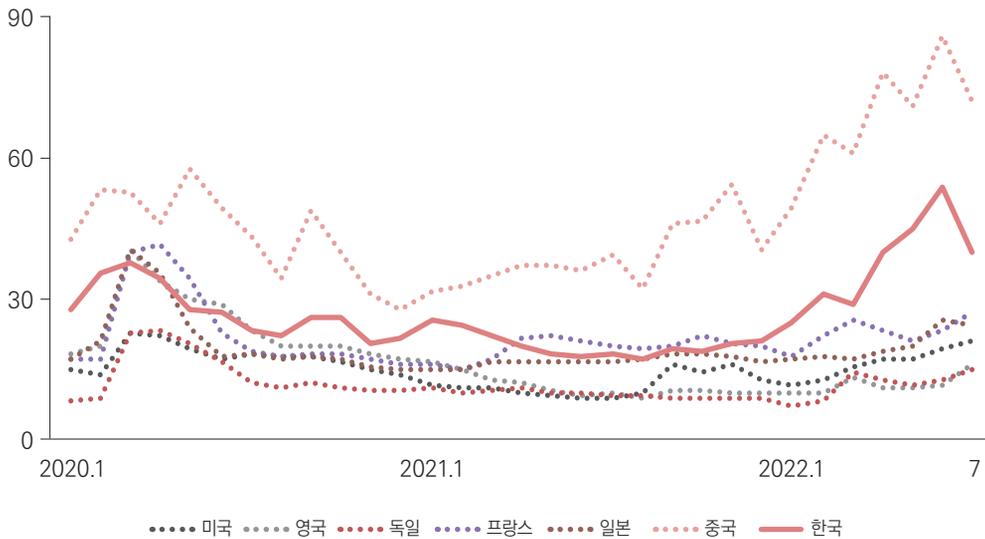


자료: FED, 한국은행

■ 2022년 7월 기준, 한국의 기준금리는 2.25%를 기록

- 한국은행이 2021년 하반기부터 선제적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국내 기준금리는 0.50%에서 2.25%까지 상승
- 미 연준은 2022년 3월 기준금리를 0.25%에서 0.5%로 인상하였으며 이후 6월과 7월에는 각각 1.75%, 2.50%로 인상
 - 2022년 7월 기준으로 한·미 금리차가 역전 되면서 국내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주요국 CDS 프리미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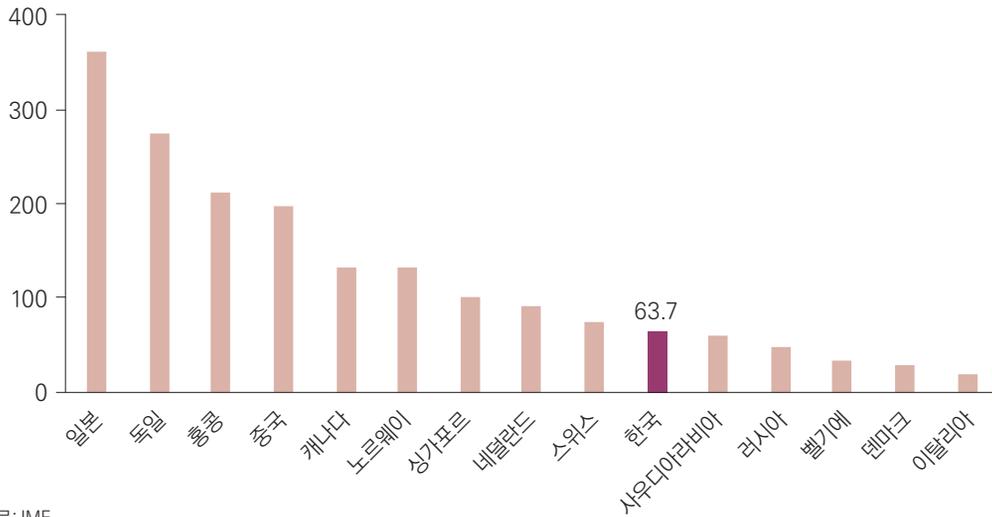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2022년 7월 기준,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

- CDS(Credit Default Swap)란 기업이나 국가의 채무불이행 위험(Credit Default)을 거래하는 파생금융상품으로 특정 국가의 국채에 대한 CDS 프리미엄은 해당국의 부도 확률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됨
 - 국가 부도 확률이 높아질수록 CDS 프리미엄은 상승
-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2021년 하반기까지도 일본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22년 들어 미국의 금리인상이 본격화되면서 빠르게 상승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늘어난 가계부채, 국가채무 등의 리스크 요인으로 한국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에 기인

[국가별 순대외금융자산]

(단위: 백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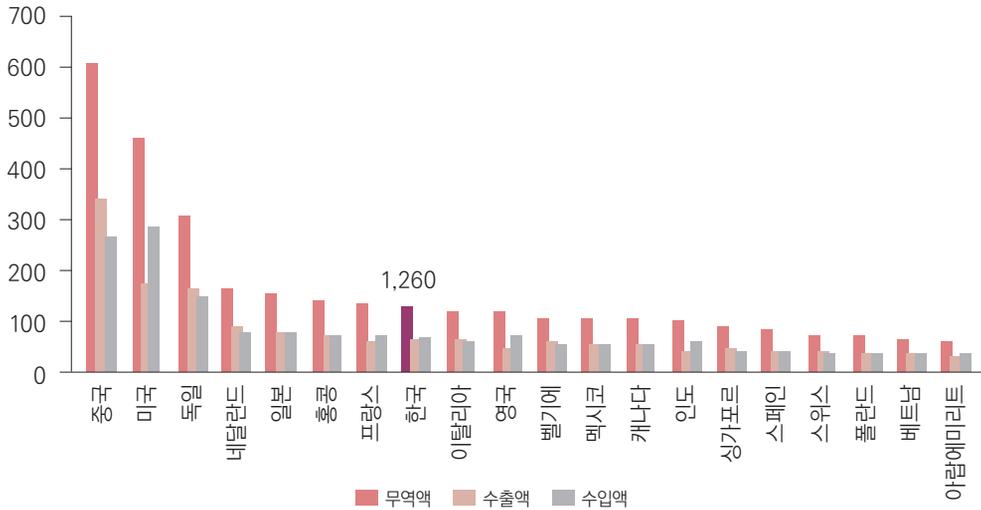
자료: IMF

■ 2021년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은 6,367억달러로 채무건전성은 양호

- 순대외금융자산은 대외금융자산에서 대외금융부채를 뺀 것으로 한 국가의 대외 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 거주자의 해외투자(대외금융자산)가 증가하거나 외국인의 국내투자(대외금융부채)가 감소할 경우 순대외금융자산이 늘어남
- IMF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은 6,367억달러로 일본(3조 6천억달러), 홍콩(2조 1천억달러), 중국(2조달러), 싱가포르(1조달러) 등에 이어 아시아 국가 중 네 번째 규모를 기록
 -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면서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

[국가별 무역액]

(단위: 백억달러)



자료: 무역협회

■ 한국의 무역액은 1조 2,596억달러로 세계 무역순위 8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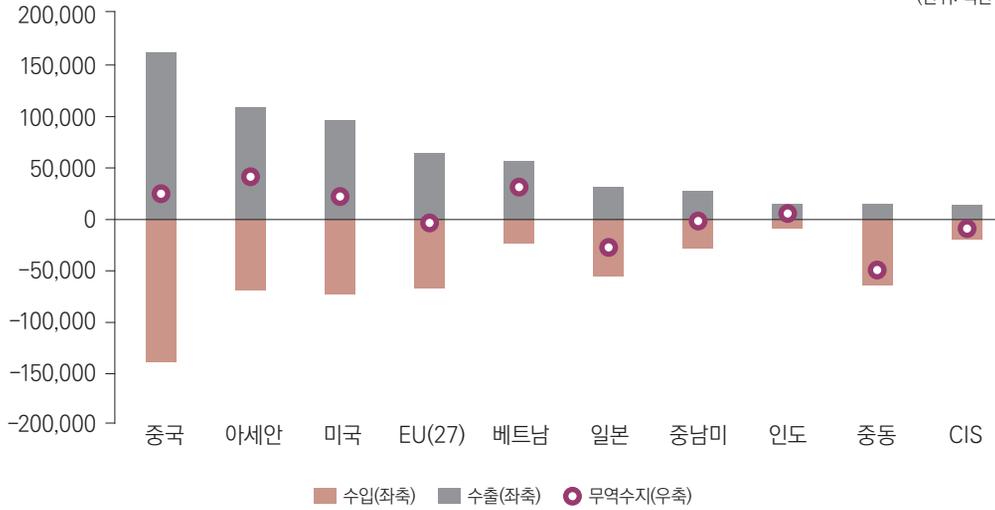
- 한국의 2021년 무역액은 연간 무역규모 최초로 1조 2천억달러대를 기록하였으며, 세계무역 순위도 9년 만에 8위로 상승
 - 전세계에서 무역액이 1조달러를 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하여 미국, 중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홍콩,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총 10개국
 - 무역순위: ('07~'09) 11위 → ('10~'11) 9위 → ('12) 8위 → ('13~'20) 9위 → ('21) 8위
-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등 전통적인 수출 주력 품목의 호조세와 함께 식품, 화장품 등 소비재의 수출도 확대되면서 수출 품목의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부
록

주
요
지
표
국
제
비
교

[주요 교역대상국별 수출입 및 무역수지(2000년과 2021년)]

(단위: 백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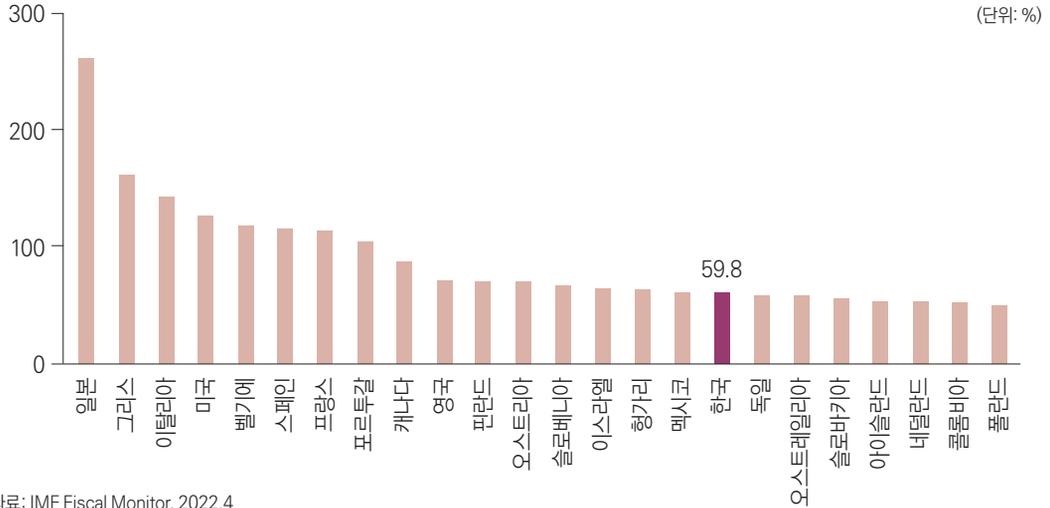
주: 수입액은 무역무지의 차감항목으로 음수(-)로 표시하여 그래프 작성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의 주요 교역대상국은 중국, 아세안, 미국, EU순

- 2021년 국가별 무역수지는 베트남, 중국, 미국에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일본과 중동에 적자를 기록
 - 무역수지 규모(2021년): 베트남 327억달러, 중국 243억달러, 미국 227억달러, 일본 △246억달러, 중동 △496억달러
- 2000년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미국이었으나, 2021년에는 중국으로 변화
 - 국가별 무역규모(2000년 → 2021년): 중국(9.39%→23.9%), 미국(20.1%→13.4%), 일본(15.7%→6.7%), 베트남(0.6%→6.4%)

5. 재정

[2027년 국가별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 전망]



■ IMF는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을 2027년 59.8%로 전망

- IMF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은 2021년 49.8%에서 2027년 59.8%로 증가할 전망
 -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기 부양 과정에서 정부부채가 크게 증가
 -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 ('13년)37.7→('21년)49.8→('27년)59.8

참고문헌

제I부 경제의 이해

- 김진웅·노영진, “최근 가계 소비침체의 현상 및 원인에 대한 연구,” 「통계연구」 제22권 제3호, 2017
- 배진영, 「제도와 경제」 제1권 제1호, 2007
- 백웅기, “저성장·고령화 시대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정책과 제도의 개선방향,” 「예산정책연구」 vol.3, no.1, 2014
- 신동진·박승호·조은영,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대응전략 III: 지속성장을 위한 산업구조변화 대응전략」, 국회예산정책처, 2020
- 이준구·이창용, 「경제학원론」 제5판, 문우사, 2015
- 임익상·하연섭, “국가재정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의원논총」 제11권 1호, 2016
-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020
- Okun, Arthur M, “Potential GNP: Its Measurement and Significanc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Proceedings of the Business and Economics Statistics Section 1962.

제II부 경제정책

-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201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 2018
-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 및 중기 경제전망」, 2021
- 국회예산정책처, 「2021-2030년 NABO 중기재정전망」, 2021
- 국회예산정책처, 「2022 대한민국 재정」, 2022
- 국회예산정책처, 「2022 조세수첩」, 2022
-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 2021
- 국회예산정책처,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 제7호, 2020
- 국회예산정책처, 「주요 주력산업과 신산업의 동향 및 수출경쟁력 분석」, 경제현안분석 제100호, 2020
- 김적교·김상호, 「경제정책론-한국의 경제정책」, 박영사, 2020
- 김종기, “신산업별 세계시장 점유율 및 세계시장 최근 동향,” 「미래전략산업 브리프」 제24호, 산업연구원, 2022.4.
- 김호균, 「경제정책론」, 청록출판사, 2016

무역협회, 「주요 원자재 공급 구조 분석 및 가격 상승의 영향」, Trade Focus 6호, 2022

박호정, “탄소중립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양립하는가?” 「자원·환경경제연구」 제30권 제2호, 한국자원경제학회, 2021

서세욱, 「농정과 재정」, 나눔, 2021

손상호, 「한국 정책금융의 평가와 분석 및 미래비전」, 한국금융연구원, 2013

안옥진,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운영 현황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22

유용순·정종철·마개좌·박철환, 「부동산 정책」, 21세기사, 2013

이유진, 「세계 소비재시장 잠재력 분석 및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 현황」, Trade Focus 36호, 한국무역협회, 2019

이장재·현병환·최영훈, 「과학기술정책론: 현상과 이론」, 경문사, 2011

임명현, 「대한민국 공공재정론」, 나눔, 2022

임종훈·이정은, 「한국입법과정론」, 박영사, 2021

장범식·윤만호·박영석·신진영·박창균·강경훈, “정책금융의 현황과 발전과제,” 한국산업은행, 2018.10.

하준경·이은석, “총요소생산성과 성장잠재력: OECD 국가들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거시적 분석,” 「경제분석」, 제19권 제2호,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2013

한국은행, “향후 자영업자 재무건전성 전망,” 「금융안정보고서」, 2020

한국은행,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 설정」, 2018

한국은행, 「대규모 자료를 이용한 월별 서비스소비 추정 방안」, 2019

Antras, Pol, “Conceptual Aspects of Global Value Chains,”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Series 9114*, The World Bank, 2020

De Ville, F., “Global Value Chains and EU-East Asia Trade: An Antidote for Geo-Economic Competition,” In: Adriaensen, J., Postnikov, E. (eds), *A Geo-Economic Turn in Trade Policy*,” The European Union in International Affairs, 2022

Hyun, Jung Taik, “Free Trade Agreements and Korea’s Trade Policy,”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Volume 10, 2003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2

OECD, “COVID-19 and Global Value Chains: Policy Options to Build More Resilient Production Networks,” 2020

OECD, “Global Value Chains: Efficiency and Risks in the Context of COVID-19,” *OECD Policy Responses to Coronavirus (COVID-19)*, 2021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2020: Trading for Development in the Age of Global Value Chains*, 2020

World Trade Organization, *Global Value Chain Development Report 2021-Beyond Production*, 2020

찾아보기

G		국민처분가능소득	21
GDP갭	29	국민총소득	21
GDP의 한계	31	금융정책	41
		기업부채	281
		기준금리	267
ㄱ		ㄷ	
가계(가구)소득	131	단기외채비율	283
가계신용	281		
가공단계별 수출입	209	ㄹ	
경기순환	32	민간소비	178
경기종합지수	33	민간신용	280
경제구조	46		
경제성장	24	ㅂ	
경제성장률	25	부문별 투자	197
경제원칙	5	분배GDP	57
경제의 투자여력	198	빈곤갭	134
경제정책 주체	82		
경제정책	70	ㅅ	
경제정책의 목표	76	상대적 빈곤율	134
경제정책의 수단	80	생산GDP	50
경제주체	3	생산연령인구비중	232
경제질서	7	서비스업 생산지수	106
경제체제	7	성장기여도	26
경제활동참가율	146	소득보장 제도	141
고령층인구비중	232	소비자물가상승률	268
고용률	146	소비자심리지수	182
고용보험	154	수출경쟁력	214
고정투자율	23	수출입	206
국고채금리	286	시장	3
국내총생산	18	시장경제	70
국민경제	2		
국민경제의 과제	4		
국민경제통계	9		
국민계정	10		
국민계정체계	10		
국민소득 3면 등가	19		
국민소득	21		

시장실패	70
실업률	145
실질 주택매매가격지수	164

○

에너지 수입 의존도	118
에너지 원단위	119
연구개발비	249
연구원	251
5분위배율	132
온실가스배출량	241
외환보유액	283
1인당 국민총소득	23
1차에너지 공급	115
임금	150

ㄱ

자금순환표	37
잠재성장률	29
저축률	23
정부실패	73
정책금융 공급액	304
종사자 수	104
주가	285
주택매매 수급지수	161
주택보급률	162
지니계수	132
지출GDP	61

ㄴ

중요소생산성	28
총인구	228
취업자 수	145

ㄷ

탄소집약도	243
통화	36
통화량	36
통화승수	266
통화유통속도	266
투자	192

ㄹ

평균 매출액	105
평균소비성향	180
비용자보수비율	59

ㅎ

합계총산물	230
환율	283

2022 대한민국 경제

Economic Overview of
the Republic of Korea 2022

발 간 일 2022년 8월
발 행 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임익상
편 집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발 행 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TEL. 02·6788·3780
디자인·인쇄 유월애 TEL. 02·859·2278

ISBN 979-11-6799-078-5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2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495-001977-01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